

# 피노키오만남장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2권 : 학생인권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피리산만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2권 : 학생인권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1일

펴낸 곳  청소년활동가상징 **활기**

이메일 [hwalgy@daum.net](mailto:hwalgy@daum.net)

전화번호 070-4228-190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ife2010>

가격 1질 전5권 100,000원

#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오늘, 이제는 역사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간 한 조직의 파란만장했던 숨결과 발걸음을 담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실천과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운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유산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 책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 돛을 올렸던 2006년의 뜨거웠던 여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나서며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담긴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구절만큼 네트워크의 처음과 끝을 함께 밀어왔던 활동가들, 네트워크라는 함선에 잠시라도 승선했던 활동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소년 인권 의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을 형성해내고 말겠다는 다부진 욕심으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란(波瀾)을 준비하자, 사회가 청소년을 설명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소년인권론을 만들고 더 큰 파란을 조직하지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는 6년간 힘차게 노 저어 왔습니다. 때로는 주춤했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자 ‘파란을 만들어내는 장’(파란만장)이었고,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확장해온 개척자였으며,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만들어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떠나보낸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서야, 늦었지만 네트워크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한 백서를 내놓습니다. 백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네트워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거쳐 네트워크가 결성된 2006년 3월부터 ‘활기’로의 전환을 결정한 2012년 3월까지 이어진 활동과 조직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권은 학생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전국행진에서부터 청소년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장에서의 움직임, 폐쇄적 학교를 뒤흔든 스쿨어택(School Attack)과 청소년 저항 지원 활동 등 긴장감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3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되짚다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갖가지 고비를 넘겨온 활동가들의 놀라운 역량과 끈기, 그리고 그 고단했던 숨결을 함께 맞볼 수 있습니다.

4권은 학생인권 이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발굴하면서 남긴 유산을 묶었습니다. 청소년인권과 반(反)차별감수성의 만남을 시도했던 십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팀, 2008년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린 보호주의팀, 청소년이 말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을 일구어내고자 했던 노동(빈곤)팀의 다채로운 시도가 남긴 결실이 이 한 권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네트워크가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과 연대활동 관련 자료들의 꾸러미입니다.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활동가대회, 잇힌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재발굴한 연구사업 등을 다룬 자료들을 따라 읽다 보면,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제 가고 없지만,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운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또 네트워크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의 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팀





<b>1부</b>	<b>학생인권법 제정 운동</b>	<b>21</b>
	배경내, 「[움푹]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 본격화되는 학생 인권 법제화운동」, 인권하루소식 제 2985호, 2006. 02. 07.	25
	배경내,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제 2993 호, 2006. 02. 17.	28
	최순영,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03. 07.	31
	이종규 기자, 「“세계최악 입시지옥 아이들을 구하자”」, 한겨레, 2006. 05. 15.	36
	최승덕 기자, 「중고생 5명 중 1명만이 “맞은 적 없다” - 참교육연구회 ‘중고등학생 생활과 인권, 자치와 복지 실태와 의식 조사’ 발표」, 프로메테우스, 2006. 07. 27	3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연대 요청서」, 2006. 08. 03.	39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웹자보, 2006. 08. 14.	4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기획안」, 2006. 08.	4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 지역 간담회 참여 요청」, 2006. 08.	47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거리 홍보용 스티커, 2006. 08. 14.	53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출발 선언문」, 2006. 08. 14.	54
최병성 기자, 「‘청소년 인권’, 전국연대 조직 본격화 - 청소년 인권활동가, 5일간의 전국행진 나서」, 뷰스앤뉴스, 2006. 08. 14.	56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소장사진, 2006. 08. 14.	58
김용한 기자, 「청소년인권행진단, '꽃으로도 때리지 마' - 파란만장 행진단, 대구서 '학생인권법' 법제화 서명활동 벌여」, 오마이뉴스, 2006. 08. 19.	66
유윤중,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파란만장한 4박5일」, 프로메테우스, 2006. 08. 22.	69
전누리, 「‘청소년인권’과 함께 파란만장한 전국행진 - 4박5일의 전국행진을 돌아보며」, 인권오름 제 18 호, 2006. 08. 23.	74
김지훈 기자, 「“학생인권법 통과로 학생인권 지켜내자” - [교육청 소년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개최」, 1318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9. 01.	79
민중의소리 기자, 「민노 최순영, 학생인권법 통과 D-100일 선언 - “200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학생인권 보장 위한 대장정 돌입」, 민중의소리, 2006. 09. 01.	81
정혜규 기자, 「“가만 있으면 학생인권법 통과 어렵다” - [학생인권 학생인권법 통과 1인시위를 진행한 청소년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씨」, 1318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9. 08	82
이계삼,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학생 인권이 선 자리」, 인권오름 제 21 호, 2006. 09. 13.	84
배민욱 기자, 「학생들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 집회' 뉴시스, 2008. 09. 16.	87

학생인권법 지지 100인 선언 추진위원회, 「학생인권법 지지 100인 선언 호소문 및 동의서」, 2006. 10.	88
박정호 기자, 「한나라당 조폭정치에 발목잡힌 '학생인권법'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06. 11. 03.	90
최승덕 기자, 「기념일된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법을 원했다 - 교육부는 약속 안 지키고 국회는 무관심...학생인권법 제정 요구 봇물」, 프로메테우스, 2006. 11. 04.	92
김상정 기자, 「학생인권법 촉구 각계 선언 잇따라 - 학부모·시민 1000인, 교사 5000인 선언... 예비교사들도 연대」, 교육희망, 2006. 11. 05.	95
이보람 기자, 「두발자유를 위해? 그럼 뭉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1318 바이러스, 2007. 03. 20.	97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단체 순회 간담회> 제안서, 2007.7.23.	99
바람, 「[소곤소곤 지역에서 희망을 찾다. -8월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다녀오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4호, 2007. 09. 27.	103
전누리,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으로 -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③] 학생인권법」, 인권오름 제 73 호, 2007. 10. 03.	105
국회 교육상임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회 수정안)」, 2007. 11.	10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6개 단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2007. 11. 27.	11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2007. 12. 26.	121

임지선 기자, 「인권 OTL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 학교 설립자 교장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신설 기념 토론회」, 한겨레 21, 2008. 05. 08.	123
---	-----

<b>2부</b>	<b>스쿨어택(School Attack) &amp; 학내저항 지원 활동</b>	<b>125</b>
-----------	---	------------

조현철·임지선 기자, 「“두발 자유를 달라” 중학생들의 반란」, 경향신문, 2006.4.21.	129
--	-----

이계덕 기자, 「<대자보> 양동중 두발자유화 시위파문, "역지사지할 때다" - [기자수첩] 학교측 24일 해당학생 징계 vs. 인권학생단체 "징계부당"」, 대자보, 2006.4.22.	130
--	-----

**서울 양동중**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2006. 04. 24.	132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두발자유집회 참가학생 징계 시도 중단 촉구 의견서」, 2006. 04. 24.	134
--	-----

정혜규 기자, 「“선생님, ‘두발규정 개정 약속’ 잊으셨나요?”」,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7. 20.	136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동성고 오병현 학생 징계 관련사건 일지」, 2006. 12. 20.	139
--	-----

**서울**

오병현, 「1인시위에 나서며 - 5/8 1인시위 당시 오병현 학생의 발표 자료」, 2006, 05. 08.	143
---	-----

**동성고 오병현 사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동성고는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응하라!」 성명서, 2006. 05. 08.	147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는 인권침해의 자유지대인가!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현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06. 07. 04.	149
---	-----

	전누리, 「다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인권오름 제 11호, 2006. 07. 05.	152
	「오병헌 학생 징계 통지서 내용」, 2006. 07. 07.	155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병헌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2006. 07. 07.	156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고등학교 측의 성의 있는 학생인권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6. 09. 18.	159
	배경내, 「오병헌, 그의 불복종을 생각하다」, 문화연대 문화웹진, 2006. 10. 12.	161
	오병헌, 「2006년을 보내며」, 2006. 12. 20.	163
	유명준 기자, 「1인 시위로 졸업장 못받은 오병헌군 “변하지 않는 학교가 불쌍할 뿐”」, 세계일보, 2007. 03. 23.	16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 기획 동성고 설문조사 결과」, 2007. 12. 11.	167
<b>서울</b>	박소희 기자, 「두발규제 항의하는 자전거 시위 - 서울D고앞 항의 시위, 학교와 마찰, 학생회장 "강제이발없다" 반론」,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6. 05.	170
<b>독산고</b>	유윤중, 「‘두발’ 자전거, 닫힌 학교를 뚫다 - 학내 저항 불붙일 자전거시위 열려」, 인권오름 제 7호, 2006. 06. 07.	173
<b>집단 민원</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집단 민원 제기」, 2006. 07. 13.	177
<b>수원 청명고</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 인권 상황」, 2006. 09. 01.	183

최승덕 기자, 「수원 초고, 두발규제 반대시위 학교 감시로 무산돼 - “퇴학시키겠다” 폭언에 학생들 좌절」, 프로메테우스, 2006. 08. 30.	185
최승덕 기자, 「청명고 ‘스쿨 어택’, 교사들 “선동하지 말라”며 제지 - “인권적으로 교육 안된다” VS “학생 존엄권 지켜줘라”」, 프로메테우스, 2006. 09. 06.	188
김고종호 기자, 「인권단체, ‘고등학생시위’ 선동했다? [현장] 수원 청명고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 사진전, 학생인권 요구에 “모의고사 방해하라”」, 시민의 신문, 2006. 09. 06.	19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의 학생인권탄압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2006. 09. 06.	198
<수원 청명고 스쿨어택> 소장사진, 2006. 09. 06.	200
공현, 「청명고 스쿨어택, 억눌린 권리를 위한 응원」, 2006.9.7.	20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원 청명고 학생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서」, 2006. 09. 14.	206
최병성 기자, 「“학생 두발규제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 청소년 인권단체, 수원 청명고 사례 인권위 진정」, 뉴스앤뉴스, 2006. 09. 15.	21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 1위원회 결정」, 2007. 01. 15.	21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타상 조사에 분노한다」 성명서, 2007. 02. 15.	22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보도자료, 2007. 02. 15.	230
전누리,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타상조사 -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인권오름 제 42호, 2007. 02. 21.	24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 인권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회의 진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총 2쪽)」, 2007. 03. 04.	25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2007. 03. 16.	254
	금릉중학교 학생,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상황 정리」, 2006.11.	256
	금릉중학교 학생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의 날’에 묻는다 - 파주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고발 금릉중학생 기자회견 견」 보도자료, 2006. 12. 08.	259
<b>파주 금릉중</b>	안민희 기자, 「하키채,큐대...가위질,학생인권은 어디에? - 금릉중 학교 학생들, “학교 못다니겠다” 교육청 앞 시위」,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2. 09.	269
	안민희 기자, 「학교교사 나타나자 학생들 ‘교육청 앞 시위’ 중 눈 물로 줄행랑 - ‘가면시위’학생들은 도망가고, 교육청, 교사, 시 민단체만 남아...」,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2. 09.	272
	「[사설] '인권의 날'과 학교 차별」, 경향신문, 2006. 12. 10.	275
<b>부산 배정중</b>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폭력의 교육을 중 단하라!’ -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공동 기 사회견」 보도자료, 2007. 07. 10.	27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징 계시도에 대한 의견서」, 2007. 03. 14.	285
<b>서울</b>	정혜규 기자, 「학내시위 이후...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 [교육청소년] 학내에서 두발자유 시위 개최한 이하람(고2)군 인 터뷰」,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7. 03. 23.	288
<b>중앙고</b>	박조은미,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 를!」, 레프트21, 2007. 04. 11.	29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중앙고등학교 두발자 유 요구 1인시위 보도자료」, 2008. 04. 18.	292

	김상정 기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두발 자유 외치는 서울중앙고 이하람 학생」, 교육희망, 2008. 04. 27.	297
	전종희 기자/박수진 기자, 「[인권 OTL]시퍼런 가위와 금속탐지기, 무서운 학교」, 한겨레 21, 2008. 05. 15.	298
<b>경기 안양 평촌고</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양 평촌고,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2007. 04. 05.	3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 구제 제 1 위원회 결정」, 2008. 02. 28.	319
<b>세민 정보고</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의견서」, 2007. 04. 16.	323
	「수원 천천고의 이상한 교육방법 - [동영상1]4일오후, 천천고 1학년학생들 오리걸음 얼차려 받아」, 수원시민신문, 2007. 06. 06.	325
	「[인권이슈]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다산인권, 2007. 06. 14.	326
<b>수원 천천고</b>	「수원 천천고 ‘오리걸음’도 교육인가 - <동영상2>천천고, “오리 걸음 약간 있었지만 학생들 지도방법”, 청소년인권네트워크, “군사주의문화 얼차려 금지해야”, 도 교육청 '체벌금지 지도감독하겠다'...‘학생인권현장’ 제정 여전히 검토중」, 수원시민신문, 2007. 06. 15.	329
	「'체벌없는' 자율학교는 언제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수원지역교교 학생들 탄원서 공개」, 수원시민신문, 2007. 06. 15.	332
	<천천고 학내 유포 전단지>, 2007. 12.	338
	「네트워크로 보낸 천천고 학생의 쪽지」, 2007. 12. 03.	339
<b>인천 산곡중</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7. 04. 09.	34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2007.4.10.	35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사태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7.4.25.	361
	장호영 기자, 「"머리 길다고 허벅지 맞아 피멍 들었어요" - 부평 사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재논란... 교육청·해당학교 "사실 아니다"」, 부평신문, 2008.4.2.	372
	「울산 신정중학교, 옥동중학교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압수중단 등 학생인권 보장 학내시위 보도자료」, 2007.5.10.	374
	김석현, 「[투고] 2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외치며 학내시위 - 신정중에서는 시위 주도 혐의로 학생 20여명 징계 추진 논란」, 울산노동뉴스, 2007. 05. 14.	382
<b>울산 신정중</b>	박조은미,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레프트 21, 2007. 05. 26.	387
<b>옥동중</b>	공현, 「울산 신정중/옥동중 상황정리」, 2007. 05.	38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 구제 제 1 위원회 결정」, 2008. 09. 25.	391
	권오성 기자, 「인권위 “중학생 교내 집회, 강제해산은 부당”」, 한겨레, 2008. 10. 21.	407
	마영선 기자, 「<속보>'효정고 교사 폭력사태' 일파만파 - '아수나로' 가해교사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대책마련 촉구」, 울산포커스, 2007. 12. 07.	408
<b>울산 효정고</b>	「효정고 학운위 '서정운 학생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2007. 12. 10.	410
	구덕기, 「효정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 - “불온, 저항, 불복종은 학생의 행복 위한 권리와 의무”」, 울산노동뉴스, 2007.12.12.	414

	진성고등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두발·복장 자유, 소지품검사 폐지, 체벌금지에 대한 건의사항」, 2007. 12. 28.	419
	「진성고 학생들이 쓴 대자보 1」, 날짜 미상	425
	「진성고 학생들이 쓴 대자보 2」, 날짜 미상	42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진성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취재요청서」, 2008. 02. 19.	431
	성하훈 기자, 「정권바뀐 올해부터 청소년 비판의식 필요없다? - 한 학교의 시대착오적 교칙... 진보단체, 청소년 인권 자율 지켜낼 것」, 오마이뉴스 2008. 03. 14.	434
진성고	강이현 기자, 「"1000명의 인권을 구해주세요" - '진성고 동영상 확산...학교 "음해세력이 조작한 것"」, 프레시안, 2008. 03. 27.	440
	유덕영 기자, 「'진성고 UCC' 진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파문 계속」, 세계일보, 2008. 03. 28.	444
	공현, 「진성고 사건 결과 정리」, 2008. 05. 02.	446
	이장연 기자, 「진성고 때문에 다시 검찰에 가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8. 09. 06.	450
	공현,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과란만장' 제 6호, 2008. 04. 14.	454
	공현, 「진성고등학교를 기억하십니까? 」, 2009. 10. 16.	456
인천 선인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선인고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 징계시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2008. 04. 10.	467
인천 예일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인천 예일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와 관련해서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08. 12. 16.	469

**3부**

**청소년인권 거리 행동**

475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홍보 캠페인> 소장사진, 2006. 04. 22.	479
유윤중,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인권오름 제 3호, 2006. 05. 10.	481
성현석 기자, 「청소년 인권, 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제」, 프레시안, 2006. 05. 12.	485
<5. 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웹자보, 2006. 05. 14.	489
5. 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선언문>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2006. 05. 14.	491
박희정 기자, 「사그라지지 않는 십대들의 외침」, 여성주의저널 일다, 2006. 05. 17.	492
위풍당당 청소년들, 「“일어나! 우리가 바뀌어야 해!” - ‘학교 성역’ 허무는 위풍당당 청소년들」,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0.	495
박종식 기자, 「두발자유 힘찬 페달을 밟아라」, 한겨레, 2006. 06. 18.	499
<두발자유원정대, 청소년인권 위한 거리행진> 웹자보, 2006. 06. 18.	500
<두발자유원정대, 청소년인권 위한 거리행진> 소장사진, 2006. 06. 18.	50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와 교육부 관계자 면담(총3매)」 보도자료, 2006. 06. 29.	503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면담> 소장사진, 2006. 06. 28.	50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국릴레이 1인시위 기획서」, 2006. 07.	508
정혜규 기자, 「“학생인권 개선하라” 전국동시 1인시위연다」, 인터넷뉴스 마이러스, 2006. 08. 01.	509
성현석 기자, 「"시위 외에는 방법이 없었느냐고요?" 서울 동성고 교생, '학생인권에 관심 촉구' 교육청 앞 시위」, 프레시안, 2006. 08. 07.	511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공동준비위원회, 「'4.14-미친학교를 혁명하라! 그 시작을 알리는 청소년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7. 04. 10.	513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웹사이트와 홍보문, 2007. 04. 14.	519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홍보자료, 207. 04. 14.	521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소장사진, 2007. 04. 14.	522
유윤중, 「[기교] 학교는 미쳤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되었다. - 4.14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청소년인권 집회를 무사히 끝마치고」,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529
「다른시각 다른분석 - ‘미친학교’와 ‘청소년인권’의 앞날은?」 녹취록, 민중언론 참세상 피플파워, 2007. 05. 01.	533
남은들, 「청소년들의 외침 - 4월 14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후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과관만장’ 제 1호, 2007. 05.	540

<b>4부</b>	<b>학생의 날 행사</b>	<b>545</b>
-----------	-----------------	------------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번 학생의 날도 공칠 텐가?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로 가는 학생인권 탕탕볼!!」 제안서, 2006. 10.	549
-------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 행사 취재요청」, 2006. 11. 02.	551
	「[사설]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 선언일’이 돼야」, 경향신문, 2006. 11. 02.	554
	<“우리도 할 말 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서명지, 2006. 11. 03.	555
	최승덕 기자, 「“우리는 때리지 않을 거예요” - 예비교사들, 학생의 날 맞아 어린이·청소년인권연대 선언 발표」, 프로메테우스, 2006. 11. 03.	556
	신청이 기자, 「학생의 날, 학생인권의 공 굴려요 - [학생의날]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아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 진행」,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1. 04.	559
	김오달, 「"우리는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원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대자보, 2006. 11. 05.	56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1월 3일(토) 학생의 날 청소년 행동기획」, 2007. 11. 03.	566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11/3(토) 2시 : 돌아온 학생의날, 저항&부활> 웹자보, 2007. 11. 03.	568
2007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의 날 선언문> ‘학생의 날’은 없다」, 2007. 11. 03.	569
	인디코,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프레스이안TV] '학생의 날'에 신나게 태클걸기」, 프레스이안TV, 2007. 11. 05.	571
	최은지,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인권오름 제 78호, 2007. 11. 06.	57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2008년 학생의 날 - 학생의 날을 진정 학생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라」 성명서, 2008. 11. 03.	579
2008년	김가에 기자, 「정부의 ‘학생의 날’ 기념은 모순!」, 뉴스웨이, 2008. 11. 03.	581

	한날, 「다시 ‘학생의 날’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제 9호, 2009. 01.	582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맞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웹자보, 2009. 11. 01.	58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외,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맞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9. 11. 01.	586
2009년	신철훈 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1318바이러스, 2009. 11. 02.	626
	발칙한, 「[뛰어보자 폴짝] 숫자로 본 시궁창: 학교 안에서도 인간일 수 있기를」, 인권오름 제178호, 2009. 11. 10.	629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홍보문, 2009. 11. 03.	633
	진성철 기자/김태균 기자, 「명동성당서 '학생의 날' 행사 열려」, 연합뉴스, 2009. 11. 03.	634
	80주년 학생의 날 기획단, 「학생의 날 80주년 선언문」, 2009. 11. 03.	635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0. 11. 03.	640
2010년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소장사진, 2010. 11. 03.	645
	강성란 기자,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청원 서명 나선다” - 81돌 학생의날 맞이 청소년 활동 활발」, 교육희망, 2010. 11. 03.	646
<b>5부</b>	<b>기타 학생인권 활동</b>	<b>649</b>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정보비공개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서, 2006. 05. 03.	653

남종영 기자, 「내가 학도호국단원이라고?- 학생들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안보 이유로 자료공개 거부,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한겨레21 제614호, 2006. 06. 14.	65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교육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안내」, 2006.	660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웹사이트, 2007. 06. 09.	665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홍보자료, 2007. 06. 09.	666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소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2호, 2007. 06. 11.	668
공현, 「폰질을 허(許)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온라인 카페( <a href="http://cafe.naver.com/asunaro">http://cafe.naver.com/asunaro</a> ) 연구·논리 자료실, 2007. 05. 09.	672
이즈,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인권오름 제170호, 2009. 09. 16.	67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내 종교자유를 지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강의석 1심 승소 판결 환영 논평, 2007. 10. 05.	68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고등법원의 판결 자체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벗어났다」, 강의석 항소심 판결 긴급 규탄 논평, 2008. 05. 09.	684
배경내,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강의석 씨 2심 판결의 문제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강의석 항소심 판결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8. 06. 24.	685
임정훈, 「평택 기고, 친구 신고하면 상점준다?- 학교장 쓰레기학교 발인도 논란, 교육청 게시판 항의글 폭주」, 오마이뉴스, 2009. 06. 04.	694

찬욱,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 점제-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인권오름 제162호, 2009. 07. 22.	700
배경내, 「녹화사업, 그린마일리지제로 돌아오다」, 세상을 두드리 는 사람 제41호, 2009년 11·12월호	704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실태 예비 조사> 설문지, 2009. 09. 23.	709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실태 예비 조사> 결과 미발표 자료, 20 09. 10.	712



# 1부

##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 개요

#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2006년 3월 19일 첫 결성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첫째 집중 사업 가운데 하나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정운동에 힘을 신기로 결의했다. 학교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2006년 네트워크는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집회 개최, 인권침해 학교에 대한 스쿨어택 감행, 두 발자유 자전거 행진,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의 날 맞이 탕탕볼 굴리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여내면서 학생인권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청소년의 서명을 모으는 활동에 매진했다. 한편으로 2006년 5월 출범한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모인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에도 연대하면서 온라인 서명운동, 국회 기자회견, 학생인권 사진전 개최, 국회 앞 1인시위 등의 활동을 함께 벌여나갔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2007년에도 이어졌으나 2006년에 비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에만 집중되면서 학생인권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벌금지에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애매모호한 입장 등에 발목을 잡히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목소리는 점차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서명용지 전달, 면담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해 12월 14일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삭제된 채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만이 삽입된 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경내, 「움툼」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인권하루소식 제 2985호, 2006. 02. 07.

#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배경내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목표이다.

###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지난해 11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그동안 교육·청소년·인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오는 14일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 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기본법을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자치활동, 징계절차 등을 다룬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은 각급 학교에서 제정권을 갖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학교의 인권 보장 의무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인권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구성, 학생회 법제화, 체벌금지, 신체의자유·사생활의자유·표현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 등 학생인권 내용의 구체화, 정규시간 외 0교시·강제학습·용의복장규제·차별 금지, 교육부의 인권실태조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학생인권문제를 대부분 포괄하는 개정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조(학교규칙)에서는 학칙으로 인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않도록 하고 학생생



한 청소년인권활동가가 직접 제작한 패러디 포스터 [출처] 싸울아비(cafe.naver.com/webssaulabi.cafe)

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18조(학생의 징계)에서는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의무 등을 부가했다. 최종 개정안은 늦어도 2월말까지 확정돼 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 인권단체들과 청소년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학생인권 보장 활동이 이번 법 개정 추진에서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금지 대상을 명확화하면 학교현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송 정책연구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 광주 학생권리조례제정운동 막바지 이르러

한편, 광주에서는 시 조례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꾸리고 20여 차례 의견 조율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지역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만든 뒤, 오는 4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이름으로 조례안을 발의,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 조례제정 과정에는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는 장휘국 의원이 적극 결합하고 있는데 다 교육위원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학생권리조례 초안에 담긴 내용은 민주노동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조례안은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내거나 관제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행위, 교직원 화장실 청소 등 불필요한 노동 강요 행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적 폭력 행위, 학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 자의적인 학생 게시물 삭제 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생리공결제 도입, 학생의 날 기념행사 보장, 문화활동과 자유로운 교제 보장, 사물함과 탈의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두발·복장 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고, 다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의견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김현 씨는 "조례가 제정되면 좀체 바뀌지 않는 학생생활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나의 시범 모델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의 조례제정이나 상위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학생인권 둘러싼 논란 가열될 듯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광주학생권리조례안이 발의되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까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두 법안이 후퇴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학생회 법제화와 체벌금지 등은 논란의 최선두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학생회 법제화는 보수언론과 사학재단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구노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학생회 법제화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을 때도 보수언론과 사학재단은 ‘중고교를 정치관으로 만들려 하나’,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전교조 전위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 바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보수집단은 물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사단체의 동의조차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체벌은 현 학교구조 안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필요악'일 수 있다는 게 교사단체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김진숙 위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체벌을 필요악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먼저 체벌을 금지한 뒤 체벌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래,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이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인권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이자 결실로 끝맺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청소년 두발자유 요구 집회 모습 [출처] 청소년인권포럼 아수나로 카페(cafe.naver.com/asunaro)

배경내,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제 2993 호, 2006. 02. 17.

##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배경내

"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짝퉁이고,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천이 이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학교 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의식도 성장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14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청소년위원회(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모습

권법안' 청소년토론회 현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법 개정과 함께 법 내용을 현실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근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기준을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된 민주노동당은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최초로 마련된 '학생인권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곳으로

이날 공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은 학칙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금지 민주적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권한 명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체벌 금지 0교시,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등 금지 학교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 자치활동 보장과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생회 권한 강화,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조항	주요 개정 내용
8조(학교규칙) 개정	○ 학칙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금지 ○ 학칙 중 학생생활 관련 사항의 제·개정시 총학생회와 협의
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개정	○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총학생회 구성 ○ 학생회 임원 자격기준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총학생회 심의의결권 명시(학칙의 제·개정 발의, 총학생회 회칙, 총학생회 예산 등)
18조(학생의 징계) 개정	○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소명권, 재심청구권 등 부여 ○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체벌) 금지
18조의2(학생의 인권보장) 신설	○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조치 강구 의무 부여
18조의3(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신설	○ 0교시, 강제 보충·야간 자율학습,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등 금지
18조의4(인권교육 등) 신설	○ 교육공무원,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체계 구축 ○ 교육부 등 3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발표
31 조(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설치)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 민주노동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증언해 나갔다. '발전하는 학생회 가져' 이이라 씨는 현재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기보다 도시락 나르고 수능 기원 떡값 걷고 학교청소나 하는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씨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극히 필요한 권한인 예·결산권이나 대의원회의 개최권, 학생회 사업 결정권 등 이러한 권한 모두는 학생회가 아닌 교사들로 이루어진 지도위원회에서 갖고 있다"면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자치권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명시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더하기' 최미연 씨는 시험을 못봤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마음에 피멍이 들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체벌은 교사의 절대권력을 상징하며 학생들에게 무기력만 안겨주는 폭력"이라며 체벌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고1이 된다는 목진성 씨는 "지난해 두발규정 개정 회의가 열렸으나 참가자는 학생회장과 각 부장, 선도부원들뿐이었고 회의 시작 전 학생부장 선생님이 자율화하지는 의견은 상정조차 말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회의에서 형식적인 발언만이 나왔다"면서 "갑작스레 교무실에 불려가 매를 맞고 가위로 머리가 잘리지 않을 자유를, 아침에 가슴을 졸이며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기회를 줘야 성장도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나갔다. 서울 D고등학교의 오모 씨는 "지금까지 주요 역사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이 있어왔다.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다. 학교가 모든 걸 막고 있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제한을 걸고 있다. 벼룩을 유리병에 가둬놓고 위에 유리판을 덮어두면 나중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만 뽀뽀기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대신 학교 측이 별점제를 강화해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 연구포럼 이수나로' 조상신 씨는 "학교에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권실태조사 때 거짓 보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서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은 개정안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렇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정안 마련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의 몫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모 씨도 "학생들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법은 사문화되고 만다"면서 학생 청소년들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내달 2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6. 3. 7.

발의자 : 최순영 의원

### 제안이유

---

---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初·中等教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初·中等教育法” 을 “초·중등교육법”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칙 중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

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지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자치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직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계최악 입시지옥 아이들을 구하자”

주당 평균 학교 수업시간(보충·심화수업 포함) 37.1시간으로 세계 1위. 학원 수강 등 과외 수업시간 주당 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하루에 4~6시간 밖에 못자는 고교 3학년 학생 비율 3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2003 피사)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입시 노동’ 실태다. 이런 살인적인 입시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교원·학부모·청소년단체들이 손을 맞잡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홍사단 본부에서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체벌 금지 등), 학생 자치권 보장(학생회 법제화 등),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내신·수능·대학별 고사를 동시에 반영하는 입시전형 개편 등),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급식 의무화 등),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우열반 편성 금지 등),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강제적인 보충수업, 휴일 강제 등교 금지 등),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보장(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상설 연대 조직을 결성해, △아이들의 삶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토론회 △교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체벌·폭언 안하기, 학생회의 민주적 활동 지원하기, 강제적인 조기 등교 참여 안하기와 같은 연쇄 교사 자정 선언 운동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3불(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어입학제 금지) 법제화등 아이들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입법 청원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최승덕 기자, 「중고생 5명 중 1명만이 “맞은 적 없다” - 참교육연구소 ‘중고등학생 생활과 인권, 자치와 복지 실태와 의식 조사’ 발표」, 프론테우스, 2006. 07. 27

## 중고생 5명 중 1명만이 “맞은 적 없다”

### 참교육연구소 ‘중고등학생 생활과 인권, 자치와 복지 실태와 의식 조사’ 발표

최승덕 기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 가장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78.7%는 집과 학교에서 체벌당한 적이 있다.

#### 청소년, 인권 침해 인식하나 개선의지는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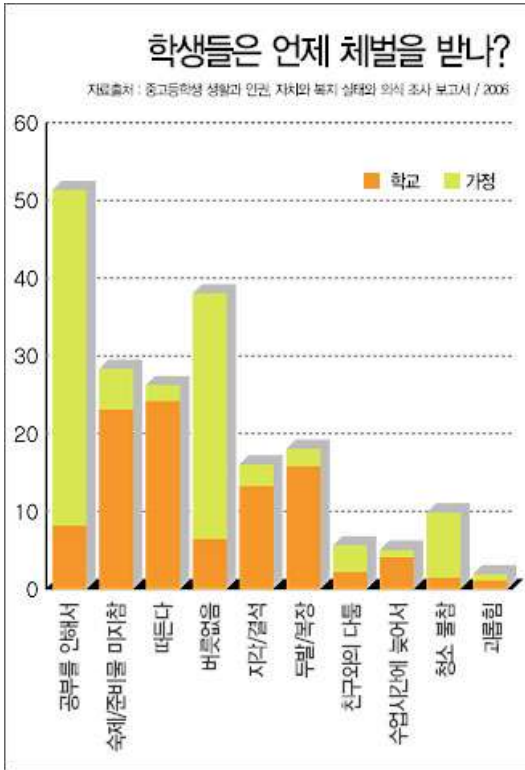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수도권 중·고등학교 재학생 24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7%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체벌 시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는 때’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답한 학생들도 8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건의나 의견을 교사가 묵살할 때(86.2%)와 두발규제에 대한 제재(85.4%)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에 비해 개선의지나 학생 자치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학생회에 대해 관심있다’는 응답이 22.7%인 반면 ‘별로 또는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8.2%가 동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대답도 31.8%나 됐다

학급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주제(388명)와 담임교사가 정해진 주제(244명)의 합계가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417명)보다 많다 훨씬 많았다. 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급회의 안전으로 낸다는 의견도 6.2%에 불과했다. 고등학생들은 학급회의가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 부족(31.8%)과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26.3%)이라고 꼽았다.

참교육연구소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며 “기껏해야 학교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급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회의 결과가 학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프로메테우스

다. 가정 체벌 빈도는 더욱 크게 감소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61.0%와 66.2%가 줄었다고 답했고 5.8%와 4.0%만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참교육연구소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문화의 변화에 비해 학교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변화하고 있다”며 “가정에서의 체벌이 급감한 것으로 볼 때, 학교 체벌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6일에 있었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 없는사회 등 16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의 사전 행사로 치러졌다. 전교조는 “세계 최장의 입시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저당 잡힌 채 학습노동의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권·자치권·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아이들살리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체벌 감소 추세...학교는 느리다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55.7%로 나타났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경험한 학생은 78.7%나 됐다. 아직도 5명 중 4명은 학교에서 맞는다는 이야기다. 체벌 정도에 대해서는 학생 17.7%가 가정 체벌이 지나치다고 했으나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43.1%가 지나치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 체벌의 이유로는 떠든다(24.2%) 숙제와 준비물 때문(23.1%) 두발 복장(15.8%) 지각과 결석(1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우 ‘공부를 안한다’와 ‘버릇없다’가 각각 43.1%와 31.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은 최근 학교와 가정 모두 체벌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 체벌이 줄었다(32.7%), 똑같다(51.4%), 늘었다(15.90%)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37.2%가 줄었다고 답한 반면 늘었다는 대답은 10.7%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단체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목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연대 요청서

날짜 : 2006.8.3(목)

문의 : 배경내(017-214-3550) 전누리(016-297-9803)

---

1.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 건설과 청소년 인권신장에 힘쓰시는 귀 단체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금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인권운동진영의 역량강화 및 장기적인 전략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모여 구성된 모임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올해 사업으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 통과운동 △두발자유 운동 △청소년인권운동사 연구, 정리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인권캠프 개최 등)으로 선정하고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3. 올해 결정된 네트워크의 사업인 두발자유화운동과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해 네트워크는 《5.14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두발 자전거 School Attack!!》 등의 사업을 기획해 왔습니다. 네트워크는 이 두발자유운동과 학생인권법운동을 좀 더 대중적인 청소년들의 투쟁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투쟁으로 만들고자 8월에 행진단이 각 지역도시를 돌며 거리집회를 여는 ‘파란만장 - 청소년 인권 전국행진’이라는 사업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전국행진은 서울을 출발하여 6개 도시를 찾아가게 되며,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국 행진단 규모는 약 10~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집회나 캠페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인권의 신장을 위해, 귀 단체가 본 사업에 적극 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행사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셔도 되고, 재정후원,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행사를 후원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된 제안서를 참고하시어 이메일(slhs8@hanmail.net)이나 위에 기재돼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전국행진 기획서 4쪽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청소년들의 파란 만들기!

2006년 5.14 청소년인권집회 사진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서울 기차회전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단은  
왜 이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거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인권을  
조급이라도 더 보장받으려면  
전국 청소년들의 커다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을 저 타고  
돌까 하고 있네.  
지역 상황에 따라  
시위/캠페인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아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만남의 자리도 가져야지.

행진단이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난 이미 떠날 준비를 했다네.  
<http://cafe.daum.net/youthhr>에  
참가신청을 하거나  
부분일정참가/전체일정참가 다 된다네.  
행진단에게 필요한 후원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는구만.  
주변에 홍보하는 건 기본일세.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문의 <http://cafe.daum.net/youthhr>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카페)  
전누리 016-297-9803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 저기 도시에서의 행사 참여 환영! \*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기획안

### 1. 제목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 행진

- 파란만장한 인권현실에 놓인 청소년들, 청소년을 억압하는 질서에 파란을 일으키는 전국 행진에 나선다.

### 2. 취지

- 수많은 청소년들이 탄압을 뚫고 청소년인권을 요구하기 위해 학교를 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소중한 움직임들은 그러나,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지만, 너무나 야만적인 학교에 의해 이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 이번 전국행진은 바로 지금 지방 청소년들의 소중한 움직임들을 다시 살리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행진단은 전국을 돌면서 청소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소수의 움직임을 다수의 움직임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역단체와 청소년들의 교류와 고민을 나눔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위한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홍보함으로써 법안 통과 운동에 더욱 힘을 신고자 합니다.

### 3. 날짜

- 2006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 4. 경로

- 서울 → 인천 → 대전 → 전주 → 울산 → 대구 (총 6개 도시)

### 5. 주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각 지역 청소년·인권·교육단체)

### 6. 행진단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10여명 결합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그 외 전국 행진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임.

## 7. 일정과 이동 경로

### ● 8.14(월)

- 오전 11시 - 교육부(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 오후 12시 -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청소년 1인시위자 지지방문
- 오후 3시 - 인천 도착
- 오후 4시 - 인천,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 오후 6시 - 인천 부평지하상가, 청소년들과 인권 캠페인

### ● 8.15(화)

- 오전 9시 - 대전으로 출발
- 오후 11시 - 대전 도착
- 오후 1시 - 대전 시내 청소년들과 인권 캠페인
- 오후 3시 - 대전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 오후 7시 - 진주로 이동

### ● 8.16(수)

- 오전 10시 - 전주에서 행진과 캠페인
- 오후 1시 - 전주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 오후 4시 - 울산으로 이동

### ● 8.17(목)

- 오후 2시 - 울산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 오후 6시 - 울산 집회
- 오후 9시 - 대구로 이동

### ● 8.18(금)

- 오전 11시 - 대구 거리 캠페인
- 오후 1시 - 대구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진행
- 오후 4시 -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
- 오후 8시 - 서울 도착

- \* 각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서 승합차나 트럭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예정.
- \* 미리 홍보를 통해 전국 행진 참가자와 지역 부분 참가자를 받을 예정.

## 8. 행사 방식

\* 아래의 행사방식은 지역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행진과 캠페인을 결합하는 방식, 캠페인에 이어 집회를 여는 방식 등은 지역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합니다.

### (1) 집회

- ① 장소 : 각 도시에서 청소년이 많은 변화가 혹은 교육청 앞 (사전 정보 필요)
- ② 시간 : 약 1시간~1시간 30분. 서명운동 병행한 사전 캠페인과 준비시간 포함해서 2시간.
- ③ 컨셉
  - 캠페인과 집회의 중간 형태. 무대 없이 돛자리를 깔거나 해서 길바닥에서 진행. 선전판들(이젤 사용)과 가판대, 또는 천막으로 행사의 공간적 틀을 만듦.
  - 변화가에서 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여 ‘구경꾼’과 ‘참가자’의 경계를 흐리게 함.
- ④ 10~15명 안팎의 행진단이 전국을 순회. 각 지역에서 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활동가들과 결합하여 행사. 몇 개 도시만 같이 도는 부분참가자도 있음.
- ⑤ 낮에 홍보전을 하고 저녁 무렵이나 오후 늦게 행사 진행. 사전 홍보전이 가능한 지역은 며칠 전부터 사전 홍보전에 들어갈 것.
- ⑥ 행사에 들어갈 내용 :
  - △ 문화 행사 : 청소년 참가자들의 노래, 풍물 공연 등
  - △ 참가자들이 피켓 들고 변화가 돌기
  - △ 발언 :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의의, 학생인권법안 소개, 학생인권현실 비판 등
  - △ 노래, 구호 등 함께 외치기
  - △ 참여마당
    - ◎ 자기 학교에서 있던 일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기
    - ◎ 분필, 락카 사용해서 ‘모두 함께 만드는 청소년인권’
    - ◎ 상징 의식: 인권장벽 부수기
    - ◎ 그 외 각 지역 사정에 맞추거나 지역 청소년들이 제안한 기발한 행사 내용.



## (2) 캠페인

① 장소 : 각 도시에서 청소년이 많은 변화가

② 시간 :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③ 컨셉

- 선전전과 같다. 거리에서 가판대와 앰프, 주변에 선전판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가판대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다. 또한 지나가는 시민들이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도록 유도한다.

## (3) 행진

① 장소 :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변화가 거리를 중심으로

② 시간 : 약 30분 ~ 40분 정도

③ 컨셉

- 차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한다. 먼저 차량이 선두에 서고 현수막을 그 뒤로 이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차량에는 앰프를 설치하여 연사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음악을 틀어도 좋고 구호나 노래를 불러도 좋다.) 차량 뒤에는 행진단이 피켓을 들고 이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몇몇 행진단은 각 홍보물들을 구경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사전에 약속된 장소까지 도착 후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4) 청소년인권 활동에 관한 지역 간담회

① 장소 : 지역 단체 사무실

② 시간 : 2시간

③ 대상 :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단체 활동가, 청소년

④ 컨셉

-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고, 청소년 인권침해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든다. 그 속에서 ‘지역에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9월 달에 전국 동시다발적인 움직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고 공동의 행동을 약속한다.

## 9. 행진단 필요 물품

① 숙식에 필요한 물품 : 침낭이나 담요, 식량

② 행사 물품 : 현수막, 앰프 등 음향장비, 이젤(선전판), 가판대, 홍보전단, 돗자리, 서명용지, 분필, 락카, 촛불, 피켓, 선전판, 매직, 포스트잇, 나무합판이나 상자

## 10. 연대단체에 협력 요청 사항

### [전체]

- ① 재정 지원 : 후원금 납부
- ② 물품 지원
  - 이동 차량
  - 물품 대여를 포함한 지원 : 앰프, 선전물 등
- ③ 행사 홍보 (웹자보 등 기본 홍보물은 주최단체에서 제공)
- ④ 14일 출발 기자회견 참가

### [지역 단체](전교조지부,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등)

- ① 행사 장소 소개(캠페인이나 집회 가능한 변화가)
- ② 집회 신고
- ③ 행사 지역 홍보(웹자보, 보도자료 배포 포함)
- ④ 행사 결합 & 참가자 조직(공연 동아리 섭외, 청소년 참가 독려 등)
- ⑤ 물품 대여 : 앰프, 돛자리 등
- ⑥ 간담회 조직 & 장소 제공
- ⑦ 잠자리 제공
- ⑧ 식사 제공도 대환영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T. 02)741-5363 F. 02)741-5364 cafe.daum.net/youthhr

**제목 : 청소년인권활동가 지역 간담회 참여 요청**

**문의 : 전누리(016-297-9803), 배경내(017-214-3550)**

---

1.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나요.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6년 초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 단체입니다. 2006년 5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이라는 행사를 준비하였고, 청소년인권캠프, 교육청 앞 전국 릴레이 일인시위, 두발자전거 스쿨어택 등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3.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몇 개 도시를 순회 하면서 학생인권법안 통과, 두발자유 등을 외치는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행진에 참여하는 10~15명의 활동가들은 지역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역 청소년인권 활동가분들(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 포함),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4.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이 소통되고 공동행동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연대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간담회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단체와 협의하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 만나고 싶었어요

## 서울지역명 청소년인권활동가 간담회

때 : 2006년 8월 일 시

곳 :

### ◇ 날도 더운데 왜?

- ♡ 청소년인권 활동가들끼리 안면도 트고 지역간 연대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 ♡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활동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합니다.
- ♡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 ♡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 ◇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들

- ☞ 각자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야기
- ☞ 활동하면서 또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
- ☞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
- ☞ 하반기 전국 공동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

두발자유! 학생인권법안 통과!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총 기획

## 1. 기획 취지

- 수많은 청소년들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학교를 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소중한 움직임들은 그러나, 서울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여러 소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지만, 너무나 야만적인 학교에 의해 이내 본격적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전국행진은 바로 지금 전국 곳곳 청소년들의 소중한 움직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행진단은 전국을 돌면서 청소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소수의 발걸음을 다

수의 발걸음으로 만들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역단체, 청소년들과 활동 내용을 교류하고 고민을 나눔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홍보함으로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신고자 합니다.

## 2. 행진 주최

### ■ 주최

: 전교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 ■ 각 지역별 주최

[인천] 전교조 인천지부

[대전] 전교조 대전지부

[전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울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당 울산시당/ 울산교육시민회/ 울산YWCA/ 청소년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대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 ■ 후원

: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노동당/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관심있는 개인들

## 3. 행진단 주요 일정

: 서울 → 인천 → 대전 → 전주 → 울산 → 대구 (총 6개 도시)

● 8.14(월) 서울~인천

11:00 교육부(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

12:00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청소년 1인시위자 지지방문

15:00 인천 도착

16:00 인천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18:00 인천 시내 캠페인 (곳: 부평역 광장 & 부평지하상가)

\* 인천에서 숙박 (숙박장소 도움준 곳: 인천노동자교육기관)

● 8.15(화) 인천~대전~전주

9:00 대전으로 출발

13:00 대전 시내 캠페인 (곳: 으능정이 사거리)

16:00 대전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곳: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19:00 전주로 출발

\* 전주에서 숙박 (곳: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 8.16(수) 전주~울산

10:00 전주 시내 행진과 캠페인 (곳: 객사길)

13:00 전주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16:00 울산으로 출발

\* 울산에서 숙박 (곳: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관)

● 8.17(목) 울산~대구

13:00 울산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울산참여연대 교육관)

16:00 울산 시내 집회 (곳: 성남동 차없는 거리)

20:00 대구로 출발

\* 대구에서 숙박 (곳: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

● 8.18(금) 대구~서울

10:00 대구시 교육청 앞 집회 (곳: 교육청 앞)

11:00 대구 시내 캠페인 (곳: 동성로)

13:00 대구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우리세상)

16:00 서울로 이동

#### 4. 주요 행사 내용

##### 1) 행진단 출발 기자회견

- 곳 : 교육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 때 : 14일 11시
- 순서
  - 전국행진 취지와 주요 일정 소개
  - 연대사 - 전교조, 교육공동체 나다
  - 행진 참가 청소년 발언
  - 함께 부르는 노래
  - 행진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파란만장 학생인권

##### 2) 캠페인

- 곳 : 인천 부평지하상가 / 대전 으능정이거리 / 대구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
- 때 : 인천 14일 18시 / 대전 15일 13시 / 대구 18일 11시 (1~2시간 진행)
- 순서
  - 자전거 홍보
  - 시작을 알리는 몸짓
  - 캠페인 취지를 알리는 발언 (1명씩 돌아가면서)
  - 진단지 배포와 학생인권법안 국회 통과 서명
  - 참여 프로그램 : 우리 학교 이야기, 교복을 입은 허수아비에 '우리의 바람' 쓰기

##### 3) 행진

- 곳 : 전주 객사길
- 때 : 16일 10시
- 순서
  - 행진 시작 선언
  - 동아리 공연
  - 자전거와 자동차 따라 사람들의 행진
  - 객사 주위 시내를 한 바퀴 돈 뒤 객사 중앙에 자리잡고 캠페인(캠페인 형태는 동일)

#### 4) 집회

- 곳 : 울산 성남동 차없는 거리/ 대구 교육청 앞
- 시간 : 울산 17일 16시/ 대구 18일 오전 10시
- 순서
  - 시작 전 캠페인을 겸한 자전거 홍보
  - 몸짓, 동아리 공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 노래 부르기/구호 외치기
  - 참가자 발언, 지역단체 활동가 발언
  - <이건 아니잖아> 등 개그 프로를 비롯한 패러디 퍼포먼스
  - 청소년인권행동 촉구/결의 발언
  - 참여 행사 : 허수아비에 생명을!/ 학생인권 입학식/ 분필 퍼포먼스/ 삼행시 짓기

#### 5) 지역 간담회

##### ◇ 날도 더운데 왜?

- ♡ 청소년인권 활동가들끼리 안면도 트고 지역간 연대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 ♡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활동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합니다.
- ♡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 ♡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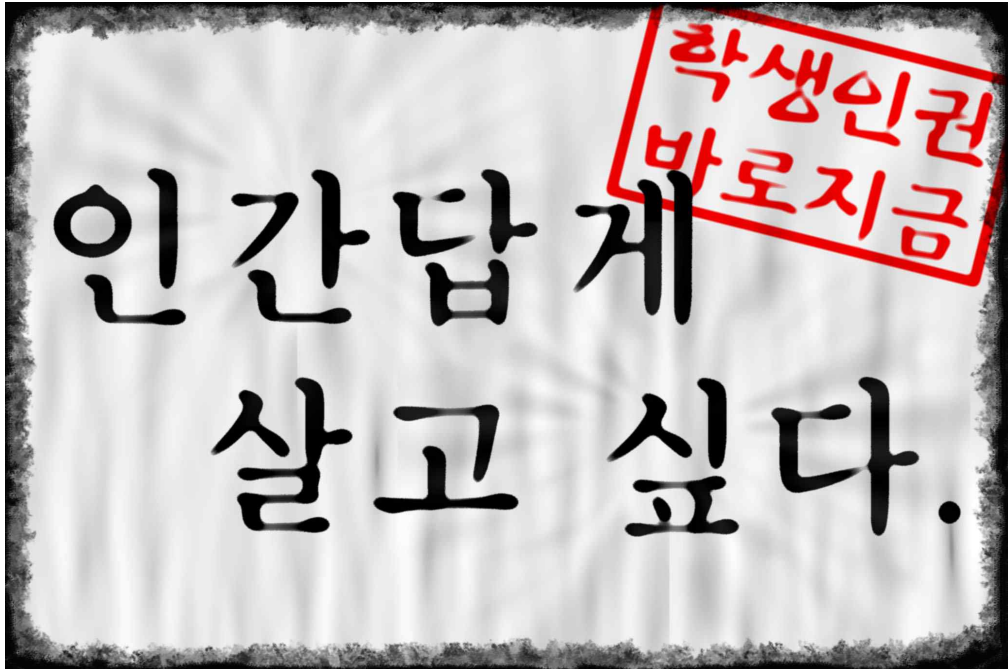
##### ◇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들

- ☞ 각자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야기
- ☞ 활동하면서 또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
- ☞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
- ☞ 하반기 전국 공동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

예) 국회앞 청소년 시위나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정기 캠페인, 학생인권침해·저항 사례·학생인권법 서명 모으는 온라인 이슈페이지 개설, 9월초 전국 동시다발 스쿨어택, 전국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 개최, 권역별 청소년인권행동 조직 등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거리 홍보용 스티커, 2006. 08. 14.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출발 선언문」, 2006. 08. 14.

##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출발 선언문

청소년들의 불온한 몸짓, 전국적인 파란을 위하여!

청소년인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외계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21세기 현대 한국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은 어른들 말 잘 들으며 자라서 사회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바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학벌, 또는 돈 잘 벌 수단을 얻는 것이라고. 아니 이런 뺨알앵알. 청소년들의 진정한 인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히 말하건대, 청소년들은 지금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사회와 교육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를 ‘체벌’이란 이름을 붙여 교육적 폭력이라고 정당화시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을 선도하려고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특정한 외모만을 강요하는 두발규제나 복장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만히 보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말들은 너무나 비슷 비슷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와서 질릴 정도입니다. 체벌이나 두발규제가 없으면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붕괴될 것이라고, 임금을 성인과 똑같이 주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경제적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거리를 싸돌아다니면 엄한 짓이나 한다나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사랑을 하며, 그러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쩌냐고도 하더군요. 인권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은 불량하고 불온하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였는지 뭔지 하는 책에서 배웠던 거 같습니다. 사회 질서의 유지 목적은 바로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부당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후천성 개념결핍증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질서를 고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청소년들은 이미 옛날부터 잘못된 사회에 개기고, 맞장을 뜨며 세상에 파란

을 일으켜 왔습니다. 징계의 위협에도, ‘왕따’라는 치사한 보복에도 두려움 없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결과물로 청소년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최순영 의원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의 인권 함성과 개김성의 발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소년들의 공개적인 행동이 없었던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전국적 청소년인권행동의 연대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우리는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이번 행진에서 찾아가는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 이 5개 도시에서라도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불벌더위를 뚫고 돌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짓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들이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진에 들이는 노력들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불러오는 타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전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의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길을 떠납니다.

2006년 8월 14일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

최병성 기자, 「 ‘청소년 인권’ , 전국연대 조직 본격화 - 청소년 인권활동가, 5일간의 전국행진 나서 」, 뉴스 앤뉴스, 2006. 08. 14.

## ‘청소년 인권’, 전국연대 조직 본격화

### 청소년 인권활동가, 5일간의 전국행진 나서

“청소년들은 지금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사회와 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를 ‘체벌’이란 이름을 붙여 교육적 폭력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살인적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외치는 인권선언이 교문을 넘어섰다. 지난 해 ‘두발규제 조항 폐지, 종교선택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여전히 횡행하는 두발규제, 종교사학의 학생탄압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국 연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 것.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 전국행진단’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박5일간의 전국행진 일정을 발표했다.

전국행진단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인천·대전·대구·전주·울산 등 6개 도시를 돌며 학생인권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행진단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각의 방문 도시에서 인권 캠페인, 집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청소년 전국 행진단의 기자회견. ©뉴스앤뉴스

바탕으로 오는 9월 ▲전국 동시다발 스쿨어택 ▲전국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학생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청소년 시위 및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정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학내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체벌 금지, 0교시, 강제 자율보충수업 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 교육위에 계류되어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지난해 청소년들이 징계와 왕따를 감수하고 청소년 인권 보장을 외친 결과물이 학생인권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오는 9월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다양한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뉴스앤뉴스

### "청소년 인권, 여전히 각박한 탄압의 위험에 놓여있다"

청소년 전국 행진단을 이끌고 6개 도시 순례에 나서는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는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으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변화지만 아직 다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각박하고 탄압의 위험이 상존해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만나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행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행진에 나서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찬연군을 지지방문하고 오후 4시 인천에 도착, 지역 청소년들과의 간담회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소장사진, 2006. 08. 14.























김용한 기자, 「청소년인권행진단, '꽃으로도 때리지 마' - 파란만장 행진단, 대구서 '학생인권법' 법제화 서명활동 벌여」, 오마이뉴스, 2006. 08. 19.

## 청소년인권행진단, '꽃으로도 때리지 마'

### 파란만장 행진단, 대구서 '학생인권법' 법제화 서명활동 벌여

김용한(news4u) 기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떤 체벌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구 지역의 체벌문제(모 고등학교 5분 지각 200대 체벌)를 성토향는 청소년들의 항의시위가 열렸다.

대구에 들린 '파란만장 행진단'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단체로 지난 14일 서울을 출발해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등 6대 도시의 교육청 앞에서 두발자유,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사랑의 매가 무서워요’ ‘수백대를 때려야만 문제가 되느냐.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는 종이 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청소년들에게는 분노와 체벌에 대한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듯 했다.

전북에서 참가했다는 이민영 학생은 “학교가 좋은 성적을 강요하는 상황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생이 말할 수 있는 권리나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 참가했다고 말한 김통일 학생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는 마치 감옥과도 같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대구시교육청앞에서 파란만장 행진단원들이 모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체벌에 대해 규탄하며 교육청에 대책을 촉구 하고 있는 광경 © 김용한



△ “사랑의 매란 없다 체벌은 사회적약자를 짓밟는 권력”이라는 팻말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 © 김용한



최근 벌어진 5분 지각, 200대 체벌 사건에 대해 학생들은 대구시교육청을 성토했다. © 김용한

서울에서 사범대학에 다닌다는 최영균 대학생은 “똑같은 교육과정, 군사주의에 만연한 군사식 교육을 떨쳐 버리지 않고는 학생인권은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발제한, 체벌, 강제보충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여 징계를 받았다는 오병현군은 “학교에는 학생은 없고 오직 교장이나 학교교직원만 있을 뿐”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싸워나가자”며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시간 가량 항의집회를 한 ‘과란만장 행진단(단장 전누리)’은 도심지인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두발자유화’와 ‘학생인권법’ 보장을 촉구했다.

일부 행진단원들은 동년배 학생들에게 다가가 ‘학생인권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벌였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전누리 단장(대학 1년)은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서울을 넘어 지방을 돌면서 캠페인,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대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대도 문제가 된다. 체벌은 폭력을 용인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대구에서 벌어진 200대 체벌문제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들어서인지 학생들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거리에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인권법’ 법제화 요구에 서명했다.

한 여학생은 “우리 학교는 아직 그런 체벌은 없지만 고등학교 올라 갈수록 체벌이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아무개 학생도 “우리 사회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두려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두발, 교복에 대한 규제, 학교체벌, 야간자습(야자), 오후보충수업(오자)에 대한 거부감



△ 집회 참석으로 혹시 징계라도 떨어질까봐 흰색가면을 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수백대를 때려야만 문제가 되느냐 단 한대라도 우리의 인격은 부셔진다.”는 종이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김용한



△ 학생인권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경. 많은 학생들이 체벌반대, 두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서명활동에 동참했다. © 김용한

과 함께 교사에 의한 학교체벌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대구지부 서수녀 수석부지부장은 “대구는 입시교육이 가장 치열한 곳이고 그로 인해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곳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부 차원에서도 체벌 재발방지 대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고, 교사연수에서도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인권교육 코너를 마련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 분간 대구 도심지에서 캠페인을 벌인 ‘파란만장 행진단’은 지역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의 실태, 학생인권법에 대한 행진단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5박 6일 동안의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두발자유화 촉구,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체벌규탄, 학생인권법을 강조했던 ‘파란만장 행진단’은 서울 도착(19일)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 대구 도심지를 돌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파란만장 행진단원들 광경 © 김용한



유윤종,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파란만장한 4박5일」, 프로메테우스, 2006. 08. 22.

##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파란만장한 4박5일

유윤종

8월 18일 아침 8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청소년들 4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 청소년들은 바로 4박5일의 일정 중 마지막 대구에서의 ‘파란 만들기’를 해나가던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이었다. “수백 대를 때려야만 문제가 되느냐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라는 피켓을 들고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행진단은 다시 10시에 교육청 앞 집회를 가진 뒤 동성로에서 학생인권법안 캠페인을 했다. 청소년들의 파란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순회한 우리 청소년인권 행진단. 그 행진단이 서울에서부터 마지막 도시였던 대구까지 거쳐 온 발자취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 서울, 인천, 대전: 시행착오를 거듭한 이틀

14일 11시경에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청소년 지지방문 길도 쉽지 않았다. 내리쬐는 햇볕이야 이미 각오한 것이었으나, 행진 내내 옆을 따라오면서 “차도로 나가지 말라”, “여기부터는 행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가지며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뒤 행진단은 인천으로 출발했다. 식비가 1인당 한 끼 2천원으로 뼈대하게 잡혀 있었기에 김밥 두 줄로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인천에서의 지역간담회는 쉽지 않았다. 내가 사회 역할을 맡았는데,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초대하신 ‘인천 도서부연합’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어서 구상해 두었던 상과 잘 맞지 않았다. 애초에 지역 인권단체나 청소년단체에 제안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면 폐기하고 사회를 보는 내내 틀을 재구상해야 했다. 인천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학생인권법안 운동과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고, 도서부연합에는 도서부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학교로부터 당하는 인권침해 실태라도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가진 대전 간담회 © 이수나로

제안했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내내 이러한 형태의 청소년인권운동 관련 간담회가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기위안을 삼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인천 부평역에서 6시 반부터 벌인 학생인권법안 캠페인도 실수가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집회신고를 내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광장으로 정해졌다. 다행히 경찰이 변화한 상가 쪽

에서 캠페인을 해도 좋다고 했다. 일부는 지하상가 쪽으로 전단지과 서명판을 들고 내려갔고 일부는 바깥 상가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중에 평가회의 때 지하상가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갔으면 훨씬 잘 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서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도중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오셔서 “무슨 인권이야. 부모가 있는데”라며 시비를 거신 일은 아마 행진 참가자들 모두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꼽을 것이다. 목소리가 어찌나 크시던지, 캠페인 하던 행진단원들 모두를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께서 행진단원 한 명에게 폭력까지 휘두르실 듯한 분위기였으나 경찰과 몇몇 사람들의 만류로 그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떠나지 않고 계속 캠페인 하는 곳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질 수 없다며 할아버지가 저녁 8시가 넘도록 버텼다. 8시쯤 할아버지께서도 지치셨는지 자기 갈 길을 가셔서 우리도 캠페인을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너무 많이 지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데다가 인천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어서,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대전지역 청소년 분들과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기자분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서둘러 응징이 거리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전 청소년들의 반응이 인천보다 좋았는지, 아니면 행진단 사람들이 점점 캠페인에 숙련도가 쌓이는 것인지 대전 캠페인은 인천 때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전 청소년들은 대부분 환호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명에 참여해주었다. 청소년들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캠페인 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사람, 서명을 해주는 친구들에게 학생인권법안 내용을 설명해주고 질문을 하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누어서 했기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덧붙여, 울동(몸짓)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대전 간담회는 역시 경험부족을 느끼게 해주었다. 대전지역에서 조금이나마 활동하던 이수나로 친구들이 여러 사정으로 한 명도 오지 못하고, 홍보를 접한 청소년 3명만 참가했다.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간담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대전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들끼리 연락을 취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는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인천과 대전, 두 번의 간담회가 모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전주: 조금 더 힘을 내서

한편, 16일 전주에서의 캠페인은 행진단 전체가 모두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처음 10시에 객사길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을 너무 일러 사람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잡았던 객사길 중앙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힘내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상당히 적극적인 캠페인을 수행했다. 2시간을 좀 넘는 시간 동안 대전의 350여 명을 상회하는 372명 서명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전날 저녁 특별히 먹은 전주 콩나물국밥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역시 교보문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학생인권법안을 호보한 행진단 사람들의 노력 덕일 터이다.

전주에서의 간담회도, 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청소년인권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돼 인천과 대전에 비하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말을 너무 길게 하실 때는 줄 뻔했다. 전체적으로 다소 편하게 진행돼 사흘 동안의 행사로 피곤해진 몸을 추스르며 간담회에 즐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전누리 군이 사회를 잘 봐주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 전주 캠페인 거리행진 © 이수나로

## 울산: 피곤해도 즐겁게

전주를 떠날 즈음에는 연이은 행사로 인한 피로도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숙소인 전교조 울산지부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둔 김밥도 먹지 않고 쓰러져 자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17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의 숙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짐을 빼줘야 했다. 그러나 당초 열어주기로 한 4층 문이 열리지 않아 전교조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즐거운 놀이 시간도 잠시,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울산 집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울산 집회를 위해 개그프로그램 “이건 아니잖아” 패러디, 전주까지 오면서 모인 청소년들의 사연들을 읽는 라디오 사연프로그램, 이번엔 대구에서 일어난 200대 체벌 사건을 풍자한 시사프로그램 등의 퍼포먼스가 준비되었다.

울산 간담회는 함께,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홍사단, 이수나로 울산지부 등 많은 단체들이 참

가하여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이 두발자유와 체벌 중 어느 게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하거나 학생회자치론에 대한 비판 등으로 튀기도 해 지금까지 간담회 중 가장 어렵게 진행됐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가장 ‘뽕뽕한’ 간담회였으나, 처음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울산 차 없는 거리에서는 행진과 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거리가 너무 붐벼서 지나다니는 청소년들만 붙들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들 대부분이 함께 나와 도와주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생주임 선생님 서너 분이 나와서 울산지역 청소년들이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계속 지키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규제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캠페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좋았다. 길을 가다 참여해주는 청소년들이 적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 학교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적어주는 분도 많았고 교복 입힌 허수아비에 물감을 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울산 행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로가 쌓여서 몸이 안 좋았는데,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것은 싹 사라져지고 즐겁게 행사를 치르며 견뎌낼 수 있었다.

## 대구: 마지막 스퍼트!

전국행진의 마지막 도시인 대구. 특히 이번에 터진 ‘200대 사건’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교육청 항의 집회가 잡혔다. 그걸 준비하느라 더 힘들었다. 나는 전날 밤에 열린 회의 도중 그동안 쌓인 피로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다시피 잠들어버렸다. 새벽 4시가 넘도록 피켓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18일 아침 8시부터 행진단 4명의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수백 대를 때려야만 문제가 되느냐. 단 한 대로도 우리의 인격은 부서진다.” “체벌은 폭력! 학교폭력 주범은 교사다. 교육청은 대책을 수립하라!” “초중등교육법 속 체벌 허용 폐지하라.” “사랑의 매는 없다. 체벌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권력!”과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출근 시간 교육청을 둘러싼 청소년들은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어느 학교냐”는 등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집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이 내놓은 “교사 정신질환 검사” 대책을 비판하고 체벌에 대한 분명한 금지를 요구했다. 이후 남은 힘을 다해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으로 캠페인을 벌이러 갔다. 대구부터는 봉고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트럭에 끼여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대구 백화점 앞 거리도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청소년만 골라 홍보하기에 벅찼다. ‘우리세상’ 회원,



△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청소년에게 교육청 관계자가 다가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 이수나로

아수나로 대구지역 회원, 밀양에서까지 찾아오신 이계삼 선생님과 그의 제자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대구에서는 서명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자기 학교 사례를 적어 노란 메모지를 붙여주는 청소년들이 특히 많았다. 촬영을 나온 방송기자들이 행진할 때 앰프를 실은 자전거를 넘어뜨릴 뻔해 다소 행사 진행에 방해되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역 간담회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우리세상 회원들,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모임의 푸른유리님도 참가해주셨다. 행진단 분들은 쌓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줄기도 했으나, 간담회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대구지역의 청소년인권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연대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었다.

행사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단은 봉고차 운전할 분을 섭외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당초 운전하기로 한 분이 못하게 되면서 생긴 공백을 어찌어찌 때우면서 대구까지 온 것이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운전해주실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별 수 없이 14만원이나 주고 대리운전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 성과는 서명수 뿐이 아니다

이번 전국행진을 하면서 5개 도시에서 학생인권법안 통과 서명을 모은 것은 총 1660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성과는 단순히 서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래 서명운동을 하는 취지도 국회 입법청원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학생인권법안의 존재를 홍보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홍보 외에 더 큰 성과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인권엔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들이 한 번씩 모일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이다. 행진단에 참여한 청소년인권운동가들 사이에 쌓인 우애와 캠페인 기술 향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것이다.

일정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몸살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로 정말 ‘빡센’ 행진이었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 성과가 비록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 후의 좀 더 큰 몸짓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행진이 끝나고 이틀 정도 폭 쉬었으니, ‘더 큰 몸짓’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전누리, 「 ‘청소년인권’ 과 함께 파란만장한 전국행진 - 4박5일의 전국행진을 돌아보며」, 인권오름 제 18호, 2006. 08. 23.

## ‘청소년인권’ 과 함께 파란만장한 전국행진

### 4박5일의 전국행진을 돌아보며

전누리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행진이 지나간 각 지역에서는 지역 청소년들 및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진이 끝나고 잠시 지쳐버린 몸을 달래기 위한 휴식을 가진 지 어느덧 사흘이 지났다. 정신없이 잠을 잔 휴식기간이었지만, 꿈에서도 행진의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 아직도 머릿속, 가슴속 행진의 추억은 나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다. 4박 5일의 행진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전국을 돌았던 발걸음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졌는가? 이번 후기를 통해 행진단의 그 소중한 발걸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탈학교 청소년, 청소년인권운동을 모색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첫 발을 담그려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고민하는 사범대 학생이 모인 전국행진단, 그 행진의 시작을 알린 것은 교육부 뒤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4박 5일 동안 전국의 5개 도시를 방문할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출발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바로 전국에서 청소년인권의 돌풍이 불게 하는 것. 더 나아가, 행진단의 메인 구호인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의 불모지에는 그 시작의 싹을 심고, 청소년인권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더욱더 대중적인 움직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표 속에서 각 지역에서 지역간담회와 학생인권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이 계획되었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인천지역 참석자는 전교조 교사들과 인천도서부연합소속의 청





행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소년들이었다. 인천에서는 전교조 독자적으로는 중앙사업인 아이들살리기운동, 자체 지역사업으로는 학생회임원 성적제한규정 폐지운동을 했고, 2학기에는 시교육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주체들이 직접 준비하는 사업은 도서부의 동아리 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인권운동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민이 들었다. 사실 간담회의 상은 청소년인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에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어떤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자 마련한 자리

였기 때문이었다. 급히 제안을 수정 했다. 우선 전교조에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학생인권법안 통과 캠페인을 같이 벌려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도서부연합에게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 아쉬움이 든 자리였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부평역으로 이동했다. 약간의 착오가 있어 장소의 문제가 있었지만, 부랴부랴 이동하고 몇 사람을 사람이 많은 지하상가로 배치하여 선전지를 돌리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숨 돌릴까 싶었는데 어느 노인 한분이 “부모가 있는데 학생이 무슨 인권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다. 더 나아가 행진단원 한 명에게는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폭력을 가하려는 상황까지 연출될 뻔했다. 답답했다. 아직도 청소년들이 인권을 외쳤을 때 보여주는 당연한 사회적 반응이 아니었을까? 너무나 당연한 외침들의 답이 이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행진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꾀꾀하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긴다고 해야 할까?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저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까지 행진단은 애당초 저녁시간을 훨씬 넘긴 8시를 넘기며 캠페인을 계속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나갔다.

둘째 날 대전 응능정이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휴일시간과 또한 점심때라 많은 청소년들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며 서명을 해주었다. 또한 문자홍보를 보고 캠페인에 참여하러 온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 행진단의 기분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어진 간담회는 인천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 선생님은 대전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청소년인권운동의 불모지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시고, 대전지부의 독자적 청소년인권운동 사업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교조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밖에 없다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 역시 대전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같은 뜻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단체가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오기로 했던 이수나로 대전지부 청소년회원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하고, 캠페인에 참여하지는 문자를 보고 처음 찾아온 어찌면 활동에 대한 고민을 아직은 깊이 하지 못한 청소년 3명만 참석했다. 우선 우리는 다



캠페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른 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봤다.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그들 역시도 학교 규정이 너무 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연락처를 얻고, 앞으로도 연락을 계속하고, 추후에 한번 청소년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와 얘기를 나누기로 약속하며, 간담회를 정리했다. 너무나 아쉬운 판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인권의 불모지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위안 삼으며 전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빵구나고 터진 타이어 3개를 고치며 도착한 전주에서 또다시, 아침 10시부터 객사에서의 캠페인을 벌

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선 사람이 너무나 없었다. 정말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없었고, 그중 청소년들은 눈에 꼽을 정도였다. 거기에 더해 영화촬영이 있으니 협조를 부탁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리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행진단은 고민했다. 우선 예정된 행진은 진행하고, 가판대를 각 객사길에 분산 배치했다. 또한 4명씩 조를 나눠 두 명은 선전물, 두 명은 선전판과 서명용지를 들게 하고 각 거리와 극장으로 파견했다. 직접 찾아가는 서명운동이었다. 결과는 대성공. 호응도 좋았다. 자기 학교는 두발자유화이지만 다른 친구를 생각하며 서명운동을 해주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지나가던 군인 한 분은 신분 때문에 서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수고한다며 ‘비싼’ 빵과 우유를 사주셨다. 결과는 전날 대전보다 더 많은 372명의 서명. 우리 행진단이 열심히 땀 만큼의 성과였을 것이다.

이어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전 두 도시와 다르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이 지역에서 유일한 청소년인권단체인 전북청소년인권모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청인모에서 먼저 자신들의 상반기 활동을 소개하고 현재 한 학교에서 적은 수의 회원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단체가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다른 단체에서도 호응을 해주었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는 적극적인 지지를 언급하면서, 청인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전단지 배포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도움을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인모의 활동에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는 자체적인 힘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고, 지역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청인모가 입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비록 간담회에서는 9월의 공동행동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전북 청인모를 지원해주겠다는 긍정적 답을 얻어냈다. 앞으로도 지역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모임이 어떻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지 라는 하나의 예를 제시해주는 기대되는 자리였던 것 같다.

행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드디어 울산에 도착했다. 사실 울산은 기대되는 도시 중 하나였다. 지역에



서의 주최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조직되었고, 무엇보다 ‘아수나로’ 울산지부에서 열심히 싸워주는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었을까?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양한 것 같았다. 울산지역 대부분 단체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혹은 학생자치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진단은 상대적으로 학교를 먼저 학생들이 뒤흔드는 직접 행동을 모색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었다. 시간의 한계상 서로의 입장을 더 나누지는 못해서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가 인권이 향유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청소년들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았다.

간담회를 마치고 행진단은 울산의 차 없는 거리로 이동하여, 캠페인과 집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돌았던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나고,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들이 거의 빠짐없이 캠페인에 함께 하여 행진단의 일손을 덜 수 있었다. 또한 지나가는 청소년, 시민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교복을 입힌 유령같은 허수아비에 물감을 칠하는 참여 행사에도 많은 호응을 보였다. 서명을 받는 가판대 곁에서 약식으로 열린 거리 집회에서 같이 자리에 앉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펼친 울동이나 학교를 풍자하는 공연 등에 관심을 보여 행진단의 기운을 북돋았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주임들이 찾아와 거리를 어슬렁거리 울산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고, 서명 가판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학교? 집? 거리? 아직도 청소년들의 외침이 허락된 공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새삼스레 든 시간이었다.

드디어 전국행진의 마지막 코스인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 최근에 학생이 5분을 지각했다고 체벌 2백 대를 가해 파문이 된 O고등학교가 있던 도시이다. 쌓인 피로에 몸이 점점 지쳐갔지만, 행진단은 그래도 대구 시민들에게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중요성을 더 큰 목소리로 전하기로 다짐했다. 그 다짐 속에 행진단은 아침 일찍부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밤늦게까지 만든 피켓을 들고 아침 8시 교육청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노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물론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느 학교에서 왔냐는 질문 등을 하며 행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2시간 뒤 행진단은 지역단체 청소년들을 조직하여 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이 체벌 대책으로 내놓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조사해보겠다”라는 안일한 대책을 규탄하고,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행진단은 박차를 가했다. 쉬지도 않고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으로 가 거리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다. 정말 체력을 뛰어넘는 정신력이었다. 그런 의지에 화답하듯, 예상과는 다르게 대구시민의 참여도 정말 높았다. 서명뿐만 아니라 포스트잇에 정말 자신의 학교사례를 다양하게 써주었다. ‘조일공고, 뽀 때리지마! 부모 욕 하지마!’, ‘사대부중, 두발자유 원함, 차별 즐’ 등등. 아마 답답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분출되었을 것이다. 때마침 체벌사건이 일어났던 O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서명을 해주며, “제발 학교에서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말에서 나는 청소년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대구에서의 간담회는 단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었다. 대구에서 성소수자 운동을 하시는 분과 청소년단체 ‘우리세상’의 청소년들, 그리고 밀양에서 이계삼 선생님과 함께 찾아와 처음 거리



**저 많은 말을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캠페인을 경험했던 청소년들. 특히 이계삼 선생님의 발언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교조 비판해야 한다. 조금 더 청소년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외부에서 비판을 강하게 해야 한다. 학교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한 청소년 참가자는 그동안 이런 활동에 관심도 없었고 뜨악하게 바라봤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다고 말해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수나로 울산지부에서 활동하면서 대구까지 행진을 함께한 청소년은 보수적인 경상도를 바꿀 수 있는 경상도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 경북, 경남의 운동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파란만장 청소년인권전국행진’이 처음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진단은 평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싹이 터지고 있다는 것을. 곧 그 싹은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들은, 청소년인권의 목소리는 서울과 중앙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 목소리가 불편한 ‘누군가’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행진단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 행진단은 각자의 그 위치 속에서, 행진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파란의 날갯짓을 펼치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

김지훈 기자, 「“학생인권법 통과로 학생인권 지켜내자” - [교육청소년]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선포식 개최」, 1318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9. 01.

## “학생인권법 통과로 학생인권 지켜내자”

###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개최

김지훈 기자



△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31일 여의도에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학교가 인격적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생활·학습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현행교육체제는 학생들을 시험 성적과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통제중심의 생활지도는 기본권 침해행위임에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두발자유, 0교시·강제야자반대,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등 학생들의 인권적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하는 나섰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체벌이 폭력의 정당화로 인식돼 사회폭력으로 세습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사회에서 폭력을 일삼는다며 학교현장에서 체벌 및 폭력이 근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상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학생인권법’을 지지하는 24명의 의원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

지를 보였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은 교육의 중요주체지만 20년이 넘게 교육받으면서 객체의 위치로 머물러 있는 것은 억압과 폭력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며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폭력이 당연시 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위원장은 “학생들이 인격의 소중함과 삶의 이름다움을 깨닫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교조가 함께 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국장은 두발자유나 체벌금지 등 아이들의 요구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제하기 보다는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꿈쩍도 않고 있다며 어른들의 동의를 구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혜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교육정책 중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눈 막고 귀 막고 살아온 지 오래됐으며 교육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연대해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발자유를 위한 1인 시위와 전국학생행진을 이끌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유윤중 활동가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있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국회의 법안통과과정을 지켜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도려낸 적이 많다.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회정기국회동안 교육시민단체와 청소년이 힘을 집중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여의도일대 시민들에게 학생인권법안을 알리고 통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학생인권법이 통과 될때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순회 공청회와 토론회, 거리선전전 및 학교공동수업 등 다양한 공동실천을 벌일 계획이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홍사단교육운동본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 선포식을 마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학생인권법을 설명하고 서명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민주노동당 구정인 청소년위원장은 4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법통과를 위한 1인시위>첫 번째 주자로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민중의소리 기자, 「민노 최순영, 학생인권법 통과 D-100일 선언 - “200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학생인권 보장 위한 대장정 돌입」, 민중의소리, 2006. 09. 01.

## 민노 최순영, 학생인권법 통과 D-100일 선언

### “200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학생인권 보장 위한 대장정 돌입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생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 구성 등 국회 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D-100일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기회는 100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최 의원의 D-day 선언은 2006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 불꽃토론’, ‘학생인권침해 증언대회’, ‘9월 15일 촛불집회 참여’, ‘학생의 날(11월 3일) 관련 행사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제 학생단체, 흥사단 등 교육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9월 15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계획하는 등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혜규 기자, 「 ” 가만 있으면 학생인권법 통과 어렵다 ” - [학생인권] 학생인권법 통과 1인시위를 진행한 청소년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씨 」, 1318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9. 08

## “가만 있으면 학생인권법 통과 어렵다”

### [학생인권] 학생인권법 통과 1인시위를 진행한 청소년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씨

정혜규 기자(바이러스)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서야합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햇볕이 따가운 7일,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전누리(20)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해 1인시위를 열었다. 그가 1인시위에 나선 것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동안 ‘두발규제금지,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수업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때문.

#### 새벽2시까지 야자, 일요일에도 학생등교

“서울은 두발규정이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기도만 나가도 두발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강제야자도 마찬가지죠. 수원 의 한 학교는 새벽 12시까지의 강제, 새벽 2시까지의 자율로 야자를 시킨다고 해요. 심지어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공부를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전씨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인천, 대전,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학생인권법을 알리는 등 법 통과에 ‘올인’했다. 이날 1인시위도 법 통과 과정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의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학교에서 제발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학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국회 앞을 지나가는 한 시민이 전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접 받는 것.

들이 ‘선생님, 체벌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답답한 학교 현실에 체념하고 순응하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되죠”

그래서 전씨는 가장 중요하게 ‘학생인권법 통과’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나서서 법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의의를 청소년 스스로 체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천활동을 하는게 중요해요”라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든 것은 법 통과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나 학교 안으로 서명용지를 들고 들어가 친구들의 서명을 직접 받는 것.

### “청소년 스스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야”

“교사들도 이번 기회에 ‘폭력의 가해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같은 위치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전씨는 ‘학생인권법 통과’는 학생인권 개선의 한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학생인권법 통과라는 한가지 수단을 통해 ‘교사, 학생’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다행인 것은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송파공고, 풍생고에서 두발 자유를 위해 집회를 열었잖아요.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져 많은 학교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청소년의 자발적인 행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해요”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진행한 전씨는 16일로 예정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실천활동을 계속한다. “체벌사건이 터지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생인권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모두가 법 통과를 위해 나서야해요”

## 학생 인권이 선 자리

이계삼 · 경남 밀양 밀성고 교사

지난 8월 18일, 내가 맡고 있는 학교 신문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대구로 갔다. 그날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주관한 청소년 인권투어 ‘파란만장’의 대구 일정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약속한 대구 동성로에 갔을 때 열댓 명의 사람들이 이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 나와 함께 간 아이들도 한 시간 반가량 캠페인을 거들었다. 별로 힘들지 않았고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는 행진단과 대구 지역 청소년들, 활동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했다. 한구석에 자리 잡고 앉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골똘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들을 경청했고, 몇 마디



행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거들기도 했다. 나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웠다. 행진단원들은 연일 이어진 일정들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 또래 청소년들이 행동하고 발언하는 모습에 신선한 자극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사비(?)를 들여가며 아이들을 대구에 데려간 내 의도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자위했다. 침묵과 굴종이 이미 내면화된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또래들을 직접 겪어보는 것은 무엇보다 뜻 깊은 체험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학생인권 캠페인 자리에서 다가온 복잡한 상념들

그러나 나는 행사 시간 내내 복잡한 상념들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지나치는 시민들, 또래 아이들에게 ‘진기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어이쿠, 용감하기도 하지...’ 하는 시선들, ‘고생은 한다면, 잘 될까’ 하는 시선들, 혹은 ‘난 니들 때보다 더한 것도 겪었어’ 하는 반응들에 마주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는 캠페인을 통해 호소하는 ‘현실’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다.

따져보면 그 행사는 ‘용감무쌍한 아이들의 별난 퍼포먼스’로 여겨질지언정, 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당해왔고 자기 2세들에게 여전히 대물림된 고통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불편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학교 안팎에서 선생 대접을 받으며 산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사는 모양새에 비하자면 과분한 대접이라 늘 느낀다. 그러나 내가 정작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긴요한 문제에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늘 썩고 객쩍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끄러움, 죄스러움마저도 각질화 되어가고, 조금씩 뻘뻘스러워지는 나를 느낀다.

이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난 뒤에는 당연히 자기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아간자율학습 폐지). 아이들은 제 몸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 표현할 권리가 있다(두발제한 철폐). 그리고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체벌 금지). 이 사회에 사려 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 당연한 권리는 늘 뒷전으로 밀린다. 이것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함부로 유린당해왔고, 이제는 인이 배졌다. 학생 인권에 관한 한 이 땅은 파시스트들의 나라다.

학교 현장에서 나는 늘 단일한 다수 교사들의 입장과 아이들의 요구 속에서 애매한 자리에 서 있다.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무슨 무슨 말을 하며 열린 교사인 척을 하지만 교무실에서는 대개 중과부적일 따름이다. 그래서 이 일을 뜻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같이’ 풀어가자는 것이다. 전교조도 있고, 학부모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는 또 얼마나 많은가.

### 교사와 학부모는 무얼 하고 있을까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그날 내가 함께 했던 대구 일정에 얼굴을 내민 ‘현직 교사’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파란만장’ 인권투어는 그래도 전교조 각 지부가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알고 있었다. 조직적 참여가 어렵다고는 해도, 전교조가 이미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결의한 마당에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는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소한 대구 일정에서 현직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다른 지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행사 시간 내내 불편하고 짜증스러웠다. 그 많은 교사들, 전교조 교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 5월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생각난다. 우리 밀양지회에서도 전세버스 1대를 빌려 서울로 올라갔다. 전국에서 6천명이 넘는 교사가 모였다. 그날 마지막 순서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결의하는 상징의식이었다. 체육관 위쪽 여러 곳에서 긴 휘장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원장부터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가슴에 배지를 달았다. 나는 지금도 그 배지를 내 가방에 달고 다닌다.

그간 안팎으로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내가 보기에 대체로 그 비판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교조도 ‘아이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일에서 무어든 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은 이루어진 것 같았고, 그날 상징의식을 통해 표면화된 ‘아이들 살리기 운동’은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징조라 생각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나 ‘아이들 살리기운동’ 선포식 따위의 상층 행사 말고 실체가 있는 ‘사업’은 내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다. 상반기 내내 본부·지부 사업으로 처리했던 것은 성과급 반납 서명과 반납 조직화, 부교재 가격 인하 서명운동 같은 것들이었다. 최근,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루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했지만,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명목상으로만 설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없어보였다. 아마 이렇게 지내다가 또 12월쯤에 있을 위원장 선거 준비들을 할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현장의 폭력과 억압은 대물림되는 것 같다. 과연 전교조는 학생 인권을 위해 안팎에 처진 그 많은 난관들과 부딪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일까. 9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두발 규제, 체벌, 이런 문제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턱없이 왜곡된 학교 안팎의 논쟁구도에 맞서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역량은 과연 없는 것일까.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교사들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얼굴 내비치는 것도 귀찮아한다.

이 나라에서 ‘부모’라는 존재들은 모두 제 자식을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작 제 자식과 그 친구들이 12년간의 학교 교육에서 받는 그 모욕적인 억압과 학대에 대해 왜 이토록 무심한 것일까. 그 많은 학부모단체들은 지금 입시제도나 교원평가 같은 문제에는 뻔질나게 방송카메라 앞에 얼굴을 내비치는데 학생 인권 문제에는 왜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학부모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은 다들 좋은 학교에 다녀서, 인권 문제가 그들한테는 ‘잘 모르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일까,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 교육시민단체들이 맨 날 주장하는 이야기, 교육공공성이 어떻고, 입시 제도가 어떻고, 대학평준화가 어떻고 하는 소리들은 다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나는 교육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 자리 잡아 가는 이 일련의 의제들에 자꾸 냉소하게 된다. 학교 교육은 여전히 ‘집단지학체제’ 그 자체이고, 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폭력’은 지금도 대물림되고 있다.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무더운 날에 전국을 돌며 호소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수에게 ‘진기한 구경거리’로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 교사와 학부모들은 별로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그들의 무심함과 안일함이 빚어낸 이 땅 학생 인권의 현실이 너무나 싫다.

배민욱 기자, 「학생들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 집회」 뉴시스, 2008. 09. 16.

## 학생들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 집회'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두발 자유 ▲체벌 금지 ▲인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31일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9월4일부터 매일 단체 대표들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들은 학생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성고 오병환 학생은 "학교는 법을 초월한 공간이기에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도 학교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행동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촛불문화제는 마당극과 율동 등 공연과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행사 등으로 진행돼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학생인권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이들은 오는 11월3일 학생의 날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집회를 실시하고,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 실시 할 예정이다.

##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0인 선언에 동참해 주십시오.

내신과 수능, 그리고 배우지도 않는 논술까지 대입의 커다란 장벽에서 학교는 교육의 수월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인권은 잠시 보류되고 머리카락에서 명찰, 빼지, 복장, 신발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선택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87년 학생회 직선제를 위한 여러 노력들로 만들어진 민주적 직선제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도, 사업도 없는 식물 학생회로 전락하였고 학생 인권을 위한 수많은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힘겹기만 한 여정입니다.

지난 3월 8일 최순영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학생인권법안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두발규제 폐지와 체벌 금지, 0교시 폐지,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생회 법제화가 주된 골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인권을 얘기해 왔던 운동의 내용을 대부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여개 단체가 모여 국회앞 1인시위로부터 전국 청소년인권포럼 개최, 촛불문화행사, 그리고 이번 학생의 날 기념 주간 선포까지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큰 힘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뿐 아니라 이제 학계와 청소년단체 활동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까지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지지에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고진화, 손봉숙, 이은영, 최순영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학생인권법 지지를 위한 1000인 선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학생인권법 내용(초중등 교육법 일부 수정안)

- 제17조(학생자치활동) : 학생회의 예결산 및 학급, 학년 학생회의 법제화
- 제18조(학생의 징계) : 1. 체벌금지  
2. 0교시 폐지,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두발 자유  
4. 정기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학생인권법 지지 1000인 선언 추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서울대사범대학생회 /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학벌없는사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아래 선언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학생인권법 지지 1000인 선언 동의서

본인은 2006년 3월 8일 국회에 상정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2006. 10. .

이름 \_\_\_\_\_ (서명) \_\_\_\_\_

소속 및 직책 \_\_\_\_\_

이메일 \_\_\_\_\_

연락처 \_\_\_\_\_

### 학생인권법 1000인 선언 준비위원회 귀중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서울대사범대학생회 /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학벌없는사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흥사단교육운동본부 tel : 02)741-2013 fax : 02)743-2515

※ 본 선언은 2006년 11월 학생의 날 즈음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정호 기자, 「한나라당 조폭정치에 발목잡힌 '학생인권법'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06. 11. 03.

## 한나라당 조폭정치에 발목잡힌 '학생인권법'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오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기자실에서 열었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학생의 날에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중심에 세우고자 한다”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정당들이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1일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D-100일 선언'을 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이른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려면...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금지, 강제적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학생을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고 감시와 처벌의 시선으로 가득찬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학생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법제화 뿐 아니라 인권실태 조사, 인권교육 실시,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 보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과 함께 기자실을 찾은 올해 고교 졸업생 전누리(2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씨도 “등교할 때마다 교문지도라는 일상적인 감시를 받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고 강제 이발을 당하고 있다”면서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을 뿐더러 한 인격체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고 말했다.

### 국회는 정권 잡기 위한 그들만의 잔치, 법안 통과 는 뒷전

현재 이 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연 학생인권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가능할까?

민주노동당 의원지원단실에서 만난 최 의원은 같은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폭같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며 분통을 먼저 터뜨렸다.

“정기국회 생각만 하면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발목잡고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있다. 학생인권법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민생 법안들도 잠자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법안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동료 의원들을 향한 최 의원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법안 발의만 해놓고서 ‘되든지, 말든지’ 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계개편을 하고 대선을 신경써서 정권을 잡으면 될 하겠냐”고 반문했다.

“국민들의 아프고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자기들만의 정쟁과 정권을 잡기 위한 자기들만의 정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치가 간다면 정치발전이 없다, 교육상임위가 그 정쟁 속에 제일 앞장 서고 있다.”

### “너희가 나중에 교사 되서 고치는 게 빠르겠다”

최 의원의 비난의 화살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다’, ‘교육을 위해 두발규제는 필요하다’라는 교육 인식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고 규정했다.

“국감자료를 보니 보충수업에 늦었다고 200대 때리는 몰지각한 교사들이 아직까지 있었다, 체벌이라는 것이 일제 잔재다, 시대는 변했다, 우리 학생들을 계속 길들여가는 교육은 안 된다, 어른들은 맞으면 고발하는데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합리화 되는 것은 위험하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교사가 되서 학교에 가 고치는 게 빠르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승덕 기자, 「기념일된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법을 원했다 - 교육부는 약속 안 지키고 국회는 무관심...학생인권법 제정 요구 봇물」, 프로메테우스, 2006. 11. 04.

## 기념일된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법을 원했다

### 교육부는 약속 안 지키고 국회는 무관심...학생인권법 제정 요구 봇물

11월 3일 77돌을 맞는 학생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승격돼 첫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20여분 진행된 짧은 기념식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선열들께서 초석을 다져놓으신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나라가 선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저마다의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며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러나 학생이 주인공인 학생의 날이 과거의 투사들을 추억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되새겨보라는 의미는 다소 퇴색돼 보였다. 학생들이 선진 경제 한국을 만드는데 노력해달라는 국가 교육의 수장다운 당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부는 불과 몇 달 전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당초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군산 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건이 한참 논란이 됐던 여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을 책임지고 있는 김석연 연구사의 말이다. 어느 때보다 교사의 체벌이 논란이 됐던 올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학생의 날 ‘학생인권종합대책’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의 날 조출한 기념관 기념식 외에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0월 30일 학생의 날 주간 동안 학생인권상황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국가인권위 명의를 보도자료만이 발송됐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은 12월로 ‘학생인권종합대책’ 발표를 미뤘다.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란 명칭의 국가기념일 ‘승격’된 것이 아니라 폐지됐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현원일 교사는 “교육부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라고 꾸짖으며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안을 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사학법 재개정에 발목잡힌 학생인권법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어서일까? 국회도 학생인권에 무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교육위가 파행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학생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체벌·두발단속 등 인권 침해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등의 학생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현실이 여전히 녹녹치 않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보수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묶여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각종 교육민생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학생을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고, 감시와 처벌의 시선으로 가득 차 학교에서 더 이상 진정한 교육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제 정당들이 발벗고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무관심 국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22개 사회단체로 모인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의원들과 학생을 아직도 자신의 통제에 놓고 싶은 일부 반교육적 교사들, 그리고 보수적 교육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 때문”이라며 학생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학생인권법은 체벌 근절하는 법적장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도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혜옥 위원장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승격에 대해 “지나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박제화하는 것”이라며 “굳이 학생의 날이란 이름을 바꾸지 말고 고통에 빠져있는 아이들, 반인권적인 시대에 놓인 아이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의미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학생인권법은 인권을 법에 담아 각종 규제를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체벌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가 관심을 갖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입시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서열경쟁체제가 사라지지



△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않으면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학생인권을 ‘탱탱’하게

이날 수도권 중·고등학생 10명이 <‘학생인권 탱탱’불 굴리기>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한 행사다. ‘선생님들이 너무 엄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소망을 담은 스티커를 붙인 커다란 공에 굴리며 명동성당에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학생의 날 ‘공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벌인 발랄한 행사였다.

이들은 “군림하지 않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학교, 입시억압으로부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교육의 식탁에 둘러앉는 학교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청소년의 꿈”이라며 이런 꿈을 표현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치며 발언에 나선 한 여학생은 “저희 학교는 체벌도 있고 두발규제도 있어 선생님들이 우리 머리카락을 자르고 춘추복을 입을 때인데 동계복을 입는다고 따귀를 때리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이 제정돼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자신의 사진을 신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주의를 쏙쏙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학교 교사에게 들통나면 혼이 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말하고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는 숨어야 하는 ‘죄인’이었다.



△ 2006년 학생인권을 탱탱하게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김상정 기자, 「학생인권법 촉구 각계 선언 잇따라 - 학부모·시민 1000인, 교사 5000인 선언... 예비교사들도 연대」, 교육희망, 2006. 11. 05.

## 학생인권법 촉구 각계 선언 잇따라

### 학부모·시민 1000인, 교사 5000인 선언... 예비교사들도 연대

11월 중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각계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11시 교육부 후문 앞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22개의 단체로 꾸러진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주최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학부모, 문화연대, 언론매체 등 전국 100여 개 단체에서 1천212명이 참가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하루속히 학생인권법안을 심의·통과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학생인권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학생인권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 교조 분회장 5천71명도 “인권복지국과 같은 학생인권과 자치 복지에 대한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실질적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체벌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등의 학생인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9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11시 30분 국회 앞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어린이 청소년인권 연대 선언식이 이어졌다. 이들



77년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2일 학생인권법통과를 지지하는 각계각층 1000인과 교사 선언이 이어졌다. 안옥수 기자

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에 맞선 실천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 탕탱볼굴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청소년들의 요구가 담긴 스티커들을 붙인 큰 공 2개를 굴리며 명동성당에서 광화문 교육부 앞까지 행진했고 5시 반에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긴 스티커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보람 기자, 「두발자유를 원해? 그럼 뭉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1318 바이러스, 2007. 03. 20.

## 두발자유를 원해? 그럼 뭉쳐!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교사 모두 모여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올해 새 학기를 맞이하여 변함없는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탄압을 고발하고, 이러한 탄압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모아보고자, 이번 3월 24일 2시, 노동사목회관에서 《VS 학교-2007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야자철제  
소지품검사 압수폐지 학교민주화 기타등등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vs 학교>**  
3월 24일 토요일 2시부터  
노동사목회관 대강당 (보문역 7번출구)  
- 2007 학생인권 현황 -  
- 학생인권 활동 사례 소개 -  
- 2007 학생인권 운동의 방향 찾기 -  
이런 사람 꼭 오셈  
: 체벌, 휴대전화압수, 두발복장규제, 성격차별 등등 학교의  
인권침해에 불만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http://cafe.daum.net/youthhr)

두발자유를 원해? 그럼 뭉쳐!©민중의소리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인권운동진영의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모여 구성된 모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7년, 학생인권이 와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발제문과 학생인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례 소개와 자유롭게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07년에도 지켜지지 않는 학교 안 청소년들의 인권을 향한 열망을 주체적·적극적 행동의 흐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서는 'VS 학교'라는 토론회 이름이 의미하듯, 학생인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기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라는 구조에 저항할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나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전누리(21세) 활동가는 "올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점에 집중을 할 것인가,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가 학교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장소는 노동사목회관 대강당 (6호선 보문역 7번출구)이다. 특별한 참가신청은 없으며 참가비는 약간의 마음과 시간이다.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단체 순회 간담회〉 제안서, 2007. 07. 23.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단체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단체 순회 간담회’ 제안서

날짜 : 2007.7.23(월)

문의 : 전누리(02-365-5359/ 016-297-9803)

1.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뿔뿔이, 한해살이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작년 3월 결성 이후, 학생인권법 제정운동과 스쿨어택(인권침해발생 학교에서의 직접행동), 5·14 두발자유집회, 청소년인권전국행진 등의 사업들을 벌여나갔었고, 올해는 2월 “청소년인권 와글난장”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교사들,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앞으로의 청소년인권활동을 위한 연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4월 14일에는 “미친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집회를 열어 청소년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직접행동을 하였습니다.

3. 네트워크는 작년 청소년인권전국행진에 이어, 올해 지역 단체 순회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각 지역마다 청소년인권에 관한 문제들과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각 지역의 청소년과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청소년인권침해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4.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인권이라는 의제를 가져감에 있어서 서로의 활동과 고민을 나누며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5. 귀 단체와 함께 하는 간담회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간담회의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위 기재된 연락처나 이메일(youthhr@chol.com)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 단체 순회 간담회 계획안(3쪽)

[첨부자료]

##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 단체 순회 간담회 계획안

- 이 계획안은 초안일 뿐이며, 각 지역 단체들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제목 :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역 단체 순회 간담회

### 2. 취지

- 2007년 올해에도 광주, 울산 등 각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혹은 거리에서 저항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단체에서도 예전부터 청소년인권을 위해 교육, 캠페인 등 각종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을 위한 이 같은 움직임들은 아쉽게도 지역들 사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인권 활동에 대한 지역 간 협력과 연대는 충분치 못했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인권 활동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한층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네트워크는 작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행진을 진행하고, 지역 청소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고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 단체의 상황 등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지역연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올해 다시 지역과의 교류와 연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다시 전국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서로의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고, 또한 하반기의 각 지역의 사업을 위한 연대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3. 날짜

- 2007년 8월 7일~11일 (총 5일)

### 4. 방문 지역

-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안동 (총 5개 도시)



## 5. 제안단체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광주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부산 청소년희망공동체 숲,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대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대구 반딧불이, 전교조 지역 학생생활국,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지역 지부 등등

## 6. 일정

- 8.7.(화) - 광주  
(6일 밤에 광주 도착하여 1박)  
10시~11시반 : 지역단체1 간담회  
13시~14시반 : 지역단체2 간담회  
15시~16시반 : 지역단체3 간담회  
17시~19시 : 광주 지역 청소년활동가들 만남  
20시~24시 :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 8.8.(수) - 부산  
10시~11시반 : 지역단체1 간담회  
13시~14시반 : 지역단체2 간담회  
15시~16시반 : 지역단체3 간담회  
17시~19시 : 부산 지역 청소년활동가들 만남  
20시~22시 :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
  
- 8.9.(목) - 울산  
10시~11시반 : 지역단체1 간담회  
13시~14시반 : 지역단체2 간담회  
15시~16시반 : 지역단체3 간담회  
17시~19시 : 울산 지역 청소년활동가들 만남  
20시~23시 : 울산에서 대구로 이동
  
- 8.10.(금) - 대구

10시~12시 : 지역단체1 간담회  
 14시~16시 : 지역단체2 간담회  
 17시~19시 : 대구 지역 청소년활동가들 만남  
 20시~22시 :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동

● 8.11(토) - 안동

13시~15시 : 지역단체1 간담회  
 16시~18시 : 대구 지역 청소년활동가들 만남  
 19시 : 서울로 출발

- \* 각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예정.
- \*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단체의 간담회 참여여부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7. 청소년인권 활동에 관한 지역 단체별 간담회**

- ① 장소 : 지역 단체 사무실
- ② 시간 : 1시간 30분에서 2시간
- ③ 대상 : 지역단체의 청소년인권 활동의 관한 담당자
- ④ 컨셉

- ㉠ 청소년인권 사업에 대한 어려움 공유
-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 협력 방안 모색
- ㉢ 지역 소식 공유 및 지역 현안 대응 지원
- ㉣ 하반기 공동 사업 제안 및 타진
- ㉤ 전국 단체 연락망 구성
- ㉥ 또한 연말에 전국의 각 지역단체의 청소년인권 사업의 담당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모색

\* 추후 각 지역단체가 참여할 경우, 간담회의 상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함께 구상하고자 합니다.

**10. 중앙 및 지역단체 협력 요청 사항**

- ① 재정 지원 : 후원금
- ② 잠자리 제공
- ③ 식사 제공도 대환영

바람, 「[소곤소곤] 지역에서 희망을 찾다. -8월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다녀오고」,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4호, 2007. 09. 27.

## 지역에서 희망을 찾다

### -8월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다녀오고-

올해도 몇몇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외치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하지만 그런 외침들이 지역 안에서, 또 지역 간에 서로 공유, 소통, 연대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요.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개인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청소년단체 지역순회 간담회를 다녀왔어요.



충주청소년들과 함께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차를 타고 충주,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안동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청소년 단체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을 모두 따로 만나는 간담회를 했어요.

충주는 전교조나 민주노동당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정도 탄탄해보였어요.

울산은 1학기에 신정중학교, 옥동중학교 학내시위를 대응할 때, 이수나로와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사전공유를 하지 못해서 미흡하게 대응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이런 실수를 딛고 이수나로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펼치면서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기로 이야기 했지요.

안동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분들이 청소년인권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열의있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청소년을 위한 인권모임의 청소년들과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의 활동을 고무시켜주면 정말 좋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20개 정도의 단체들을 만나서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같은 이야기를 여러 교실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지만, (^.^)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의 활동



울산인권운동연대와의 간담회

가들 덕에 오히려 더 힘을 받았었어요. 네트워크에서는 하반기에 각 지역별로 '학생인권 공동행동'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겨울방학에 전국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모이는 '청소년인권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어요. '청소년인권 만남의 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준비단위부터 전국적으로 함께 꾸려서 서울 중심의 행사가 아닌 행사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지요.

지방에서도 힘들지만 청소년인권을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어요(개인적으로 ^.^). 그리고 그런 불씨들이 지역 안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네트워크가 제안했던 '학생인권 공동행동'과 '청소년인권 만남의 장'이 그 불을 지피는 데 장작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돌아왔어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확신이 되고 현실이 되는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싸워봅시다. ^.^

전누리,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으로 -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③] 학생인권법」, 인권오름 제 73호, 2007. 10. 03.

##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으로

###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③] 학생인권법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2006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긴 시간동안 작지만 끈질기게 이어져왔던 학생·청소년들이 억압의 상징적인 공간인 학교를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싸워왔던 노력을 이어받아 민주노동당과 교육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인권단체가 함께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법의 내용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었다.

#### 당리당락 속에 파묻힌 인권 법안

학생인권법안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① 학칙의 인권침해규정을 막고 학칙 중 학생생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해야 할 것(8조 2항 신설), ②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 하고 학생회칙 등의 제·개정권과, 학교생활과 급식비 등 학교의 납부금 징수 등에 의견 표명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17조 및 31조 2항 개정), ③ 징계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18조 2항 개정), ④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 즉 체벌을 금지 할 것(18조 3항 신설), ⑤ 학교장 및 학교 설립·경영자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 강구를 의무화 하며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두발·복장 검사, 소지품 및 일기장 검사 등의 행위를 금지(18조 2 및 3 신설), ⑥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과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체계구축 및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18조의 4)이다. 이렇게 개정안이 총체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



지난 4월 14일,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미학 혁명' 집회

재 학교 현장이 학생·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과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된 후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싸움을 전개했다. 5월 14일, 광화문에서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2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개별학교를 급습하며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현실을 폭로하고, 또한 8월에는 5개 대도시 지역을 행진하며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학생인권법을 알리고 통과운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기 학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혹은 학내 시위를 일으켜 학생인권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여러 단체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다짐하는 자체 교사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법안은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이 발의된 2006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발규제와 강제이발, 단체 열차려 등이 일어났고, 한 학교에서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을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한 학생에게 재심청구권과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징계이수라는 중징계를 감행했다. 8월에는 대구에서 한 교사가 보충학습에 5분 늦었다고 학생에게 200대를 체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었다. 하지만 국회는 조용했다. 해를 넘기고, 두발, 휴대전화 문자 검사 등 학생인권침해행위와 체벌 사건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었고 7월에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문성적이 낮다고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야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사학법 개정과 로스쿨법 통과 등의 당리당략 속에 직무유기를 하며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학교공간은 학생들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 인권의 기준이 사라진 법안심사

뒤늦게, 아주 뒤늦게 최근 9월 13일 학생인권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유기홍)에 상정되었다. 오랜 기쁨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 법을 보면서 이제 학교가 교육하기 힘들게 되겠다. ...학생들을 여태까지는 너무 존중해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참 버릇도 없고... 하여튼 동등한 위치까지도 행세하려고 드는데...” 초등학교 교장과 교육청의 교육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김영숙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며 법안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법안 소위 의원들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 체벌 조항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 뒤에서 욕을 해도 못 때린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의 체벌금지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반면 학생회 법제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것에 학생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말한다. 또 어떻게 학운위에 피교육자인 학생과 교원들이 동등하게 심사를 할 수 있냐고 말한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에 공청회를 열자고 결정한다.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축조심의를 첫 항에서 끝나버렸다. 기대는 무너졌다.

4일 뒤인 17일, 공청회가 열렸다. 학부모 혹은 인권활동가 심지어 청소년당사자도 빠진 채 교사 등의 교원

단체 사람 4명(찬성: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 전상룡 동덕여고 교장. 반대: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 최병갑 구로중 교장)이 진술인으로 선정되었다. 역시 기대 할 것은 없었다. 반대 측 이명균연구원과 최병갑 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과 일선 학교의 자율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지조항을 법으로 둘 경우 획일화로 인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자칫 교원을 반인권적 교육자로 매도할 수 있고, 올바른 지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그들은 교육적 이유로 체벌을 허용한 현행 법령에 의해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체벌이란 폭력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운운한다. 그들은 학교의 민주화를 운운하면서도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대신 배제의 장벽을 치려고 한다. 법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될 수 없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 전국의 학교를 획일화 시킨다고 말한다. 말 머리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작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들의 너무나 가식적인 수사에 치가 떨릴 뿐이다.



지난해 8월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이 열렸다. 사진은 대전 응봉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캠페인

법안심사소위의 국회의원들과 일부 교원단체 사람들의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인권의 대한 인식 부재와 청소년이란 인격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결코 뺏을 수 없는 마지막 삶의 기준인 인권에 대한 무지. 무엇보다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개 개인의 주체로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한 철학 속에서 행하는 교육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 교육에도 인권의 원칙을

공청회를 끝낸 학생인권법안은 10월 4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1년 8개월을 기다린 법안이 올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의원들의 반인권적인 입장 속에서 법안의 내용이 누더기가 되어버려 애초 학생인권법이란 법안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나아가 학교의 억압과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숨죽이며 법안이 통과되길 고대했던 청소년들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걱정이 될 뿐이다.

호소한다. 결코 교육에서도 인권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을 살리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학생인권법안의 후퇴 없는 조속한 통과를 17대 국회에 호소한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7. 11.

발의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9월 9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2일 고 구논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여섯 건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 제267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2,3,4,5차 위원회(2007. 9.13, 9.14, 9.19, 10.4, 11.15)를 개의하여 여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하는 사유로 발육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학교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하되,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운동을 기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초등학교 취학유예 또는 면제사유로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함(안 제14조).
- 나.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 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

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함(안 제31조, 제32조).

마.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初·中等教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지역사회 인사 및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생대표는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6개 단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2007. 11. 27.

##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11월 통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가위질 끝에 좌절되었다.

학생인권법안은 체벌금지, 두발복장자유화,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 각종 차별금지, 징계 재심 청구권 보장, 학생회 법제화, 교사와 학생 등에 대한 인권교육, 3년에 한 번씩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11월 16일, 법안심사소위는 이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주요 내용들을 거의 다 빼버리고 더 이상 원안의 흔적은 찾기 어려운 수정 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퇴학에 한해서만 교육청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 청구권 부여
- ▲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 초등학교 취학 유예 사유에 발달 정도 추가
-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되, 학생 대표는 보충이나 자율학습 등에 대한 것, 급식에 대한 것, 운동부에 대한 것,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4가지만 심의권 부여

그러나 이 수정 대안조차도 한국교총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에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부분은 누락되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조항을 제외하고 위의 4가지 내용이 담긴 수정 대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달된 11,745명의 서명과 수차례 있었던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집회, 의견 전달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 통과를 지지하는 청소년인권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 입법은 원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기존의 차별금지, 두발복장자유화, 차별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를 비롯하여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했던 법안 내용을 단지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으로 대체한 것은 그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이미 교육기본법에도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별 차이가 없는 선언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한데, 법안심사소위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적당히 선언적 조항을 넣는 방안을 택했다. 이것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징계 재심 청구를 퇴학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한 점 또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만 항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재심 청구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보여 준다. 이는 오히려 퇴학 외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낼 수 있다. 2006년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학교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셈이다.

수정 대안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조항이 일방적으로 상정 당일 삭제된 것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신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었다. 한국교총의 의견 하나에 당일 날 법안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마저도 줄속으로 삭제하도록 한 한국교총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 우리는 누더기 수정 대안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에 반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안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학생인권법안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 청소년인권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현재 통과된 학생인권 보장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1월 27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 한국교총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에 대한 입장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의견진술 기회부여”로 한정해야 “학생자치활동 강화, 의사 수렴해야”

#### - 학생 학교운영위원 참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정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정 사안에 대해 학생 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데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200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후 대안으로 내놓은 이번 상정안은 민주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기함을 제안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자기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3. 동일 조직의 동일 구성원에게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면서 12개의 심의사항 중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등 4개 특정 사안에 한해서 학생들에게 참여권한을 준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교총은 학생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방식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권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5.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보호와 학교의 여건과 사정에 따른 학교단위의 자율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위원 자격신설 보다는 학생회를 통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즉, 학생자치 활동의 적극적 권장·보호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 위주로 학생들의 학교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

히는 참여기회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이다.

6. 전국의 5천여 중등학교의 지역별, 규모별, 설립목적 등 학교가 안고 있는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모든 학교를 획일화 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학생참여보다는 피교육자와 미성년자의 지위를 가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조장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7.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일본의 학교운영협의회 등 외국의 경우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나 교육전문가,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학생의 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학생자치 활동이 제한받거나 이로 인해 학생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교육위는 주목하기 바란다.

<첨부자료 2> 성명서 참여단체의 반박글

## 한국교총의 입장에 대한 반박

한국교총의 주장은 결국 학생은 “피교육자”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 없고 의견진술 기회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미성년자”라 해도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비중으로 반영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주장이다.

한국교총의 주요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자면,

- ◎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안을 포함하여 학생인권법안 자체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9월 17일 한국교총 관계자까지 참여한 가운데 이미 한 차례 한 바 있으며, 그 또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참가시키지도 않고 오직 교사들의 의견만을 듣는 공청회였다.
- ◎ “미성년자”라 해도 결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정당하게 반영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하고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교총의 주장은 학생들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묵살당하는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까지는 인정하겠으나 그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두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 ◎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평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민주주의는 체득될 수 없다. 한국교총이 교육이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완전히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을 교사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 ◎ 한국교총은 법제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이루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학교의 행태를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이며 반인권적이다. 법이 존중해야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자율성이 아니다.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입법하고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것일 수는 없다.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며, 이 또한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이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과 동등한 학교 운영과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당위적이다. 한국교총은 “동일 조직의 동일 구성원에게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학생 대표에게도 단지 4가지 사항 뿐 아니라 예결산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 한국교총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학생자치 활동이 제한받거나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협의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요한 문제는 제외되고 학생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소한 사항도 학교 측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영국이라고 해서 학생자치 활동이나 학생의 권리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며, 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의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2007. 12. 26.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지금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두발규제와 차별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울산시 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일선학교 자체점검과 특별점검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따로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로 꼽히는 두발규제와 차별이, 학교 현장에서 현행 법령과 지침을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각 학교의 교직원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이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별이나 두발단속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울산 효정고에서는 11월 26일, 교사 두 명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에게 차별을 가하여 학생이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은 교사들에게 오른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매와 출석부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맞았으며 발로 뒤통수와 목 부분을 차고 밟혔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와 학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가해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학교 안에서도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꾸려져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작년에 오병헌 씨가 두발자유와 차별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학교 안에서 운동을 벌였던 서울 동성고의 올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12월에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두발규제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9.3%, 징계를 당한다고 한 학생이 67.8%, 강제이발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8.8%였다. 차별의 경우에도 교사가 ‘기합’을 준다고 한 학생은 64.4%, 교사가 손과 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때린다고 한 학생이 42.4%나 되어, 두발규제와 차별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부는 차별금지와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이미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두발규제도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인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울산시교

육청의 특별점검 기간에조차도 효정고와 같은 두발단속 과정에서의 체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육부·교육청의 말이 얼마나 ‘약발’이 안 먹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체벌과 두발규제 등의 인권 문제를 학교장과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고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를 거의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 한두 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작년에 체벌금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체벌 없는 학교” 등을 시범 실시하여 문제가 없으며 이를 확대해가며 체벌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체벌 없는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2007년 한 해 동안 체벌 때문에 사망한 학생이 나왔고 교사가 학생을 말 그대로 ‘두들겨 패는’ 장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으며, 이번에 교육청의 점검 기간 중에도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급한 인권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사이에, 피해 학생들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늦기는 한참 늦었지만, 정부는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초·중·고교육법 제18조에 신설)라는 한 줄 뿐 아니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체벌의 완전한 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교육부가 2007년을 돌아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의지있는 학생인권 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특별점검’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감시,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무이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이상의 직무유기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단기적·장기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간판을 단 인권침해와 잘 ‘절충’하고 ‘합의’해갈 문제가 아니며, 눈치보기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2007년 12월 26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임지선 기자, 「[인권 OTL]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 학교 설립자·교장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신설 기념 토론회」, 한겨레 21, 2008. 05. 08.

## [인권 OTL]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 학교 설립자 교장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신설 기념 토론회

#### “늦었지만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이 ‘축사’를 던졌다. 하지만 곧 “축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로 분위기를 바꿨다. “3월1일 시행된 ‘이 법’이 아직 학교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는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토론장을 가득 채웠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조항 신설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이 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시행 두 달 만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공현씨는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선언적 조항만 신설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나마 이 ‘선언적 조항’이 규정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총 8가지의 학생인권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 2006년 3월13일이다. 이후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가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입법화 운동 추진을 선포했다. 해를 바꿔서는 청소년·교사·학부모들이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11월23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물론 학생자치권 보장, 체벌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진 상태였다.

법 공포는 2007년 12월14일, 시행은 2008년 3월1일부터였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축하하긴 뒤늦었고 걱정만 하긴 이르다. 하지만 법 시행 뒤 오히려 학생인권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한숨 소리가 높았다.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여전히 우리의 학교는 닫혀 있는 감옥과도 같다”며 0교시 수업, 수준별 학습, 복장·두발 단속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4·15 학교 자

을화 정책'은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이라며 “이명박식 실용과 교육 시장화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을 구제 불능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종린씨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에 반대하는 4월19일 촛불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구호는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였다”며 “고교선택제가 더 진행되면서 학교마다 ‘모범생’을 요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 위원장은 “상부의 통제는 너무 강하고 하부의 힘은 너무 약한 학교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오기열 교육연구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대변화”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도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단체·교원·학생·활동가 등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 자치위원장은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 제공,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 상상하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법 조항을 만든 것이 처음인 만큼 이를 계기로 이 법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은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이 학교운영, 학습활동, 학생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목록을 만들자”고 했다. 이제 입학한 ‘학생인권’이 교문을 열고 들어서서 활개 치는 세상이 오기까지 남은 과제가 많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 2부

### 스쿨어택(School Attack) & 학내저항 지원 활동





# 개요

## 스쿨어택(School Attack) & 학내저항 지원 활동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학내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행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2006년 서울 양동중 학내 시위로 인한 징계 위협에 항의하는 스쿨어택(School Attack)을 시작으로 서울 동성고 오병현 학생에 대한 징계 저지 활동, 수원 청명고 두발자유 시위에 대한 징계 위협과 휴대전화 일괄 압수·검열에 항의하는 스쿨어택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파주 금릉중에서 일어나는 체벌과 각종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금릉중학생 기자회견 지원과 교육청 항의방문, 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려 했던 안양 평천고 사건에 대한 대응과 국가인권위 진정, 울산 신정중과 옥동중에서 일어난 학내시위에 대한 지원과 국가인권위 진정, 경기 광명 진성고에서 일어난 학내시위 지원과 학교측과의 협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인천 산곡중과 선인고, 예일고, 수원 천천고, 서울 중앙고 등에서도 체벌, 두발규제 등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지원하거나 자체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항의행동이 잇따랐다.

애초 스쿨어택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명으로 연예인의 기습 학교 방문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네트워크가 진행한 스쿨어택은 ‘저항이 있는 곳에 저항을 지원하고, 저항이 움트는 곳에 저항을 조직한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만의 힘만으로는 약할 경우 학교 항의방문, 국가인권위 진정, 징계 저지 활동 등을 기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학내 인권사안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했고, 이후 사건에 참고할 만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2008년 이후에는 스쿨어택 활동은 청소년 당사자 회원 조직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몫으로 넘겨졌다.



## [양동중학교]

조현철·임지선 기자, 「“두발 자유를 달라” 중학생들의 반란」, 경향신문, 2006. 04. 21.

# “두발 자유를 달라” 중학생들의 반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측의 두발단속에 반발, 교내에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측이 집회 주동자를 징계하겠다고 나서자 인권단체가 반대외사를 나타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목동의 모 중학교 학생 20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 ‘학생도 사람이다’ ‘두발자유’ ‘체벌반대’ 등이 적힌 A4용지 30여장을 들고 교내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10여분 진행되자 교사들이 운동장에 나와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 일부가 교사들에게 정강이를 발로 차이고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집회가 그동안 교사들이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 가위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강요하거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해온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사전통보 없는 집단행동을 벌여 해산시켰으며,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비교장은 “지난해 9월 공청회를 통해 두발규정을 완화했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건의하거나 학생회를 통해 말하면 되는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오는 24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회 주동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집회 주동학생을 만나 시위를 벌이게 된 계기와 과정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계덕 기자, 「〈대자보〉 양동중 두발자유화 시위파문, "역지사지할 때다" - [기자수첩] 학교측 24일 해당학생 징계 vs. 인권학생단체 "징계부당"」, 대자보, 2006. 04. 22.

## 양동중 두발자유화 시위파문, "역지사지할 때다"

### 학교측 24일 해당학생 징계 vs. 인권학생단체 "징계부당"

지난 4월 1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동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방침에 대해 인권단체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하는 등 중학생들의 집단 행동의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례적인 중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는 중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두발자유화 요구' 중학생들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집중 보도했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 아고라에는 양동중학교 학생들에 징계를 철회하라는 네티즌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과 기성세대들이 의견차이를 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인신공격과 비방이 오고 가는 등 세대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같은 중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자기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들은 어른에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자보>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집단행동이 벌어진 서울 양동중학교의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작년 9월에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어 심사숙고한 끝에 의견을 모아 두발 규정을 개정했으며 남학생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규정을 심하게 어기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은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교가 이 일을 빨리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교사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청소년신문 바이러스는 이 학교에 한 교사가 "대한민국에 기본권이 있긴 하지만 자기주장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까지 발언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이번에 뽑힌 학생회장 진짜 좋은데 이 일로 학교에서 마음대로 자른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정말 부당하다"며 학교의 징계조치를 반대했다고 보도하기도 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시각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중학생들의 시위가 번져나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와 청소년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등 청소년 인권단체는 다음달 14일 두발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이번 양동중학교 학생들의 두발관련 시위와 관련 뉴스를 접한 중고생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두발관련서명운동사이트 등에 자신의 학교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머리길이' 문제가 학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연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함에도, 관할부처인 교육부는 "두발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실제적인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 의견을 제시해도, 학교 관계자나 교사가 거부하면 끝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교육부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두발규정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결국 학생들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사이트인 우리스쿨의 전 대표 이태우 씨는 "기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타의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 침해이며,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논의에 의해서 개개인의 기본권을 규제할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나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두발제한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당장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두발제한 폐지 시위를 주도한 7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양동중학교 생활지도담당 교사는 "오는 24일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징계방침을 밝혔으며,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최대 70일 이내의 등교정지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등 인권단체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학교측에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의 순욱(19세)군은 "두발제한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권고를 한 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측에 당연한 요구를 한것이고, 그에 따른 징계절차는 부당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계를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이 학생들을 집단행동으로 내몰고 있는가? 기본권에 규제와, 아직 어리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어른들이 학생들을 소위 '어른을 공경할줄 모르는 싸가지 없는 아이'로 만들고 학생들을 집단행동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징계로써만 풀려고 한다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2006. 04. 24.

##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학교측의 강제 해산으로 불과 10여분만에 끝이 났다.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측이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참가 학생은 물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학생까지 체벌한 데 이어, 학생 7명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의 보편성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교내 집회를 연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동중학교가 집회 참가 학생들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학교 스스로 야만과 폭력, 반인권의 공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측은 ‘불법집회 개죄’, ‘교내질서 문란’ 등을 명분 삼아 학생징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라는 학교측의 발언은 인권과 법 위에 학교가 존재한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무릇 모든 표현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소통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질서에 대한 학교측의 구시대적 강박만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우리는 학교측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는 교칙 내용 자체가 인권과 헌법을 부정하는,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두발자유 집회가 학교측의 야만적인 두발규제로부터 촉발됐다는 학생들의 증언에 특별히 주목한다.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교사에게 끌려가 체벌을 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분노가 이번 집회를 낳은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발제한 규정이 있는 한 두발단속은 불가피하고, 두발단속이 있는 한 학생들의 인격을 짓밟는 2차 폭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는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측은 학생의 두발을, 아니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현재의 두발규정이 필요최소한의 제한인지도 증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두발규정을 유지해 왔다. 정해진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두발단속을 실시하고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당연 책임을 묻는다면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학교에 물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측이 인권 보장을 요구한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 자격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양동중학교는 이번 교내집회를 계기로 자신의 인권불감증을 반성하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약 집회 참가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가한다면, 우리 청소년인권단체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양동중학교는 집회 참가 학생을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양동중학교는 두발단속과 집회 해산 과정에서 자행한 폭력에 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

양동중학교는 반인권적 교칙을 즉각 개정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6년 4월 24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다함께 청소년모임)

수신 : 양동중학교 교장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두발자유집회 참가학생 징계 시도 중단 촉구 의견서

날짜 : 2006.4.24(월)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이수나로 조상신(017-354-1217)

---

<의견서>

##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청소년 단체 소속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9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보장 교내 집회와 관련하여 참가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단체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1일에도 귀교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우리의 의견을 문서로 밝힙니다.

2. 우리는 지난 19일 집회와 관련하여 참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이 나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학생 집회는 교내이든 교외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귀교가 학생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는 교칙 조항이나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귀교는 19일 교내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는 듯합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라는 귀교의 주장은 귀교가 과연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학교당국의 허락이나 교칙은 인권과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판단 역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설령 질서를 다소 어지럽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역사와 우리 사회의 법리가 확인해 온 바입니다.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적극 알리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로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촉구합니다.

4. 나아가 우리는 이번 두발자유 집회가 귀교의 지나친 두발규제로부터 촉발됐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체벌을 가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 발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임에 분명합니다.

5. 귀교에서는 정해진 두발규정은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가 불가피하며, 규정 개정을 원한다면 집회가 아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는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며,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가 먼저 두발제한이 불가피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현재의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제한인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학생들에게 따르기만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부당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권리, 즉 불복종할 권리의 일환으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복종의 방식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불복종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귀교에 묻습니다. 귀교는 귀교의 두발제한 규정이 불가피하고도 필요최소한의 규정임을 입증한 일 있습니까? 귀교에 묻습니다. 학생들의 교내 집회가 과연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폭력을 수반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까?

6.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그동안의 인권 불감증을 반성하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재 귀교가 갖고 있는 두발규정을 비롯한 구시대적·반인권적 교칙 개정 에 나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주도 혹은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학생대표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와 요구와 달리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썩기질 않을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결코 귀교의 조치를 좌시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2006년 4월 24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다함께 청소년모임)

정혜규 기자, 「“선생님, ‘두발규정 개정 약속’ 잊으셨나요?”」,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7. 20.

## “선생님, ‘두발규정 개정 약속’ 잊으셨나요?”



‘두발자유’ 현수막 뒤로 학교 밖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Y중 학생들이 보인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Y중 학생들, 두발단속 계속되자 또다시 시위 추진

두발자유 시위를 열었던 Y중학교 학생들이 19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한번 시위를 열려다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Y중학교 학생들은 ‘두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며 학교 안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후에 학교측에서 ‘두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7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시위를 계획한 것이다.

### 말로만 두발규정 개정... 두발단속은 계속

### ‘학생의견’알리기 위해 집회 계획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각 교실에 들어가 집회에 대해 홍보하며 사람들을 모았지만,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에서 막는 바람에 개최하진 못했다.

김석기(중2·가명)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500여명 정도가 운동장에 모여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막아 참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학생들이 시위를 개최하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4월 있었던 집회 이후에도 학교 측의 두발규제가 계속되었다는 것. 김진석(중2·가명)군은 “집회 이후에 오히려 두발 때문에 차별이 심해졌고, 내 친구는 강제이발 당하기까지 했다”며 학교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에선 두발규정 개정을 약속했지만, 개정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학생들에겐 불만이었다. 김광진(중2·가명)군은 “일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두발규정 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늘 말뿐이었다”며 속상해했다.

결국 학생들은 4월 시위 이후, 학교에서 두발규정 개정 과정은 진행하지 않은 채, 두발단속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두번째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다. 김석기군은 “학교 측에서 두발규정을 바꾸는 움직임이 없어 점심시간에 모여 우리 목소리를 알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학교측에서 학생들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를 하지 못한 Y중 학생들이 ‘두발자유’라는 현수막을 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관계자를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학생들, "1차 시위 이후에도 강제이발 등 두발단속 계속 돼"**

### **학교측, "강압적인 두발규제 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두발규제한 사실이 없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부인했다. 그는 “지금 두발규정 개정을 밟아가는 중”이라며 “9월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두발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밖에선 학생들의 시위소식을 알고 지지방문을 왔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청·인네트워크)와 학교측의 마찰이 있었다. 집회를 열지 못한 학생들은 청·인네트워크가 방문하자, 주위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학교의 두발단속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측 관계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사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 관련사건 일지」, 2006. 12. 20.

#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 관련사건 일지

### ■ 2005년 12월 31일~ 2006년 3월

▷ 3학년 담임교사 부임 첫날부터 책상을 발로 걷어치는 등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함. 그때부터 오병헌 학생은 체벌 과정을 녹음하거나 교사폭력 일기를 쓰는 등 기록 시작.

### ■ 2006년 5월 4~6일

▷ 학생부장이 교실로 두발단속을 돌면서, 학생들이 8일(월)까지 머리를 자르고 오지 않으면 '제식훈련을 시키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함.

### ■ 2006년 5월 8일

▷ 강제 0교시 시작을 앞둔 오전 7시를 기해 오병헌 학생 학교 앞 1인시위 진행.

▷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 - ①두발제한 폐지 ②체벌·폭언 금지 ③강제 0교시 폐지 ④강제 보충·야자 폐지 ⑤사상의 자유(신문과 서적 소지와 독서의 자유) 보장 ⑥표현의 자유 보장(학교게시판 검열 중단) ⑦제식훈련 엄포 등 비상식적 징계 시도 중단 ⑧집회·결사의 자유 보장(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참가시 처벌 엄포 비판)

▷ 이날 학생부장을 비롯한 교감, 3학년 생활지도담당, 담임 등이 오병헌 학생을 호출해 경위에 대해 살펴 물음.

▷ 학생부장이 그 후 두발 재검사를 하겠다며 유예기간을 줌.

### ■ 2006년 5월 9일

▷ 8가지 요구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림. 목요일(5월 11일)까지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

### ■ 2006년 5월 11일

▷ 1인시위 이전 두발단속에 걸렸으나 머리 자르고 오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음.

- ▷ 이날 머리를 자르고 오지 않은 다른 8명의 학생들과 학생부실에 불려가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음.
- ▷ 오병헌 학생은 처음에는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결국 경위서를 작성함. 작성 도중, 학생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로 ‘제식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일 뿐 실제 제식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시인할 것을 요구함. 결국 학생부장의 요구대로 경위서를 작성.
- ▷ 이날 교장과 교감을 면담함. 그러나 교장과 교감은 학교 명예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할 뿐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함.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집회와 관련해서도, 교장은 참가 학생을 퇴학시키겠다는 학생부장의 협박이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이 자리에서 교장과 교감은 오병헌 학생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예고

■ 2006년 5월 12일

- ▷ 학교 측에서 오병헌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남.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4개 단체가 학교를 항의방문하여 교감을 면담하고 징계의 부당함과 8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눔. 이 자리에서 교감은 체벌과 서적 금지는 담임교사 개인의 잘못된 만큼 이에 대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등교시간은 늦출 예정이라고 답함. 그 외 두발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답하고, 보충수업의 경우에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뺌함.
- ▷ 1인 시위 이후 이날까지 학교측은 0교사(아침 7:10~)에 진행되던 강제보충수업은 9교시로 옮겨 계속 실시하고 대신 강제 자율학습시간으로 유지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은 여전한 상태였음.
- ▷ 학생부장이 16일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확인시키면서 앞으로 학교규정을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함. 그러나 오병헌 학생은 서약서 작성을 거부.

■ 2006년 5월 16일

- ▷ 7시 전후였던 3학년 일괄 등교시간이 조금씩 늦춰짐. 어떤 학급은 7시 20분, 어떤 학급은 7시 50분으로 학급마다 달라졌음.
- ▷ 두발규정 불응으로 다른 8명과 함께 수업시간 중 교내청소 징계 명령을 받음. 그러나 오병헌 학생은 정당성 없는 두발규정과 그 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거부하고 수업을 들으려 감.

■ 2006년 5월 17일

- ▷ 담임교사가 체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담임직을 사퇴함. 새로운 담임 부임.

■ 2006년 5월 23일



▷ 학생부장이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함. 그러나 오병헌 학생은 작성을 거부함. 그러자 학생부장이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서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해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함.

■ 2006년 6월 15일

▷ 오병헌 학생은 1인시위 이후 학교의 변화 상황을 소개하고 추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준비. 210장을 복사해 새벽에 1,2,3학년 교실을 돌면서 돌림. 교실 칠판 옆 게시판에 붙이거나 책상에 앉은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줌.

▷ 3학년 부장,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불려서 전단지 돌린 일을 확인하며 ‘왜 이런 것을 붙이느냐’, ‘다른 사람(학생)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데...’ 등의 얘기를 함. 000 교사는 교무실에서 손으로 따귀를 때리려고 하다가 다른 교사가 말려 결국 때리지 못함.

■ 2006년 6월 20~24일

▷ 오병헌 학생은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두발제한 반대, 체벌/폭언반대, 0교시 반대, 강제보충/야자 반대로 나누어 서명을 받기 시작.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음.

■ 2006년 6월 23일

▷ 3학년 생활지도담당 교사가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오병헌 학생 아버지에게 알림. 대략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7월 4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함.

■ 2006년 6월 29일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내용증명으로 집으로 도착.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서술되어 있었음.

- 1)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불이행
- 2) 위 사항에 따른 징계 거부
-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4)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 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 덧붙여, 부모님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이에 따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음.

▷ 이날 학생부장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변론권이 없으며, 부모님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수긍하는 것으로 본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음.

■ 2006년 7월 3일

▷ 인권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학생이 변론할 기회를 주겠으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옴.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함.

■ 2006년 7월 4일

▷ 징계위원회 개최(11:40 예정)를 앞둔 10:30 35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동성고 교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에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함.

▷ 오병헌 학생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 중, 학생부 소속 노아무개 교사가 다짜고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교실로 끌고 가려고 함. 오병헌 학생은 변론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지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손목을 틀어잡고 데려가려 함.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나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무슨 불만이냐’ 라는 발언을 함. 결국 손길을 뿌리치고 나옴.

▷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특별교육이수’라는 징계가 결정남. 그러나 오병헌 학생에게 통보되지 않음.

■ 2006년 7월 6일

▷ 오병헌 학생에게 징계 통보

▷ 16개 단체가 ‘동성고 오병헌 학생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 2006년 7월 7일

▷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사건 해결 촉구,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징계 관련 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이유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얻어냄

■ 2006년 9월 19일

▷ 동성고 오병헌 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 열려. 공대위 차원에서 약식 집회 동성고 앞에서 개최. 재심에서도 동일 징계 결정. 오병헌 학생 징계 이수 거부

■ 2006년 12월 13일

▷ 학교 교사의 중재로 오병헌 학생과 교장과의 면담 개최. 학교측에 편지 형식의 의견서 보내고 징계 철회 키로

■ 2006년 12월 20일

▷ 오병헌 학생, 2006년을 보내는 글 보냄. 이듬해 2월 오병헌 학생 졸업

# 1인시위에 나서며

오병헌(동성고등학교 3학년)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잘못된 것을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비겁하게도 조용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도 조용히 있는 것. 그렇게 조용히 있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학교의 탄압이 무서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말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무서움에 떨고만 있으면 학교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무섭게 굴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움에 떨면서 숨죽여 지낼 때는 지났습니다. 학생여론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조항도 학교의 인권탄압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설사 학생회를 통하여 저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인권탄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회의 힘이 너무나 약하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학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서지 않는다면, 용기를 갖고 우리 학교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교를 다니며 깨달은 교훈입니다. 또 제가 겪은 일이 우리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이 행동이 다른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도 작은 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강제적인 0교시 보충수업을 그만두십시오

저희 학교에서는 0교시 보충수업이 3학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3학년 학생들은 6:55까지 등교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부족한 잠에 허덕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업에 잘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보충수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0교시가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는 '0교시 없으면 9교시 생긴다'고 대답하십니다.

학생도 사람입니다. 하루 15시간 가까이 꿈쩍없이 강제로 학교에 남아 과중한 학습노동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 2. 비상식적인 두발제한규정을 없애십시오.

우리 학교에는 엄격한 두발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머리 7cm 이내,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머리선 위로, 구렛나루는 제거’. 교문 앞에서, 또는 교실을 돌며 선생님이 단속을 하시고, 단속과정에서 학생 체벌도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 군대식 제식훈련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두발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학기 두발규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두발규정 완화’가 학생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학생부장 선생님은 3월 31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조작됐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했습니다. 그 후 학생회에서 다시 ‘두발완화’ 쪽으로 의견을 모아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두발완화’란 결국 현행유지와 다름없는 것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두발규정 폐지 또는 개정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지난해 2학기에 들어서야 앞머리 5cm 이내에서 7cm 이내로 약간 완화되었을 뿐입니다.

머리 길이와 색깔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일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보다 중요합니까?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머리가 길면 빨갱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비상식적인 두발규정을 두다 보니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인격모독과 신체의 자유 침해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반인권적인 두발제한규정을 완전히 없애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맞거나 심지어 이번처럼 군대식 제식훈련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3.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그만두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는 체벌과 폭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실수에도 싸대기를 때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폭언도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체벌을 빈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맞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린다고 무엇이 나아집니까? 저만 해도 체벌을 당하면 기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폭언도 그렇습니다.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만약 선생님들이 실수했을 때 체벌이나 폭언으로 응징을 받는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장 비인권적인 체벌과 폭언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1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읽고 있던 사회과학서적을 모두 없애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한겨레 21>도, 한겨레신문도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책은 읽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강제 야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을 없애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아직도 선생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도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서적 제한 명령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5. 학생회장 성적제한 규정을 없애십시오.

저는 ‘내신 50%’라는 성적제한 규정에 걸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적제한, 학생회장 일을 하는데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회장이 뽑혀도 학교에는 학생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1,2학년 때 학급 회장으로서 대의원회의에 참여했는데, 당시 학생회장은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성적 좋은 학생회장이 이끄는 학생회에서 모아진 의견도 선생님들 선에서 잘려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회장의 성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의욕이 있는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어야 그나마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선 성적제한을 없애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빼앗긴 피선거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6. 의견을 말할 자유를 돌려주십시오.

저희 학교 게시판에서는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고, 익명으로 남길 경우 글이 삭제됩니다. 실명으로 남긴 경우에도 제가 쓴 글은 여러 차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게시판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함부로 지우지 않고, 지우더라도 묻고 지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은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지워졌습니다.

학생에게도 의견을 말할 자유,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말할 권리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7. 비상식적인 징계를 멈추십시오.

지난 겨울방학 전에 학생들이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수업도 듣지 못한 채 얼차려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이 제식훈련까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두발규정에 따라 장교머리처럼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군대식 제식훈련, 얼차려 같은 징계는 비상식적입니다. 온 사회가 군사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는 와중에도 학교만이 군사독재시대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심화반 아이들은 걸려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불만이 돌고 있습니다.

당장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징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8.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5.14 청소년인권행사를 소개하는 스티커가 몇 군데 붙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는 두발단속을 도시면서 만약 이번 5.14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등 학생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고, 바로 그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란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모여서 내서는 안 됩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런 권리의 행사를 권장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속에서 제대로 된 사고란 있을 수 없고, 사고 없이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행사 참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협박하는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저는 오늘 학교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1인시위로 학교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자리 잡고, 정당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12년이나 지켜봤지만 학교는 정당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제가 학교의 자정능력에 대해 불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섭니다. 억압의 시작을 상징하는 0교시에! 학교의 불의를 보고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을 빼앗은 학교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지금 곧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 동성고는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응하라!

동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오병현 학생이 폭로한 학교의 인권유린실태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생에 대한 비인간적인 체벌, 폭언, 두발규제, 그리고 그에 불응 시 이루어지는 제식훈련 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바로 이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동성고의 폭력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징계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학교 현실을 바꿔내고자 1인 시위를 시작한 오병현 학생의 행동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흔히 한 나라의 인권지수를 확인할 때 살펴봐야 할 곳이 병원, 감옥, 학교라고 한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곳으로서 그 사회 미래의 인권지수를 살펴볼 수 있기에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동성고의 인권유린 현실을 확인 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 인권의 절망적인 현실과 암울한 미래를 엿볼 수 있기에 좌절감을 느꼈다. 나아가 진의든 수사이든 경찰까지 인권경찰을 운운할 정도로 인권의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이 때, 유독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혀 따라잡지 않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버티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 더 큰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의 불모지인 학교를 바꾸고자 나선 오병현 학생의 용기있는 행동은 자칫 학교당국의 징계를 부를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학교당국에 호소하고 요구한다. 오병현 학생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려져서는 안 된다. 학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자 한 합법적인 1인시위에 징계를 내린다면 동성고등학교 자신이 헌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야만과 폭력의 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터져 나오는 인권의 요구에 동성고는 귀 기울여야 하며, 그동안 학교 안에서 이뤄져 왔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인권실태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부디 학교당국은 학교의 명예를 운운하며 정당한 외침에 탄압을 가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징계가 내려질 경우,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징계 철회와 동성고등학교 인권개선을 이루어낼 때까지 다른 시민사회단체, 정당,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인권을 외치는 학생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오병현 학생이 지적한 학교의 인권탄압 현실이 단지 동성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쉽게 드러나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인권의 역사를 믿는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어가고, 세계 곳곳으로 인권의 외침이 퍼져 나갔던 것처럼, 곧 이 땅의 학교, 아니 더 많은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이 외치는 인권의 목소리가 교문을 넘고 넘어 사회로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 인권의 외침을 위한 저항의 작은 불씨가 된 오병헌 학생의 투쟁에 다시 한 번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006년 5월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는 인권침해의 자유지대인가!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06. 07. 04.

## 학교는 인권침해의 자유지대인가!

###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인권침해의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는 학교의 ‘특권’과 이를 묵인하는 오랜 ‘침묵의 카르텔’을 타파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보장 외침을 지지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지난 5월 8일, 오병헌 학생(동성고 3학년)은 학교의 부당하고 상습적인 인권침해를 고발하기 위해 탄압을 무릅쓰고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당시 오병헌 학생은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신념 아래 용감하게 교내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고에서는 7시에 시작되는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야간학습으로 인한 과중한 강제학습,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폭언과 이에 대한 묵인, 엄격한 두발규정과 강제단속, 교외 행사 참가 불허 등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빼앗긴 인권을 돌려달라”는 오병헌 학생의 용기있는 외침을 적극 수용하고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문제된 사실을 축소·은폐 하기에 급급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동성고는 반인권적 교칙을 앞세워 오병헌 학생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 밝힌 오병헌 학생 징계 사유는 ‘두발규정 불이행, 이에 따른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 모두 다섯 가지이다. 앞의 세 가지 사유는 정당하지 못한 현재의 두발규정과 이를 강제하는 교사 지도에 대한 불복종이 그 핵심이다.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에서도 밝혔듯이, 두발‘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인 만큼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발 물러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5년 6월 27일자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할 지라도, 두발규정은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학교들이 두발제한의 불가피성을 증명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 가운데 자유를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두발제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 동성고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동성고 두발규정은 무효나 다름없기에 학생은 정당성을 상실한 두발규정과 ‘정당한 지도’가 아닌 ‘반인권적 강요’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를 준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다름없다.

또한 ‘허위 또는 허락받지 않은 사실 유포’와 ‘학생선동과 질서 문란’이라는 사유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 학교측은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 당시 비판한 ‘제식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돌린 전단지과 서명용지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성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내세우는 ‘제식훈련’은 1인시위 당시 이 학교 학생부장에 의해 분명히 예고된 것이었고, 제식훈련과 다름없는 운동장 열차려가 이 학교에서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구 하나가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점만을 꼬투리 잡아 학생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덧씌우는 것은 교육자다운 태도가 아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학생이 자신의 뜻을 알릴 수 있고, 주위의 동참을 호소하는 일이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 역시 학교측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고 동료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할 올바른 ‘선전·선동’ 행위이며, 학교측이 말하는 질서 역시 인권침해에 잠자코 굴종하라는 ‘반인권의 질서’, ‘침묵의 질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동성고가 오병헌 학생이 행사한 표현의 자유를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인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심지어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고의 징계 절차는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을 변론할 권리와 재심을 요구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지금의 징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칙을 앞세워 오병헌 학생을 보복 징계하려는 동성고등 학교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동성고등학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교칙들을 당장 폐지하고, 징계절차 개정에 나서라.
1.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던 인권침해 행위들을 전면 중단하라.
1.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2006년 7월 4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성이반문화웹진 엘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평화인권연대,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상 35개 단체)

전누리, 「닥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인권오름 제 11호, 2006. 07. 05.

## 닥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전누리

4일 오전 10시 30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한두 명씩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내 그들은 갖가지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학생인권 침해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징계시도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하라! 징계받아야 할 것은 오병헌 학생이 아니라 억압적 규칙이다!’ 이들은 바로 지난 5월 8일 이 학교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했던 오병헌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



러나 이들의 빗속에서의 외침은 학교에 의해 무참히 외면당했다. 몇 시간 뒤, 동성고 선도위원회가 오병헌 학생에게 외부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라는 징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인권보장 요구에 징계로 화답

두 달 전 오병헌 학생은 ‘오랜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 왔다’며 학교의 인권탄압 실태를 사회에 고발하는 교문 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그가 일인시위를 시작하면서 학교 측에 요구했던 것은 두발규정 폐지, 비상식적인 징계 금지, 강제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 폐지 등 총 8가지였다. 그러나 동성고는 오병헌 학생의 요구에

대해 고개를 돌렸고, 가혹한 체벌의 가해자였던 담임교사를 교체해주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대신 두발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시간 중 교내봉사를 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런 학교의 책임회피에 분노한 그는 재차 정당성 없는 두발규정과 일방적인 징계에 불복중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진단지와 서명용지를 돌렸다. 그러자 학교는 그의 ‘불온한’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복장용의규정 불이행,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허위사실과 허락받지 않은 사실 유포,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의 사유를 들어 결국 중징계를 결정했다.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요구에 징계라는 탄압으로 화답한 것이었다.

### 닥치고 굴종하라고?

동성고가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5가지 사항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인권기준은 제쳐두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볼 때도 어이없는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아니 좀더 양보해서 납득할 만한 제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학생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두발규정에 불복중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 부당하게 ‘인권의 반납’을 요구하고 징계를 받으라는 요구가 어떻게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될 수 있나?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학생은 입에 재갈을 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부당한 학교규정을 바꾸기 위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한 행위가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인가? 학교가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 학내 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 ‘어떤 질서’인지 의문이다.



허위사실이라고 학교측이 주장하고 있는 제식훈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 학교 학생부장은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 머리를 잘라오지 않으면 제식훈련을 시키겠다고 분명 예고한 바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차려를 시키는 등 제식훈련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학생이 사용한 문구 하나를 꼬투리 잡아 학생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죄를 덧씌우는 게 과연 ‘교육자’다운 일인가? 징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경위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하니 과연 이곳이 ‘학교’라 부를 만한 공간인가 의심이 든다.

### 학교로부터 격리해 교정교육 시킨다고?

이런 비판에도 학교는 ‘특별교육 이수’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특별교육 이수는 퇴학처분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만약 인권단체들의 대응이 없었다면 바로 퇴학처분을 했을 텐데 그나마 눈치를 본 게 이 정도인가 싶다. 특별교육 이수라니... 학교에서는 도저히 교정이 불가능한 ‘문제아’니 외부 특별기관에서 교정을 받으라는 말 아닌가. 꼴 보기도 싫고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학교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말 아닌가. 이는 학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학생에게 오히려 ‘네가 문제’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리는, 그야말로 치사한 행태에 불과하다.

이날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 오병헌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징계가 아니라 인권이었노라고. 그러나 학교는 지엄하신 학교의 말씀에 불복종한 죄, 입 닥치고 가만있지 않고 학교의 비밀을 떠들고 다녀 고귀하신 학교의 얼굴에 먹칠하게 한 죄를 물어 학생을 내쳤다. 수많은 학생들이 탄압을 불사하고 ‘저항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왔지만, ‘학교왕국의 역사’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

사회에 다시금 묻는다. 학교는 억압의 성역인가? 학교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인가? 과연 학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도대체 이 우문들을 과연 언제까지 던져야 하는가?



학교의 부당 징계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오병헌 학생

「오병헌 학생 징계 통지서 내용」, 2006. 07. 07.

## 학생 징계 통보

2006.7.4에 있었던 선도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하오며, 이의가 있으시면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민주시민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내 뜻하고 달라도 준수해야 합니다.

동성고등학교 두발규정은 교육청의 지침대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2006. 4. 27. 중간고사가 끝나고 흐트러지기 쉬운 분위기를 다잡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발지도를 한다고 각반에 공표를 하고

5월 1일 각반으로 쉬는 시간에 방문 지도를 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학생은

5월 8일 까지 규정대로 하고 검사를 맡으라고 시간을 주고, 이에 불응한 학생은

5월 10일 다시 소집하여

5월 11일 까지 불응한 오병헌을 포함한 9명의 사실확인 경위서를 제출받고 (9명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경위서를 받았는데 오병헌군만 강제로 생활지도부장이 부르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경위서를 썼다고 주장함) (시민의 신문. 2006. 5. 24)

소선도위원회를 거쳐 5월 16일 3일간 교내 봉사활동을 명했습니다.

8명은 징계에 응하고 3일간 교내봉사활동을 하였으나 오병헌군은 징계를 거부하여

2006년 7월 4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 학생선도규정

1. 예절: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준법: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제 3장 제 15 조 징계불응은 가중처벌임

위와 같은 규정에 입각하여 정신적인 휴식을 위한 상담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정되어 **특별교육이수(10일)**를 명합니다.

2006. 7. 7.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병헌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2006. 07. 07.

## 오병헌 학생의 징계를 철회하고 동성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정당한 인권보장을 요구한 오병헌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린 동성고와 이러한 사태를 무책임하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사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미 우리는 동성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7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병헌 학생 주장의 정당함과 징계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징계시도 철회와 인권실태개선을 동성고 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빗속에서의 우리의 외침은 무참히 짓밟혔다. 몇 시간 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이수가 무엇인가. 학생에 대한 징계종류 중 퇴학처분 전 단계인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생을 외부에 있는 기관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징계내용을 오병헌 학생에게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각종 규정 불응과 정신적인 휴식 필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숨 막히는 학교의 인권탄압 현실을 밝힌 학생이 정신의 안정을 위해 휴양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용감하게 실천한 학생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온 학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분란’의 책임을 오병헌 학생에게 뒤집어씌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이번 징계는 오병헌 학생의 저항이 다른 학생들에게 파급되지 못하게 오병헌 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징계절차에 대한 부당함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고자 할 때 부모나 학생에게 적절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고 측은 “교칙에서 학생의 소명기회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학생의 소명기회를 줄 수 없다.”,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론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의 억지를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그런



역지논리가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자 동성고는 주먹구구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날 아무런 학칙 개정 없이, 오병헌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징계위원회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다. 이처럼 이번 징계는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병헌 학생에게 이미 내려졌던 ‘교내 봉사 3일’의 징계 역시 학생의 진술 대신 강압적인 요구로 쓴 경위서에 기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져 그 절차에 대해 학생과 인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징계사유인 두발규정에 대해서도 오병헌 학생은 1인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교는 두발규정을 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생에게 ‘용의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유와 함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채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유까지 덧붙여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인권의식을 갖춘 학생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취할 올바른 행동이 결코 아니다. 또한 학생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소집 사유 가운데 일부(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징계 사유를 축소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번 징계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동성고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에 나섰을 때, 인권단체들은 동성고 담당 장학사에게 사태파악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피해자인 학생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부장이나 교장과의 통화·면담만을 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결정 과정과 문제가 되고 있는 두발규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해 책임 회피와 학교 측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규탄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을 무시하고 반교육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와 이를 방조한 교육청을. 이게 어찌 동성고만의 문제인가?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여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를 방관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아무리 학교지치 시대라고 하지만 상급단위로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권보장을 요구했던 학생이 중징계를 받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런,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믿는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아무리 학교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로 버틸지라도 결코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거대한 인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대책위는 그 흐름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동성고등학교는 오병헌 학생이 제기한 인권침해행위들을 전면 중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하여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엄중한 지도 감독을 행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7월 7일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학생자치사업본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고등학교 측의 성의 있는 학생인권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6. 09. 18.

## 동성고등학교 측의 성의 있는 학생인권 조치를 기대합니다

저희 대책위는 며칠 전 오병헌 학생을 통해 오병헌 학생의 징계 재심이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안에 대한 통보가 오병헌 학생의 가정사정(맞벌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제때 미리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7월에 열렸던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이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퇴학 이전 단계인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사실 자체에도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러한 중징계의 핵심 사유가 오병헌 학생이 두발규제에 불복종하였다는 것뿐이라는 점에서 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당황스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9월 18일 긴급회의 결과 학생의 두발 문제를 이유로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얼마 전 두발자유가 기본권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기본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해치고 있고 학생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귀 학교의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행 두발규정에 의하여 귀 학교가 오병헌 학생에게 어떠한 종류의 징계라도 내린다면 이는 저희 대책위원회가 학교 측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육이수와 같은 중징계뿐 아니라 교내봉사활동과 같은 경징계도, 정당하지 않은 규정에 의거하여 내려진 징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위원회는 오병헌 학생의 징계 수용여부와 별도로 징계결정이 날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에 대광고등학교가 강의석 씨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1인시위, 학교 내 시설 무단사용,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그 징계가 소송을 통해 무효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억압적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일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병헌 학생 사건도 사회 전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인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인권적인 결단으로 법정에서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병헌 학생의 징계위원회 재심의 자리가 학생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정당성 자체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성고등학교의 두발을 비롯한 용의복

장규정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한 징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인권단체와 기타 다양한 교육시민단체까지 나선 대책위의 간절한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

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철회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긴급대책위

교육공동체 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중고등학생연합,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 청소년 다함께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니로), 학벌없는 사회,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오병헌, 그의 불복종을 생각하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오병헌은 투박한 사람이다. 그는 교묘한 말로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른다. 적당한 타협에 만족하고 그럴 만 했다고 자신을 기만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 묵히고 묵혀, 바닥끝까지 고민한다. 그래서 그의 말과 실천에는 힘이 있다. 수개월 동안 학교와 맞장을 뜰 수 있었던 저력은 그 투박한 진정성에 있다.

지난 5월 8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동성고등학교 앞에서는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오병헌의 일인시위가 있었다.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쓴 피켓을 손에 들고 그는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 부당한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했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학습, 체벌, 두발제한, 교외 집회 참가 불허 등은 학생에게서 인권을 강탈하는,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라는 것이었다.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게 속편하다는 체념, 좋은 대학 가려면 이 정도 학생들 잡는 건 불가피하다는 조악한 현실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굳건한 침묵의 카르텔은 그렇게 깨어졌다.

학교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다. 학생의 용기있는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리라는 기대는 언감생심. 학교 측은 가혹한 체벌 가해자였던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교육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0교시를 폐지하는 미봉책만을 제시하면서 바깥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침묵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를 물어 오병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학생 선동과 질서문란,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라는 징계 사유는 자기도 부끄러웠던지 지워버렸고, 두발지도에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비판 여론으로 9월 19일 마지못해 열린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 안에서는 도저히 ‘교정’이 불가능하고 풀 보기도 싫으니 학교를 떠나 있어 달라는 것이다.

그의 일인시위 소식을 접한 이들이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은 놀람게도(!) ‘그리 특별한 인권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였다. 그랬다. 오병헌이 지적했던 문제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학교의 ‘일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도 버젓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학생이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했다는

비판이, 주위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릴라치면 학생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학교가 허락하지 않는 생각은 해서는 안되며, 설령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맘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것, 만약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고 ‘비밀’을 바깥에 발설할 시에는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는 건 대다수 학생들이 터득하고 있는 생존비법이고, 이는 대개 충실히 지켜진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에게서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전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체벌 한 대는 괜찮고 2백대 정도는 때려야 문제가 되는 현실, 학교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학생을 가르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는 현실, 이런 낮은 무딘 인권의식이야말로 학생 인권 위에 군림하는 학교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다. 오병헌의 저항은 이처럼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불복종이다. 저 바닥 깊은 곳에서 뒹굴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끌어올리는 펌프질이다.

그 정도면 학교도 많이 양보했으니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의 두발규정을 따르라고 주문하는 이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오병헌의 저항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지지 활동으로 그가 비판했던 몇몇 문제점은 개선된 반면, 두발제한이라는 핵폭탄은 재각재각 지금도 학생 인권의 숨통을 죄고 있다. 오병헌은 일인시위 이후 지금까지 두발지도는 물론, 두발지도 불이행 이유를 내려진 징계에도 불복하고 있다. 그는 묻는다. 두발제한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두발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아니 좀더 양보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의견조차 무시한 채 만들어진 부당한 두발규정에 불복종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지 말고 절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오병헌의 저항은 그렇게 학교의 진실을 까발리고 학교의 진실에 눈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비밀의 벽을 쌓아왔던 학교가 더 이상은 견재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시켜 준다. 교문을 등지고 교문 앞에서 사회를 향해 왜 학교는 이 모양이냐고 외쳤던 그의 물음에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사회가 답하기 전에 이미 더 많은 오병헌들의 저항으로 ‘학교’는 허물어지고 있다.

## 2006년을 보내며

오병헌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동안 학교 안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으로 한 문제제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넌 암적인 존재야. 넌 사라져야 해”하는 식의 요지의 말씀을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학교의 문제를 안으로만 문제제기하는 것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일인시위를 통해 이 일을 다른 학교의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하여 더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학교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학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학교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일하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척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발제한같이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분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리 하고 저 자신의 개인적 단위에서의 징계거부에만 치중한 것이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유로 내려졌던 징계들이 철회되어 징계로 받은 상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가량 학교를 나가지 않던 것을 보며 화가 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주변의 괴롭힘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행위 자체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갖

게 되는 의미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 분들은, 이 행동 뒤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집단 괴롭힘의 고통이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일과 관련해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상처도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일과 관계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바라는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학교가 뭘가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막대한 도덕적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인시위를 한 이후 한 선생님께서, 전 이야기한 적도 없는 수업권 이야기를 하시며 ‘오병현이 단축수업에 반대하기 때문에 단축수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에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헛소문들이 나돌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수업시간마다 분필을 던져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저를 둘러싸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괴로웠습니다. 제가 한 말 한마디에는 모두가 잔인하도록 파고들어 괴롭히면서도, 자신들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교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학교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준 기자, 「1인 시위로 졸업장 못받은 오병현군 “변하지 않는 학교가 불쌍할 뿐”」, 세계일보, 2007. 03. 23.

## 1인 시위로 졸업장 못받은 오병현군 “변하지 않는 학교가 불쌍할 뿐”

“학교(동성고)측이 불쌍해요. 명예·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못하면서 갇혀 지내는구나하는 생각에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지난 해 5월 ‘두발제한 폐지’ ‘체벌·폭언 금지’ ‘보충수업 폐지’ 등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올해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 오병현군(19)은 자신의 모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학교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감추면 그들의 명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군이 학교 제도는 물론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교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학년 때부터다. 학교 모금운동의 강제성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에 항의를 하다가 학생회가 개최한 두발제한 공청회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두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3학년에 올라가자 갑자기 학교측에서 두발단속에 걸린 사람은 제식훈련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 훈련이 싫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식훈련은) 1인 시위를 했던 날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론사 등이 찾아오고 해서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군은 당시 학생선동 및 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았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 대신 졸업 직전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는 학교측의 지시에 ‘1인 시위 이후에도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17번이나 수정 지시를 받았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 다니고 있는 오군은 자신이 경험한 중고등학교 현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

“중고등학교의 현 상황은 폭력적이고 언제나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권 역시 암묵적으로 그들 (학교와 선생님)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군은 학교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체벌·차렷 경례·모금운동·0교시수업·야간자율학습·서적제한 등을 놓고 학교측과 논쟁을 벌였죠…국민의

레나 애국가 역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국가에 이유없이 충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이 나치즘 등 역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오군이 고등학교때 학교를 상대로 1인시위등 투쟁을 했을 때 주위 사람은 어떠했을까

“소수의 선생님들이 지지하셨고 다수의 선생님들은 싫어하셨죠 친구들은 그때그때 다르게 평가해주고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오군은 대학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사회 운동쪽에 무게를 두었다.

아직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있지만 좀더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오군의 추후 행보가 궁금해졌다.

한편 오군에게 졸업장을 주지않은 동성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적으로는 졸업을 시켰지만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교육적 차원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은 것일 뿐 반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차피 졸업을 시켰으니까 우리 학교와는 상관없는 얘기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트워크 기획 동성고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일시 :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오후 6시
- ◎ 장소 : 동성중고등학교 앞
- ◎ 총 59명
  - 1학년 44명
  - 2학년 10명
  - 3학년 2명
  - 학년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 2명

○ 두발단속에 대한 1번 문항 (해당하는 것은 모두 표시하는 방식)

두발단속은 종종(1주일 에 1번 이상) 있는 편이 다.	두발단속 때문에 체벌을 당한다.	두발단속 때문에 봉사활 동 등 징계를 당한다.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경 우가 있다.
74.6% (44명)	59.3% (35명)	67.8% (40명)	28.8% (17명)

○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2번 문항 (해당하는 것은 모두 표시하는 방식)

교사가 도구나 손발을 이용해서 학생을 때린다.	교사가 앞드려뻔쳐, 오리걸음등의 기함을 준다.	교사가 욕설, 비하 등 모욕감이 드 는 언어를 학생에게 사용한다.
42.4% (25명)	64.4% (38명)	37.3% (22명)

○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3번 문항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생님의 강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무응답
52.5% (31명)	42.4% (25명)	10.2% (6명)

○ 3번 문항에서 “선생님의 강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한다”를 선택한 경우

체벌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끈질기게 권유한다.	둘 다
11.9% (7명)	33.9% (20명)	5.1% (3명)

※ 이유는 모르겠지만 3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를 선택했음에도 이 문항에 답한 학생이 5명 있었음.

○ 사생활 침해에 대한 4번 문항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는 방식)

소지품 검사가 있다.	핸드폰, mp3나 기타 소지품을 압수하여 잘 돌려주지 않는다.
18.6% (11명)	42.4% (25명)

○ 하고 싶은 말

두발자유

제발 머리 좀

니들이랑 우리랑 달라

학생에게 말을 하라!

제발 두발 자유 ㅋㅋ

심해지지만 말길

두발 자유

학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해 주세요

두발 완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 내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발 자유도 안바래요. 완화 제발

두발 규제 완화, 체벌 금지

머리가지고 체벌이 심하다

너무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 같다

인권침해 하지 마세요

두발 규제를 좀 풀어 줬으면

머리 좀 ~!

## [독산고등학교]

박소희 기자, 「두발규제 항의하는 자전거 시위 - 서울D고앞 항의시위, 학교와 마찰, 학생회장 "강제이발없다" 반론」,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6. 05.

# 두발규제 항의하는 자전거 시위

서울D고앞 항의시위, 학교와 마찰, 학생회장 "강제이발없다" 반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D고에 기습방문하여 자전거 시위를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점심시간, 서울 D고 앞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자전거시위가 벌어졌다.

오늘 오후 12시 6~7명의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D고 앞에서 등에 두발자유라고 쓰여있는 종이를 붙이고 자전거를 타면서 두발규제와 강제이발에 항의하는 시위를 10여분간 진행했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기 초에 일부 학생들이 강제이발을 당하고 머리카락을 뽑히는 등 강제적인 두발규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D고 한 학생의 요청으로 이번 시위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두발규제에 항의함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문제를 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D고 교사들, "집회 신고는 한거냐? 무단침입이다"

12시경 자전거시위대가 교문에 들어서자 동시에 학교 옥상에서는 제보한 학생이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뿌렸고, 활동가들은 학교 건물 앞을 돌고 난 뒤에 일부는 '두발자유 School Attack'이라고 쓰여 있는 깃발을 들고 운동장을 여러 번 배회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지난 시위현장에 I 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나타난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며 "자전거를 타고 여러 학교를 함께 돌아다니며 우리의 뜻을 알리고, 휴일에는 집회를 열어 대규모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위가 벌어지자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우르르 몰려나왔고, 뒤이어 학교 교사들도 하나 둘씩 나타났다. 일부 격분한 교사들은 활동가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으며, 교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D고의 교사들은 "집회 신고는 한 거냐, 이걸 무단침입이다."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듯 했다.



### D고 학생회장, "우리 학교는 강제이발을 한 적이 없다"

반대로 학생회장이 나서 "우리 학교는 강제이발을 한 적이 없다."라며 항변해 시위대와 학교 측과의 대립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교사는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거론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30여분의 실랑이가 오간 후 일부 활동가와 교사들 간의 대화가 정리, "다음번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후 방문하겠다."라고 인권활동가들이 약속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현재 D고의 두발규제는 학기 초에 비하면 완화된 편이지만, 이전에 강제 이발을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학교 측과 제보한 학생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두발자유 School Attack"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들고 운동장을 돌고 있는 인권활동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교 측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이에 말다툼이 오가기도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점심시간을 맞이하여 쉬고 있던 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러 모여들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유윤중, 「 '두발' 자전거, 닫힌 학교를 뚫다 - 학내 저항 불붙일 자전거시위 열려 」, 인권오름 제 7호, 2006. 06. 07.

## ‘두발’ 자전거, 닫힌 학교를 뚫다

### 학내 저항 불붙일 자전거시위 열려

유윤중

지난 5일 12시 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교내에서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을 외치는 자전거시위가 기습적으로 벌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기획한 “‘두발’ 자전거 School Attack”이라는 이름의 이 시위는 학생들의 제보, 신청을 받아 인권활동가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기습 방문하여 항의시위를 열고 해당학교 학생들이 호응하는 직접행동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두발자유’를 외친다는 발상은 지난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행사 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발적인 두발자유 캠페인을 벌인 뒤 집회에 참가했던 경험에 착안한 것이다. 그 첫 대상이 된 독산고등학교는 올해부터 두발규제가 새로 생긴 곳이다.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독산고에서는 학기 초에 여러 차례 강제이발이 이루어졌고, 5월부터는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뒷머리와 옆머리를 뽑기도 했다고 한다.

#### ‘두발’ 자전거 타고 ‘두발’자유를

점심시간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두발자유 School Attack”이라고 적힌 깃발을 휘날리며 청소년인권활동가 7명은 4대의 자전거와 함께 독산고등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을 택한 것은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때이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두발자유’, ‘청소년인권’

라는 글귀의 선전물로 꾸며진 자전거는 건물 주위와 운동장을 돌며 시위를 이어갔다. 한 명은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자전거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학교를 비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 교문을 지나 건물 앞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

건물 밖에 나와 있던 학생들은 “두발자유”가 적힌 깃발을 보자 “두발자유다!”, “우와~”라고 말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자전거가 건물 앞에 도착하자 건물 옥상에서는 두발자유 의 정당성을 담은 전단지 가 뿌려졌다. 이윽고 자유가 고른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시위대를 향해 “두발자유”를 함께 외치며 응원을 보내준 학생들도 있었다.



건물 앞에서 자전거 시위가 시작되자 건물 옥상에서는 전단지 가 뿌려졌다.

잠시 후 교사들이 나와 시위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당신들 뭐야?” “남의 학교에 기관장 허락없이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수업방해다”라며 고성을 질러댔다. 활동가들이 “저희가 여러분 수업을 방해했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되물자 학생들은 “아니요”라며 호응해 주었고, “학교가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유지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역시 “아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교사들의 제지에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모여 있던 학생들을 향해 “두발자유! 청소년인권!” 구호를 외쳤고, 모여 있던 학생들도 교사들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구호를 따라 외쳤다. 학생들의 호응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자 독산고 교감은 직접 호응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혼난 줄 알라고 으박질렀다. 그래도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자, 교감은 학생들의 정강이까지 건어차며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한다.

한 교사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 폐쇄성 깨고 학교를 공공의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교사들이 강제로 막으면서, 시위는 이제 교사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사이의 연쟁으로 전환됐다. 교사들은 “당신들 주거침입이다”, “수업방해다”, “미리 연락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더니 교문을 닫아걸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학교는 주거나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인 만큼,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학교는 교장의 허락을 맡고서야 드나들 수 있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누구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폐쇄된 공간, 사회 밖의 공간으로 숨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들을 쉬쉬해 왔다. 폐쇄성이라는 장벽을 깨고 학교를 공공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 역시 이번 자전거 학내 시위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교사들과 활동가들 사이의 대치는 30분이 넘게 계속되어 수업종이 울린 뒤에도 한참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도중에 불려나온 학생회장은 “우리 학교는 강제이발 없고 두발규제도 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회장의 말을 반박하는 학생들의 증언은 아주 많다. 제보한 학생의 증언은 물론,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독산고 학생들의 댓글들도 학생회장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잠시 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면서 약간의 긴장이 흘렀다. 하지만 경찰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인지 약간은 당황한 모습이였다. 경찰들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학교를 딱히 주거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난감해했다. 경찰이 난감해하자 기세등등하던 교사들도 수그러드는 듯했다. 잠시 후 인권활동가들은 “다음번에 독산고를 방문할 때는 정식 면담 신청을 하고 오겠다. 면담 신청을 하고 오려는 이유는 오늘의 시위가 ‘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고 다음번엔 학교측에 우리 입장을 좀더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교문 밖으로 무사히 나왔다.

## 학교는 과연 사적 공간인가

### ‘School Attack’은 계속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 자전거 School Attack”과 같은 기습 시위를 학교와 사회에 대한 충격적이며 학생들의 행동과 저항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서 준비했다. 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인권침해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행동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수동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가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졸업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일, 교육부나 교장 등 ‘위에 분들’이

바뀌줄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설령 행동이 필요하다든 걸 알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 그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학내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행동해야 할 용기를 북돋아주려는 것이 찾아가는 자전거 시위의 목적이다. 실제로 첫 번째 School Attack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호응은 뜨거웠다. 시위를 끝내고 나올 때 체육 시간인 듯 운동장에 나와 있던 학생들이 교사에게 “두발규제는 인권침해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시위가 끝난 이후 학생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다는 전언이 있기도 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두발’자전거 순례를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는 “두발 자전거 School Attack”을 계속 이어나기려고 한다. 두발자유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두발자전거는 두발자유를 위해 설 새 없이 달린다.

## [집단 민원 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집단 민원 제기」, 2006. 07. 13.

**보도자료**

제공일자	서기 2006년 7월 13일
총 매수	A4 5매
담당자	유윤중(019-480-3328) 전누리(016-297-9803) 배경내(017-214-3550)

## **제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집단 민원 제기**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난 6월 28일,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민원으로 제기하면 최대한 노력하여 구제하겠다는 의미의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권보장에 힘쓰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그동안 학생들의 신고로 수집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50여 개 중 15개를 정리하여 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집단 민원 안에는 두발규제(강제이발 포함), 체벌, 강제적 자율학습과 같은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회원중학교와 같이 학생들의 교내에서의 활동을 크게 억압하는 경우나 송운중학교와 같이 두발자유 배지를 못 달게 하는 경우처럼 학교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넣었으며, 거진중학교처럼 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들어오는 인권침해 신고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인권보장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알려지는 학교의 인권 현실이 7월부터 진행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교육부의 학생인권종합대책에 반영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첨부자료 - 민원 내용>

###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곡공업고등학교

두발규정에 있는 머리보다 머리길이가 짧아도, 선생님이 보기에 길어보이면 잘라오라고 하면서 체벌합니다. 주로 체육선생님이 손으로 싸대기를 여러 대 때립니다.

한 반 2명이 1주일동안 하는 주빈은 40분 먼저 학교 등교해서 학교를 청소해야 하는데, 만약 지각하면 몽둥이로 60대를 맞습니다.

8시 전엔 학생부장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있는데. 눈에 띄면 일단 맞고 보고, 지각해서 또 60대 맞고 주빈 된 일주일엔 정말 맞으면서 살아야 해요.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중학교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매일 아침 교실 순회를 돌면서 학생들 혼내고 욕설을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학교 수업이 다 끝나도 교문 앞에 지키고 서서 무조건 3시 10분까지 학생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체벌도 맨날 손으로 싸대기를 때립니다. 진짜 기분 나쁩니다. 올해 4월에는 신발신고 있던 이유로 학생을 손으로 막 때렸습니다. 기본이 8대 정도입니다. 5월 초에는 “두발자유” 배지 달고 다녔다고 교장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서 혼내고 싸대기 때렸습니다. 복도에서 때릴 때도 있고, 교장실로 데려가서 때릴 때도 있습니다.

###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동중학교

저희 학교에서 선배들의 학내시위가 있는 이후 선생님들이 공청회를 한다고 했지만 공청회 안 열렸습니다.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하는데, 6월 27일에는 체육선생님이 아침에 강제이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하나가 학교홈페이지에 두발자유 문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에는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개를 불러서 “시악하다.”라고 하면서 막 욕했습니다. 진짜 차마 듣기 민망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교무실로 개보고 좀 오라고 했는데 개가 숙제해야 해서 싫다고 하니까 학생부 선생님이 또 욕했습니다.

###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중학교

“두발자유” 배지 달고 다닌다고 4월 10일쯤에 여학생이 학생부에 불려가서 맞았습니다. 때라고 했는데 안 뺐다고 세계 한 대... 지나가다가 애들이 배지 달고 있는 거 보면 뺏어갑니다. 저는 음악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했구요.

### 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등학교

친구가 2006년 5월 14일쯤에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두발관련 글을 올려서 조회수 1800에 댓글도 150이상 달렸는데, 5월 18일 저녁 때 교감실로 호출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내용에 욕도 없었고 자기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교감실에서 우리학교는 두발자유 생각도 안했고 계획도 없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전학가라는 식으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강제전학 시키겠다는 위협도 하면서 당장 삭제하라고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학교 측에서 글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5월 29일에는 학교 조회시간에 두발과 교복 등등을 검사했습니다. 규정은 거의 귀뚜라미에 해군머리였는데, 선생님들이 검사하면서 가위로 강제이발을 했고 두발단속 걸린 사람은 엎드려뺨쳐 시킨 채 수업 못 듣게 했습니다.

### 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고등학교

김보현 선생님이 2006년 6월 6일인가 7일에 한 학생을 명찰 ‘찍찍이’로 달았다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 학생이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자 머리를 때리면서 “그럼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칙에 안 써있어서”라고 말하니까 “교칙에 결혼하지 말라고 써있으면 안 할거냐.”라면서 싸대기를 막 때렸습니다. 명찰 때문에만 대략 6~7대 싸대기 맞고 머리 3대 정도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 애들한테 개새끼라고 욕도 자주 합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 야지도 다 찬성으로 써내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때린다고 했습니다.

### ⑦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고등학교

저희 학기 초에 야간자율학습 동의서 같은 건 아예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강제로 야간자율학습합니다. 보충수업의 경우도 강제로 동의서에 동그라미 치게 했습니다. 2학년부턴 토요일에 오후 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키고, 1학년 때는 9시 50분까지 하지만 2학년부턴은 10시 넘어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킵니다. 화홍고등학교 말고도 수원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이 강제로 야자하고 0교시하니까 하나만 없앨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 하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 ⑧ 경기도 시흥시 송운중학교

저희가 5월부터 “두발자유” 등이 적힌 배지를 달고 다니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서, 학주 선생님이라 1학년 부장 윤인숙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대충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3반 담임 좌효숙 선생님이 배지 달고 다니는 거만 보면 혼내면서 배지를 압수합니다. 저희 반 친구 하나가 배지 50개 정도를 애들한테 공짜로 나눠줬는데, 그걸 갖고서 그 애한테 “니가 선동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서는, 배지를 가방에만 달라고 하기도 하더니 요샌 그거 어겼다면 다 압수해가더군요.

### ⑨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저희학교의 두발규제는 상고형 머리로 옆머리와 뒷머리를 1/3이상 기계로 비썩 잘라야 하며 매일 초 검사가 있습니다. 수업시간 도중에 학생부 선생님들 3명이 들어와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이름과 벌점체크 한 명은 공업용플라스틱 파이프로 3대씩 종아리를 체벌합니다. 벌점 체크 후 다음날 머리를 깎고 학생부에 8시 30분 까지 집합하여 머리검사 후 통과하지 못할 경우나 검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합니다. 또는 3번 이상 두발로 적발시 교내봉사를 하며 반삭발 형태인 경우는 반항의 의미로 간주하여 그 학생의 가방 및 사물함을 뒤져 모자와 가발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모자와 가발이 발견되면 모자와 가발 등 압수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두발규제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⑩ 대전광역시 중구 대성고등학교

1학년 별관 입구에서 생활검열을 하는 분은 1학년 부장이신 음악선생님이랑 학생부의 미술선생님입니다. 우리학교는 전체가 체벌은 ‘단무지’라는 노란색 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발규제나 교복 관련해서 걸리면 폴스윙 강도로 학생부 교사는 기본 5대 때려요 엉덩이, 아니면 간혹 무릎 꿇린 채로 허벅지. ‘개기지 못하게’ 마구 때리기 때문에 엉덩이 맞으면 피멍이 듭니다.

보충수업 같은 경우는 학기초에 가정통신문도 아닌 설문지형식으로 O X 체크하도록 해놓고 X인 학생 교무실에서 지도, O로 바꾸게 했습니다. 보충반이 정해진 후에 강의 교사 선택용지와 부모님 동의서를 배부하여 사후 위조 강요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야자는 11시 10분까지 강제입니다. 9시 10분까지는 전원 강제고 9시 10분부터 학원 가는 학생만 빼줘요 야자는 반에서 1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조퇴형식으로 가끔 빠질 수 있는데 부모의 연락이 없이는 빠질 수 없습니다.

학급 반장 부반장은 성적에 상관없이 뽑지만 학생 간부는 성적순으로 뽑았습니다. 1, 2, 3학년 반장 부반장들과 학생부장이 학생회의를 했는데 학생부장이 거의 주도하여 학생들 의견 무마하는 식으로 하고 교장에게는 학생부장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번에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사고 안 나게 군기를 잡겠다면서 가기 전에 머리 싹싹 깎도록 지시. 안 깎아오면 체벌하고 기합 줬습니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중학교

저희 학교는 두발단속 걸리면 때리기도 하고 체육실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두발단속에 3번 이상 걸리면 교내의 상장을 못 타게 막는데, 아 정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의 두발규제 완화에 대한 글이 학교홈페이지 올라오니까 5월말인가 6월달에 학생부 선생님들이 아침에 대의원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학생부 교사들이 앞뒤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학생주임이 학생들



에게 두발규제 얘기 또 한 번 나오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시킬 것이며 공청회 열어서 2cm로 줄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대표 총 20명이 너네랑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도 하구...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놓고 뭐가 불만이나고 불만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회장이 7월 3일에 두발문제 관련 설문지를 준비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선생님 그걸 알고 바로 복도에서 설문지를 학생회장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마구 욕하고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온문서유포라나... 학생회장이 설문지 돌리는 게 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징계는 안 받았다고 하던데... 그 일 있고나서 바로 학생부나 학주 선생님이 학생회장한테 그 답글도 달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성실해서 홈페이지에 학생들 질문 올라오면 답글 달아주고 그러는데... 학생회장이 학생들한테 답글 달아줄 권리도 없습니까?

### ⑫ 대구광역시 북구 동평중학교

도덕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머리 길어 보이면 6월 19일부터는 가위 가져와서 머리 깎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7월 6일에는 가위를 들고 와서 정말로 머리 길어 보이는 애들 머리를 잘라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2차로 또 잘랐습니다. 도덕 선생님은 그전에는 수업시간에 두발단속 걸리면 쇠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씩 때렸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평소에 자기 수업시간에 손으로 애들을 때립니다. 전에는 한 학생이 체벌문제 갖고 항의니까 목을 때리기도 했고, 학생들이 공 위에 앉았다고 학생들 배를 손으로 세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상중학교

두발규제는 무조건 기계로 밀어내게 되어 있는데요... 학주 이순현 선생님이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걸린 사람은 가위로 바로 잘라버립니다. 머리에 기계 안 댔다고 담임 조인래 선생님한테 학생들 앞에서 뺨을 5대 정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김운섭 선생님은 한자시간에 매주 쪽지시험을 쳐서 틀린 개수만큼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밀대로 애들을 뺨니다. 6월 22일에도 맞았습니다.

김동욱 체육 선생님은 별 설 때 학생들에게 장난쳤다면 배를 대나무 같은 걸로 때리기도 했고, 체육시간에는 체육복 하복을 안 입고 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5대 넘게 맞았구, 체육복 동복 입고 있으면 2~3대.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합니다.

### 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암고등학교

2006년 6월 초에 최영진 선생님이랑 정국환 선생님이, 자기 수업시간에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머리를 깎으라고 위협했습니다.

### ⑮ 경상남도 고성시 거진읍 거진중학교

2005년 12월달에 학생들이 두발규제 놓고 투표를 했는데 선택지가 1번 더 짧게 2번 지금 규정대로 3번 두발자유(염색, 펌 등 제외하고)였습니다... 투표결과 학생들 90% 이상이 3번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규정이 짧아졌어요 남자는 그 전까지는 뒷머리는 5cm 정도 구레나룻은 귀뿌리까지 길러도 되었는데 지금은 뒷머리를 바리깡으로 올려 쳐야 하며 구레나룻을 없애래요.

이상 15개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규제, 재발방지 등을 요구합니다.

## [수원 청명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 인권 상황」, 2006. 09. 01.

# 청명고 인권 상황

### ◎ 두발규제와 그로부터 비롯된 폭력

- ① 두발규제는 그 존재 자체로 국가인권위도 확인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② 명시된 규정과 관계없이 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짐.
- ③ 두발단속 과정에서 차별과 강제이발 등의 폭력이 가해짐.
- ④ 2학기 시작하자 두발규정강화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 ⑤ 9월 4일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에서 대대적으로 두발단속을 펼쳐 잡힌 학생은 운동장을 뛰게 함.

### ◎ 강제야간자율학습과 강제보충수업 등 쉼 권리 침해

- ①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를 나눠주고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부모님 사인 위조해서 찬성에 써서 내라고 강제.
  - ② 방학 중 오후 5시까지 하는 보충수업도 마찬가지로 동의서에 찬성으로 쓰라고 강제.
  - ③ 심화반의 경우 0시~2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
- ※ 대부분의 수원 인문계 고등학교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실시한다고 함.

### ◎ 사생활 침해

- 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는 등 소지품 검사가 있어 왔음.
- ② 휴대폰을 빼기면 문자를 보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는 등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
- ③ 청명고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문자 기록을 엿봄.

### ◎ 부당한 시위 탄압 및 청소년들의 언론, 표현의 자유 등 침해

- ① 8월 25일 시위 때 호루라기를 불고 들어가라면서 학생들을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손을 휘저으며 학생들을 밀치는 등 폭력 사용.
- ② 8월 25일에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을 끌고 가서 협박, 자퇴서 작성 강요
- ③ 8월 29일 시위를 제지하겠다고며 소지품 검사를 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전단지들 소지했던 2학년 학생을 끌고 가서 혼냄. 그 학생은 교무실로 계속 끌려 다니고 있으며, 가지고 있던 청

소년인권활동가의 명함도 압수당함.

- ④ 8월 29일 시위를 막기 위해 교사들이 교실, 복도, 입구마다 감시하며 시위 나가려던 학생들을 제지.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것도 통제하는 등 계속적 억압.
- ⑤ 8월 31일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겠다며 휴대폰을 건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학생들의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 시도.
- ⑥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학생들을 색출하겠다고 하며 조사를 벌이는 등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 ⑦ 현재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도 폐쇄된 상태임.

###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방해

- ① 8월 31일 교사가 청소년인권활동가를 미행하다가 그 활동가가 미행을 따돌리자 같이 있던 다른 활동가들에게 다가가 “일행 다 봤다. 당신들 뭐냐.”라며 교사 여럿이 둘러쌈.
- ② 9월 1일 교감이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나쁜 외부단체와 동조하지 말라고 하며 외부단체 대표(2학년 학생에게 압수한 명함의 주인인 이수나로 활동가를 대표라고 표현한 듯함.)는 대학교 3학년인데 정신연령이 여러분보다 낮을지도 모른다고 비난.
- ③ 9월 1일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외부단체, 기자와 접촉한 학생이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 학생 이름을 밀고하라고 함.
- ④ 9월 1일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려는 청소년인권활동가를 계속 쫓아다니며 학생들과의 접촉을 감시. 따돌리기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뛰기 시작하자 계속 추격. 접촉한 학생을 찾기 위해 휴대폰도 검사하고 설문지도 돌린 판국에 이는 인터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
- ⑤ 9월 1일 이수나로 청소년활동가(19세)에게 교사 두 명이 “이수나리인가 하는 데서 이런 거 시키디?”, “또라이” 등 폭언. 어깨를 밀치기도 함.

최승덕 기자, 「수원 초고, 두발규제 반대시위 학교 감시로 무산돼 - “퇴학시키겠다” 폭언에 학생들 좌절」, 프로메테우스, 2006. 08. 30.

## 수원 초고, 두발규제 반대시위 학교 감시로 무산돼

### “퇴학시키겠다” 폭언에 학생들 좌절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두발규제 강화 지침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를 벌이려다 교사의 강력한 제지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 초고 1·2학년 학생들은 29일 오후 8시 야간자율학습 휴식시간 동안 모두 운동장으로 모여 두발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시위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퇴학시켜버리겠다”는 학교의 강경방침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교사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지품과 사물함을 검사해 ‘청소년 인권, 두발자유’ 문구가 쓰여진 전단지 등 시위물품을 압수해갔다. 학교 측은 비가 온다는 핑계로 휴식시간 20분을 10분으로 줄이고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또한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을 종용하는 등 삼엄한 감시를 펼쳤다.



△ 수원 초고등학교. 밤 10시지만 모든 교실에 전등이 환히 켜 있다.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 ‘뒷머리 옆머리 다 밀어 명령에 쌓인 분노 폭발

초고 학생들이 시위를 계획한 데는 학교의 강화된 두발규제 지침과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때문이다.

초고는 9월부터 두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남학생의 경우 머리 뒷부분과 옆 부분의 두발을 완전히 잘라 살이 보이도록 할 것과 손을 넣었을 때 빠져나오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여학생의 경우엔 10cm이하로 자르도록 강요했다. 현재 초고 남학생의 두발 길이는 대략 2cm정도다.

남학생의 말에 따르면 학교 측은 두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만을 이용해야 하

며 적발 시 봉사활동을 제재를 주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한다. 휴대폰 학내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학생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다. ㄱ학생은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강행한다는 이야기 들었으며 학생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표시를 하면 학교로부터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ㄱ학생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해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참여를 강요하고 학부모의 서명을 학생이 대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군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토록 심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규제를 강화하더니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머리를 더 자르라고 해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서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여명 가량이 운동장으로 나와 일부는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는 여학생의 두발길이를 10cm에서 17cm로 완화해주었지만 남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굽히지 않았다.



△ 한 남학생의 두발. 여느 학교와 비교해도 짧은 편이다. 그는 9월이 되면 규정에 걸리게 돼 더 짧게 잘라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 프롬메테우스 최승덕

### “퇴학시키겠다” 폭언에 학생들 체념

밤 10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내 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ㅎ학생에 따르면 “선생님이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은 퇴학시키겠다”는 폭언까지 해 도저히 집회를 강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ㄴ군은 “시위를 못하게 되서 다들 아쉬워했고, 해봤자 안 된다며 체념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전단지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에게 징계가 내



△ 교사의 제지로 학내 시위가 무산돼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 © 프롬메테우스 최승덕

려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초고 학생부장 교사는 “지난주에 두발규제를 보완했는데 이에 대해 거부감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발 규제를 강화한 취지와 학생 징계에 대해 문자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최승덕 기자, 「청명고 ‘스쿨 어택’, 교사들 “선동하지 말라”며 제지 - “인권적으로 교육 안된다” VS “학생 존엄권 지켜줘라” 」, 프로메테우스, 2006. 09. 06.

## 청명고 ‘스쿨 어택’, 교사들 “선동하지 말라”며 제지

### “인권적으로 교육 안된다” VS “학생 존엄권 지켜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수원 청명고를 찾아가 최근 일어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스쿨어택(school attack)’을 벌였다.

수원 청명고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남학생은 2cm미만으로 자르되 옆머리와 뒷머리는 속살이 보이도록 자를 것, 여학생의 경우 10cm 미만으로 자를 것 등 지시했다. 그러나 1·2학년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학내 시위를 벌이려다 학교 측의 유인물 압수, 감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이상훈 청명고 교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스쿨 어택’ 시작부터 교사와 실랑이 벌어

인권단체들은 6일 오전 7시 30분 청명고 진입로에 6~7여점의 사진을 전시하며 ‘스쿨어택’을 시작했다. 매를 맞고 있는 학생, 허벅지와 둔부에 든 피멍, ‘바리깡’으로 두발이 밀린 학생 등 학교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적나라한 사진들이었다.

이에 대한 청명고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무관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민의신문> 김고중



호 기자는 그중에는 “지들이 뭘데 남의 학교와서 난리냐”며 말을 던지는 학생부터 박수를 치며 “화이팅”을 외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전이 진행되는 내내 교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있던 청명고 교사 세 명이 다가와 당장 설치물을 철거하고 떠나라며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기자들 불러다가 목적 다 달성했네요 인권운동 순수하게 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언론이 와도 몇몇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등 거친 말들이 오갔다.

2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교사는 “17년 교사생활에 폭죽을 나눠주고 학생보고 시위하라고 것은 처음”이라며 “학생들을 선동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다. 그는 “당신들이 학교현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인권적으로 하면 교육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시를 넘겨서는 청명고 학부모 대표까지 찾아와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 3들이 널 모레 시험인데 뭐하느냐”, “뭐 이런 그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며 따졌다. 학부모로 보이는 한 남성은 “니네들 너무 뻔뻔하다”, “니네들은 이복으로 가야 돼” 등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학교 대표와 인권단체 대표간의 면담이 합의되면서 사진 전시물을 철거하고 모두 교장실로 이동했다.



△ 스쿨어택에 전시된 사진

### 청명고 “인권단체가 학생들 선동하고 있다”

#### 인권단체 “휴대폰 검열은 범죄행위”

그러나 면담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시작부터 보도진과 학부모 철수, 양측 동수 입회 등 면담 방식으로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참가하기로 했던 청명고 교감 한 명이 면담을 거부하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청명고 교사들은 언론 보도와 인권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학교가 학생시위를 통제를 위해 소지품



△ '스쿨어택' 행사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청명고 학생들

검사하고, 기자와 접촉한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휴대폰을 검열했으며 강제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단체와 접촉한 학생을 밀고하라며 설문지를 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 “대답한 가치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휴대폰 검열은 학생들에게 문자가 오면 “간혹가다 무슨 문자왔냐라고 물으며 잠깐 보는 정도”라고 답했다. 설문지에 대한 개별학급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며 학교에선 그런 바 없다고 했다.

자율학습 실시도 모두 부모의 동의를 얻었고 반대하는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소지품 검사는 폭죽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안전지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8월 24, 25일에 벌어졌다고 알려진 학내 시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훈 교사는 “단순히 누군가 운동장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학생들이 놀라 ‘우’하며 소리 낸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단지 학생들의 시위 시도는 인권단체의 선동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이용구 교감은 “여학생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다 이해하고 잠잠해지는 와중에 인권단체에서 시위물품을 나눠주고 시위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학생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어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라며 ‘선동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폰 검열은 명백한 범죠행위”라고 말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청명고 교감,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 청명고-인권단체, 시각차 커

양측은 교육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학교는 아이들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면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교사는 “예전엔 두발규제가 엄했는데 새로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생들을 믿어보라고 해 완화시켰지만 무스를 바르고 애들이 건방져져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이 집회를 선동하면 자퇴사유가 된다”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퇴하고 전학을 가는 것도 전향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아이들 인권을 억압한다고 하는데 10년 후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학교에서 칼부림 난다”고 말했다.

배경내 활동가는 “학부모가 대신 두발규제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단지 보조적 역할만 해야하며 학생이 직접 동의해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법과 국가인권위의 권고, 세계인권조약 등에 규정된 대로 학생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내 시위에 대해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양측의 의견을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면담 말미에 학부모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인권단체는 다 빠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몰아 부쳤다. 교사들도 “아이들 선동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 운영위원은 “인권운동하기 전에 인격형성부터 하라”며 비난 하기도 했다.

교육자와 인권운동가, 활동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마음의 상처만 입히고 끝나고 말았다.

김고종호 기자, 「인권단체, ‘고등학생시위’ 선동했나? [현장] 수원 청명고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 사진전, 학생인권 요구에 “모의고사 방해마라” 」, 시민의 신문, 2006. 09. 06.

## 인권단체, ‘고등학생시위’ 선동했나?

[현장] 수원 청명고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 사진전

학생인권 요구에 “모의고사 방해마라”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mailto:kkjh@ngotimes.net)

“학생들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응구 청명고 교감의 말이다. 두발 제한을 몇 센티미터로 할 것이냐는 논쟁보다도 훨씬 더, 교육현장의 암울함을 드러내주는 말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6일 아침 7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청명고등학교 앞에서 ‘스쿨어택 2탄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사진전’을 열었다.

이 사진전은 지난 8월 25일 한 청명고 학생이 두발제한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제보한 후 인권단체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려 하자 학교가 학생 단속을 강화된 데에 따라 열린 것이다.

청명고 교사들은 네트워크 활동가들에게 다가와 “현장의 어려움을 당신들이 아느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들이 교원자격증 따서 해봐”라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므로 집회로 봐야 한다”라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발 길이 규제 강화에 대해 이상훈 청명고 2학년부장 교사는 “청명고의 규제는 수원시 내 열 개 인문계 고교 중 일곱 번째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며 “머리와 교복이 단정한 학교는 대개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응구 교감도 “성인 남성이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학생들도 단정해야 마음가짐이 똑바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고종호 기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6일 아침 7시 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청명고등학교 앞에서 '스쿨어택 2탄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사진전'을 열었다.



김고종호 기자. 이상훈 2학년부장 교사(제일 왼쪽)가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가운데),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너머로 학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센티미터라도 더 기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누가 제한 강화에 동의하겠느냐”라고 말해 생활지도지침의 두발규정 조항 개정시 설문지 등을 이용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학교 측은 네트워크가 학생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교감은 “철 없는 학생들이 자유를 누려보고자 그랬으면 타일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으로 포장한 위부선동으로 아이들이 경솔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학교는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위압적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시위를 가로막았다”며 “학생들이 이런 부담함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들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학교로 몰려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표자 4명은 학교 안에서 학교 교감,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들과의 면담을 가지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배경내 상임활동가가 학부모들에게 “친권은 인권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학부모들은 “어이 없다”고 말하며 피식 웃었다. 정연현 2학년 학부모 대표는 “우리 아이 인권은 우리 학부모가 책임질테니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라”며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이를 방해했으니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 학교운영위원은 네트워크 활동가들에게 “인권운동 하기 전에 인격 형성부터 하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교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시위냐”며 “앞으로 아이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네트워크에 요구했다.





김고종호 기자. 사진전이 펼쳐지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르르 학교로 몰려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표 4명은 학교 안에서 학교 교감,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들과의 면담을 가지고 입장을 설명했다.

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는 청명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특히 청명고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이상 학생인권 신장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청명고 인권침해 사실

**2006년도 1학기** - 두발규제는 여학생 묶으면 20cm,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썹까지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카라에 닿지 않게. 교문지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수업시간에나 교실에서 단속할 때 교사들이 규정과 상관없이 처벌. 일부 강제이발. 휴대폰 압수시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했으며, 간혹 가방을 열어보라며 개별적 소지품 검사.

**8월 21일경** - 개학하자마자 두발규제를 남학생은 스포츠형(뒷머리와 옆머리는 하얗게 보이도록 지를 것), 여학생은 묶으면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할 것이며, 9월 1일부터 후문을 닫고 정문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고. 학생들 불만 고조.

**8월 25일 금요일** - 시위한다는 문자가 돌고, 야간자율학습 1교시에 학생회가 각 반을 돌면서 시위를 만류.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오후 8시에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운동장에서 촛불을 들고 교실 불을 껐다 켜다 하며 시위. 교사들에게 해산당함.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이 끌려가서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협박당했다고 함. 월요일에 다시 시위한다는 문자가 돌. 청명고 학생이 이수나로에 시위를 제보.

기자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다. 교사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은 “사진 찍지 말라”는 말로 기자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러 반응을 살필 수는 있었다.

어떤 학생은 사진전을 펼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 “자기네들이 뭘데 남의 학교 와서 난리야”라는 말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머리 기르고 싶어요”라며 네트워크와 기자들을 향해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머리 길이 문제만은 아닐 테다. 네트워크의 주장과 학교 측의 해명을 종합해보았을 때 소지품 검사, 강제자율학습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일

**8월 28일 월요일** - 여학생 규정은 묶으면 17cm로 바뀌어서 발표. 문서상 남학생은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 끝부분은 손가락 굵기 이내” 등으로 발표되었으나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하얗게 보이도록 잘라야 한다고 했다 함.

월요일에 시위하겠다고 한 것이 화요일로 미루어졌다는 문자가 돛.

월요일 시위를 취재하러 갔던 이수나로 활동가가 주도적인 1학년 학생 한 명과 2학년 학생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 받아 두발자유/청소년인권이 적힌 카드섹션과 전단지 몇 부를 제공.

**8월 29일 화요일** - 시위할 거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교사들이 대대적으로 가방과 사물함 소지품 검사를 하여 2학년 학생의 카드섹션, 전단지, 폭죽 등이 적발됨.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며 시위 제지.

바이러스와 프로메테우스 기자가 취재하러 갔다가 시위 무산 기사를 씀.

**8월 30일 수요일** -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한 명씩만 가도록 통제하는 등 시위 경계.

**8월 31일 목요일** - 기사가 나오자, 인터뷰한 학생을 찾겠다고 휴대폰 건어가서 내용을 확인.

학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 인터뷰하러 온 인권활동가들을 미행.

**9월 1일 금요일** - 본래 예정되었던 교문단속은 월요일로 다시 공고됨.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외부단체’가 개입하고 있다며 비난. 이수나로 활동가의 정신연령을 언급하며 폄하. 외부단체와 접촉해봤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봤거나 그런 학생을 알면 밀고하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나눠줌.

저녁 때 추가적으로 학교 안 상황을 알아보러 온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대놓고 미행. 한 청소년활동가들 밀치며 폭언.

\* 야간자율학습과 방학 중 보충수업은 강제이며, 심화반은 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킴. 교사들이 학생에게 자율학습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함. 예체능계 학생들이 강제 자율학습으로 인해 학원을 다니지 못



김고종호 기자

하고 있음.

### 네트워크 주장에 대한 학교의 해명

1. 휴대폰 검사 부분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 교사들이 “무슨 문자냐? 보자” 하며 문자 내용을 가볍게 봤을 수는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문자 내용 검사를 하지는 않았음.

2. 가방을 열고 소지품 검사를 했다는 부분 - 아이들이 폭죽과 같은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안전지도 차원에서 검사했을 뿐임.

3. 지난 8월 25일과 29일의 학내 시위 부분 -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한 명의 사람이 폭죽을 터뜨렸을 뿐 학내에서 그 어떠한 시위도 벌어진 적이 없음. 아이들이 불 켜다 껐다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비계획적인 행동이었지 시위라고 볼 수 없음.

4. 학생에게 자퇴서를 강요했다는 부분 - 학내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퇴학 사유임. 이를 고지해주면서 “정 맘에 안들면 학교 관두고 다른 학교 가라”라는 취지의 지도는 한 적이 있지만 자퇴서를 강요한 적은 없음.

5. 인권활동가 미행 부분 -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들이 인권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던 것이었음. 그런데 인권활동가들은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우리를 보자 슬그머니 도망치는 모습을 보임.

6. 외부단체와 접촉하는 학생을 알면 밀고하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돌렸다는 부분 - 개별적으로 그렇게 한 교사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음. 학교 차원에서 그런 설문지를 돌린 적은 없음.



김고종호 기자. 6일 아침 등교시간 청명고 교문 안쪽의 풍경. 교사들이 교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걸린 학생들의 이름을 적는 듯 했다. 통과한 학생과 걸린 학생이 대비되는 모습.



김고종호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청명고등학교. 130여 명의 교직원과 1750여 명의 재학생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다.



7. 강제 자율학습 부분 - 야간자율학습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음. 다만 학부모가 자율학습에 남아 공부하길 원하는데 학생이 싫어할 경우 학생과 면담을 하면서 설득하는 차원일 뿐임. 예체능계 학생들은 학원 교육을 위해 전원 자율학습에서 배제시켜 주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도 이를 지키고 있지만 더 남아 공부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원하는 사람만 밤 12시까지 남아 공부하고 있음. 이는 교육청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청명고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측의 학교질서 훼손 사실**

1. 외부단체들이 폭죽과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몰래 시위를 선동하였음
2.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들이 대화를 나누고자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슬그머니 도망치면서 계속 학교를 돌며 아이들과의 접촉을 반복함.

### **청명고 주장에 대한 네트워크의 해명**

1. 시위 선동 부분 - 청명고 학생들로부터 전화로 도움을 요청받은 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명고에 왔었음. 이때 카드섹션과 전단지 한 차례 전달하며 “혹시라도 학교에서 부당함을 겪으면 연락하라”고 하며 명함을 건넨 적은 있으나 가만히 있는 학생들을 선동(?)한 적은 없음. 할 생각도 없는데 외부단체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 없지는 않을 것임. 학생들의 자발적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임.

2. 학교 측 관계자를 피했던 부분 -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고 학생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학교 측 관계자와의 접촉을 피했던 것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의 학생인권탄압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2006. 09. 06.

## 청명고의 학생인권탄압 현실을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5일 청명고에서는 학교의 두발 규제 강화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자발적 시위가 있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학교당국은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기위한 대대적 소지품 검사를 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시위의 발단이 된 두발규제 강화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지침도 따르지 않는 행태이다. 두발의 자유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선언했듯이 학생의 기본권이다. 게다가 단속과정에서 체벌과 강제이발 등의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청명고의 학생인권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명고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보충수업이 실시돼 왔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돼 있음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반 학생이 모두 앉은 자리에서 가정통신문에 학부모의 서명을 날조할 것을 요구하는 작태마저 저질렀다.

학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 학교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가방 등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수업시간에 핸드폰이 걸린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폰을 빼앗아 문자를 확인하고 그 문자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 인권침해에 저항한 학생들의 행동은 용감했고 정당했다. 학생들이야말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억압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주동자’에게는 자퇴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글을 보고 학생을 추적하기도 하고 학교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인권 활동가들을 미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금의 청명고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의 손발과 입과 귀를 철저히 동여매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선 안될 반교육적 처사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인권단체들이 요청한 면담마저 교육청은 학교부터 만나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거부한 바 있다. 이는 교육청이

단위학교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만적인 언사에 다름없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청명고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교육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지금의 태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청명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명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9월 6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다산인권센터

〈수원 청명고 스쿨어택〉 소장사진, 2006. 09. 06.









## 청명고 스쿨어택, 억눌린 권리를 위한 응원

9월 6일 아침, 수원 영통에 위치한 청명고등학교에서는 평소의 일상적인 등굣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의 인권활동가들이 “스쿨어택 2탄 - 찾아가는 청소년인권 사진전”을 열면서 정문으로 가는 길에는 두발규제와 차별, 그리고 청소년들의 학내시위 모습 등 청소년인권을 다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학교 주변에서는 활동가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학생인권 바로 지금”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은 학교

청명고등학교는 8월 29일, 학생들의 학내시위 시도를 학교측에서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와 감시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막아 한 번 언론에 알려진 적이 있는 학교이다. 청명고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2학기 들어 학교가 새로 강화된 두발규정을 발표하자 불만이 생긴 학생들이 8월 25일에 운동장에 나가고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교실의 불을 켜다 켜다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후 여학생들의 규정만 완화가 되자 남학생들은 추가적으로 8월 29일에 시위를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권단체로부터 “두발자유 / 청소년인권”이 적힌 카드섹션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학교는 시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여 주동자를 색출하고 시위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학교 곳곳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무산시켰다.

게다가 학교는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나가자 기자나 외부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찾겠다며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걷어 그 내용을 보기도 했으며, 인터넷 기사에 학교 규정 등을 밝힌 댓글을 단 학생을 색출하여 교무실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 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인터뷰하러 왔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방해하며 학생들과의 만남을 막으려 했다.

### “화이팅”과 “꺼져라”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등이 연대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는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시위 시도를 더욱 강력한 인권 탄압으로 막은 청명고등학교에 항의하고, 또 학교 안에서 불만과 저항의지를 갖고 있던 학생들에게 응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스쿨어택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이 시작되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정문에서 두발, 용의복장 등 등교지도를 하던 교사들이 나와 인권 활동가들과 언쟁이 시작되었다. 청명고 이상훈 교사는 “교직생활 5, 6년 이상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현장의 어려움을 아느냐. 인권적으로 해서는 교육이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한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했다고 말하자 “우리가 인권위 말을 왜 따라야 하느냐.”라고 강경한 태도를 비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교사들은 “주변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 청명고는 심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교사들은 전시된 맞아서 멍이 든 사진들 등이 청명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치우라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한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을 고발하고 청명고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옆에 왔던 한 학부모는 “우리 애도 맞아서 다리에 멍이 들어 왔지만 애들은 역시 맞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그렇게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이복으로 가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학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집회 신고를 냈는지 묻고 미리 신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인권활동가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거나 연행하지는 못했다.

스쿨어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학생들은 “왜 남의 학교에서 난리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편, 어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스티커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두발자유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이팅”을 외쳤다. 등교시간이 끝나고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명고 교사 측과 면담을 하러 들어갈 때, 한 창문에서는 남학생들이 “두발자유!” “살려줘요!” “화이팅!”을 외치는데 다른 창문에서는 여학생들이 “꺼져라! 꺼져라!”를 외쳐 양분된 학교 안의 여론을 보여주었다.

## 너무나 다른 인권의식

면담은 교사 2~3명을 비롯하여 학부모들이 다수 배석한 가운데 거의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청소년인권 활동가들은 두발단속, 소지품 검사, 강제야간자율학습 및 강제보충수업, 부당한 시위 탄압 및 징계 위협,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등 학생들의 증언과 제보를 토대로 알려진 인권침해들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두발규정 개정 과정 등을 질의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까봐 안전지도차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집단선동은 ‘자퇴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니 ‘자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 “야간자율학습 등은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답하며 학생들의 증언을 부인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시위는 없었고 외부단체가 선동했을 뿐이라 말하자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할 생각도 없는데 선동한다고 해서 할 만큼 학생들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하여 서로의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배경내 활동가가 “친권이 인권보다 앞설 순 없다.”라고 말하자 학부모들은 이에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 인권의식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학교와 학부모는 면담 내내 계속 현재 애들에겐 입시가 가장 중요한데,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저번주부터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을 선동했고 오늘은 3학년 모의고사 날인데도 소란을 일으켰다며 활동가들을 비난했다. 결국 면담은 학교와 학부모가 “아이들 인권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라.”라고 하자 활동가들이 “우리가 참견하지 않아도 되게 인권을 잘 보장하면 된다.”라고 받아치며 팽팽한 분위기 속에 끝났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청명고에서의 면담이 끝나고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이 청명고 사건에 관한 면담을 거절한 것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명고에서의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학생들과 연대하여 계속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청명고에서 일어난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침해는 여러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청명고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모두 틀어막아버렸다는 점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더욱 강한 지탄을 받았다. 이후 청명고의 학생들이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청명고등학교는 학생인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소년계나 교육계는 모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b>진 정 서</b>	
<b>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b>	
① 이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표 진정 - 배경내/유윤중)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 대한민국
④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⑤ 전화 02-741-5363	⑥ 팩스 741-5364                      ⑦ 이메일 hregang@hanmail.net
<b>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b>	
① 이름 수원청명고 학생들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b>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b>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	
<b>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b>	
① 이름 교장 김청극	② 소속 수원 청명고등학교
② 연락처 031-201-9600~15	
<b>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b>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누구 (                                      )	
<b>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lt;별지 2&gt; 참고</b>	



## <별지 1> 진정 내용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등학교에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아래 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해 2006년 3월 결성된 연대체입니다.

- 저희 네트워크는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캠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등의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지난 1학기부터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특히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위협에 놓인 학생들을 옹호하고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학교 앞 1인시위에 나섰다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오병헌 학생(서울 동성고등학교 재학)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교조, 홍사단,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는 기획 기사를 <인권오름>과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에 연재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활동을 벌이던 중, 저희 네트워크는 지난 8월 25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1차 학내 시위가 교사들에 의해 강제 해산된 데 이어 29일 준비되고 있던 2차 시위마저 교사

들의 대대적인 단속과 징계 위협으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학내시위를 ‘교내 질서를 교란하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와 표현물 압수, 핸드폰 압수와 문자내용 엿보기, 관련 기사 댓글 작성자 추적, 시위시 징계 위협 등으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저희 네트워크 쪽에 시위 계획을 제보했던 청명고 학생들과 하교길에서 만난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파악된 것입니다.

- 이러한 학교측의 부당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청명고 학생들은 징계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희 네트워크가 제3자 진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피진정인의 경우, 단속을 주도한 몇몇 교사들이 존재하지만 학교당국의 방침 혹은 묵인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학교 교장을 인권 침해 당사자로 지목하였습니다.

## 2. 수원 청명고가 행한 학생인권 침해

### 1) 집회의 자유 전면 봉쇄

#### [학생들의 학내 시위 배경]

- 수원 청명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지난 8월 21일경,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은 스포츠형(문서상으로는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끝부분이 손가락 굵기 이내;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뒷머리와 옆머리는 머리밑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자를 것), 여학생은 묶었을 때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제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는 9월 1일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등교하도록 하여 대대적 단속을 벌일 것이며 단속에 걸린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고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1차 시위에 대한 강제 해산]

- 이에 8월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나는 저녁 8시, 주로 여학생을 중심으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가운데 몇 명은 촛불을 들어 학교측의 부당한 규정에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교실의 불을 켜다 끄다 하면서 지지의 뜻을 표했고, 3학년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합성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1차 운동장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시위가 있자마자 교사들 몇 명이 달려나와 곧바로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손을 휘저으며 학생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은 끌려가서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실제 자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항의 행동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자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서 자퇴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 시위에 대한 원천 봉쇄]

- 28일 여학생들에 한해 ‘뭉으면 17cm’로 두발규정이 다시 바뀌어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 중심으로 29일 저녁 8시를 기해 2차 학내 시위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일 당일, 시위 계획이 미리 알려져 교사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가방과 사물함 수색)를 실시하여 2학년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두발자유, 청소년인권 문구가 쓰여 있음), 폭죽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전단지를 갖고 있던 학생은 교사들에게 끌려가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 쉬는 시간을 애초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교실과 복도, 현관 입구 등지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퇴학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며 흩어지도록 하는 등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삼엄한 감시를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시위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학생 집회의 자유 침해]

-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집회를 열고,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집회의 공간이 학교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안 권력관계 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아래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언론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집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할 기회를 열어주는 집회

의 자유는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집회의 자유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로서 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청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 학내시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자퇴서까지 강요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단속과 협박을 통해 2차 학내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9월 6일 저희 네트워크가 이 학교를 항의방문하여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응구 교감이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데 내버려둘 수는 없다. 막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보아서도 청명고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측의 원천 봉쇄로 무산된 학내시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면, 또 저희 네트워크가 학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면, 청명고는 2차 시위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징계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던 집회를 자의적으로 봉쇄하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준비한 학생들에게 징계 또는 징계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지난 5월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4월 19일 열린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막기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명고가 학생들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원천 봉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청명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교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받고, 시급히 삭제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표현의 자유 침해

### [언론과의 접촉 통제]

- 8월 29일 2차 시위 무산 소식이 언론(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프로메테우스)을 통해 보도되자, 31일 청명고 교사들은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고 휴대폰을 건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9월 1일에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외부단체나 기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으면 이름을 쓰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친구를 밀고하라고 압박하는 비교육적

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 **[의사 표현 금지]**

- 8월 29일 교사들은 소지품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단지를 압수해갔습니다. ‘두발 자유, 청소년인권’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시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표현물을 함부로 압수해간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몇몇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사에 댓글을 단 학생들을 색출하겠다고 조사를 벌이고, 앞으로 댓글을 달지 말라고 협박하여 학생들이 학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마저 금지시켰습니다.

###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 학생들의 언론활동과 의사표현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전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상의 의사 표현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면 통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69년 미연방대법원 역시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받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교문 앞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고 학교의 부당한 억압적 조치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그럼에도 청명고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교의 잘못을 덮으려는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원칙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모든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하고, 아동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특별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정당성 없는 수색 - 소지품 검사]

- 청명고에서는 1학기에도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지품검사를 실시해 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교사가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특히 지난 8월 29일 학내 시위를 막을 목적으로 벌인 대대적 단속 과정에서 교사들은 가방과 사물함을 함부로 열게 하고 소지품을 뒤지는 등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 31일에는 학교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문자 기록을 엿보기조차 했습니다.

### [학생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우리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12조)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자유’(17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16조)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 소송이 많이 제기된 미국에서는 ‘학교 당국이 영장 없이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긴급한 상황이라는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색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수색이자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청명고에서는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를 함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행된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단행된 것인 만큼,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은 언제 소지품 검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 3. 진정인의 요구

- 저희 네트워크는 청명고가 자행했고 또 앞으로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제시한 관련 지침

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두발규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또 다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 부디 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명고 학생들이 당한 피해가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명고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고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병성 기자, 「“학생 두발규제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 청소년인권단체, 수원 청명고 사례 인권위 진정」, 뉴스앤뉴스, 2006. 09. 15.

## “학생 두발규제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 청소년인권단체, 수원 청명고 사례 인권위 진정

일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등 5개 청소년인권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수원 청명고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청명고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의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네트워크가 청명고 학생들의 증언과 제보를 통해 수집해 이날 발표한 사례들은

네트워크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청명고는 지난 8월 25일을 지나친 두발 규제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나흘 뒤인 29일로 예정된 시위는 원천봉쇄했다.

학교 측은 학내시위를 ‘교내 질서를 교란하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집회에 관련한 표현물과 핸드폰을 압수했고 학생들에게는 징계위협을 가했다.

#### “휴대폰 통화내역 검사에 인터넷 댓글 단 학생 색출까지”

또한 지난 29일 두 번째 시위가 무산된 뒤 이 내용이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기사화되자 언론과 접촉한 학생들을 찾아내겠다고 하며 휴대폰을 걷어가서 통화와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의심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내라’며 설문지를 돌리기까지 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학교 측의 부당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청명고 학생들은 징계 위협 때문에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제3자 진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는 “피진정인의 경우 단속을 주도한 교사들이 있지만 학교당국의 방침과 묵인 아래 인권침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교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청명고가 자행했고 또 앞으로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행위는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며 “인권위의 적극적 판단으로 청명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인권 탄압이 중단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학생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내 시위를 막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학내 시위 자체를 ‘일부 학생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일체 부인했고 휴대폰이나 소지품 검사도 학생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4일 수원 청명고의 집회 봉쇄와 관련 학생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앤뉴스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건명: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030)

진정인: 배경내(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피해자: 수원청명고학생들

피진정인: 수원청명고등학교장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규정 제77조의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기타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학생들의 학내 시위 배경

피진정인은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지난 8.21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학생

의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공고하였다. 개정 규정은 남학생은 스포츠형(문서상으로는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끝부분이 손가락 굵기 이내이나 증언에 따르면 뒷머리와 옆머리는 머리끝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자를 것), 여학생은 묶었을 때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9.1일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정무능로만 등교하도록 하여 대대적 단속을 벌일 것이며 단속에 걸린 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징계 조치하겠다고 공고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나. 8.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나는 저녁 8시, 주로 여학생을 중심으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가운데 몇 명은 촛불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하고 운동장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교실의 불을 켜다 켜다 하면서 지지를 보냈으며, 3학년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함성을 내지르기도 하였다. 이날 운동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위가 있자마자 교사들 몇 명이 달려나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시키고 손을 휘저으며 학생들을 미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은 끌려가서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다.

다. 또한, 8월 28일 여학생에 한해 묶으면 17cm로 두발규정이 다시 바뀌어 공지되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 중심으로 29일 저녁 8시를 기해 2차 학내시위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시위계획이 미리 알려져 교사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가방과 사물함 수색)를 실시하여 2학년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두발자유, 청소년 인권 문구가 쓰여 있음), 폭죽 등을 압수해 갔으며 전단지 소지학생은 교사에게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 쉬는 시간을 애초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항이며, 교칙에 ‘학생을 선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8.29일 2차 시위 무산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사들은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고 휴대폰을 걷어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9.1일에는 설문지를 돌려 외부단체나 기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으면 이름을 쓰라고 하면서, 친구를 밀고하라고 압박하였으며, 8.31일에는 학교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문자기록을 엿보기조차 하였다. 그 외 1학기에도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교사가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학생 두발규정 관련 지침 또는 근거, 개정배경, 개정결정까지의 업무처리한 과정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침

○ 공문: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05.11), 20888(2006.08.25) 「학생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중,

①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③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 나) 개정 배경

2005년 5월 수원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중 본교가 제일 먼저 두발 규정을 완화하였으나 2006학년도 신입생 중 상당수가 완화된 두발 규정을 이유로 본교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학력 향상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로 인하여 생활지도나 교과지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었고,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판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 또한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장이 생활규정 개정을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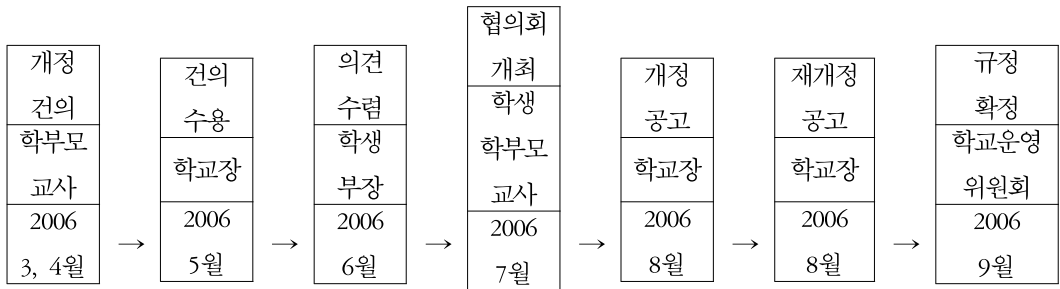
#### 다) 업무 처리 과정 및 절차

##### (1) 업무처리 과정

위 '개정 배경'에서 진술한 바, 2006. 5월 중 학교장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교감을 거쳐 학생자치부장에게 지시하여, 학생자치부장은 제8기 학생회장단과 학생회를 통하여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을 공지하고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05.11), 20888(2006.08.25) 「학생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중 학교생활규정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민주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2) 업무 처리 절차도



(3)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응답자: 교사 (    ), 학생 (    ), 학부모 (    )

다음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우리 청명고등학교 구성원 모두는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학교 문화 창조'를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주어야 하고,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며,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지역 사회에는 신뢰와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청명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뒷면의 현행 생활규정을 숙독하고, 한 번 더 깊이 우리 청명고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두발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



2. 복장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
3. 선도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
4. 핸드폰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
5. 기타, 학교생활규정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통계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 통계표					
학부모 : 2006년 5월 15일, 교직원: 2006년 6월 19일, 학생대표: 2006년 6월 28일					
구분	교직원	학생대표	학부모	계	비고
내용1. 두발규정	① : 48명	① : 10명	①강화: 137명		학생대표 3명 무응답
	② : 4명	② : 121명	②현행: 75명		
학생 대표 134명, 학부모 설문 응답 총 212명					
내용2. 복장규정	① : 49명	① : 44명	①강화: 123명		
	② : 3명	② : 99명	②현행: 20명		
내용3. 선도규정	① : 49명	① : 44명	①강화: 192명		
	② : 3명	② : 87명	②현행: 20명		
내용4. 핸드폰규정	① : 48명	① : 11명	①강화: 175명		
	② : 4명	② : 120명	②현행 : 37명		

2) 2006년 8월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20:00-20:20), 소수 학생들이 시위시도를 하였고 교직원들이 지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2006년 8월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20:00-20:20), 소수 학생들이 시위시도를 하였고 운동장에서 서너 개(10개를 넘지 않음)의 촛불

과 컵이 발견되었으나, 사용한 학생을 확인할 수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자퇴서를 쓰라고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조치 사항도 없었다.

3) 8.28일 여학생에 한해 묶으면 17cm로 변경한 이유는 새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심각함을 인식하고, 2006년 8월 25일(금) 1차로 18:00-20:00에 학교장, 학생회 회장단 및 학생회 임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위 규정대로 변경하였다.

4) 2학년 남학생 2명이 소지품 검사에서, 외부단체가 전달한 시위용 전단지과 폭죽, 자체적으로 준비한 스프레이용 락커 및 촛불 등을 소지한 사실이 발견되어 2학년 교무실에서 학년부장이 불법시위 주동은 학교생활규정 중 '퇴학'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며, 학년부장의 '경고'를 학생이 '협박'으로 인지했다면 교사나 학교측으로서는 유감이며, 집단이나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하게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교내 집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기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문자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읽은 해당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사항이 사실일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5)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에서 교내에서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휴대폰 소지 학생 파악을 위해 학급담임교사가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수거한 사실이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당시는 계도 기간이었기에 당일 모두 반환 조치하였으며, 당시 담임 교사별로 학급의 핸드폰을 수거했다 반환하였기에 특정한 압류 대상을 정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개수는 1,2학년 전체 수백 개로 추정된다.

6) 9.1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이유는 2006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새로운 두발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일부 불만과 관련하여 소수 특정 학생이 외부 청소년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외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훼손시키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7)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도 개성과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성년인 관계로 미래 성년이 되어 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학생 모두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면학 정진 한다면 규제와 벌, 지시와 감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성인과 동등한 자유와 개성, 인권을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책임과 의무 보다는 나태와 방종, 만용의 길을 가기가 쉽다. 결국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당장 먹기에는 곱감이 달다'고 그

들이 원하는 것만을 줄 수는 없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진리임을 믿는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1) 피진정기관 학생들은 학내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시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 조치된 학생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학생 두발규정 관련 지침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5.11)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공문에 의하면 “두발관련 학칙 또는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과 중등교육과-20888(2006.8.25)호의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 방안 알림”의 공문은 “학생두발, 교복 등 용의 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의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교직원, 학생대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4) 『학교생활규정』 설문조사 결과 두발 및 휴대폰 규정에 대한 학생의견

구분	계	강화	현행	비고
두발	131명(1000%)	10명(7.6%)	121명(92.4%)	학생대표 의견에 한함
휴대폰	131명(1000%)	11명(8.4%)	120명(91.66%)	

5) 피진정인은 두발관련 학생 시위 이후 당초 여학생 두발 규정 등을 완화하였다.

6) 피진정인은 1·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백 개 압수 후 반환한 사실이 있다.

7) 피진정기관의 『학교생활규정』 제74조(두발규정) 및 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휴대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휴대폰의 소지를 허용하되, 학업(수업, 보충·자율학습)중에는 전원을 끈다</li> <li>2. 사용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다.</li> <li>3. 각종 고사중에는 휴대폰 소지를 금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li> <li>2.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자치부의 허락하에 휴대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li> <li>3. 교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동안 학생자치부에서 보관한다.</li> </ol>
	<p>- 남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을 정도까지 기름</li> <li>2.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함</li> <li>3. 뒷머리를 최대 길렀을 때 교복깃을 닿지 않아야 함</li> </ol>	<p>- 남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포츠형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최대 머리길이는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의 끝부분은 손가락 굵기 이내여야 한다.</li> </ol>
	<p>- 여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드시 묶을 것을 전제로 20cm를 넘지 않음.</li> <li>2. 묶지 않았을 때 고개를 숙여서 목뒤 깃 또는 칼라의 위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li> </ol>	<p>- 여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드시 묶을 것을 전제로 17cm를 넘지 않음. ※당초 10cm이나 학생 시위 반발 후 17cm로 재개정</li> <li>2. 묶지 않을 시 귀밑 5cm 단발이나 커트형으로 한다.</li> </ol>

## 나. 판단

1)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5.11)호 및 20888(2006.8.25)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하였다고 하나, 동 지침을 살펴보면 “학생 두발, 교복 등 용의복장 등에 관한 규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의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의견 수렴을 위한 두발규정, 핸드폰 규정 등의 설문조사시 “현행 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는 “현 규정대로 한다”라는 단순한 설문으로 두발 및 핸드폰 규정 등의 규제 정도, 허용 범위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내용없이 설문조사한 것은 적정한 의견 수렴절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학생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규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5.11)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지침은 “①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두발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학생 설문조사시 90% 이상 대다수 학생들이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배제하는 강화된 두발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인해 학생들의 시위 발미를 제공한 것과 학생들의 반발 및 반응이 예상 밖으로 심각함을 인식하고 재수정(여학생 두발 묶을 시 10cm →17cm)하여 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학교생활규정』 운영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의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보장”, 제16조 “사생활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7조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 교육 보장”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상급기관 지침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피진정인이 1·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하였다고 하나, 휴대폰 소지 현황 파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내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교내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는 조문 또한 상기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의 기 설문조사에서도 개정전 현행유지 의견이 대다수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 시안이자, 피진정인이 준수하여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지침 사항이다.

5) 2006.8.25.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한 학생시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 시위용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의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

#### 4. 결론

가.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6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학생시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 등의 진정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5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탁상 조사에 분노한다」 성명서, 2007. 02. 15.

성명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탁상 조사에 분노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청명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가 최소한의 성실성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9월 청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개악 및 학생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 그 과정에서의 소지품 검사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접수번호 06-0002506)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4개월 이상 질질 끌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그 내용이 부실한 결정문만 달랑 내놓았다.

국가인권위가 청명고 사건 진정에 내린 결정의 내용은 ▲학교는 두발규정을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 것 ▲휴대폰을 거둬서 내용을 본 것과 교칙상의 휴대폰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이므로 학교는 교칙을 개정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할 것 ▲담당 교육청은 청명고 교장에게 주의를 내릴 것 등이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관련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말이지 ‘탁상행정’ 그 자체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진정내용과 학교 측의 그에 대한 서면 답변, 교칙 정도만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사건 진정서와 학교 측의 서면 답변, 그리고 교칙 외에는 아무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놓고서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증언을 듣는 등의 조사 활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기

본임에도 국가인권위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학교 측의 답변과 서류에만 의존했다.

결정문의 내용 중에도 불성실한 부분이 많다. 국가인권위는 휴대폰 수거나 소지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측 답변 중 소지품 검사를 했고 소지품 검사에서 전단지와 폭죽 등이 나오자 해당 학생에게 그것이 “퇴학”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결정문에서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고 쓰고 있다. 담당자가 대충 훑어보다가 못 보고 지나치기라도 한 것인가? 게다가 진정 내용 중 집단행동 금지 교칙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평가에, 직접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탁상 조사 외에도 대충대충 일 처리까지 추가해야 할 판이다.

두발규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정문에서는 단지 두발규정 개정 과정의 절차가 부적절했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두발규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단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규제를 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실제 두발규제가 그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의 이유가 기본권인 두발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기에 앞에서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이고 두발규제는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논리적 결함이 있는 부실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명고등학교 사건은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인 두발자유를 두발규제를 통해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더 개악하려고 한 것, 그리고 학생들의 학내시위를 해산시키고 소지품·휴대폰 검사를 통해 시위를 막은 것 등, 학교의 억압적인 인권침해 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자유 문제 뿐 아니라 소지품 검사 문제 및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나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진보적이고 인권적



인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일 처리 자체에도 능장을 부리더니 아예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버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런 일 처리에 분노와 배신감까지 느낀다.

동시에 우리는 부실하게 처리된 결정문에 대해 진정인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국가인권위의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진정인의 인권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탁상처리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대비책의 미비와 국가인권위의 안일한 인식이 이번 청명고 결정과 같은 '탁상 조사'를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는 재조사 절차를 비롯하여 '탁상 조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건 담당자인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애 상임위원은 탁상 조사로 인한 불성실한 결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현장방문과 피해당사자 조사의 원칙화, 재조사 절차 마련 등을 비롯하여 탁상행정 처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1. 결정문 중 부족하나마 청명고의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명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1. 추가 진정 내용에 대해 시급히 조사하고,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라.

2007년 2월 1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보도자료, 2007. 02. 15.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때: 2월 15일(목) 오전 10시

곳: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

## <자료 1> 경과 보고

### 2006~7년 청명고 학생인권탄압 사태 진행 일지

2006년도 1학기 두발규제는 여학생 묶으면 20cm,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썹까지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카리에 닿지 않게. 교문지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수업시간에나 교실에서 단속할 때 교사들이 규정과 상관없이 처벌. 일부 강제이발. 휴대폰 압수시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했으며, 간혹 가방을 열어보라며 개별적 소지품 검사.

2006년 8월 21일경

개학하자마자 두발규제를 남학생은 스포츠형(뒷머리와 옆머리는 하얗게 보이도록 자를 것), 여학생은 묶으면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할 것이며, 9월 1일부터 후문을 닫고 정문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고. 학생들 불만 고조

8월 25일 금요일 시위한다는 문자가 돌고, 야간자율학습 1교시에 학생회가 각 반을 돌면서 시위를 만류.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오후 8시에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운동장에서 촛불을 들고 교실 불을 켜다 껐다 하며 시위. 교사들에게 해산당함.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이 끌려가서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협박당했다고 함. 월요일에 다시 시위한다는 문자가 돌. 청명고 학생이 이수나로에 시위를 제보

8월 28일 월요일 여학생 규정은 묶으면 17cm로 바뀌어서 발표. 문서상 남학생은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 끝부분은 손가락 굵기 이내” 등으로 발표되었으나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하얗게 보이도록 질러야 한다고 했다 함.

월요일에 시위하겠다고 한 것이 화요일로 미루어졌다는 문자가 돌.

월요일 시위를 취재하러 갔던 이수나로 활동가가 주도적인 1학년 학생 한 명과 2학년 학생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두발자유/청소년인권이 적힌 카드섹션과 전단지 몇 부를 제공.

8월 29일 화요일 시위할 거리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교사들이 대대적으로 가방과 사물함 소지품 검사를 하여 2학년 학생의 카드섹션, 전단지, 폭죽 등이 적발됨.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며 시위 제지.

바이러스와 프로메테우스 기자가 취재하러 갔다가 시위 무산 기사를 씀.

8월 30일 수요일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한 명씩만 가도록 통제하는 등 시위 경계.

8월 31일 목요일 기사가 나오자, 인터뷰한 학생을 찾겠다고 휴대폰 건어가서 내용을 확인.

학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 인터뷰하러 온 인권활동가들을 미행.

9월 1일 금요일 본래 예정되었던 교문단속은 월요일로 다시 공고됨.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외부단체'가 개입하고 있다며 비난. 이수나로 활동가의 정신연령을 언급하며 폄하. 외부단체와 접촉해봤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봤거나 그런 학생을 알면 밀고하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나눠 줌.

저녁 때 추가적으로 학교 안 상황을 알아보러 온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대놓고 미행. 한 청소년활동가를 밀치며 폭언.

\* 야간자율학습과 방학 중 보충수업은 강제이며, 심화반은 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킴.

9월 6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활동가들이 학교 앞, 아침 등교길에서 '스쿨 어택 2탄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사진전을 개최. 사진전 이후, 학교 교감 및 관계자, 학부모 면담. 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수준이 드러남.

학교 방문 후 경기도 교육청으로 항의방문을 감.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사태해결을 요구함.

9월 14일 청명고 인권침해 사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청명고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청명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해줄 것을 요구.

2007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피해당사자들인 학생이나 혹은 교사에 대한 조사 없이, 학교측의 서면으로만 조사한 후, 사건 종결. 다음과 같은 주문 내림. 1.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인 의견 수렴 없이 개정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학교생활규정에 있는 ‘휴대폰 소지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을 권고 2. 경기도교육감이 청명고 교장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 3.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2007년 1월 31일

결정문 최종 완성.

2007년 2월 8일

네트워크에 결정문 송달.

2007년 2월 16일

네트워크,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추가 진정.

## <자료 2>

# 청명고 학생들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

## 1. 1학년 바씨의 의견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보면 핸드폰 규제에 대한 결론은 잘 나온 것 같아 기쁩니다. 많은 학생들이 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두발문제였고 시위의 가장 큰 이유도 두발규제였는데 두발규제에 대해선 특별한 결론이 없는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인권위가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는 두발자유인데 학교측에서 그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이유 자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만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사회의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높은 분들이 밑실에서 그분들끼리' 모든 결정하고 즉시 시행했다는 건 결코 절대로 민주적인 절차가 될 수 없는 건 물론이지만,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사회의 평판이 나빠진다는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이 과연 기본권 침해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학교의 위선적인 이미지, 명예라는 것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학생들을 기만하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규모 학내시위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학교측의 태도나 시위를 제대로 확인 않은 인권위의 태도가 유감스럽습니다. 분명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었는데 학교측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마저 뺏어놓고서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은폐하려 하는 의도가 농후해보입니다.

## 2. 2학년 홍씨의 의견

이번에 인권위에서 나온 청명고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문이었는데, 아쉽게도 내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작년 8월, 학교의 어이없는 규정발표에 학생들이 불만을 토하며 시위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커녕 시위를 은폐하거나 막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강제 소지품검사와 외부접촉에 관한 설문지를 돌리고 급기야 핸드폰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많은 압박감과 뭔가 꼬투리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인권침해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인

권위가 핸드폰 검사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을 이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찾기 위한 행동까지 탄압받고 있습니다. 두발 외에도 강제야자나 보충시행 등등,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까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 청명고 당국의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우려되어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인권위 조사결과의 허점들

### 1. 두발규제, 정당성 심사는 어디로?

인권위가 두발규제에 대한 판단 근거로 결정한 지침은 “학생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규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5.11)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두발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피진정인인 청명고 당국 역시도, 두발규정의 개정 근거를 위 지침으로 삼고 있다. 또한 그 지침에 따라 두발 자유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교육의 목적을 ‘학력 향상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로 인하여 생활지도나 교과지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었고,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와 평판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 이라고 밝혀두고, 또한 두발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주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발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단지 절차적 당위성, ‘피진정인이 학생 설문조사 시 90% 이상 대다수 학생들이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배제하는 강화된 두발규정으로 개정함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학교생활규정』 운영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즉, 민주주의적으로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들고 있다. 바로 앞에서는 두발제한을 위해서는 교육목적상의 필요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지만 그 두발규제의 교육목적이 합당했는지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두며 교묘히 회피를 한 것이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든 근거, 즉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며, 그 제한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청명고가 강행했던 두발규정 강화가 과연 교육의 목적상에 필요했고, 합리성이 있는 규제였는지, 또한 그 규제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였는지 실질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인권적 원칙에 기댄 판단을 해야 한다.

### 2. 집회탄압의 객관적 증거, 없었나 보지 않았나?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시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에 대해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한 학생시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 시위용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 외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시위 사실을 알고 전단지, 폭죽 등을 빼앗았다’, ‘시위 때 교사들이 보초를 서며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위를 막는다며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시위 이후 화장실도 줄 세워서 한 명씩 가도록 했다’, ‘외부단체와 접촉한 학생의 이름을 쓰라고 했다’ 등과 같은 학생들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가해자’인 학교 측의 의견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소한 학생 측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거나, 목격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일임에도 국가인권위는 앉은 자리에서 공문서만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근거 없음’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것도 ‘가해자’인 학교 측의 입장에서 작성된 공문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 3. 소지품 검사에 대한 판단은 어디로?

네트워크가 인권위에 진정한 핵심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청명고에서는 1학기에도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지품검사를 실시해 왔고...학생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학내 시위를 막을 목적으로 벌인 대대적 단속 과정에서 교사들은 가방과 사물함을 함부로 열게 하고 소지품을 뒤지는 등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하 중략)’

학교 측 역시도 자신들의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다.

**‘4) 2학년 남학생 2명이 소지품 검사에서, 외부단체가 전달한 시위용 전단지와 폭죽, 자체적으로 준비한 스프레이용 락커 및 촛불 등을 소지한 사실이 발견되어 2학년 교무실에서...(이하중략)’**

그렇다. 학교측에서 친절하게 자신들이 행했던 소지품 검사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선 소지품검사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았다. 과연 인권위 조사관들은 진정인들이 낸 진정문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일까?

##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명고 사건 반쪽자리 탁상 조사에 분노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청명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가 최소한의 성실성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9월 청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개악 및 학생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 그 과정에서의 소지품 검사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접수번호 06-0002506)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4개월 이상 질질 끌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그 내용이 부실한 결정문만 달랑 내놓았다.

국가인권위가 청명고 사건 진정에 내린 결정의 내용은 ▲학교는 두발규정을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 것 ▲휴대폰을 거둬서 내용을 본 것과 교칙상의 휴대폰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이므로 학교는 교칙을 개정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할 것 ▲담당 교육청은 청명고 교장에게 주의를 내릴 것 등이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관련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말이지 ‘탁상행정’ 그 자체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진정내용과 학교 측의 그에 대한 서면 답변, 교칙 정도만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사건 진정서와 학교 측의 서면 답변, 그리고 교칙 외에는 아무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놓고서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증언을 듣는 등의 조사 활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기본임에도 국가인권위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학교 측의 답변과 서류에만 의존했다.

결정문의 내용 중에도 불성실한 부분이 많다. 국가인권위는 휴대폰 수거나 소지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측 답변 중 소지품 검사를 했고 소지품 검사에서 전단지와 폭죽 등이 나오자 해당 학생에게 그것이 “퇴학”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결정문

에서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고 쓰고 있다. 담당자가 대충 훑어보다가 못 보고 지나치기라도 한 것인가? 게다가 진정 내용 중 집단행동 금지 교칙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평가에, 직접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탁상 조사 외에도 대충대충 일 처리까지 추가해야 할 판이다.

두발규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정문에서는 단지 두발규정 개정 과정의 절차가 부적절했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두발규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단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규제를 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실제 두발규제가 그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의 이유가 기본권인 두발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기에 앞에서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이고 두발규제는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논리적 결함이 있는 부실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명고등학교 사건은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인 두발자유를 두발규제를 통해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더 개악하려고 한 것, 그리고 학생들의 학내시위를 해산시키고 소지품·휴대폰 검사를 통해 시위를 막은 것 등, 학교의 억압적인 인권침해 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자유 문제 뿐 아니라 소지품 검사 문제 및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나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진보적이고 인권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일 처리 자체에도 능장을 부리더니 이에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버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런 일 처리에 분노와 배신감까지 느낀다.

동시에 우리는 부실하게 처리된 결정문에 대해 진정인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국가인권위의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진정인의 인권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탁상처리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대비책의 미비와 국가인권위의 인일한 인식이 이번 청명고 결정과 같은 ‘탁상 조사’를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는 재조사 절차를 비롯하여 ‘탁상 조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건 담당자인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애 상임위원은 탁상 조사로 인한 불성실한 결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현장방문과 피해당사자 조사의 원칙화, 재조사 절차 마련 등을 비롯하여 탁상행정 처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1. 결정문 중 부족하나마 청명고의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명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1. 추가 진정 내용에 대해 시급히 조사하고,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라.

2007년 2월 1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첨부자료 2>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진정서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b>진 정 서</b>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표 진정 - 조만성)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 대한민국
④ 주소 서울 중구 중림동 398-17 3층	
⑤ 전화 02-365-5363	⑥ 팩스 365-5364                      ⑦ 이메일 fffww123@naver.com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수원 청명고 학생들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최영애 위원장(상임위원)	② 소속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② 연락처 02-2125-9609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별지 1> 진정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원 청명고 관련 진정사건을 학교측 서면답변에만 의존하여 불성실하게 조사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판단을 구하는 핵심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와 결정은 피해자인 청명고 학생들의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나아가 공정한 구제절차에 의해 헌법10조가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성 없는 두발제한, 학내 집회에 대한 원천 봉쇄, 소지품 검사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구한 데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내어놓아 향후 동일한 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개인 활동가들, 아래 네트워크)는 2006년 3월 결성된 연 대체로서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인권법안 통과 등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는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을 지지, 보호하는 역할도 아울러 맡아왔습니다.

- 그러던 중, 2006년 8월 25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두발규정 관련 시위가 학교 측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시위 참가 학생들이 징계 위협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9일 2차로 준비되던 학생 시위를 학교측이 원천 봉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침해당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청명고에서는 학생들의 언론 등 외부 접촉을 가로막기조차 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청명고 피해 학생들을 대신하여 제3자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06진인2030).



- 그런데 2월 초 진정인인 우리 네트워크 앞으로 전달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결정문(2007.1.15 결정)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진정인에게 단 한 번의 진술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나온 결정이었고, 결정 내용 역시 청명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정 내용이 청명고 학생들의 인권을 추가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진정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 책임자인 ‘최영애’ 위원장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지금도 청명고 학생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기에 제3자인 네트워크가 대신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2.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의한 인권침해

### 1) 평등권 침해

헌법 11조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명고 학생들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 공정한 조사를 받고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구제제 1위원회는 피진정인인 학교측의 서면 답변서만 받았을 뿐, 실제 피해자인 청명고 학생들과 목격자로서 공정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증언할 단 한 차례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 공정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현을 촉진하는 특별한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놓은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상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침해

학생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역시 학교규율이 아동의 존엄성에 합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청명고 관련 진정(06진인2030)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구한 핵심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첫째, 지난 진정에서 네트워크는 2006년 8월 25일 1차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고 협박한 점, 29일 2차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시위를 계획한 학생을 위협한 점 등이 학생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진정인인 청명고 측은 서면답변에서 ‘학생의 교내 집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기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도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청명고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거짓 주장에만 의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학교측마저도 2학년 남학생 2명에게 퇴학을 ‘경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학생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은 채 증거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집회 자유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이 과연 인권침해가 아닌지, 현장방문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실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진정에서 네트워크는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가 인권침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소지품 검사 자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서면답변에서 소지품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소지품 검사 자체가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휴대폰 압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난 진정에서 네트워크는 시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표현물을 압수해 간 점, 9월 1일 설문조사를 통해 외부 기자나 단체와 접촉한 학생을 밀고하라고 요구한 점, 인터넷을 통해 청명고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학생들을 색출하겠다고 조사를 벌이고 댓글을 달지 말라고 협박한 점 등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훼손시키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학교측의 억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밖에 보기 힘듭니다.

### 3. 진정한의 요구

- 우리 네트워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쪽 조사’를 진행한 것과 핵심 진정내용을 외면한 결정을 내놓은 것은 청명고 학생들의 인권을 추가로 침해하고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외면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 부디 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명고 학생들이 당한 추가 피해가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정당성 없는 두발제한, 학내 집회에 대한 원천 금지와 봉쇄,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위협행위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내어놓아 향후 동일한 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누리,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 보며」, 인권오름 제 42호, 2007. 02. 21.

##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전누리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인권위 맞아?” “최영애 상임위원은 청명고 사건 부실조사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열댓 명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최영애 상임위원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침묵시위에 들어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청명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 청명고에서는 무슨 일이?

작년 8월,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2학기를 앞두고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두발규정을 강화하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야자시간에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몇몇 학생들에게는 자퇴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터져 나온 학생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여학생에 한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지 며칠 후, 다시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2차 학내시위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시위 당일 시위계획이 학교에 미리 알려지게 되었고 학교당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가방, 사물함)를 실시했다. 소지품 검사 결과 “두발자유” 등이 적혀있는 전단지와 폭죽 등이 발견되었고, 물품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교무실로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복도, 현관 출입을 감시, 통제하며 학내시위에 참여하

는 학생에게는 퇴학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내렸다. 학내시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명고의 한 교사는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열람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외침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현장, 청명고에 ‘인권’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9월 14일 청명고 학생들을 대신해 국가인권위에 청명고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정했다. 청명고(교장 이청극)를 상대로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황의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주기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2006년 2월 8일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받았다. 두발규정에 대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휴대전화 수거와 그 내용 열람은 인권침해이므로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문의 내용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청명고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벌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시위

### 소지품 검사, 국가인권위의 입장은 어디로?

현재 많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휴대전화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열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들어 청명고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휴대전화 소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것은 환영받을 만 했다. 대다수 학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은 총 7쪽에 달하는 결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소지품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조차 없었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학교 측의 서면답변 역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지품 검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다.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작 인권적 관점에 근거해서 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

가인권위는 그러지도 못했을뿐더러 인권침해 진정 사안에 대해서도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 학내시위탄압 증거, 찾아보려고는 했나?

학교 측의 학내시위 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증거없음’으로 기각처리를 한 것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학교 측은 전단지과 폭죽 등 시위에 사용할 물품을 소지했던 학생들에게 ‘불법시위주동은 퇴학처분에 해당된다’고 실제로 경고했고,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객관적 근거가 정말 없었을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네트워크는 피해학생들, 그리고 어렵게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교사를 증인으로 소개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가해자인 학교 측의 서면 답변만을 신뢰했을 뿐이다.

### 인권침해 현실에 애써 눈감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했던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진정 내용엔 있지도 않았던 두발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결정 역시 불성실하기는 마찬가지. 국가인권위가 판단근거로 삼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는 ‘두발규제는 교육목적상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시 90%가 넘는 학생들이 두발제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두발규정을 강화한 것은 단지 ‘민주적인 수렴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국가인권위는 결국 절차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두발‘규제’ 자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명고가 학교 측의 두발제한을 정당화하며 그 이유로 든 ‘면학분위기 훼손’과 ‘지역사회 평판’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읽은 청명고의 한 학생은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사회의 평판이 나빠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과연 기본권 침해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가 또다시 청명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인권보장 의무를 외면했다고 판단하여, 국

가인권위를 가해자로 해 다시 진정을 했다. 그러나 담당 조사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국가인권위 직원들은 “학교공동체 문제의 경우, 다수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 학교 명예도 있고 해서, 조사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발자유문제의 경우, 요즘 학생들이 자주 요구하는 내용이라 조사 초기에 두발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디자인했다” 등과 같이 이야기했다. 학교공동체를 조사하면서 조심스럽



국가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출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www.1318virus.net](http://www.1318virus.net))>

게 접근하는 것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또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진정인이 원하는 인권침해 내용에 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결국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문제제기에 대해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은 결코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의 중간에 존재할 수 없다. ‘인권’은 억압당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인권’의 본질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인권위원회’일 수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명고 인권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총 2쪽)」, 2007. 03. 04.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

수신 : 수원 청명고등학교 교장 김청극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청명고 인권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총 2쪽)

날짜 : 2007. 3 . 4

문의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017-214-3550), 전누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016-297-9803)

---

## 1. 안녕하십니까?

2. 작년, 귀 학교가 자교 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 하는 등의 수많은 폭력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명고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 받고자 한 저항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항의 행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 행동 후에도 아무런 반성과 대책이 없었던 귀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시급한 해결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권고를 내려주기를 요구하며,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3. 그리고 올해 2월, 진정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생활규정(두발규정)개정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휴대폰의 소지를 금지케 한 ‘휴대폰 소지금지’조항에 대해 개정 할 것’이었습니다.

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 국가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적 원칙에 미흡해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결정이 귀 학교의 현 인권침해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귀 학교가 이번 결정에 담긴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계획을 알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첨부합니다.



5. 첨부된 질의서를 확인하시고, 이번 주 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학교의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이란 이름아래 자행되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귀 학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서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귀 학교가 집행해왔던 두발규정에 대한 개정이 도교육청의 지침(중등교육과-12122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에 근거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공개적 절차의 의한 합의라고 볼 수 없기에, 교육기본법 12조(학생의 인권보장)와 헌법 10조(행복추구권) 등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권위는 귀 학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1) 학생 생활 규정의 민주적, 공개적 절차의 합의를 위한 귀 학교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작년 민주적, 공개적 절차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고 판단 된 현 두발규정의 ‘재개정’계획은 무엇입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것이,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았기에 헌법 17조(사생활의 침해)와 18조(통신의 자유)가 인정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77조 ‘교내에서도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라는 조항도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의 대다수의 의견 역시 현 규정에 대한 반대의를 밝혔기에, 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지침의 운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 인권위의 요구한 권고 결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77조 ‘휴대폰 소지금지’규정의 개정, 보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인권침해라고 결정된 휴대폰을 수거, 그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귀 학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안 내 문 】**

**진정사항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를 토대로 진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께서 제출하신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법이 정한 이유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의 진정사건을 처리해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국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유념하며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께서 진정하신 사항이 각하된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조만성)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법이 정한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기꺼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올림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문서번호 : 침해구제총괄팀-836

사건번호	07-진인-0000469	사건명	부당기각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진정인	성명	청소년인권활동 가네트워크 (조만성)	주소	서울 중구 중림동 398-17 3층

1.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9호(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007. 03. 1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옥수희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Tel: (02)2125-9629/ Fax: 02-2125-9638
-----	-----	-----	--

## [파주 금릉중학교]

금릉중학교 학생,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상황 정리」, 2006.11.

금릉중학교 인권상황에 대해 학생이 정리해서 보내준 글

1. 학교에서 종이자르는용 또는 부엌용 가위로 미용자격증도 없는 선생님들이 자기 맘대로 학생들 머리를 잘라버림.

그것도 똑바로 잘라주는것도 아니라 손에잡히는데로 잘라버려서 미용실에서조차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음

2. 자기마음에 드는 학생과 안드는 학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떠들면 조용히 하라는 말한마디

공부를 쫓 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드는 아이가 떠들면 바로 태도 -1점

음악실기나 체육실기에서 아무리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A

그런데 잘해도 자기 마음에 안드는 애 이거나 공부를못하면 B~D

이렇게 어이없게 평가하다보니깐 아이들의 항의가 빗발침

그때 하는 딱 한마디 "재네들은 노력을 해서 A를 준거야"

누가 과연 100점에서 70점이나 들어가는 실기 수행평가를 노력 하나 하지 않았을까

또 저번에는 1500만원짜리 동상을 학교에 기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장선생님한테 편애받고 고등학교갈때 내신에 반영되는 상장점수를 채워주기 위하여 상장까지 줌.

3. 도대체 학생들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갑자기 아침에 쳐들어와서 반 아이들 전체를 내쫓고 소지품 검사를 함.

요즘 여자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사춘기 여서 가방에 곳곳 생리대나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남자 선생님들이 함부러 만지고 뒤집

저번에는 한 학생이 마이가 두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도둑년이라고 몰리고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머리를 심하게 맞으며

"꼴통,미친년,머리에 든것도 없는주제에,몇반에누가마이가없어졌다는데" 라는등

근거도 없는 상스러운 말을 들어야했고

또 이창우 라는 기가 선생님은 다른반에가서 "○반에 ○○가 마이가 두개데 자기말로는

원래 두개를 샀는데 그런애말을 누가믿어 요즘애들은 왜 그렇게 발랑까졌는지 몰라" 라는등 이상한 말을 하고다녀서 그 학생은 졸지에 도둑년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 마이가 원래 두개 였다는것이 밝혀지자 그 두 선생님은 사과는 커녕 따뜻한 말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만약 마이가 두개였던 사람이 전교1등이거나 선생님들에게 편애받는 애였다면 어땠을까? 뻘하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왜마이를 두개나샀어?" 라고 돌려서

물어봤을 것이고

그 기가 이창우 선생님도 "마이 두개나 가지고 다니면 오해받으니 그러지마렴"

이런식으로 돌려서 말했을것이다.

4.학생들을 지도할때 거의 몽둥이가 아닌 손과 발로 지도함.

만약 손과발이 아니라 몽둥이라고쳐도

그 몽둥이는 보통 선생님들의 나무회초리가 아닌 당구큐대 하키채 각목 임.

한번은 머리를 안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아직 어색할 1학년 애들을

아무도 없는 빈교실로 끌고 올라가 하키채로 엉덩이를 내려침

또 학교규정에 발목양말이 금지라고 하였는데 맨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올라오면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복숭아뼈를 완전히 다 덮는것만 허용한다고 말을바꿈

그날도 그이유였다. 한학생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었으나 위에 복숭아뼈가 조금 보인다는 이유로 추운겨울에 양말을 빼김.

그것도 심한데 기가 시간에 이창우라는 선생님한테 수행평가를 내리 나갔다가

양말을 안신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출석부와 주먹으로 심하게 맞음

또 한학생은 이창우 선생님 네 반 교실에 잠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무근거없이

도둑으로 몰려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꺾방망이를 심하게 내리침

그때 반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대로 쳐다보지 조치못함

6.자기마음에 안드는 학생이 있으면 그학생의 자존심을 몽개버림.

한 학생이 개학식날 추워서 교복안에 후드잠바를 입었는데 그 이유하나만으로

학생부장 이춘식선생님이 전교생앞에서 뒤통수 꺾방망이를 심하게맞음

또 한 여학생은 지각해서 벌을 받고있는데 마이를 졸였다고 귀를비틀어끌고

3학년 선도부 오빠들이 보는앞에서 뒤통수 꺾방망이를 심하게 맞음

(이학생 교복 줄인거 아님. 원래 썸 사고를 치는애였는데 그거하나로 괜히 시비건거임

적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였다면 마이썰였냐고 물어보기라고 했을것임)

그것도 모자라서 선도부 오빠들에게

"애이쁘냐? 뒤통굴이 이렇게 생겼냐?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런년들은  
아예 안하는게 낫지. 나중에 지 애낳아서 지 애한테 담배 술 가르킬지 어떻게알아"  
분명 이학생은 술.담배를 전혀 안하는 학생이었고 잘못된것은 지각 하나였음  
그런데 학생부장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3학년 선배 오빠들 앞에서 모욕을 당함.이건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임.

7.처음에는 교칙이 많이없었는데 자주 교칙이 하나 둘씩 늘어남

맨처음에는 두발도 그냥 길이만 자르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 층도 내지말라

술도 치지말라 점점 단속이 심해짐

교칙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어가고 있고

쪼금만 잘못해도 집에 전화하는 숨막히는 교실에 있기 조차 실어함.

또 어떤학생은 어머니가 많이 예민 하신 편인데 학교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일로

매일 전화를걸어 나쁜학생도 아닌데 집에서는 문제아로 알고 막대함

그렇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완전 소외당하던 그학생은

죽을결심까지하고 수면제를 샀고 친구들의 말림으로 수면제는 결국

복용하지 않았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에 들수있음

위에것들말고도 자잘한 이유만으로 너무 중대한 처벌을 내리던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지 하는 작은이유들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학교를 서서히 한두명씩 떠나고있음

벌써 머리때문에 전학년 학생만으로도10명정도이고

학교 처벌과 자기에 대한 차별감때문에 전학년학생들도 꽤있음

금릉중학교 학생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인권의 날’ 에 묻는다 - 파주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고발 금  
릉중학생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6. 12. 08.

<보도자료>

# ‘인권의 날’에 묻는다

## 파주 금릉중학교 인권침해 고발 금릉중학생 기자회견

- 때: 2006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 곳: 파주교육청 앞

### 금릉중학교 학생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지하는 개인들)

## <상황 보고>

### 파주 금릉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실태

\*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인권의 날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학교의 인권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권의 날을 앞두고 금릉중학교 중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에는 학교의 모습이 너무 구리지 않냐구요. 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사회는 이 현실을 눈감는 데만 익숙하냐고 말합니다.

\* 아래 내용은 금릉중 학생들의 증언과 서면으로 보내온 실태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 ■ 두발·복장규제

- 현재 금릉중의 두발규제는 여학생은 단발, 남학생은 반삭 수준에다 구렛나루가 금지되고 있음. 처음에는 규제가 많지 않았는데 갈수록 늘어남. 처음에는 그냥 길이면 자르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층도 내지 못하게 하고 술도 치지 못하게 하는 등 단속이 심해짐.
-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하키채로 처벌을 가하기도 함. 바리깡 또는 문구용/부엌용 가위로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를 강제이발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잘라서 미용실에서도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두발뿐만 아니라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도 매우 심하고 많아지고 있음. 발목양말이 금지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올라오면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복숭아 뼈를 완전히 덮는 것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뀜. 한 학생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을 신었으나 복숭아 뼈가 보인다는 이유로 겨울에 양말을 압수당한 일도 있었음. 교복 안에 잠바를 입거나 마이를 줄이거나 양말을 안 신으면 맞음.
- 가방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함. 빨간색 가방도 금지되고, 가죽으로 된 검정색 가방도 어른스럽다고 메고 다니지 말라고 금지함. 색깔있는 안경테도 금지되고 있음.





※ 뒷머리가 잘린 금릉중 여학생들 모습. 이 정도 잘린 것은 양호한 편이라고 함.  
더 심하게 잘린 학생들은 부끄럽다며 사진 찍는 것을 거부했다고 함.



※ 구렛나루가 잘린 금릉중 남학생 모습

⇒ 두발규제는 그 자체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게다가 금릉중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마저 금지하고 있는 강제이발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규제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을 또다시 체벌하는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 ■ 체벌 (물리적 폭력)

- 손과 발로 체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몽둥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나무회초리가 아닌 당구큐대나 하키채, 각목 등을 사용함.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이런 체벌도구들이 학생부에 비치되어 있다고 함.
-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교실로 학생을 데려가서 하키채로 엉덩이를 체벌한 적도 있음.
- 기술가정 시간에 이 과목 교사인 이창우 교사에게 수행평가를 내러 갔다가 양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부와 주먹으로 머리를 맞음. 이창우 교사는 다른 반 학생이 교실에 잠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도둑으로 몰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귀땀기를 때리는 등 심한 체벌을 가함.
- 개학식 날 교복 안에 후드 잠바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학생의 뒤통수와 귀를 학생부장 이춘식 교사가 때린 일도 있었음. 여학생 A는 지각해서 벌을 받고 있었는데 마이를 줄이지 않았음에도 평소 좀 찍혀 있었기 때문에 마이를 줄였다고 트집을 잡혀 3학년 선도부들 앞에서 뒤통수와 귀땀기를 심하게 맞음. 학생 B는 교복 마이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도둑년이라고 몰리며 학생부장 이춘식 교사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음.

⇒ 체벌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임. 게다가 이 학교

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체벌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비교육적 체벌’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 모욕, 중상 (언어적 폭력)

- (앞에 나온) 여학생 A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음에도) 선도부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애 이쁘냐?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런 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애 낳아서 애한테 담배 술 가르칠지 어떻게 알아?”라고 모욕을 들음.
- (앞에 나온) 학생 B는 마이를 두 개 가졌다고 해서 도둑년이라고 몰려 맞으면서 “꼴통, 미친년,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주제에..., 몇 반에 누가 마이가 없어졌다는데...”라는 말을 학생부장 교사에게 들음. 이창우 교사는 다른 반에 가서 “○반에 B가 마이가 두 갠데 자기 말로는 원래 두 개를 샀는데 그런 애 말을 누가 믿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발랑 까졌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서 전교에 “도둑년”으로 알려짐. 마이가 원래 두 개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 두 교사는 사과하는커녕 말 한 마디 하지 않음.

⇒ 때로는 물리적 폭력보다 폭언을 통한 정신적 폭력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음. 학생들의 인격을 함부로 재단하고 이를 공공연히 떠들고 다님으로써 학생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 소지품 검사

- 종종 갑자기 아침에 반으로 교사들이 들어와 학생들을 다 내쫓고 가방을 뒤지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 여학생들 가방에 생리대 같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가방 속의 내용물들을 남자 교사들이 함부로 만지고 뒤집. 이는 여학생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소지품검사는 정당한 이유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학생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면서 전체 학생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봐야 함. 그럼에도 금릉중에서는 소지품검사가 비밀비재하고,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

학생의 가방을 뒤져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 기타

-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애가 심함.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떠들면 조용히 하라는 말만 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떠들면 바로 태도 점수를 깎아버림.
- 100점 만점에 70점을 차지하는 음악이나 체육 실기에서 아무리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A를 줌. 잘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이거나 공부를 못하면 B~D를 줌.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럴 때는 “재네들은 노력을 해서 A를 준거야.”라고 말함.
- 1,500만원짜리 동상을 학교에 기증한 학생을 교장이 편애하며, 내신에 반영되는 상장점수를 채워주기 위하여 상장까지 줌.
- 규제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조금만 잘못해도 집에 전화를 함. 어떤 학생은 어머니가 많이 예민하신 편인데,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 등 별것도 아닌 일로 매일 전화를 거는 바람에 집에서 문제아로 알고 홀대하기에 이름. 그 학생은 학교에서도 집에서 소외당해서 죽을 결심까지 하고 약을 샀지만 친구들이 말려서 자살은 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음.
- 작은 이유만으로 너무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고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사람으로 인정받는 학교를 한두 명씩 떠나고 있음. 두발규제 때문에 전학 간 학생만 10명 정도이며, 학교의 처벌과 차별 때문에 전학 간 학생들도 꽤 있음.

## ■ 학생들의 느낌

- 이창우 교사가 출석부와 주먹으로 체벌할 때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맞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대로 쳐다 보지조차 못했다고 함.
- 계속 늘어나는 교칙과 조금만 잘못해도 집에 전화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이며, 숨 막히는 교실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함.
- 교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폭력과 체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까지 몽개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인격 모독의 괴로움을 호소.

- 소지품 검사로 인해 도대체 사생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낌.
- 정보를 준 학생들은 “마이 도둑” 사건에 대해서, 《만약 마이가 두 개였던 사람이 전교1등이거나 선생님들에게 편애받는 애였다면 어땠을까? 뻘하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왜 마이를 두 개나 샀어?” 라고 돌려서 물어봤을 것이고 그 기가(기술가정) 이창우 선생님이 “마이 두개나 가지고 다니면 오해받으니 그러지 말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이 정도로 학생들은 성적이나 가정배경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

## ■ 뒷집 진 교육청

- 금릉중에서는 한 학생이 교육청 게시판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날 엄청 맞은 일이 있었다고 함.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 체념하는 학생들이 많고, 아예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 학생이 지난 여름, 다른 학교의 어느 사람 이름을 빌려 파주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파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파주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음.



※ 파주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강제이발 고발 글. 지난 6월에 “이게 사람 머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성명서>

**학교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양산하는 텃밭인가?**  
**금릉중은 학생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육청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라.**

지금 경기도 파주 금릉중학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금지한 강제이발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폭

언이 교사의 입을 통해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있다. 머리 길이는 물론 머리 모양, 양말 길이, 교복, 가방 색깔 등 신체에 관련한 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키채나 각목, 당구큐대 등으로 체벌하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타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뒤질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으로도 모자라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고 가방을 뒤지거나 남교사가 여학생의 가방을 뒤지는 일이 벌어진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성적과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대우도 심각하다.

이 모두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사람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하키채와 각목을 남발하는 공간은 더 이상 학교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금릉중학교 학생들은 온갖 폭력적 방식으로 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을 “꿀통”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죄없는 학생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교사에게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교사가 체벌을 할 때면 학생들은 공포에 짓눌려 그 장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어이없는 것은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이다. 고통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자인 학생의 편에 서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육청의 나 몰라라 식의 태도는 학교안 인권침해를 키우는 자양분에 다름없다. 금릉중학교 역시 계속 학교로 남아있길 바란다면 반교육적인 인권침해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두발규제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언과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지품검사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규제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활동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금릉중학교 학생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금릉중학교와 이를 방조하는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금릉중학교는 온갖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파주교육청 역시 금릉중학교를 비롯한 관할 학교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번에도 교육청이 학생인권문제에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학생인권 침해를 방조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앞두고 터져 나온 학생인권 보장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에는 학생 인권의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다. 오늘 이 목소리는 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만 터져 나왔지만, 이는 한국 사회 대다수 학교의 학생들이 목청껏 외치고 싶은 목소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인권침해와 폭력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텃밭 노릇에 여념없는 학교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06년 12월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민희 기자, 「하키채,큐대...가위질,학생인권은 어디에? - 금릉중학교 학생들, “학교 못다니겠다” 교육청 앞 시위」,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2. 09.

## 하키채,큐대...가위질, 학생인권은 어디에?

### 금릉중학교 학생들, “학교 못다니겠다” 교육청 앞 시위

8일 파주교육청 앞에서 하얀 가면을 쓴 6명의 학생들이 학교의 인권침해사실을 폭로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파주에 위치한 금릉중학교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신분을 밝히 폭로하기가 두렵다며 가면을 쓰고 시위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 학생들의 주장 1. 두발, 복장규제 “우리도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금릉중의 두발규제는 여학생은 단발, 남학생은 반삭(반삭발) 수준에다 구렛나루(옆머리)가 금지돼 있다.



강제 이발을 당한 학생들

“최근에는 숏도치지 못하고 층도 내지 못하게 하는 등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하키채로 체벌을 가한다. 또 바리깡 또는 문구용, 부엌용 가위로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를 강제 이발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잘라서 미용실에서도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가방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고 '빨간색, 가방, 안경' 모두가 금지되어있는 현실에 답답하다 토로했다.

## 학생들의 주장 2, 물리적 폭력

“사랑의 매? 손으로만 때리지 말아주세요”

금릉중 여학생들은 손과 발로 체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몽둥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나무회초리가 아닌 당구 큐대나 하키채, 각목 등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교실로 학생을 데려가서 하키채로 엉덩이를 체벌한 적이 있었다. 또한 기술가정 시간에 담당교사인 이창우 교사에게 수행평가를 내려 갔다가 양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부와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

교육청 앞에서 파르르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자신들의 현실을 폭로하기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은 체벌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체벌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비교육적 체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면을 쓰고 권리주장을 하는 학생들 ©바이러스

## 학생들의 주장 3, 모욕, 언어적 폭력, 그리고... 소지품 검사

교사에게 받은 모욕적 상처도 폭로했다. 한 학생은 교복 상의를 두 벌 가지고 있다 해 도둑으로 몰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년’이란 취급을 받으며 상처를 받았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보다 폭언을 통한 정신적 폭력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하는 금릉중 학생들

이들은 학생들의 인격을 함부로 재단하고 이를 공공연히 떠들고 다님으로써 학생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아침에 갑자기 교실로 교사들이 들어와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가방을 뒤지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학생들 가방에 생리대 같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가방속의 내용물들을 남자교사들이 함부로 만지고 뒤집, 이는 우리에게 매우 모욕 적이었다." 덧붙였다.

또한 이창우교사가 출석부와 주먹으로 체벌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맞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대로 쳐다 보지조차 못했다며 "계속 늘어나는 교칙과 조금만 잘못해도 집에 전화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이며, 숨 막히는 교실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학생들의 주장 4, 뒷짐 진 교육청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릉중에서는 한 학생이 교육청 게시판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날 엄청 맞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체념하는 학생들이 많고 아예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생이 지난여름 다른 학교의 친구 이름을 빌려 파주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 있었지만, 아직 까지도 파주교육청은 아무런 답이 없다.



사진찍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아이들 ©바이러스

이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위해 교육청 앞으로 가면을 쓰고 나선 것이다. 피켓을 든 학생들의 손이 겁에 질려 별벌 떨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치며 학교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되길 빌었다.

안민희 기자, 「학교교사 나타나자 학생들 ‘교육청 앞 시위’ 중 눈물로 줄행랑 – ‘가면시위’ 학생들은 도망가고, 교육청, 교사, 시민단체만 남아...」,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2. 09.

## 학교교사 나타나자 학생들 ‘교육청 앞 시위’ 중 눈물로 줄행랑 ‘가면시위’ 학생들은 도망가고, 교육청, 교사, 시민단체만 남아...

8일 학교 금릉중학교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해결해보자 하얀 가면을 쓴 6명의 소녀들의 교육청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 될까 두려워 가면을 쓰고 폭로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얀 가면을 쓴 학생들은 금릉중학교 내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두발, 복장규제, 체벌 등 다양한 방면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던 중 언제부터 자리를 지키고 서있었는지 파주교육청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청으로 들어와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인지나 학생들에게 자세히 들어보자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

이에 학생들은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 장학사들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발하고자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 “가면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학생이 교육청 게시판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날 엄청 맞은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 되는 것이 끔찍이도 싫다고 한다.

이런 두려움에도 학교의 현실을 고발해 학교인권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6명의 소녀들은 하나같이 손을 발발 떨면서도 교육청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한 소녀가 “야 선생님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걸음아 나살려라 줄행랑을 쳤고 도망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오는 교사 때문에 학생 몇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눈물을 흘렸다.

2시 20분 파주교육청 앞에 모인 금릉중학교 교사는 모두 11명, 교육청에는 어떻게 알고 왔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서류 받으러 왔어요” “지나가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규철 교사는 “교육청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실토했다.

이에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관계자는 “교육청과 직접 대화하려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사를 부른 일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라고 소리쳤다.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교육청 학무과 안주호 중등부장은 “수업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의아하게 생각해 학교에 전화 했던 것”이라 답했다. 결국 학생들이 도망간 상황에 교육청, 금릉중학교 교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대화가 시작됐다.

### “아이들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

자리에는 파주교육청학무과 안주호 중등부장, 유영생 장학사와 금릉중학교의 이춘식 학생부장, 이진교감,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배경내씨의 5명이 참가했다.

대화가 시작되자 교육청 학무과 안주호 중등부장은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편하게 조절해 주는 곳이다. 어려운 문제라면 설득해줄 수 있는 곳이니 오늘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혹 이것 때문이라면 학생들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학생들의 입장에 서 항상 교육적으로 푸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유영생장학사는 이 사건을 접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고 방금 금릉중학교로 출장을 다녀와 사실 확인을 했다고 밝히며 지나친 체벌과 소지품 검사 등이 교사 심문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결국 지나친 체벌과 가방검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흥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줄 모른다면 실제 소지품 검사 시 담배, 고데기 등 학생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물품들이 발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시에 음주운전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입니다.”라고 덧붙혔다.

‘교육적’인 해결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자리의 참석한 모두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이 부분은 학교 측의 정확한 체벌규정과 차별 없는 교칙으로 학생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한편 교육청은 보도 자료에 적혀있는 ‘뒷짐 지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게시물이 실명으로 올라오지 않아 답변을 못해준 것뿐 민원이 들어오면 체크를 해 학교 쪽으로 통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미 불이익 당한 학생이 있어 익명으로 올렸고 아직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오늘 이 자리에도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자리가 또 한 번 사라진 것이라 덧붙였다.

학교 측은 개교한지 아직 1년밖에 안 된 학교라 가지각색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칙강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무차별한 체벌은 금릉중학교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배경내씨는 “시대가 달라질수록 아이들은 변한다. 어른들의 세



금릉중학교 재학생 ©바이러스

대 때는 괜찮던 것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것이다.

머리가 길다고 무작정 체벌하는 것보다 길었을 때 불이익을 아이들에게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고 두발규제를 했으면 한다. 또한 목소리가 작은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설] '인권의 날'과 학교 체벌」, 경향신문, 2006. 12. 10.

## '인권의 날'과 학교 체벌

어제는 '인권의 날'이었다. 인권 존중이 평화라는 유엔헌장의 취지에 따라 58년 전인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널리 인용되는 이 선언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각종 선언의 전범(典範)이 됐고,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세계인의 철학적·도덕적 지침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권·사회 단체들이 인권의식 및 인권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매년 이날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이 뜻깊은 날 우리들의 마음은 그다지 혼연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인권지수(指數)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파주 어느 중학교에서의 후진적 체벌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부장 교사는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부엌용 가위로 자르고, 빈 교실로 데려가 하키채·당구채로 때렸다고 한다.

또 교사들은 걸핏하면 주먹이나 출석부로 때리고 “미친 x”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주제에...” 등의 폭언으로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알까봐 겁을 낸 나머지 가면을 쓴 채 파주시 교육청 앞에서 인권단체와 함께 항의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도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학교측의 이같은 처사는 학생을 인격체로 인식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우리가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일 뿐이다.

특히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당한 폭력은 오랫동안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 인격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의 체벌은 그 어떤 형태로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규정도 당연히 고쳐야 한다. 교육청 등 관할당국도 학교 체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도 관할 파주교육청은 학생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진정을 접수했는데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을 달달 외우고, 거창한 기념식을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인격체로 아껴주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따를 때 '학교 인권지수'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 [부산 배정중학교 등 학내 체벌사안 종합대응]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폭력의 교육을 중단하라!’ -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7. 07. 10.

### <보도자료>

# ‘폭력의 교육을 중단하라!’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때: 2007년 7월 10일(화)

□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교육공동체 나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학생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회 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교육공동체 희망, 페다고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생



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학벌 없는 사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총 44개 단체)

## [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체벌 사건들

### 2006년 5월

**전북 익산(16일)** - 스승의 날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여 명의 학생들을 엎드려 뺨쳐 시켜놓고 죽도로 체벌한 사건이 공개됨.

### 2006년 6월

**전북 군산(27일)** - 초등학교에서 숙제(공책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학생에게 공책을 집어던지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에 사직함.

**광주(28일)** - 초등학교 교사가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을 빗자루로 때려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문제가 커지자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해임.

**서울(28일)** - 경찰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학생 여러 명을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는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머리를 교실 캐비닛에 쫓게 하는 등 심한 체벌을 가한 혐의. 교육청에서는 경징계.

**경기 남양주(29일)** -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습적인 심한 체벌로 고소당함. 해당 교사는 공부를 안해서 단체로 체벌을 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체벌한 적은 없다고 주장.

### 2006년 8월

**대구(14일)** - 오성고 교사가 방학 중 보충수업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엎드려뺨쳐' 시키고 200여 대를 때려서 언론에 크게 보도됨. 해당 교사는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대구(28일)** -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 뒤부분을 손으로 때려 전치 3주.

## 2006년 9월

**제주 서귀포(6일)** - 2005년 10월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뺨을 때려 학생의 고막이 파열된 사건에 대해서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2006년 11월

**서울(3일)** - 교사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학생을 체벌하여 학생의 손톱이 부러졌고, 그 도중에 한 학생이 기침을 하자 그 학생에게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뺨과 귀, 등쪽을 사정없이 때림. 같은 반 학생이 찍은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도 공개됨.

**전남 진도(24일)** - 진도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중에 학생의 머리가 길다며 머리카락을 뽑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 뒤 넘어지자 발로 짓밟음. 다시 학생의 목을 잡고 양호실로 끌고 가서 배를 발로 짓밟는 등의 체벌을 가함.

**충북(24일)** - 중학교 때 자신을 심하게 체벌했던 체육교사에게 보복 폭행한 사람이 체포됨.

## 2006년 12월

**경기 파주(8일)** - 금릉중 학생들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이발, 빈 교실에서 하키채나 당구채로 체벌하고 출석부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욕설 등 언어폭력, 소지품 검사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파주시 교육청 앞에서 함.

**전남(13일)** -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각목으로 머리, 어깨, 뺨 등을 때린 것, 평소 여학생들에게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때리겠다” “학생들이랑 불륜관계 같은 것으로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 카바레 출입 등의 문제로 해임당했던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전북 익산(14일)** - K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주차장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다는 이유로 4명의 손바닥을 교편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엎드려뺨쳐를 시키면서 다리를 들고 하게 했으며 다리를 들지 않았다고 발로 한 학생의 머리를 찬 사건이 보도됨.

## 2007년 3월

**광주(2일, 3일)** - 풍암고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계속해서 수차례 맞고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함. 또한 해당 학생은 1학년 때도 개명절치를 밟는 중이어서 명찰을 달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설명했음에도 명찰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함. 학부모와 청소년인권단체의 항의로 해당 교사가 사과.

## 2007년 4월

**경기 군포(6일)** - 산본고 교사가 보충수업시간에 병원에 갔다온 학생을 무단으로 외출했다며 발바닥을 25

0대 체벌한 사건이 학부모의 항의로 알려짐.

**인천(9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산곡중 교사의 강제이발, 체벌, 언어폭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청 앞에서 열고 진정서를 제출.

#### 2007년 5월

**대구(3일)** - 중학교 교사가 식판을 미리 가져오지 않아서 배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의 먹살을 잡고 정강이를 차고 밀치는 등 체벌. 피해 학생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이후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됨.

**경기 안양(11일)** - 초등학교 교사가 4월달에 자폐 증상이 있는 학생을 수업에 방해된다고 등과 종아리 등을 회초리로 체벌. 이에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여 해당 교사는 전근 조치됨.

**경기 안성(15일)** - 학생이 3월부터 “교실에서 떠든다.”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과학 암기평가 성적이 저조”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허벅지, 엉덩이를 체벌 당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350번의 체벌 등을 받아 학부모가 폭행치상으로 교사를 고발.

#### 2007년 6월

**경기 수원(4일)** - 천천고에서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과 농구장에 집합시켜 두발복장단속을 한 뒤 걸린 학생들을 오리걸음시킴. 운동장에서만 총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리걸음을 함.

**경기 동두천(21일)** - 중학교 음악 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전기 난로를 켜 더위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속에서 15분 동안 발바닥을 때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하는 등의 체벌을 가해서 학부모가 항의하여 교사가 사과.

#### 2007년 7월

**부산(4일)** - 배정중에서 한문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오리걸음 체벌을 받던 학생 한 명이 쓰러져서 사망.

## **부산의 학생 사망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즉시 체벌 금지를 입법화하라.**

지난 몇 일간 어린 청소년들이 분명한 원인도 파악이 되지 않은 채 2명이나 사망하였다. 어린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그 중 한 건은 성적과 관련하여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 숨졌다. 사건 발생의 본질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현상적으로 보아 체벌 중에 숨진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먼저 여러 청소년 단체가 함께 하여 청소년 7,014명이 서명한 학생인권법안 촉구 서명지를 임해규, 유기홍, 최순영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학생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였다. 즉 이주호, 구노희, 최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함께 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것,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들은 애석하게도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법안에 대한 논란에 밀려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인권법안(정확하게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는 학생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를 비롯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일 것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면 어떤 기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신체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21세기임에도 학교에서 체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되지 못 한 까닭에는 국회의 나태함과 책임감 부족도 있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2007년 4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간부들은 학생인권법안의 내용에 속하는 체벌 금지에 대해서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연구 중, 연구 결과 체벌금지 속에서 학교 운영이 원활하다면 체벌금지 법제화 가능함”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체벌금지를 명문화 하는 입법화에 시간 끌기로 대처하였다. 만일 교육부가 ‘체벌금지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데, 입법화가 된다면 교육부는 일선 학교와 함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자세입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입법화가 촉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체벌 금지 이외에도 '두발 자유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 학생회 법제화,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학생회 자치 활동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학생을 교육 활동의 동반자나 목적이기 보다 대상으로만 보았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대에 맞는 교육부의 입장 발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사건도 결국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입법 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교직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체벌을 문화적으로 막지 못하였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지만, 교사의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일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생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추구하고 청소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와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역할은 한 것이다.

입법화가 되어 체벌 금지가 되었다면 학교 분위기가 체벌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리걸음이라는 체벌이 시도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교사에게도 독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설움에 잠기게 하는 비통함을 가져 온 것이다.

이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체벌금지를 부총리 지시로 하여 학교에서 준수하도록 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휴회 중이라도 학생인권법안을 심사 완료하여,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면 첫 번째로 입법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학생회 예산의 자율적인 운영 및 학급, 학년, 학교 학생회의 법제화

둘째, 체벌금지, 두발 자유

셋째, 0교시,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폐지

넷째, 정기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다섯째,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의 신체 보호라는 일을 책임있게 하여, 다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진실로 바란다.

2007년 7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부와 국회는 당장 죽음의 교육을 중단시켜라!

부산에서 7월 4일 한 학생이 시험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먼저, 한문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오리걸음’ 체벌을 당하던 중 쓰러져서 사망한 이 씨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안타까운 사고”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씨의 그 당시 건강상태와 ‘오리걸음’ 체벌이 우연히 만들어낸 “불운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청소년들을 매우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입시경쟁과 체벌 등, 학교의 폭력적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었다.

입시경쟁은 청소년들을 서열화하여 차별하고 청소년들의 가치를 입시성적으로 매기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파괴, 청소년들의 삶 자체를 억압하고 있는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체벌은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대명사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각인당하고 억압을 받아들여 부당한 것에도 침묵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인권적 장치다.

이러한 폭력의 교육, 폭력의 학교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거나, 상처받아 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에 대구에서 한 청소년은 “선생님들의 강력한 몽둥이”, “선생님들의 강력한 두발규제”, “선생님들의 공부 공부소리”, “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와 “같은 머리 같은 옷 그리고 같은공부”를 강요하고 “쭈뼌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넣”는 이 세상이 슬프다고 쓴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런 사건들처럼 그 피해가 직접 드러난 경우 뿐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을 것이며,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하여 폭력과 억압을 내면화해온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런 청소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광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대구에서 “200대 체벌” 사건이 터졌을 때도 교육부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 정신감정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교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체벌이나 입시경쟁이라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구조 자체가 낳은 필연적인 사건이며 그 중에 극소수가 이슈화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번 부산에서의 사건 같은 경우도 교사가 학생에게 잠깐 소홀해서, 학생의 건강상태가 유독 특별해서, 혹은 ‘오리걸음’이라는 체벌의 방식이 안 좋아서 일어난 불운한 사고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폭력적인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기만과 눈치 보기는 용납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의 최소한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와 입시경쟁 철폐 등 체벌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들을 금지하고 폐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금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금의 폭력적 교육과 죽음의 교육에 반대하고 이를 그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2007년 7월 10일

##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교육·사회·인권단체**

교육공동체 나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학생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회 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교육공동체 희망, 폐다고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학벌 없는 사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총 44개 단체)



## [서울 중앙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징계시도에 대한 의견서」, 2007. 03. 14.

수신 : 중앙고등학교 교장

발신 : 인권사회단체들

제목 :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징계시도에 대한 의견서

날짜 : 2007.3.14(수)

문의 : 전누리, 배경내 (02-365-5359)

---

## 중앙고에 드리는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중앙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학교인권문화 조성과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을 주장한 학내 집회와 관련하여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이번 두발자유 집회가 주로 귀교의 두발규제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체벌을 가하고 머리를 꺾도록 압력을 넣는 등 학생인권 침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귀교는 귀교의 두발규제가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며 그렇게 정해진 규정은 따리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 인권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현재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것인지에 대해

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이미 만들어진 규정의 정당성만을 되뇌며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귀교는 이번 학내 집회와 관련해서 학생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반인권적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교는 집회와 같은 학생들의 집합적인 행동이 학교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규정 개정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그러하기에 국제인권조약들과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협소한 의미의 ‘정해진 절차’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표현의 형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징계 유보의 대가로 각서의 제출도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교에서 징계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유인물 배포”도 언론·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 등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3월 14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나르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정혜규 기자, 「학내시위 이후...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 [교육청소년] 학내에서 두발자유 시위 개최한 이하람(고2)군 인터뷰」,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7. 03. 23.

## 학내시위 이후...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 학내에서 두발자유 시위 개최한 이하람(고2)군 인터뷰

“시위하기 전에 떨렸어요 ‘애들이 안 나오면 어찌지’ ‘선생님들에게 해산당하면 어찌지’ 등 웬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2~3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고마워요.”

지난 12일 학교 점심시간에 두발자유와 강제야자 폐지 등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이끌었던 이하람(고2)군이 집회 개최 당시부터 시작해서 10일 지난 22일까지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하람군, "지금이 바로 시위할 때라는 생각에 나섰죠."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새 학기 엄격해진 두발규제... 시위할 때라는 생각"

“두발규제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차나에 학교에서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두발규제를 작년과 달리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강제야자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고, 지금이 바로 시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군은 시위하기 직전 3일 동안 2학년 교실을 돌며 ‘학생인권을 위해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군이 시

위를 제안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또 다른 반에 가서 '같이 하자'고 말하는 등 시위를 한다는 사실은 조금씩 퍼져 나갔다. 그중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고 말한 친구도 있었다. 누구나 다 두발자유를 원하지만, 직접 나서는 학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군의 제안에 신기해했다. 반대로 '시위를 하면 두발자유를 할 수 있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동참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결국 12일, 이군은 학교 점심시간 동안 시위를 열었다. 시위 장소는 학교 정원으로 1, 2, 3학년 교실 건물의 한 가운데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약속 장소로 하나둘씩 모였다.

이군과 안면이 있던 친구도 나왔고, 전혀 모르는 친구도 나왔다. 그들은 이군이 미리 준비한 '두발자유' 카드를 손에 들고 10여 분 간 "두발자유"를 외쳤다.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창문을 열고 이군을 따라 '두발자유'를 외쳤다.

시위를 처음 해본 학생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30여 명의 학생들은 다 따로 서 있었고, 교사들이 보기엔 학생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집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학생들의 집회 광경을 지켜본 교사들이 10여 분만에 와서 학생들을 제지한 것이다. 같이 시위를 했던 학생들은 교사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이군만은 교사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죄가 없는데, 왜 도망가야하냐'라며 속마음을 다졌다.

당시 교사들은 이군에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주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날, 학생부 교사는 "앞으로 시위를 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징계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군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학생부에 징계를 기록하는 것이 뭐 큰일인가요?"

학교에서 이군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집회개최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다시는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는 학교에 항의했다. 그 결과, 지금 학교에서 징계를 주겠다는 말은 쪽 들어가 있다.

### 시위 이후 이군에게 가장 큰 힘은 '학생들의 변화'

시위 이후 학교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학교에서는 31일 있을 대의원회의에 '두발' 문제를 안건에 상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회의 한 간부가 이군을 찾아와서, 학생들이 두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교사들에게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집회가 열린 공간은 그 순간만큼은 학생들 세상이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학교가 변할 징조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두발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22일 역시 한 학생이 강제이발을 당했다. 머리길이를 지적당해 미용실에서 자르고 재검사를 받으러 학생부에 간 친구가 구레나룻이 잘려 돌아온 것이다. 강제야자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군의 친구들은 ‘학교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털어놓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시위까지 해도 소용이 없다’는 좌절감이 짙은 것이다.

일단 이군은 31일 열릴 대의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1인 시위 형식으로 할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 이군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두발규제를 없애려면 '학생 스스로가 나서야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다.

인터뷰를 한 이날도 이군은 한 친구와 함께 왔다. 그 둘은 스스로 '서로의 동지'라고 생각했다. 인터뷰 자리에서 이군의 친구는 학생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이군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사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우리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선 자기가 싸워야한다는 인식도 생겼어요.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 시위를 한 이후에 가장 큰 성과예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두발자유’ 언제 되냐고 물을 때마다 책임감을 느껴요. 애초 징계를 받거나 혼나는 것이 무서웠으면 시작도 안했죠. 두발규제는 인권침해예요.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야 해요.”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바뀌야죠" ©인  
터넷뉴스 바이러스

##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맞붙> 39호 | 지면에 실린 독자편지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29명이 강제 이발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서울 신목중학교에서는 강제 이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경찰이 도리어 학교 학생부로 넘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울의 지름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졌다고 벌점을 받는 일도 있다.

휴대폰도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압수한 뒤 이동통신사 해지서를 받아와야 돌려주거나 졸업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지만 그건 서로 약속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지품을 압수하는 식의 인권 침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 촬영기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보면, 최근 인권 침해를 폰카로 고발하는 일이 잦아지자 휴대폰 규제 강화로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앙고에서는 점심시간에 30여 명이 모여 ‘두발 자유’,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쓴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에 호응한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노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평촌고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인권토론회 진단지를 학내에서 돌리며 홍보했고, 이에 학교는 징계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연대단체들의 항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진보적 청소년, 교육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거리 집회가 열린다. 숨막히는 인권 억압, 이를 외면·조장하는 교육부, ‘3불 정책’ 폐지 운운하며 학생들을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 가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힘찬 외침이 필요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중앙고등학교 두발자유 요구 1인시위 보도자료」, 2008.4.18.

## 서울 중앙고등학교 두발자유 요구 1인시위 보도자료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 관련 기자들

날짜 :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문의 연락처 : 010-2971-1968 (담당자 : 곤양이)

### 1.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교사들의 방해

- 4월 17일 목요일 아침,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인 이하람 씨가 “두발규제는 다수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두발규제 즉각 폐지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습니다.
- 이하람 씨는 작년 3월, 중앙고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수십 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이하람 씨를 징계하려 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에 부딪쳐 징계를 철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두발규제를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이를 두발규제를 개정하는 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학부모와 교사의 ‘다수결’에 의한 것이라며 현행 두발규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이하람 씨는 학교 측의 부당한 두발규제에 불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을 당하기도 했고 현재는 “지도불 이행”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그러나 1인시위를 할 때 이하람 씨를 본 한 교사는 “네 머리 정도면 두발단속 안 걸리는데 왜 그래?”라고 하여 중앙고 두발규제가 교사들에 의해 자의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이하람 씨는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두발규제에 의한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며, 그리고 정당한 인권으로서의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중 다수는 이에 대해 호의적이고 지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 1인시위를 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교사들이 이하람 씨와 이하람 씨를 취재하던 1318virus 윤선영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란 걸 믿을 수 없다며 억지로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가방을 뒤지는가 하면, 이하람 씨의 담임교사라고 한 교사는 이하람 씨의 피켓을 부숴버리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들이 이하람 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는 교사들을 저지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켓은 교사들의 손에 무참히 부서지고 구겨졌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 소동은 끝났고, 이하람 씨는 즉석에서 새로 만든 종이 피켓을 들고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5분 전까지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이하람 씨는 부서진 피켓을 새로 만드는 대로 다시 1인시위를 시작하거나, 지지하는 학생들과 함께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다른 행동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 2. 자료 사진들



작년인 2007년 3월 중앙고 학생들이 단체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이하람 씨가 교사에게 체벌당한 후 상처를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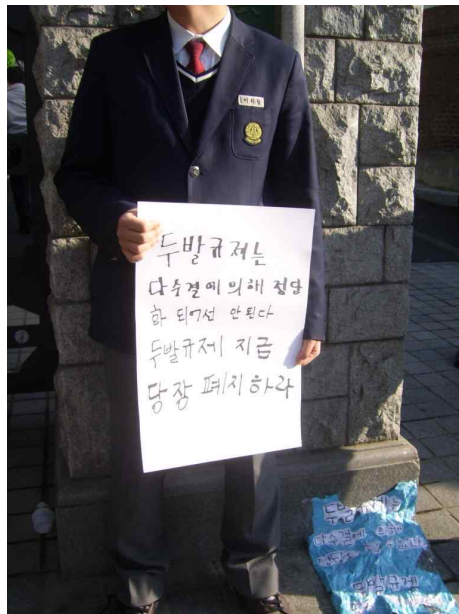
이하람 씨가 17일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교사들이 폭력적으로 1인시위를 중단시키려 하여 몸싸움이 벌어진 모습



부서지고 구겨진 피켓



즉석에서 새로 만든 종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모습

김상정 기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두발자유 외치는 서울중앙고 이하람 학생」, 교육희망, 2008. 04. 27.

##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두발자유 외치는 서울중앙고 이하람 학생

지난 17일 7시경 서울중앙고 이하람 학생이 두발규제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작년부터 친구들과 함께 두발규제폐지를 학교에 요구했으나 변화가 없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고 앞에서 만난 그는 자신을 입시를 준비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고3 학생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두발 규제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두발규정을 정하는 회의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학내의 부당한 구조를 바꾸고자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5명에서 학내시위를 벌였다.

학내 시위를 처음 할때는 많은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함께 했다. 올해 고 3이 되니 친구들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뉜다.

‘몇 달만 견디자’ ‘마지막에는 두발자유를 즐기자’ 교사들은 학교명에 실추하지 말라고 하거나 생각에는 동의한다며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보자는 반응을 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하고 체벌, 두발, 강제야자보충 등 학교에 존재하는 억압적인 문제들에 대해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사들을 향한 그의 바람이다. 그러나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칙이니 따라야 한다는 교사들의 말에 그는 규칙자체가 부당하게 만들어졌으니 온몸으로 저항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기는 시간 흐르면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청소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학교를 바꾸는 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하람 학생이 전하는 말이다.

평범한 고3 학생들처럼 그는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아침 7시반까지 등교한다.



## 시퍼런 가위와 금속탐지기, 무서운 학교

두발·복장 단속에 토요일마다 단체기합, 휴대전화 색출하려 아이들 몸 뒤지는 선생님... 체벌과 욕설에 짓눌린 학생 인권

지난 4월19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일산 ㄷ고 교정. 체육복과 운동화 차림의 학생 300여 명이 운동장에 집합했다. “자, ‘토봉’하는 학생들. 빨리빨리 모여. 지각해서 걸린 놈들이 또 지각이나. 저기 걸어나오는 학생들. 지금 걸어? 빨리 뛰어.” 마치 군대 유격 조교처럼 빨간 티셔츠를 입고 야구모자를 눌러 쓴 이아무개 교사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토봉’이란 ‘토요 봉사활동’의 줄임말로, 주중에 이름표나 실내화 따위를 안 가져와 걸리거나 두발 단속에 적발된 학생들, 돌아다니며 밥을 먹다 걸린 학생들을 불러모아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실상의 단체기합이다.



△ 지난 4월19일 경기 일산의 ㄷ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토요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의 체벌을 당하고 있다.

## 오리걸음 뒤에 엎드려뺨친 채 몽둥이로...

걸린 횟수에 따라 분류된 학생들이 곧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다. 운동장에 뿌연 흙먼지가 일었다. 교사 4명이 군데군데 흩어져서 아이들이 제대로 걷는지를 감시했다. 오리걸음을 하다 쉬거나 바닥에 앉거나 일어서는 학생들을 잡아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4번 이상 걸린 학생들 무리가 농구대 근처에 도착하자 이 교사는 엎드려뺨쳐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시켰다. 엎드려뺨쳐를 하다가 무릎이 흙바닥에 닿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야 4회 이상 너네 다섯 명 놓고 있어? 체육복 바라. 흙이 묻어가지고 당장 이리로 올라와. 전원 교단 위로 전력질주.” 그렇게 뛰어온 학생들은 엎드려뺨친 상태에서 “어떻게 4번 이상 걸려?”라는 타박을 들으며 엉덩이를 맞았다. 한 시간여 동안 기합을 받던 학생들은 “교칙 준수!”를 외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는 것을 끝으로 토봉을 마쳤다.

땀을 뻘뻘 흘리며 토봉을 끝낸 박아무개군은 “이건 완전 미친 짓!”이라며 숨을 골랐다. ○양은 “걸리면 벌점을 매기면서, 오리걸음까지 시키는 건 이중 처벌 아니냐?”며 “제발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좀 써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다른 ○양은 “3학년인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1시간씩 돌고 나면 그날 오후 2~3시까지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살다 보면 한 번쯤 교복 넥타이를 안 가져올 수도 있고, 명찰을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요?”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토봉 장면을 운동장 위 계단에서 지켜보던 김아무개양은 “저는 ‘챗슈팅’ 발랐다고 걸린 적도 있어요. 그냥 보습으로 발라주는 건데... 암튼 별걸 다 잡아요. 선생님들 맘 내키는 대로 또 어떨 땐 아무리 발라도 안 잡혀요”라고 말했다. 이날 ㄷ고 운동장은 마치 통나무 들기만 뺀 삼청교육대를 보는 듯했다.

학생들의 일상 구석구석까지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는 이 학교에선 급기야 금속탐지기가 등장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선 교사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곤 하는데,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일괄적으로 걷어 저녁에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입수당하기 일쑤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몸에 감추고 있을까봐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기에 이른 것이다. ㄷ고 1학년 박성화(가명)군은 “얼마 전 우리 옆반에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검사하려고 선생님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와 공항 검색대에서 몸을 훑듯이 검색을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휴대전화 압수에 적응이 돼서인지 모욕감이나 불쾌감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들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급 담임 교사는 “금속탐지기를 들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 몸에 직접 대고 검색하지는 않았다”며 “그즈음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학생 수가 줄어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 농담처럼 한 일”이라고 말했다.

## ‘압수’에 적응돼 공항 검색대 지나듯



△ 운동장의 흙먼지가 가리았을 뒤 만난 학생들은 비인간적 체벌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 금속탐지기는 도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용된 적이 있다. 2학년 한 학급의 경우 이번 학기 초에 학생들의 MP3와 전자사전 등이 잇달아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부 교사가 금속탐지기를 가져와 학생들 몸을 검사했다고 한다. 이 학급 소속 한 학생의 말이다.

“학생들을 다 일어나게 하고 가방을 검사한 뒤 선생님이 와서 손으로 몸을 만져보면서 검사했어요. 그러고는 금속탐지기를 들고 와서 대보더군요. 결국엔 못 찾았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금속탐지기를 봤다는 게 좀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따뜻한 온정이 오기야 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차가운 금속탐지기가 끼어들면서 학생들은 상처를 받았다.

두발과 복장 규제 등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억누르거나 적발된 학생들을 지나친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은 드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남의 한 평준화 지역 고교 2학년인 박성인(가명)군은 지난해 11월 자퇴서를 썼다.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하라”며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성인인과 상담하던 교장 선생님이 “다음에 보자”며 유아무야하는 동안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학교 탈출’은 실패했다. 성인인이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는 강제로 실시되는 야간자율학습을 비롯해 두발과 복장 등을 단속하는 학교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입학과 동시에 학교는 이른바 ‘반삭’(반 삭발을 일컫는 은어)을 요구했다. 머리카락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2cm를 넘지 말라고 했다. “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가진 고유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 의사를 밝혔다. 선생님의 설득으로 자퇴를 포기하고 일단 기준으로 머리를 잘라보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반삭 요구를 따르긴 싫었다.

성인인의 현재 머리카락 길이는 4cm. 학기 초에는 다른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교실 옆 복도에서 새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 두발과 관련한 학교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선생님이 매로 애용하는 단소로 수십대 맞았는데, 정확히 몇 대인지는 기억할 수 없다. 성인인은 “지금 담임은 뺄하면 손발로 때리는데, 뺄을 때리거나 하체를 발로 마구 차기도 한다”며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불러서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말했다. 지



난 4월 들어서는 일부 담임 교사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며 학생들의 구레나룻을 현장에서 잘랐다고 한다. 성인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자기 밑의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며 “언제 학교를 그만둘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1인시위 했더니 피켓 던지며 “지랄싸네”

물리적 폭력만 학생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다. 교사들이 특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거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일부 교사는 ‘××새끼’ ‘병신’ 등의 욕지거리도 예사로 던진다고 학생들은 푸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뜯어고치려고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생들의 것이 아니다. 서울 중앙고 3학년 재학 중인 이하람군은 지난 4월26일 학교 교문 앞에서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던 중 한 교사에게 피켓을 빼앗겼다. “두발 규제는 다수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즉각 폐지하라”고 적힌 이군의 피켓은 구겨지고 내동댕이쳐졌다. 이군은 “선생님께 잘못 된 것은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지랄싸네’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라고 말했다.

광우병 집회에 중·고교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에 뜨끔한 어른들은 또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시도 교육감 회의가 소집되는가 하면, 학생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일과 뒤 서울 여의도와 청계천으로 투입되고 있다. 또 경찰은 ‘문자괴담’의 진원지를 찾겠다고 경기 성남 수내고 등 일부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과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교육부 지침 및 학교 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이런 품위 있는 권고는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 선린인터넷고의 유쾌한 반란

### “자율적인 외모, 아이들이 예뻐 보인다”

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남학생들은 모두 장발족이다. 뒷머리가 여느 고등학교 남학생 앞머리만큼 길다.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도 제각각인데, 살짝 파마를 하거나 가볍게 염색을 한 친구들도 눈에 띈다. 교복을 입긴 했는데, 여학생의 치마와 남학생의 겹옷만 같다. 안에 받쳐 입은 웃은 모두 다르다. 보통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애네들 학생 맞아?”라는 물음이 터져

나을 범하다.



최근 서울시내 특성화고교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의 교문 앞 표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부터 두발 및 복장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2년 뒤에는 두발 규제를 아예 폐지했다. 학생과 교사의 요구도 있었고, “자율을 누리되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자”는 천광호 당시 교장의 결단도 한몫을 했다는 게 학교 쪽 설명이다. 교칙도 “두발은 자율로 하되, 단정하게”다. 파마나 염색은 금한다고 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서 본 대로, 실제로는 세계 단속하지 않는다. 채한조 학생부장은 “새학기 들어 5월 초까지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은 머리를 온통 진한 갈색으로 물들인 여학생 1명뿐이고 복장 단속에 걸린 학생도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 등교한 학생 대여섯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다른 학교처럼 가위나 몽둥이를 들이대는 일은 결코 없다.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학생들은 이 학교에 체벌용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교사는 없다고 말했다. 2학년 임원빈군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학생들 머리가 길어 전부 양아치들인 줄 알고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머리 길이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라며 웃었다.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은 머릿도 길고 옷에 신경쓰느라 공부를 못할까? 결코 아니다. 올해 2월 졸업생 가운데 15명이 미국 주립대에 진학했고, 2명은 일본 대학에 입학했다.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59.8%에 이른다.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황호규 교장은 “자신의 용모 등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생활지도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내신성적 15% 안에 드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입학 경쟁률도 3.5 대 1에 이른다는 게 학교 쪽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부임한 황 교장은 “처음 왔을 땐 학생들의 머리와 복장을 보고 꽤 당황스러웠다”며 “지금은 애들이 예뻐 보인다”고 했다.

학생들은 처음 입학해서는 대개 호기심에 머리를 길게 길러보고 머리에 신경도 많이 쓰지만 대개 한 학기를 못 넘긴다고 했다. 머리 모양 등에 대한 흥미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다. 임군은 “두발 단속을 당할 때 훨씬 더 머리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다”고 했다. 억누를수록 튀어오르려 하고, 놓아두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들은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다. 2학년 배진희양은 “머리를 한번 길러보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추천했다.

선린인터넷고의 사례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자유를 실컷 누리면 되지 않느냐”는 학생 인권 탄압 논리를 뒤집는 유쾌한 반란이다.

**[평촌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양 평촌고,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2007. 04. 05.

**<보도자료>**

**안양 평촌고,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때: 4월 5일(목)

문의 : 윤종 019-480-332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02-365-535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

## < 상 황 보 고 >

3월 23일 박소현 씨가 학생인권 토론회 홍보 전단지를 학교 안에서 나누어줬다가 교사에게 불려가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음.

27일 수업시간에 교사가 여러 차례 박소현 씨를 불려가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박소현 씨는 계속 거부함.

28일 학교 측에서 30일에 “불법 전단지 배포” 를 사유로 선도위원회를 열겠다는 참석 안내서를 박소현 씨에게 줌.

2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가 항의 전화를 하고, 박소현 씨의 어머니가 강하게 항의하자 학교 측이 선도위원회를 연기함.

30일 학교 측에서 박소현 씨에게 전단지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을 몰랐으며 알았으면 허가 없이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면 선도위원회를 철회하겠다고 함. 박소현 씨는 거부함.

4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골자로 사건 진정.

접수번호	날짜 2007년 4월 4일 시 분
<b>진 정 서</b>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박소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대한민국	
④ 주소 경기도 군포시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 노선덕 교감	② 소속 : 안양 평촌고등학교
② 연락처 : 031) 383-4823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 <input type="checkbox"/>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참고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별지 1> 진정 내용

### ◎ 평촌고등학교가 행한 인권침해

- 저는 2007년 3월 23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라는 단체에서 여는 <VS 학교 -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 그런데 제가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준 것을 놓고 23일, 이준홍 교사가 저를 불러가서 인권단체 활동이나 제 개인적인 부분 등에 대해 물었으며, 다른 교사는 저에게 “선동” 운운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양식에 따른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백지에, 전단지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의 유윤종 씨에게서 받았다는 내용만을 썼습니다.

이후 3월 27일에 생활지도부 교사는 저를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불러가서 전단지를 나눠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교사는 동아리 홍보물을 비롯하여 모든 전단지들을 학교 안에서 배포하기 전에 ‘허가’ 를 받아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술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자 학교 측은 3월 28일, 3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선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저에게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선도위원회 사유는 “불법 전단지 배포” 였습니다. 학교 교칙에 전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불법 전단지 배포가 징계 사유에 없는 것(<별지 2> 참조)을 말하자 노선덕 교감은 선생님들 모두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학생들도 알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제 어머니가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자 학교 측은 본래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도위원회를 연기했습니다. 대신 노선덕 교감은 이후 계속해서 저와 저의 어머니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학교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며, 추후에는 허가 없이 전단지 배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면 선도위원회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 표현의 자유 침해

- 평촌고가 저에게 행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제13조에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제한 사유와 정도의 명확성, 명백하며 현존하는 위험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 1969년 미 연방대법원 역시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받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교문 앞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하고, 아동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특별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곧, 전단지에 ‘허가’ 를 받아야 하며, “불법 전단지 배포” 가 징계 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헌법 제21조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애초에 “불법 전단지”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허가 받지 않은 전단에 대해 “불법” 이란 말을 남용하며 저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계속해서 ‘허가’ 논리를 고집하며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만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권 침해는 저뿐만 아니라 평촌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 ◎ 부당한 대우

- 학교 측이 선도위원회를 여는 사유로 제시한 “불법 전단지 배포” 는 평촌고등학교 생활지도 규정의 “학생 선도” 부분의 징계사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생활지도 규정 어디를 봐도 전단지 등을 배포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령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학칙 조항 자체가 인권침해인 것은 물론이지만, 명시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징계를 하려는 자의적인 처리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선덕 교감은 선생님들 모두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학생들도 알 줄 알았다고 했으나, 규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으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명시해두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학교 징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5월 18일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36)” 결정문에서 학교 안의 징계도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이 건을 이유로 저를 자주 호출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며칠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조사’ 를 당하며 제가 전단지를 배포한 사건 자체 외에도 단체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개인적인 문제들을 질문 받았으며, 원치 않는 답변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사생활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진술’ 해야 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평촌고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저를 불러내서 진술서 요구나 징계 협박 등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학교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감이기도 한 노선덕 교감을 피진정인으로 지목합니다.

## ◎ 진정인의 요구

- 저는 학교 측이 저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징계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선도위원회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 교칙에 해당 부분이 없음에도 저를 징계하려 했던 것이나 그 과정에서 저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을 사과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촌고등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학교의 부당한 “관습적” 인 ‘허가제’ 를 없애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촌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징계시도의 완전한 철회와 ‘허가제’ 를 없애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촌고가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인권적인 판단이 평촌고의 인권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시키고 학생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별지 2> “평촌고 학생 생활지도 안내” 중 “학생 선도” 부분

(평촌고 홈페이지 <http://www.pyeongchon.hs.kr/> 에서 확인 가능)

## 6. 학생 선도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와 평촌고등학교 학칙 제 31조, 32에 의거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1. 학생 징계의 심의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원은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인성생활지도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학년부장, 인성생활지도부 학생생활 담당교사, 해당 학년 학생생활 담당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 간사는 인성생활지도부장이 된다.

#### 제3조(심의)

1.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재가한다.
3. 해당 학년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반 학생의 심의 사건시에는 해당 교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제 2 장 체벌·선도 및 징계

#### 제4조(체벌)

1. 학생이 교내 생활에 문제가 있어 구두 지도로 선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징계 이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체벌을 할 수 있다.
2. 체벌의 형태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선도)

- ① 체벌 이후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상담실에서 일정기간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상담 지도한다.
- ② 상담으로 지도가 불가능할 때 학부모 소환하여 지도하고 그래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징계하며 징계 이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 지도를 한다.

### 제6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 ① 학교내 봉사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년부의 품의 결재로 1주일범위 내에서 지도한다.
- ② 사회봉사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인성생활지도부와 진로상담교육부에서 지도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인성생활지도부와 진로상담교육부에서 지도한다.
- ④ 퇴학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재심)

징계중 반성의 자세가 뚜렷하면 학교장이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에 재심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진술)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의 의견 진술을 들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진술도 들어 징계의 자료로 참조한다.

### 제9조(기록)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인성생활지도부 상벌계 교사가 기록하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는다.

### 제10조(학교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내 봉사를 명할 수 있다(기간은 3~7일).

1. 무단 가출 3일 이내 또는 무단결석이 계속 3~7일 인 자
2. 미성년 출입금지 구역의 유흥업소를 출입한 자
3. 교내에서 흡연한 자
4. 학교 비품,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자
5.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회람한 자
6. 흉기 소지자
7. 담을 넘은 자

8.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자
9.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준하는 악습 행위를 한 자
1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
11. 교내에서 이성간의 풍기 문란 행위를 한 자
12. 고의로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모략하기 위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
1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자
14. 웹상에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글쓰기로 상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15. 기타 행위로 인하여 학교 선도 위원회에서 학교내 봉사로 의결된 자
16. 두발, 흡연, 율담, 도로 무단횡단, 기타 무단결석 및 결과, 무단외출, 명찰 미패용 등의 행위를 4회 이상 위반한 자
17. 기타 실내(외)화 미착용, 수업 중 핸드폰사용, 음식물 및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행위 등을 10회 이상 위반자, 또는 제16호의 위반행위가 4회 미만이고 제17호 전단의 위반행위가 7회 이상으로 10회 이상 위반자. 단, 13회 및 16회 이상 위반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호와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제11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 봉사에 명할 수 있다(기간: 4~7일, 단 정상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에 명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의 징계를 받고도 다시 위반한 자
2. 불량 서클에 가입한 자
3. 무단 가출 19일 이내인 자
4. 고사 중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
5.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6. 집단 행동을 선동했거나 모의에 가담한 자
7. 인터넷 상에서 상대 비방, 명예훼손, 거짓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자
8. 기타 행위로 인하여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로 의결된 자
9.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자
10. 제10조 제16호의 행위를 6회 이상 위반한 자
11. 제10조 제17호의 행위를 13회 이상 위반한 자

### 제12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명할 수 있다. (기간 7일 이내, 사안에 따라 퇴학에 처할 수도 있다.)

1.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고도 반성의 소지가 보이지 않는 자

2. 1년간 무단 결석 일수가 20일 이상인 자
3.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이성교제가 청소년 사회 윤리에 어긋난 자
5. 불량서클에 가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6. 교직원 반항 비방, 구타하여 교권을 손상시킨 자(사안에 따라 퇴학을 명할 수 있다)
7. 무허가 집회를 주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8. 학교장의 허락 없이 정당이나 정치관련 단체에 가입한 자
9. 교내에서 정치 선동을 한 자
10.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자
11. 기타 행위로 인하여 학교선도 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로 의결된 자
12. 제10조 제16호의 행위를 8회 이상 위반한 자
13. 제10조 제16호의 행위를 16회 이상 위반한 자

**제13조(단속 적발)** 제10조 제16호 및 제17호, 제11조 제10호 및 제11호, 제12조 제12호 및 13호의 단속 및 적발 등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단속·적발은 평촌고 전 교원이 실시하되, 두발 단속은 학년생활지도교사와 인성생활지도부 교사가 1개조가 되어 실시하며, 하계, 동계 휴가 및 신학기 초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 두발 단속은 월2회 실시하되, 7일전에 예고한다.

### 제14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퇴학을 명하기 전 학교장은 일정 기간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사고결석으로 처리함)
2. 특별교육이수를 받고도 행동의 변화가 없이 다시 그 이상과 같은 징계행위를 한 자
3. 심한 정신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4. 기타 행위로 인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이 의결된 자

### 제15조(징계의 해제)

- ① 진로상담교육부장, 인성생활지도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의 협의 하에 징계해제를 학교장에 게 상신할 수 있다.
- ② 징계 해제 학생은 교칙을 준수한다는 본인과 보호자의 각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가 해제된 학생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도교사와 결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4 장 개 정

**제16조** 본 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와 직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징계대상자가 징계 이전에 시, 도 규모 이상의 각종 대외상이나 학교장의 선행상을 수상한 자는 징계내용을 경감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6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별지 3> 평촌고 선도위원회 참석 안내서

(이외에도 직인이 찍힌 참석 안내서가 집으로 보내졌음.)

### 선도위원회 참석 안내서

제 2 학년 4 반  
성명 박소현

위 학생의 학생선도 규정 위반으로 본교에서 학생 선도 위원회를 개최하니 학부모님께서는 2007년 3월 30일 16시 30분 본교 운영위원회실에 참석하셔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불참시 위 학생의 선도 처분에 관하여 본교 교칙대로 처리해도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선도처분사유 : 불법 전단지 배포  
선도위 개최 일자 : 2007. 3. 30(금) 16시30분  
통지 방법 : 담임 유선 연락 및 참석 안내서

평 촌 고 등 학 교 장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07진인1146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 이유 부분 제3항관련 규정에 기재된 법령 및 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게 학교안에서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물의 표현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2007. 3. 23.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측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배포한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하여

배지를 강제로 압수하고 폐기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2007. 3. 23.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배지)를 교실 뒤쪽에 비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교무부장 교사가 이를 적발하여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진정인을 불러 백지에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교사의 요구에 맞춰 수차례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이후 같은 달 26. 인성생활지도부 교사가 진정인을 수업시간에 수차례 불러 진술서 양식을 놓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교감 ○○○이 계속 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다. ○○고등학교측에서는 같은달 28. '불법전단지배포'라는 사유로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 참석 공문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다.

2)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에서 제작한 '강제야자 즐'이라는 문구가 있는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하여 2007. 4. 둘째주 경위 배지를 강제로 압수하고 폐기하였다.

### 나. 피진정인

#### 1) 진정요지 가항(전단지배포) 관련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진정인에게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배부하였다. 그러나 같은달 28. 학년부와 학교관리자 등이 협의하여 선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기로 잠정결정하고, 같은해 4. 6.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 2) 진정요지 나항(배지강제압수) 관련

2학년 부교사 및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등이 학생회를 통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배지를 압수한 사실이 없다.

## 3. 관련규정

### 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조약제1072호, 1991. 12. 20. 발효)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전단지 배포)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의 주장요지 제1호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제1호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장되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면,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3조는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이 사건 전단지 배포 행위)에 적용하여 보면,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해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 절차와 위반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 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를 보건대, 진정인이 현실적으로 징계를 당한 사실이 없고 선도위원회의 개최가 취소된 점,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재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 제3항 기재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게 학생이 학교안에서 어떤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 게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학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배지강제압수) 관련

진정인의 주장요지 제2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요지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위원장 유남영

위원 신혜수

위원 윤기원

## [세민정보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의견서」, 2007. 04. 16.

수신 : 세민정보고등학교 교장 김완지  
발신 :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  
제목 :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의견서  
날짜 : 2007.4.16. (월)  
문의 : 전누리, 유윤중(02-365-5359)

---

세민정보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어떠한 위협이나 징계도 없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은 학교안 인권문화 조성과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을 주장한 학내 시위와 관련하여 관련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이름을 적어내고, 일부 시위참여자들에게 대해 체벌을 가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귀교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시위를 한 것은 귀교의 두발규제와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 인권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현재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이미 만들어진 규정의 정당성만을 되뇌며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그러하기에 국제인권조약들과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13일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공포감 조성과 위협, 호출 등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나 반성문, 각서요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덧붙여, 이미 귀교의 심민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입니다.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6. 우리는 우선 심민자 교사가 차별을 가한 것에 대한 학교장 차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 등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4월 16일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천천고등학교]

「수원 천천고의 이상한 교육방법 - [동영상]4일오후, 천천고 1학년학생들 오리걸음 얼차려 받아」, 수원시민신문, 2007. 06. 06.

# 수원 천천고의 이상한 교육방법

## [동영상]4일오후, 천천고 1학년학생들 오리걸음 얼차려 받아



▲ 4일오후 4시경, 수원 천천고(교장 오옥환) 1학년 학생들이 오리걸음을 한 채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있다. 이날 온도는 영상 30도에 육박하고 있었다. © 수원시민신문

본지는 편집이 끝나는 데로 동영상 1~3편과 <사진으로 보는 오리걸음 얼차려 장면>을 실을 예정이다.

[인권이슈]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다산인권, 2007. 06. 14.

##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청소년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체벌'을 중단하라!

최근 4일 수원 천천고에서는 학교측에 의해 대대적인 두발, 복장단속, 그리고 체벌이 진행되었다. 퇴약별이 짜는 오후3,4시 고온의 운동장에 청소년들을 집합시키고 두발, 복장단속을 진행한 뒤, 기준에 맞지않는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앞드려뺨쳐’,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인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열차려를 중단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진행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그 즉시 ‘열차려’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바로는 7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맞지않는 청소년들을 다시 체벌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인권 보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의 주된 주장.

기자회견을 마친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실태조사 해보겠다.’, ‘학교내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받았을 뿐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4일 수원 천천고에서는 대대적인 두발·복장단속과 체벌이 있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집합시키고 단속을 하여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앞드려뺨쳐’,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하는 광경은, 학교 안에서 억압받는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듯했다. 천천고 현장에 도착한 인권활동가들이 “인

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얼차려’ 체벌을 중단하십시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언론과 함께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학교 측은 체벌을 중단했으나, 7일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걸린 학생들을 체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추가적으로, 천천고 학생들을 통해서 평소에 교사가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하거나 욕설을 함부로 하는 등의 상황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은 비단 천천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 현실은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8월에는 수원 청명고의 두발자유 학내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탄압이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고, 인터넷언론 1318virus의 기사<경기도는 학생인권침해우범지대?>(07.03.09.) 등을 통해 경기도의 강제이발이나 체벌, 강제적 자율학습 실태 등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생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도 인터넷을 통해 동원고, 매탄고, 장안고(수원 성지교용인) 등의 학교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5월 당시 언론을 통해 학생인권헌장 제정이 전국 최초임을 강조하면서 “학생인권헌장 제정과 함께 학교마다 이 헌장 이념에 맞게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을 줄여 나가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학생인권헌장은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발표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헌장' 제정 중단?>(07.05.11.) 기사만이 그것이 헛약속에 불과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인권헌장 중단은 결국 두발자유, 체벌, 야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그러한 무책임 속에 숨은 학생인권 침해들은 방치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지역 학교들의 학생인권 상황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이 알려지고 있으나, 전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학교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라.

학생인권 상황 조사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 현실은 암울하며, 학교의 자율로 맡겨둬도 좋을 만큼 희망적이지도 못하다. ‘자율’이란 허울 속에 허용된 학교의 독재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인권침해로 괴로워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하라. 도중하차한 학생인권헌장 제정은, 당연히 다시 추진하여 학생인권 정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권존중과 보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헛약속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교육청이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2007년 6월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수원 천천고 ‘오리걸음’ 도 교육인가 - <동영상2>천천고, “오리걸음 약간 있었지만 학생들 지도방법” , 청소년인권네트워크, “군사주의문화 열차려 금지해야” , 도 교육청 '체벌금지 지도감독하겠다 “... ‘학생인권헌장’ 제정 여전히 검토중」 , 수원시민신문, 2007. 06. 15.

## 수원 천천고 ‘오리걸음’도 교육인가

### <동영상2>천천고, “오리걸음 약간 있었지만 학생들 지도방법”

청소년인권네트워크, “군사주의문화 열차려 금지해야”

도 교육청 '체벌금지 지도감독하겠다“...‘학생인권헌장’ 제정 여전히 검토중’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수원 천천고교(교장 오옥환)는 지난 4일 7교시에 1~2학년 남녀 학생들을 운동장과 농구장에 집합시킨 뒤 대대적으로 두발, 복장단속을 실시, 단속에 걸린 70여명의 남학생들을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체벌을 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아래 도교육청)이 체벌금지에 미온적이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헌장(아래 인권헌장)'마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부터 장안구 천천동 513번지의 수원천천고교(교장실 031-249-6700)는 운동장에 1~2학년 남녀 학생 200여명이 집합해 있었다. 재량시간에 학생들이 집합된 이유는 복장문제와 두발 단속 등에 대해 학교측이 흠어진 기강을 잡겠다는 것. 이날의 온도는 영상 28도여서 운동장에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였다. 일부 남, 녀 교사들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1학년 한 교사가 운동장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현장 부근에는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뒤 두 남자 교사가 한 학급을 운동장 단상에서부터 오리걸음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40여명의 1학년 여학생들이 앞드려 뺨치를 하려다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도는 남학생들은 왼쪽부터 모서리를 돌아 결국 오른쪽 모서리까지 거의 한바퀴를



▲수원 천천고등학교(교장 오옥환)간판 © 수원시민신문

돌아 다시 출발한 장소까지 되돌아와서야 오리걸음이 끝났다. 중간에 낙오된 학생들 4명은 특별히 한 교사가 같이 따라다니며 끝까지 오리걸음을 견게 했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 옆 농구장에서는 2학년 남학생들이 6~7명의 남녀 교사들의 통제아래 오리걸음을 받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교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학교 담 옆에서는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02-365-5359)가 ‘군사주의 문화 열쳐려 금지’ ‘학생인권보장’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40여명의 여학생들이 옆드려 뺨쳐를 하려다가 잠시 머뭇거린 것은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체벌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천고교는 7일에도 두발 복장 등을 재검사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천천고 학생이 제보를 하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한 천천고 학생이 40cm 크기의 몽둥이로 체벌을 받아 피멍까지 든 적이 있다고 전했고, 평소에도 교사가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또 야간 자율학습도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자율로 했으면 한다. 학생들이 자기 개성이 있듯이 보충도 자율로 해서 여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집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현행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생체벌이 공교육 불신과 교권 실추, 학교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거나 상벌점제, 봉사활동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 천천고는 예외적으로 한 여름날씨에 체벌을 강행한 것.

천천고의 한 학부모는 “교장선생님 부임뒤 부쩍 학생들의 기강을 잡기위해 법적으로 금지한 체벌을 시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오철현 천천고 교감은 출장중인 오옥환 교장을 대신해서 “두발,복장 문제 등으로 1학년 학생들을 운동장의 3분의 2를 오리걸음시켰다”며 “이 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분명 열쳐려 지만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지도방법의 하나고,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해 그런 일이 없도록한 뒤 사안이 끝났다”고 말했다.

15일, 박해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031-2490-209)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체벌을 금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학생교육적 목적에서 했다는 학교쪽 사안보고를 받아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적으로 해리라고 조치를 내리지만 학교도 어려움이 있다”며 “야간자율학습도 우리는 금지하고 있다”고만 말해 했다. 경기도 관내 고교의 체벌 민원 등에 대한 질문에 “체벌 민원이 들어오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며 학교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경기학생인권현장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도 교육청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보장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교육청에 천천고 상황을 비롯, ‘야간자율학습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동원고, ‘두발단속이 심한’ 매탄고, ‘교문지도가 심한’ 장안고, ‘두발 반대 시위 학생을 교내봉사시킨’ 용인 성지고, ‘강제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는’ 평택 한광고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

면서 ①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행할 것과 ②중단되어 있는 학생인권헌장 제정을 완결시키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진정, 건의했다.

현재 도 교육청은 천천고 상황에 대한 사실여부 조치를 확인하기위해 방문계획만 있을 뿐, ‘교육적으로 해라’라는 지시이외에는 이렇다 할 재발방지대책조차 없어 행정지도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본지는 도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체벌을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서 제보(031-244-8632)를 받는다. 많은 참여바란다. 본지 인터넷 [www.urisuwon.com](http://www.urisuwon.com)에는 천천고의 4일 체벌현장이 동영상(1~2편)으로 방영되고 있고 동원고, 매탄고, 장안고 등의 학생들 탄원서 전문이 있다.

「체벌없는' 자율학교는 언제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수원지역교교 학생들 탄원서 공개」, 수원시 민신문, 2007. 06. 15.

## '체벌없는' 자율학교는 언제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수원지역교교 학생들 탄원서 공개

지난 4일 수원 천천고는 1~2학년생들에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다음은 지난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도교육청에 수원 천천고 상황을 비롯, '야간자율학습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동원고, '두발단속이 심한' 매탄고, '교문지도가 심한' 장안고, '두발 반대 시위학생을 교내봉사시킨' 용인 성지고, '강제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는' 평택 한광고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다.



▲ 운동장에 학생들이 집합해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원 천천고 상황〉

‘재량’시간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을 각각 운동장과 농구장으로 소집하여 대대적으로 두발·복장단속을 실시. 운동장에서는 단속에 걸린 120여 명의 학생들을 잡아놓고 ‘앞드려뺨쳐’와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함.

인권활동가들이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언론과 함께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학교 측에서는 체벌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들여보냈음.

6월 7일 천천고 학생이 학교가 재검사를 하여 체벌을 가했음을 제보함.



단속에 걸린 남학생들이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검사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활동가들이 학교 안에 피켓을 들고 들어가서 항의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경기도 청소년들의 탄원서>

### 수원 동원고등학교

제가 다니는 동원고등학교는 사실상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별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남학교라 그런가 차별 강도가 셉니다. 2학년 부장선생님 같은 경우, 차별이 정당하다고 학생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다든지 욕을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은 2월에 신발 신고 하교한다고 신발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싸대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선생님은 야간자율학습 시간 때는 떠드는 학생을 복도에 나오라고 했는데 떠들지 않았다고 하자 소리를 크게 지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강타했습니다.

어떤 담임선생님은 학기초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발은 학교 교칙에 따를 것,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정숙할 것...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당할 것을 서약함.” 말도 안 되는 계약서입니다.

두발규제도 완전 압박입니다. 앞머리 5cm, 앞 뒷 머리는 하얗게 보여야 합니다. 보통 두발은 담임선생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심한 담임선생님들은 규정에 맞아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깎아오게 합니다. 두발검사는 시험 후나, 개학 후 대대적으로 검사하구요 평소 교문 지도 때도 두발검사합니다.

야간자율학습도 대부분 강제적으로 시키는데요, 담임선생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학원이 나 과외 같은 경우에 빼주는 선생남도 있긴 합니다.

핸드폰은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가져온다면 아침에 핸드폰을 걸었다가 야간자율학습 끝날 때 돌려줍니다. 핸드폰 사용이 걸리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혹은 학년이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발 이런 인권침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니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 수원 매탄고등학교

수원 매탄고를 다니는 고2 남학생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제가 일학년일 때 저희는 스포츠로 엄청 심하게 잡았거든요 원래 수원 인문계는 풀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스포츠고요. 더구나 저희는 반삭을 하면 또 혼납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작년에 2학년이죠 머리 정말 길었습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짧다고 생각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다 짜르니까... 형들의 머리는 다 실업계 수준으로 길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2학년이 되고 하면 좀 풀어줄 줄 알았더니 머리를 또 심하게 잡더군요 요번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검사를 한답니다. 어디서 돈이 솟아 나나. 그리고 이번 3학년은 이번 3월 한 번만 잡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잡는다는 얘기가 무척이나 많이 들리더군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요번 신입생들 보니까 저희 보다 긴 거 같더군요 저는 저번주 일요일에 머리를 짧랐는데 겨우겨우 넘어가서 이제 다음달까지 길러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야자시간에 머리 기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말할 때 들으라고 이제 매주 월요일에 검사하니까 또 잘라고 오라고 하더군요

수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두발자유도 많던데.. 수원은 왜 이럴까요..

얼마나 답답,짜증,화가 났으면 머리를 기르게 해주면 야자를 11시~12시까지 할 수 있다고 애들이 말하겠습니까. 책임지고 수원 두발자유 우선순위 0순위로 좀 해주세요

### 수원 장안고등학교

장안고 남학생 두발규정은 반삭발에 올려치기 정도구요.. 걸리면 엉덩이를 때립니다... 여학생은 15cm가 기준이라는데 검사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맘대로 바꿉니다... 발목 양말 못 신고 밝은색(흰색, 빨간색)신발이나 가방 금지에, 교복 안에 흰색 아닌 다른 색(검정색 회색 전부) 옷은 못 입게 합니다...

교문지도가 장난 아니게 심합니다.. 두발이나 양말이나 뭐 명찰 같은 거 교문에서 걸리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넘게 시키는 건 기본입니다. 쓰레기 주워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방에 책 얼마 안 들었다 싶으면 즉석 소지품 검사할 때도 있구요..

작년에 여학생 싸대기를 때리는 것도 봤는데... 엉덩이나 종아리를 많이 때리고 김보현 수학 선생님은 엉덩이, 발바닥을 주로 하는데 머리카락이나 싸대기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찰 때문에 직접 싸대기랑 맞아봤구요.. 편희철 선생님도 매로 엉덩이를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아침 교문단속에 걸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거나 쓰레기 주워오게 함.

야간자율학습 희망 조사하는 것을 다 찬성으로 써내라고 하고, 어떤 반은 그렇게 안하면 때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수원 천천고등학교

천천고 머리 규정은 앞머리 5센치 옆머리 뒷머리 1센치 윗머리 3센치이구요. 배찌.명찰 등을 잡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문제점을 말씀하겠습니다. 머리 규정이랑 체벌. 이견 한꺼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머리규정은 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너무 짧습니다. 버티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면 학생과.학년부장한테 체벌을 받습니다. 한 30~40센치 굵기에 가로 : 2~4센치 세로 2~3센치 정도의 몽둥이로 체벌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런 몽둥이로 맞아서 피멍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요번주에는 두발 문제로 월요일(6월 4일) 7교시 1학년과 2학년이 운동장에 나와서 단순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른 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이 머리 안 자른 학생들을 체벌하였습니다. 그다지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내일까지 깎아오라고 했습니다. 체벌까지 당하고 머리도 깎아오란 소리도 듣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명찰.배찌가 없어두 체벌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때리는 체벌은 아니지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압수... 천천고는 핸드폰 뺏기면 기본이 한 달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급히 쓸 일이 있다고 하했을 때 핸드폰을 뺏긴 게 잘못이라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야자.보충 문제도 있습니다.. 보충은 무슨 선택제처럼 용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여 안 한다고 쓰면 담임선생님께 꾸중을 듣고요, 무조건 참여해야 하죠. 저는 보충.야자를 자율로 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이 있듯이 보충도 자율로 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집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시까지 등교해서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이 어른들이 인문계 학교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은 보충.야자 같은 거 할 시간에 자기의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10시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고 씻으면 11시를 넘기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12시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그때 취침을 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학교에 지각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두발.복장.야자.보충 이러한 문제로 힘들다고 하시지만 학생들도 두발.복장.야자.보충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고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인만큼 그만큼 존경해주고 학생들에게 자율이란 혜택을 주신다면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 용인 성지고등학교

작년에 제가 성지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강한 두발규제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교장선생님께 편지를 보내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낸 편지는 조례 때 교장선생님께서 타임캡슐로 보관한다고 하시는 우스개소리로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위한 학생들은 교내봉사, 주도지는 사회봉사를 갔구요.

너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고통받으니까 참아라라는 답변만 날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적인 의견 ‘반영’조차도 되지 못한 채 또 1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1년 사이 돈을 가져오게 해서 학교에 미용사를 불러서 학교 안에서 머리를 깎게 하고(3mm 삭발컷) 깎지 않은 학생들은 운동장을 돌게 하고 오리걸음으로 돌게 하고 오리걸음 후에 때리는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시 벌점과 상점을 주는데 상점은 선생님 한 분당 한 달에 2번만 줄 수 있지만(거의 주지도 않습니다.) 벌점은 무한공급이 가능합니다. 15점을 넘길 경우 노는 토요일날 등교하여 자율학습. 20점을 넘길 경우 도시락을 싸오게 하여 3시까지 자율학습. 그리고 나머지는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퇴학도 있습니다. 퇴학은 있긴 하지만 거의 쓰는 일이 없고 사회봉사도 쓰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교내봉사를 주로 씁니다.

벌점 중에 두발 관련된 것이 최고형인 벌점 10점인데 이 벌점이 학년부장, 선도부 선생님께 연속으로 걸리면 20점 되겠지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5점이나 10점을 부과시킵니다.

물론 머리를 깎아오면 상점 5점을 주지만 대부분 잘 안 깎거나 벌점이 위험한 학생들만 머리를 깎지요. 모두 자의로 깎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 또 학년부장선생님께 두발에 관해 어찌고 저찌고 학생들이 떠들었는데 학년부장선생님曰 "그렇게 머리에 불만 있으면 전학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불손한 물건을 가져오는 학생들의 물건도 빼앗고는 돌려주지 않는데 다음이 목록입니다.

색이 있는 신발, 색이 있는 신발주머니와 가방, 교복 안에 흰색과 속옷을 제외한 색의 옷을 입을 경우 압수. 휴대폰 6개월 압수(빨리 받으려면 1개월 이후 학부모가 찾아와야 함.)

저게 불손한 물건이라니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두발 문제를 해결하고 체벌이나 벌점제, 압수 문제 등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택 한광고등학교**

저희 한광고등학교가 이전 보충학습 2시간에다가 야간자율학습 무조건 강제로 나간다고 합니다. 전엔 강제 보충 1시간에 자율학습도 강제가 아니고 뭐 나름 선택이었거든요. 저도 올해 중요한 고3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 나름대로 자신만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강제로 학교에 얹혀 놓는다니... 이 야간강제학습 다시 자율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두발자유 문제도 신경써주십시오.

\* 자료협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02-365-5359)

## 압박스런 두발단속, 직접 바꿔볼까요!?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오늘! 천천고에 다니시는 학생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시험이 끝나서 좋으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우면서도, 아침마다 현관에서의 **두발복장단속**과 그에 따른 **부당한 징계, 체벌 같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압박스러우시진 않나요?**

천천고는 지난 6월에도 운동장에서 두발단속을 하며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체벌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천고는 현관에서,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두발단속과 처벌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발단속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고 정도면 다른 데보단 나은데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천천고보다 훨씬 더 청소년들의 인권이 잘 존중받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권리를 무시당할 때, “그래도 난 재네보단 낫지.”라고 가만히 위안삼고 있을 순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미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서 두발단속 같은 인권침해들을 없앴거나,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천천고를 청소년인권이 잘 보장되는, 더 좋은 학교로 바꾸기 위해 함께할 분들은

**019-480-3328** 아님 **02-365-5359** 로 연락주세요~

「네트워크로 보낸 천천고 학생의 쪽지」, 2007. 12. 03.

## 네트워크로 보낸 천천고 학생의 쪽지

저는 퇴학 당할위기에 처해진 천천고 학생입니다.

네이버에 천천고를 쳐보다가 글을보고 쪽지드리는거구요. 이런글을 올리면 학교에서 처벌을 할까봐 쪽지로 말씀드려요

12월 1일 토요일날 농구장에서 교문에서 걸린아이들을 모아서 예전처럼 단체로 기합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교문에서 걸렸으니 봉사활동한답시고 교실청소를 한시간동안 시킨후 농구장으로 집합시키고 줄을새워놓고 그 추운날씨에 한시간동안 벌을줬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머리, 팔, 다리 다들고 누워있는학생들이 힘들어서 다리가 내려가면 몽둥이를 휘둘르고 발로 엉덩이를 차면서 쌍욕을하고 사진기를들고나와서 기념촬영이라고 사진을찍더군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몇백개씩시키고 그추운날씨에 오리걸음을시키면서 한시간동안 벌을받았습니다.

집에도착해서 입술이 다갈라지고 온몸이 쭈서서 걸어다니지 못할정도로 아팠습니다.

예전에 학교로 찾아오신걸로아는데

학생부장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인권단체에서 피켓들고나왔다고 "인권은무슨 지랄하고있네" 하면서 막에기를하시더군요. 학기초에는 3학년 선도부 5명에서 머리긴 2학년학생을 학생회실로 끌고가 집단구타를 했었습니다. 그학생은 온몸에 멍이들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왔는데 학생부장이 하는말은 때린건 게들이 잘못한건데 니들이 맞을짓을했잖냐고하면서 오히려 맞은학생을 나쁜놈으로 몰더군요, 그리고 3학년 선도부들은 알아서 혼내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징계조차내리지않고 선도부들은 사과조차 하지않더군요. 몇일뒤에 머리긴 2학년 학생이 1학년학생과 싸웠는데 그 2학년학생한테는 사회봉사를 주더군요.

1학년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선도부들은 5명에서 집단구타를해도 아무처벌도 내려지지않고 머리 가길었던 2학년학생은 1학년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린것도 아닌데 때렸다는 이유로 징계가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는 여학생 팔을 꼬집었다고 저번년도 학생부장선생님이 와서 때리시더군요 . 왜때리냐고 때리지말라고 말로하시라고하니깐 개새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면서 화장실로 쫓아오시더군요 , 대가리를 부셔버린다느니 쌍욕을해가면서 종이칠때까지 화장실 문을잠궈놓고 욕을하시면서 넌 개가지말라고 한번만 더걸리면 퇴학이라면서 욕하시더군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이런일말고도 제가알고있는 더많은일들이 많구요.

온몸이쭈서서 그냥 인권단체에서 도와주셨스면하는 바램으로 쪽지를 보내봅니다 .. 더물어보실꺼있으시면 쪽지나 메일주세요 ..



**[산곡중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7. 04. 09.

**<보도자료>**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 때: 2007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 곳: 인천시교육청 앞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 <상황 보고>

### 인천 산곡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상황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인천 산곡중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은 3월 말, 산곡중에 재학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아이디: 산곡중일원)이 네트워크 카페에 한 글을 올리게 되면서입니다. 그 글은 산곡중의 학생부장 박용주 교사가 저질러온 체벌, 언어적 성폭력, 강제이발을 고발하는 글이었고,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에 내용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 항의글이 올라온 이후, 놀랍게도, 글의 주인공이었던 박용주 교사가 카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삭제를 요구하며, 자신은 두발에 대해서 훈화와 말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던 학생에게 강제이발을 했지만, 체벌과 언어적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곡중일원’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되며, 그 사람의 신원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아무개 교사의 글이 올라오자, ‘산곡중일원’이 쓴 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 네트워크와 2차례 정도의 통화에서 박용주 교사는 자신이 강제이발을 했으나, 폭력과 언어적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글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그 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지우겠다는 대답을 했고, 덧붙여, 박용주 교사에 대해 강제이발에 대해 언론이나 교육청, 인권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박 아무개 교사는 아무런 반성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산곡중일원’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네트워크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산곡중 상황에 대해 묵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네트워크는 산곡중을 찾아가 학교길의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안타깝게도, 글의 많은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 두발규제

◎ 두발규정은 앞머리 뒷머리 길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길어 보이거나 ‘단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도 함.

◎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여 두발규정에 어긋나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잘라올 것을 요구하며, 학생부실로 데려가서 체벌을 하기도 함.

◎ 박용주 교사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잘라오지 않으면 강제이발을 하겠다고 하다가, 3월 23일 수업시간에 (주로 2학년) 학생들 다수의 머리를 가위로 자름. 뒷머리를 일자로 자르거나 구레나룻을 자르거나 땀뿡을 만드는 등.

⇒ 두발규제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게다가 산곡중에서는 두발단속 과정에서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마저 금지하고 있는 강제이발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 \* 체벌

◎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갔다가, 떠들었다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체벌의 수단과 형태는 몽둥이, 매를 사용한 체벌, 체육관-체육창고에 ‘엎드려 뺨쳐’ 를 시켜놓고 때리는 것,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체벌, 발길질 등 다양함.

◎ 인터넷에 박용주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가하는 등, 체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함.

◎ 작년에는 두발단속에 걸린 복학생이 도망을 가자 심하게 체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싸대기’ 를 때리고 넘어뜨려서 때리는 등 심하게 체벌.

⇒ 체벌은 인권의 기준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약자에 대한 폭력임. 국제인권기구도 여러 차례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산곡중에서는 체벌이 상습적일 뿐 아니라, 체벌 사유나 체벌 절차, 그리고 체벌의 수단 등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무시되고 있음.

### \* 모욕적 행위 성폭력적 언사

◎ 학생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바지를 “까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작년(2006년)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농담’ 으로 “여자 가슴 만지는 게 좋아 보는 게 좋아 핏는 게 좋아” 라고 묻거나 여성비하적 발언 등을 자주 했음.

⇒ 처벌로서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바지를 벗기는 것이나,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으로 여성비하적 발언이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함. 또한,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작년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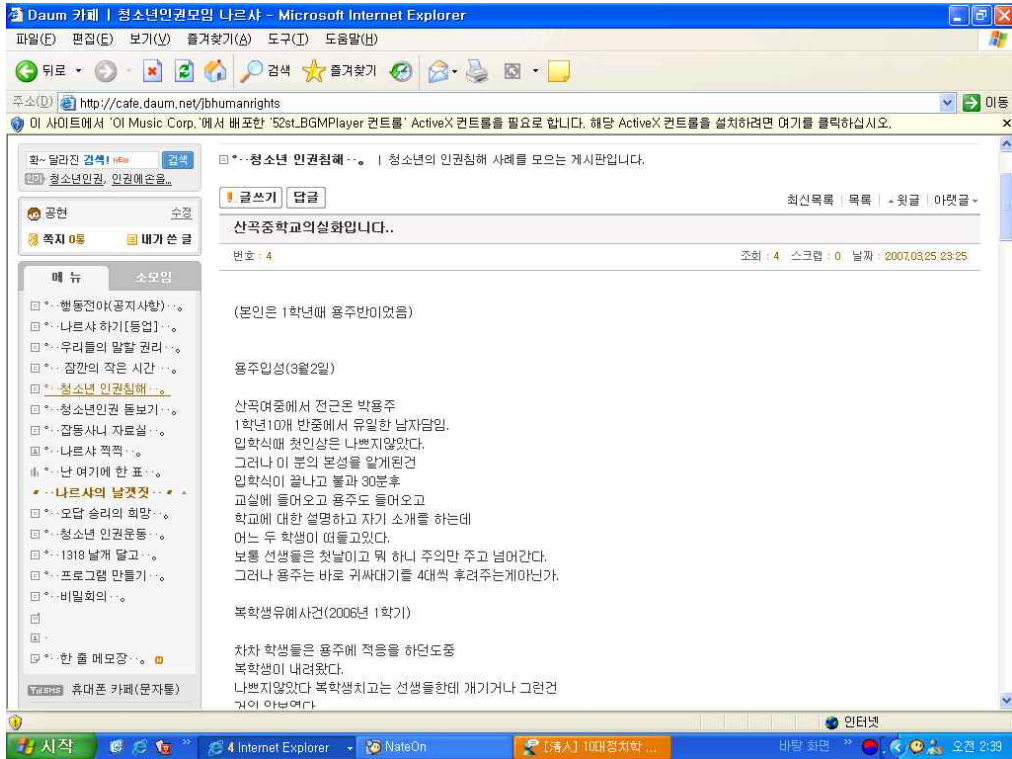
### \* 강제적 자율학습

◎ 시험기간에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공부를 시킴.

◎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며 ‘자습’ 을 시킴.

⇒ 한국은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습부담이 이례적으로 높은 편임. 정규교과 외에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 를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 과중한 학습부담은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음.

## <첨부자료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산곡중 글



(본인은 1학년때 용주반이었음)

용주입성(3월2일)

산곡여중에서 전근은 박용주  
 1학년10개 반중에서 유일한 남자담임.  
 입학식때 첫인상은 나쁘지않았다.  
 그러나 이 분의 본성을 알게된건  
 입학식이 끝나고 불과 30분후  
 교실에 들어오고 용주도 들어오고

학교에 대한 설명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느 두 학생이 떠들고있다.  
보통 선생들은 첫날이고 뭐 하니 주의만 주고 넘어간다.  
그러나 용주는 바로 귀싸대기를 4대씩 후려주는게이닌가.

복학생유예사건(2006년 1학기)

차차 학생들은 용주에 적응을 하던도중  
복학생이 내려왔다.  
나쁘지않았다 복학생치고는 선생들한테 개기거나 그런건  
거의 안보였다.  
그리고 두발검사를하던날.  
용주가 복학생보고 머리를 자르랬더니  
복학생은 거부하는것이였다.  
용주는 결국 종례끝나고 같이 머리깎으러 가자고했지만  
이 복학생은 도망을쳤고  
다음날 이 복학생을 두들겨패는데  
차마 두눈으로 보기힘들 정도로 잔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고 눕혀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학생들 없는 조용한곳에서 체벌을한다면 모를까.  
학생들이 보는앞에서 그렇게 체벌을 하는것이다.  
그러다가 그 복학생이 참다못해 내뱉은말이  
'학교 안나올게요'  
라는 한마디였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났으면 그런말을 내뱉을까  
더 빠들은 용주는 조פק고 복학생은 그이후로 나타나지않고 유예처리가되였다.

농담용주  
수업을하다가  
지루하지않게

농담을 던지는 선생님 .. 나쁘지않다 아니. 좋다.  
용주도 수업하다가 농담을 할때가있다.  
그런데 농담이 참 음란스러운 농담이다.  
남학교라 그렇다고 치자.  
가만있는 애보고  
"넌 여자 습가 만지는게좋아 보는게좋아 훑는게좋아?"  
라는등..  
솔직히 저거 웃기지않다.  
그런데 애들은 웃는다.  
이유는 왠지 안웃으면 맞을것같은 기분..  
한심하다..

운동회용주(운동회시즌)

ㅋㅋㅋ본인은 이걸겪었다. ㅋㅋ  
운동회를 앞두고 우리반은 열심히 운동회연습을 하고있었다.  
애들 남겨서 연습하는것 자체를 애들은 싫어했다.  
그래도 즐겁게 연습을 하는데  
장대 이어달리기라는 종목을 연습하는도중  
본인은 뒤쳐진애들 덕에 넘어졌다.  
ㅋㅋ 근데 갑자기 본인보고 앞드려뺨치라고 하는게아닌가 ㅋㅋ  
그리고는 허벅지를 때리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아픈지도몰랐다. ㅋㅋㅋ  
세상에 .. 진짜 운동회도아니고  
연습하다 넘어진걸가지고 때리다니 ㅋㅋㅋ  
지금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ㅋㅋ

공부용주

1년에 총 4번의 중간고사.기말고사가있다.  
또 2학기말에는 시립고사인지 먼지하는  
못봐도돼는 상관없는 시험을 본다.

용주는 이때마다  
모든 아이들을 4시 30분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하는 분들..  
겪어봐야한다.  
진짜 짜증난다.  
다른반은 다 8시 30분까진데  
우리반만 8시까지여서  
아침도 못먹고 어설피게 학교를와서  
오자마자 9시까지 자습시키고  
점심시간에 다른반 다 나가눌때  
우리반만 반에 처박혀서 자습을시킨다.  
또 수업시간 다 빼기고 4시 30분까지  
또 자습 ㅋㅋ 학교에서 8시간 30분을 처박혀있었다. ㅋㅋ  
자는시간보다 길다 ㅋㅋ

그리고 오늘..

강제로 머리자른사건(2007년 3월 23일)

역대 용주사건중 가장 열받고 좃같고 어이없는 사건이다.  
이날 대략 2학년만 2~30명가량 잘린것같다.  
본인도 잘릴뻔했지만 말빨로 겨우 잘리지 않았다.  
오늘 사건은 몇일전부터 용주가 방송으로 계속 떠들어댔다.  
사춘기에 멋도부리고싶은 나이에 머리를 기르고싶던 아이들은  
까지않았다.(까았는데도 잘린아이들도있다.)  
이에 용주는 가위로 무차별적으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애들은 분노했다.(어떤 그지새끼는 잘렸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거없다.)  
여기서 잠깐 두발규제라는게 왜있는지 짚고넘어갈 필요가있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이다.



공부랑 머리카락길기와 무슨연관이있나.  
 찾을수없다.  
 또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엔 분명히 나와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법은 괜히만들었나? 어이없다.  
 머리가길면 탈선율이 증가한다고?  
 웃기지마라  
 오히려 당신들이 머리깎아라 깎아라 하는 스트레스로  
 반항과 분노의 표시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  
 (통계자료에서도 담배피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어른들에 대한 반항으로 제일많았다.)  
 아까 복학생 사건도그렇다. 두발규제따위만 없었어도  
 복학생은 유예되지도 않았을것이다.  
 군대도 두발규제가 있다고?  
 군대하고 학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건가?  
 천만의말씀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  
 학교는 '공부 하는 곳'이다.  
 엄연히다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단합하고 훈련하는곳이기때문에 두발규제는 있는게 당연한것이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인데 왜 머리를 못기르게 하는것인가  
 솔직히 머리좀 기르면 어떻게 돼나?  
 머리기르면 100%비행하고 탈선하냐?  
 당신들의 상상에 지나기는 똥개가 쳐웃고 다닐거다  
 어이없는 소리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용주는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수업분위기 흐려놓고  
 마구 머리를 잘라버렸다.  
 분명 인권침해다.  
 분명 잘못이다.  
 설마설마했다.  
 애들 대부분이 그랬다.

"설마 자르겠어? 그냥 겁줘서 애들 스스로 깎게하려는거겠지.."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진짜질라버렸다.

난리났다

애들은 신고한다고 교육청에 올릴거라고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귀 기울일 새끼들이아니다.

학생이란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하는게 너무싫다.

그냥 한국이 싫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로만 씨부렁거리는 개한민국이 정말싫다

다른나라 9시까지 여유있게 아침먹고 잠 폭자고 학교갈때(교문에 아무도없다)

우리나라는..

에휴.. 말할 가치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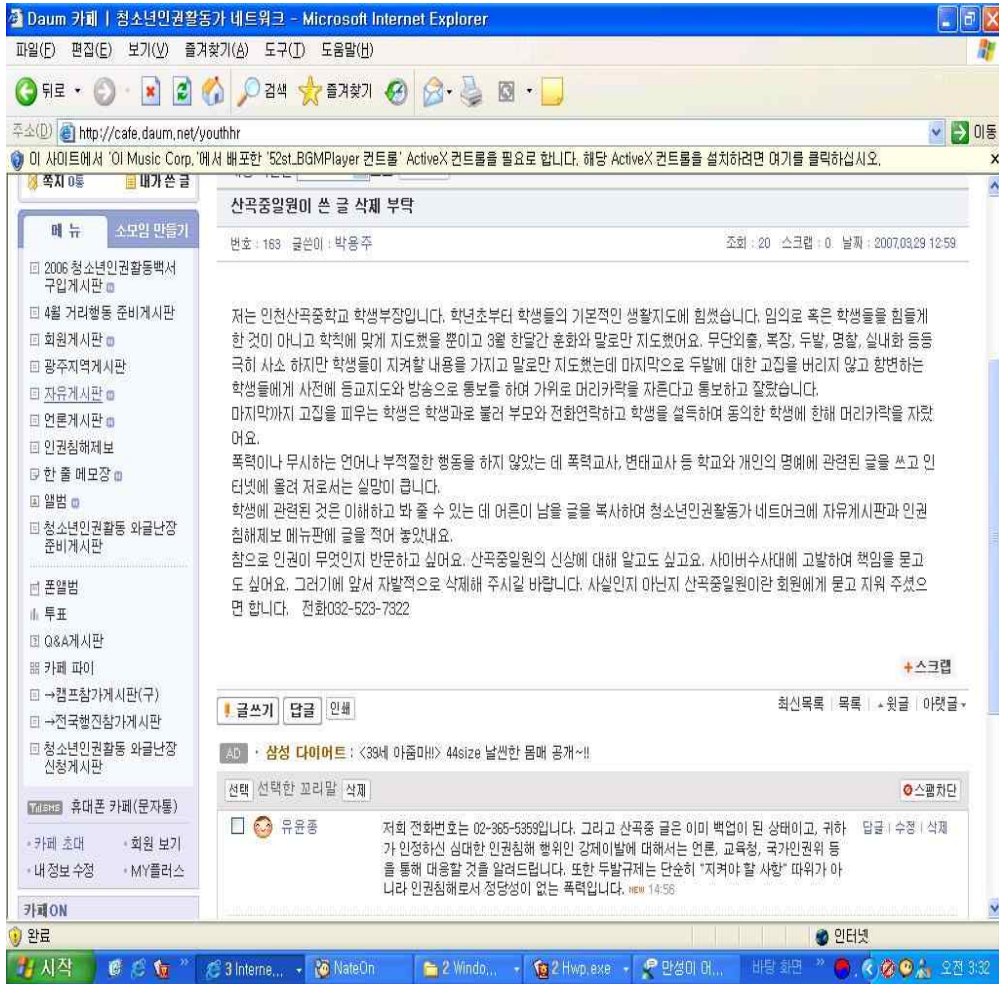
용주가 이글을 제발 봤으면 좋겠다.

제발..

(이글을 정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뿐이고요 어떻게야할까요 ...

신고한다면 어떻게어디서 ?)

<첨부 자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박용주교사의 글



### <첨부 자료 3> 산곡중 하교길 학생들의 증언 녹취

#### 녹취1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예 교내에서 체벌이나 이런 강제이발이나 이런 교사 분들한테 당하신 게 있으시거나 보신 게 있으시면 네 죄송한데

산곡중 학생1 : 머리 잘리구요 그냥 머리 잘리고 막 안 자른다고 좀 개기는 애들은 다 맞고

산곡중 학생2 : 주먹으로 막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다 여기 터지구요

산곡중 학생1 : 싸대기 맞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싸대기 맞고

산곡중 학생3 : 수업시간에 장난쳤다고 싸대기 맞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직접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산곡중 학생1 : 당한 거는 그냥 떠들다가 맞은 거밖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떠들다가 맞은 거고 친구들이

산곡중 학생2 : 그거 머리 막 자르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머리 그냥 강제로 이발하시구요

산곡중 학생3 : 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떤 선생님이...

산곡중 학생3 : 박용주

산곡중 학생2 : 박용주요

산곡중 학생1 : 박용주 선생님이요

산곡중 학생2 : 용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위가 심하신 편이세요 그러면?

산곡중 학생2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그러면 그 혹시 그런, 그런 분 아 그, 안 맞은 학생도 있는지

산곡중 학생2 : 예

산곡중 학생1 : 몇 명은

산곡중 학생2 : 잘 피해간 애들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보통 그냥 그 어떤 학생들 많이 때려요?

산곡중 학생1 : 머리 기른 애들이나

산곡중 학생2 : 좀 불량스러운 애들

산곡중 학생3 : 실내화 안 신고 온

산곡중 학생2 : 좀 떠들고 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예 감사합니다

### 녹취2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이라거나 그런 그 폭력, 체벌을 직접적으로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산곡중 학생4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 수위가 어느 정도셨는지

산곡중 학생4 : 그니까, 다 잘라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머리를요?

산곡중 학생4 : 머리를 다 잘라요. 수업시간에도 막 들어와서 강제로 다 잘라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업시간에도요?

산곡중 학생4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럼 체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산곡중 학생4 :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때려요?

산곡중 학생4 : 네 막 주먹으로 아무데나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주먹으로요? 아... 그러면 그런, 뭐 혹시 본인 말고 친구 분들도 많이

산곡중 학생4 : 네 심하게 맞았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심하게

산곡중 학생4 : 네이버에 올렸다고 막 배로 막 밟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배로 밟구요 아... 그분 혹시 성함이 박용주 선생님 맞으시죠?

산곡중 학생4 : 네 맞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혹시, 그분 한 분만 그러시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몇 분 그런 계신 건지

산곡중 학생4 : 그, 그 선생님만 그래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 선생님만요? 아... 감사합니다.

### 녹취3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제가 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체벌이라거나 강제이발을 당하신 적 있으신지

산곡중 학생5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두 개 다 당하셨나요

산곡중 학생5 : 아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 뭐...

산곡중 학생5 : 강제이발만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만 당하셨어요? 그럼 폭력

산곡중 학생6 : 나도 머리 잘렸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산곡중 학생5 : 아뇨 갑자기요 수업시간에 딱 들어와서요 딱 갑자기 너 나와 너 나와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애들, 애들을 세워놓은 다음에요 그 문방구에서 파는 가위로요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잘라요 막 불만하  
면요 때릴 것 같아서요 애들 다 가만히 있어서 잘랐어요

산곡중 학생7 : 학생부에서 까이고 왔어요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체벌 당하셨어요?

산곡중 학생7 : 까이고 왔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은 그런 체벌을 본 적이라도 없으신가요. 본 적이 없으신가요?

산곡중 학생5 : 엄청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엄청 때려요?

산곡중 학생5 : 네

산곡중 학생7 : 무조건 싸대기예요

산곡중 학생8 : 죽때기를 그냥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반은 죽어요

산곡중 학생7 :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 녹취4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 혹시 혹시 성적 발언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으세요

산곡중 학생9 : 제가 그 반이었어요 4반이었어요 갑자기요 야

산곡중 학생10 : 자지 막 뺏아버린다구요

산곡중 학생9 : 와 맞아 맞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수위가 심하신가봐요

산곡중 학생9 : 예 제가 4반이었거든요 근데요 하는 말이요 야 여자 가슴 어, 여자 가슴 만지는 게 좋아 보  
는 게 좋아 핏는 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계속 물어봐요 할 때  
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럼 또 다른 또 혹시 다른 내용이

산곡중 학생11 : 그냥 까요 까  
 산곡중 학생9 : 그냥 애들 옷을 벗겨서요  
 산곡중 학생11 : 까요 아나 진짜 까요 그냥  
 산곡중 학생9 : 이게이게 체육복을 이렇게 싹 (바지를 내리는 시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아 당한 학생이 있, 보신 건가요 당한 학생을?  
 산곡중 학생9 : 봤어요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직접 보셨어요. 그 당한 학생 기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산곡중 학생9 : 그냥 웃던데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웃,그럼 뭐  
 산곡중 학생9 : 억지스럽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억지스럽게 그냥 선생님 앞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산곡중 학생9 : 야 나 오늘도 까이는 거 아나

#### 녹취5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산곡중 학생12 : 학생부실에 가서요 몽둥이로요 팔을 이렇게 쳤어요 근육통이 생기구요  
 산곡중 학생13 : 시발 뭐 근육통이야 개놈아  
 산곡중 학생12 : 허리 허벅지  
 산곡중 학생13 : 개새끼 뭐 근육통이야  
 산곡중 학생14 : 멍, 멍은 들었어도... 근육통까진  
 산곡중 학생12 : 근육통이었어 그리고 왼쪽 무릎은 인대가 손상이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인대 손상까지 나왔  
 산곡중 학생12 : 이걸 이렇게 깎았어요 그냥 옆드려 있는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옆드려 있는데?  
 산곡중 학생12 : 파바바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감사합니다.

#### 녹취6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저희가 그 이런 산곡중의 인권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체벌  
 이나 강제이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곡중 학생13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산곡중 학생13 : 지각했다구요 많이 맞은 적 있는데요 심하게 싸대기까지 맞은 적도 있구요 그 정도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친구 분들 이렇게 당하신 것도 보신 적 있는 건가요

산곡중 학생13 : 1학년 때요 어떤 형이 그 복학을 했었는데요 학교 안 더 안 다닌다 그랬다가요 싸대기 맞고  
눅혀서 밟기도 하고 그 정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같은 반이셨어요?

산곡중 학생13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때 1학년 때 몇 반이셨어요?

산곡중 학생13 : 4반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4반... 아 혹시 뭐 성적 발언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산곡중 학생13 : 네 그건 1학년 때 장난 식으로

### 녹취7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이나 체벌 이런 거 직접 당하신 거나

산곡중 학생14 : 반 돌아다니면서요 머리 긴 사람들 막 자르고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업시간에?

산곡중 학생14 : 네 갑자기 들어와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럼 체벌 그때 그그 아 예 체벌 수위가 심한 것까지 말씀해주셨죠. 때리는  
건 어떻게 때리는지

산곡중 학생14 : 싸대기하구요 축탕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주먹질이요?

산곡중 학생14 : 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혹시 그분 담임 선생님 아니었어요 그분이?

산곡중 학생14 : 담임 아니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 혹시 시험기간 때요 그 반 학생들 남기고 강제로 남겨서 그 반만 남겨서 공  
부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산곡중 학생14 : 네 2... 저희 학년 말구요 2학년인가 그랬다는데 점심시간에도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끝  
나고 공부하라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사실인 거죠?

산곡중 학생14 : 네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감사합니다.



### 녹취8 (2007년 3월 30일 하교길)

산곡중 학생15 : 가위로 막 자르고 실수라 그러고 땀뺀내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박용주 선생님 언어폭력 같은 것도 있었나요?

산곡중 학생15 : 막 욕하죠. 그러고 막 신고하지 말라고 하구요. 네이버에 쓴 글이요 다 지워달라고 해요.

막 개네 누군지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때렸다면... 그거 하는 애들 다 때리고, 발길질하고...

### 녹취9 (2007년 3월 30일 하교길)

산곡중 학생16 : 실내화 신고 운동장에 나갔었는데요 애들이 몇명 도망쳤는데요 저도 그때 도망쳤었는데 애들보고 잡아오래요. 저하고 다른 애 한 명은 둘이 잡혔어요. 근데 그래서 먼저 여기 기다란 거 마포걸레 뒷자루로요 아직도 명들어있을걸요. 두 대 맞구요, 거기 '옆드려뻔쳐' 하고 있었어요. 아직 흑도 남아 있는데 막대기 갖고 머리도 한 대씩 때리고 넘어지면 발로 차고. 애들은 도망쳤다가요 잡혀왔거든요. 체육관 들어가서 열대씩 맞고 저도 다시 체육창고 있잖아요 구령대 아래 거기 들어가서 맞고 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굉장히 심하네요. 혹시 박용주선생님 그분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몇 분이 또..

산곡중 학생16 : 한 서너분...

## 진정(건의·질의)서

· 진정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성 명 : 유윤종(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주민등록번호 : 880225-1029611  
전 화 번 호 : 02-365-5359

· 제목 :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진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3월 한 제보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귀 기관의 관할에 있는 인천 산곡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의 재직하고 있는 박용주교사가 체벌, 강제 이발, 언어적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 제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의 결과는 애석하게 제보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서는 이 중대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귀 기관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펼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 산곡중의 인권침해사안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가해자인 박용주 교사와 산곡중학교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곡중학교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2007, 04. 10.

## <성명서>

#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

지금 인천 산곡중학교에서는 강제이발을 비롯하여 신체적 · 정신적 폭력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7년 3월 말 몇몇 포털사이트들, 그리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산곡중학교 ‘박용주’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체벌 폭력과 언어적 성폭력, 강제이발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곧이어 ‘박용주’ 교사가 직접 쓴 강제이발은 사실지만 폭력 등 다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글 삭제 요청과 함께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용주’ 교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산곡중학교의 학생인권 침해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사실관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직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한 현장 조사에서는, 많은 산곡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글에 써있던 ‘박용주’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들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곡중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두발규제와 강제이발이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강제이발 사실은 ‘박용주’ 교사 본인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인정한 바 있다. 동의를 얻고 여러 번의 통보 후에 행한 강제이발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떠한 압박도 가해지지 않은 학생들의 진정한 ‘동의’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통보를 했다고 해서 강제이발이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했던 두 번의 현장 조사 결과 ‘박용주’ 교사 본인이 부정했던 신체적 폭력과 욕, 성적인 언어폭력 등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수업시간에 강제이발을 하거나 2, 30명을 모아놓고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는 일, 발길질 등 인권 기준은커녕 교육부의 기준도 한참 벗어나는 체벌과, 학생들의 바지를 벗기는 성폭력, 여성비하적인 내용의 언어적 성폭력 등, 증언에 따르면 산곡중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했다는 인권침해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산곡중학교에 학생인권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발자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본권임을 인정한 신체의 자유이자 개성발현권, 표현의 자유이다. 학

생들에게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로 신체적으로 훼손(규제) 당하지 않을 권리 혹은 개인의 신체결정권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의 강제이발을 금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차별이 고문의 일종이며 차별을 없애는 것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의 기준에서는 한참 부족하지만 교육부나 법원 판례들도 ‘허용’할 수 있는 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곡중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은 이 또한 어기고 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여성 비하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성폭력 소지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교사이기에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육행위에 대한 지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박용주 교사 자신도 인정한 강제이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학생들이 증언한 위의 인권 침해 행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바란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 기준은커녕 교육부의 기준도 무시하는 비교육적인 차별, 성희롱과 여성비하적인 내용의 성적인 언어폭력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이 산곡중학교장과 ‘박용주’ 교사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곡중 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 그리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제와 강제이발, 폭력을 행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산곡중을 포함하여 자기 관할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할 것과, 두발용의복장규제, 차별로 대표되는 학교의 이러한 행태가 없어지도록 하고 신체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지시·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4월 10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사태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7. 04. 25.

## <보도자료>

#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사태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7년 4월 25일(수)

문의: 전누리 (02-365-5359, 016-297-9803)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 <경과 보고>

### 산곡중학교 인권 침해 사태 진행 경과 보고

2007년 3월 말

산곡중에 재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한 학생(아이다: 산곡중일원)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카페에 산곡중 박용주교사의 성폭력적 언어사용, 체벌, 강제이발등의 학생인권을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하는 글을 퍼다 올림.

3월 29일

박용주교사가 네트워크 카페에 글을 삭제 해달라는 글을 올림. 글을 지우지 않을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함.

네트워크 담당자와 통화에서 강제이발은 했으나, 체벌이나 성폭력적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

3월 30일, 4월 2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산곡중 하foot길을 찾아가 박용주 교사의 학생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학생들 피해사실이 있다고 증언.

4월 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시교육청에 산곡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진정,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함.

4월 11일

교육청 1차 현장방문 진상 조사. 박용주 교사, 강제이발, 언어적 성폭력 등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인정.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함. 학교측도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4월 13일

교육청 2차 현장 방문 조사(1차 조치 결과 확인)

4월 19일

네트워크에 현장조사 결과문 음.

<성명서>

## **인천시교육청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산곡중을 비롯한 인천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에 우리는 산곡중 학생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단속과 빈번한 체벌, 그리고 언어적 성폭력 등으로 산곡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박용주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조치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4월 10일 낸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 진정”의 처리 결과를 지난 주, 산곡중 현장 조사와 산곡중 내에서의 조치 및 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 처리서”를 통해 통보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조사 이전 우리와의 통화 등에서는 강제이발과 두발단속 이외의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하던 박용주 교사가 “본인이 성격이 급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제시된 체벌 기준에 의거 체벌을 안 한 일도 있었지만” “수업 분위기 쇄신을 위한 농담이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불신과 여성비하적인 광의의 성폭력으로 인지된 것”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맡아 책임감과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 등, 모호한 표현이긴 하나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산곡중 내 조치로 박용주 교사가 자신이 강제이발을 한 학생들을 불러 강제이발 사실을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교 당국이나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산곡중 내에서의 구체적인 조치가 오직 강제이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에게만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용주 교사는 체벌이나 두발단속 자체, 학생 모욕적 행위나 발언 등 다양한 학생인권 침해를 자행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교육청 조사에서 학생 면담이나 실제 산곡중 내 조치 등은 오직 강제이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강제이발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박용주 교사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산곡중 학생들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직 강제이발

을 당한 학생들만을 교무실로 불러서 사과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부분이 단지 “산곡중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조치 강구”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천지역은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강제야자가 횡행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 4명의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교사에게 의존하거나 학생부장 교사들에게 생활지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수 같은 정책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산곡중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발 빠르게 조사·조치를 처리한 것은 교육청에 학생인권 신장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강제이발 사안에만 집중하여 그 외의 많은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산곡중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공개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실시 등 학생인권 사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서, 우리는 교육청이 인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청은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부장 교사 연수 이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천지역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인권 침해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산곡중 사건에서 얻어낸 학생인권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이 앞으로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2007년 4월 25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 [자료1]- 인천시 교육청 진상 조사 처리서

### 진정(건의 · 질의) 처리서

####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 진정”

##### 1. 작성자 현황

- 접수번호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민원서류 241호
- 접수일 : 2007.410(화) 15:30
- 작성자 : 유윤중(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이하 기본정보 생략

##### 2. 진정내용(요약)

산곡중학교 학생부장인 박용주 교사의 학생 체벌, 강제이발, 언어적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해당교사 및 산곡중학교장의 사과와 책임 요구

- 1) 두발규제에 관한 건
- 2) 체벌에 관한 건
- 3) 모욕적 행위 및 성폭력적 언사에 관한 건
- 4) 강제적 자율학습에 관한 건

##### 3. 1차 현장 방문 진상 조사 실시

- 1차 현장방문 조사기간 : 2007.4.11(수) 09:00~12:00
- 현장방문 조사장소 : 산곡중학교 교장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량다리길 6번지
- 전화번호 : 032-523-7322
- 현장방문 조사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참석자 : 최춘섭(산곡중학교 교장), 구건서(교감), 박용주(학생부장), 학부모(최민규 母), 강인구, 이주영(산곡중 3학년 학생)

### [학교장-교감 면담]

-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교사의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인해 학생-교사-학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 학생의 인권침해와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공식 사과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지도대책을 강구하겠음.
-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 없도록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기획 · 운영 하여 365일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인 산곡중학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음.

### [학생부장 박용주 교사 조사]

박용주(학생부장) 교사는 1958년생으로 전북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2007년 3월 현재 교육경력 24년의 중견교사로 작년 3월에 산곡여중에서 산곡중학교로 전근하여 2006년에는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박용주 학생부장은 동료교사들이 08:30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07:10분경에 출근하여 보통 19:00경에 퇴근하고 있고, 학생 시안 관련 면담으로 인해 자주 23:00경에 퇴근하는 등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교사임.

#### 1) 두발규제

-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는 미준수 학생에게 선도규정에 의거 수차례 지도하였지만 전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아 3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사전 안내 및 강제 이발을 방송과 등교시 정문에서 해당학생들에게 직접 고지를 하였음.
- 본인도 강제이발이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지하였기에 교사로서의 언행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짧은 생각에서 해당 학생들을 학생부로 불러 두발단속에 대한 취지와 과정을 이해시켰고, 학부모에게도 전화로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한 후 강제이발을 시행하였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을 몰랐음.
- 현재 본인은 어더한 이유에서든지 학생들에게 강제이발을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정식으로 표명하겠다고 함.

#### 2) 체벌

- 본인이 성격이 급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제시된 체벌 기준에 의거 체벌을 안 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와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 시켰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변화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의 훈육으로 매를 가한 적이 있음. 특히 2007년도에는 매를 때린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4월 11일 현재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대리는 것, 발길질과 같은 체벌을 자행하지 않았음.

- 인터넷에 올린 학생에 대한 체벌과 2006년 복학생에게 행한 심한 테벌에 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복학생 권○○군은 복학 후 수차례에 걸쳐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행사 다른 아이들을 부하뇌동시켜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동료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품 갈취, 작은 무단외출과 가출, 두발불량, 동료학생에 대한 교내 흡연 권유 및 압력, 편모슬하의 권○○군 어머니의 자녀교육 기피, 담당교사의 지도 불응과 여교사에 대한 욕설과 위협 등 학생으로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반복하였고, 본인에게도 물리적인 대항으로 정당방위 차원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체벌로 비쳐져서 당혹스럽다고 함.

### 3) 모욕적 행위 및 성폭력적 언사

- 과학교사인 본인이 수업중 성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양성평등의식 형성과 인성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함.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질은 성농담이 아닌 수업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지구책으로의 농담이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불신과 여성비하적인 광의의 성폭력으로 인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4) 강제적 자율학습

- 시험기간 중 담임반 학생에 대한 성적향상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효과를 기대하며 학생들 가정에 일이 전화로 학부모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시행한 담임교사주도의 자율학습이었음
- 담임교사의 의욕이 지나쳐서 학생들에게 휴식권이나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로 인지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의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지도방법이었지 다른 목적이나 동기는 없었다고 함.
- 향후에는 학생들의 자율권이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함.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맡아 책임감과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인해 산곡중학교 학생-교사-학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일이라도 자신이 강제이발을 시행한 학생들을 불러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초래하게되어 미안하게 되었다고 공개 사과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구책을 강구하며 교사 본인은 물론 산곡중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로 발돋움 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기로 하였음

### [최민규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

포탈사이트인 [naver 지식 in]에 장문의 글을 기고한 최민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부모님들의 심경을 청취.

- 최민규 학생은 작년 박용주 선생님 반의 학생으로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도 전혀없이 그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인터넷에 글을 써 보았는데 이렇게 확대 · 과장 · 왜곡 전파될

줄을 몰랐다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수십년간 교단에서 열과 성을 다한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켜 드려 너무도 죄송하고, 별 생각없이 쓴 글이 산곡중학교와 박용주 선생님을 인터넷을 통해 매장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함.

· 또한 아들이 쓴 글을 사실 확인도 안하고 ‘산곡중일원’이라는 아이디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댓글까지 붙여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확대 되어 가족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토로함.

· 또한 부모로서 아들이 쓴 글을 글쓴이의 허락이나 사전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명과 협조를 구하려고 여러번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연락도 없었고,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너무도 한쪽의 의견만 수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함.

#### [강인구, 이주영 학생과 면담]

산곡중학교 3학년 강인구, 이주영 학생은 ‘교육청 민원 Q&A와 클린신고’에 글을 올린 학생으로 솔직한 심경과 답변을 들어보려고 입석 교사 없이 면담을 실시하였음.

· 작년에도 학년 초 두발지도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여러 번 있었으나 실제로 가위를 이용한 강제이발은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경고성으로 지도를 하셨는데 금년과 같은 강제이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함.

· 학생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것은 좋지만 무단외출, 교내흡연 학생들에 대하여 다른 선생님들도 보다 무척 엄하게 다스리셔서 선생님이 무섭다고 함.

· 과학수업 중에 성교육과 관련된 단원 지도시 농담으로 가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음.

·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셔서 가슴이 후련하지는 않았지만 성의있는 표현과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토로함.

#### 4. 2차 현장 방문(1차 조치결과 확인) 조사 실시

- 2차 현장방문 조사기간 : 2007.4.13(금) 15:00~17:00
- 현장방문 조사장소 : 산곡중학교 교장실
- 전화번호 : 032-523-7322
- 현장방문 조사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참석자 : 최춘섭(산곡중학교 교장), 구건서(교감), 박용주(학생부장)

#### [산곡중학교 내에서의 조치 결과]

##### 1) 학생들에 대한 공개 사과 실시

· 박용주 학생부장은 1차 현장 방문조사 후 12일(목), 13일(금) 쉬는 시간마다 강제 이발을 실시한 학생들을 불러 자신의 강제이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자신이 다른 뜻이 있어서 행한 행동이 아니라 의욕과 열의가 지나쳐서 일어난 일이니 만큼 서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심심한 사과를 한다며 비운 후 땅이 더욱더 굳어지듯이 본인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매사에 모범을 보이며,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사랑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아버지처럼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며 산곡중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하였다.”고 함.

· 그러자 학생들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겠다며 너무도 좋은 분위기에서 사제시간에 정이 오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일로 인해 자신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매사에 근신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염려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교사로 서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 2)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가정통신문 발송

· 최춘섭 학교장은 4월 13일(금) 전교생에게 학생의 인권과 자율 · 책임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창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흡연예방, 안전교육 철저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발송하여 학부모-학생-학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음.

## 3) 교내 학생생활규정 정비 및 부장교사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한 학교교육력 신장을 위한 1박2일 부장교사 워크숍 실시

· 최춘섭 학교장은 4월 13일(금)~14일(토) 1박 2일 동안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이용하여 부장교사 워크숍 실시를 했음.

· 당일 워크숍에는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부장교사 11명이 참석하는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산곡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규정과 학생지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를 표명함.

· 또한 부장교사 자신들의 업무를 자신만이 알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부장교사 및 전체 교직원에게 잘 홍보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학교교육력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되자며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 4) 각종 연수를 통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

· 산곡중학교에서는 향후 학교의 각종 행사나 학생-학부모-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계획 · 추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교육청에서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 1) 산곡중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조치 강구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산곡중학교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시 유의사항을 비롯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시 유의사항을 비롯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대책 강구 및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사과 실시 여부 확인 및 유감 표명 실시

### 2) 관내 중학교 학생부장 연수 및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학교 지원 사업 실시

· 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근간이 「학생의 인권 · 자율 · 책임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부장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지도 정보공유 및 연수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구하겠습니다.

· 오는 4월 26일(목) 진산중학교에서 관내 20개 중학교 학생부장 전원에 대한 학생부장 전원에 대한 학생생활지도시 유의점과 학생의 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제2회 학생생활지도 효율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에 상주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순회상담하고 있는 2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와 동암중학교와 진산중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계신 2명의 상담교사로 하여금 인근학교와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활동 및 교사-학부모-학생에 대한 연수를 계획 · 실시하고 있음.

## 5. 기타 외부 학부모 단체 회장과의 전화 통화 실시

- 1차 전화통화 실시 : 2007.4.10(화) 11:00경
- 2차 전화통화 실시 : 2007.4.13(금) 17:00경
- 전화통화자 : 노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
- 전화번호 : 032-438-3970, 011-338-9303
- 전화송화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지난 3월 하순에 산곡중학교에서 빚어진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진정서에 기록된 것처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대책 강구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여 달라는 요청으로 통화 실시

· 4월 10일(화) 오전 현재 진정서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학교에 담당 장학사를 파견하여 진상조사와 더불어 향후 지도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4월 13일(금) 오후에 담당장학사의 1차, 2차 현장방문 조사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해당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교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들을 위의 기록을 토대로 장시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노현경 회장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번 사안이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감사하다며 통화를 종료하였음.

장호영 기자, 「"머리 길다고 허벅지 맞아 피멍 들었어요" - 부평 入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재논란... 교육청·해당학교 "사실 아니다"」, 부평신문, 2008. 04. 02.

## "머리 길다고 허벅지 맞아 피멍 들었어요"

### 부평 入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재논란... 교육청·해당학교 "사실 아니다"

지난해 강제이발과 체벌 등으로 침해 논란이 일어났던 인천 부평에서 최근 다시 학생인권침해 논란 있다.

지난해 入중학교의 학생인권침해에 진정했던 인권단체에 새 학년 다시 두발규제와 체벌에 대한 학생가 계속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학교와 조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역 入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인터넷 교사가 강제 이발, 두발 단속, 체벌, 농담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받고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

이에 인천북부교육청은 入중학교 지도감사를 진행했으며, A교사는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 측은 이어 교사연수를 통해 학생생 칩을 보완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천북부교육청은 주의성 공문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학생인권 入중학교 이 일고 해를 시교 기 들어 들의 제보 대해 해당 실이 아니



난해 4월 을 통해 'A 성폭력적 는 제보를 로 조사를 출했다.

▲ 인천 부평 入중학교 학생들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휴대폰으로 제보한 사진. 위 2장은 지난해 12월에 체벌장면이라면서 보내온 시 말서를 것이고, 아래 1장은 올 3월 체벌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허벅지 사진이다. 학교 고 보내온 것이다. © 제보사진

교에 대한 시 말서를 출지도 수 생하지 않



그러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단속이나 체벌을 경험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여전히 이어졌다고 전했다. 때문에 지난해 8월 하곳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 진행했다는 것. 이 과정은 공중과 방송으로도 보도됐다.

그후 상황이 좀 완화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12월 한 학생이 A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장면이라며 이를 핸드폰으로 찍어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또한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제보 문자도 인권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다시 사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학생들은 "A교사와 B교사가 교문 앞에서 등갓길에 두발단속을 하고, 걸린 학생들을 모아서 복도에서 체벌을 가했다, 올해는 강제로 직접 머리를 자르지는 않지만 B교사가 학생들을 강제로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자르게 한다"고 증언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인 박조은씨는 "올해 3월 들어서만 15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학생은 두발규제 때문에 허벅지를 맞아 피멍이 들었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리로 1년이 넘도록 학생들이 계속 고통 받고 있기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학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발 단속에 적발되어 머리를 잘랐으나 제대로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 측이나 조사를 진행한 해당 지역교육청은 강제 두발규제나 체벌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중학교 교감은 "두발단속으로 인한 체벌은 전혀 없으며,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멍이 든 사진은 우리학교가 아니"라며 "다만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천 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제보를 듣고 교장, 교감, 해당 교사와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한 결과 체벌이나 강제 두발규제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교육위원의 문제제기로 사중학교 강제두발 단속과 체벌에 대한 교육청의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 신정중학교/옥동중학교]**

「울산 신정중학교, 옥동중학교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압수중단 등 학생인권 보장 학내시위 보도자료」,  
2007. 05. 10.

**<보도자료>**

**울산 신정중학교, 옥동중학교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압수중단 등  
학생인권 보장 학내시위  
보도자료**

□ 일시 : 2007년 5월 10일 (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 《시위 전 학생인권 상황》

### ◎ 신정중학교

- 체벌은 주로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짐.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이 매우 일상적임. 교문에서 두발이나 복장 등을 이유로 걸리거나 하면 학생들을 오리걸음을 운동장 10바퀴씩 시키고 기합을 줌.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단체 기합을 줌.



(신정중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기합을 받고 있음)

- 남학생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눈썹을 넘지 말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말아야 하고, 구렛나루는 컷볼을 넘어선 안 되며, 뒷머리는 카라에 닿으면 안 됨. 여학생 두발규정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두발단속에 걸리면 가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보냄. 두발단속에 걸린 것을 이유로 체벌을 받는 일도 많음.

4/3

#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개나리의 노란 꽃망울에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학기의 서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차분한 학습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으며 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도에 반영하려 합니다.

최근 교사들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휴대폰 단속입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희 학교도 휴대폰을 소지하는 학생이 한 반에 거의 1/3이나 1/2이 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자습시간 및 수업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작년 까지 아침에 휴대폰을 거두어 보관했다가 종례때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지도(단속)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간혹 보관중인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기도 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작용도 심각하여 올해도 어떤 방식의 지도든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두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이 많은 쪽으로 지도의 방향을 정할까 합니다. 찬성하시는 쪽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중학교장



----- 절 취 선 -----

학년 반 번 학생:

보호자: (인)

1안	2안
종전대로 아침에 선생님이 거두었다가 종례때 돌려줌. 휴대폰을 내지 않는 학생은 일정기간 교사가 보관했다가 돌려줌	학교에서 적절한 장소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음. 가져와서 적발되면 한달 이상 담임이 보관함.

→ “조기등교” 라고 해서 1교시 시작이 9시 15분임에도 등교를 8시 15분까지 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종종 압수하거나 혼냈음.

올해 4월달에 휴대폰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5월 1일부터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면 무조건 뺏음.

(신정중 휴대폰 관련 4월에 나온 가정통신문)

## ◎ 옥동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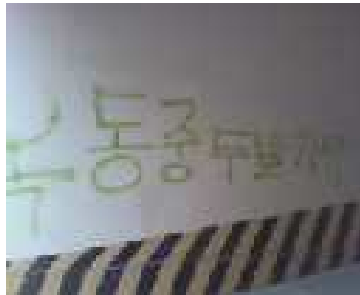
→ 체벌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발로 때리거나 하는 사례도 있으나 특히 체육교사들이 심함.

한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학생 얼굴을 밟기도 하며 심하게 체벌. 한 번 학생이 인사를 했는데 뺨을 때렸음. 맞은 학생은 아직도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름.

다른 체육교사는 남학생 성기를 잡고 비트는 체벌을 하기도 함.

→ 남학생 두발규정은 ‘상고머리’ 라고 하여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고 뒷머리 옆머리는 짧게 올려친 머리. 여학생 두발규정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두발단속에 걸려 머리를 안 자르면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의 체벌을 가함.



(옥동중에서 2006년 1학기에 있던 두발자유 락카시위)

→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혼내는 일 등은 종종 있었는데, 올해부터 휴대폰을 전면 금지·걸릴 시 압수한다고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음.

## 《학내시위》

### ◎ 신정중학교

5월 10일 점심시간에 학생들 100여 명이 운동장에 나와서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운동장을 돌며 시위를 함.

운동장에 있던 교사가 “야 뭐하는 짓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며 다가왔으나 학생들이 계속 운동장을 다녔음. 시위 10여 분만에 교사들에 의해서 해산됨.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의 머리를 때리기도 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한 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교사들이 교문 밖으로 쫓아냄.

학생들의 요구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휴대폰압수 폐지, 아침조기등교 폐지” 였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 교무실 창문 등에 학내시위하기 직전에 종지로 붙임.



### ◎ 옥동중학교

5월 10일 오후 3시 40분 경 하교시간대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시위를 시

작함. 교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학생들이 불어나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두발자유 / 청소년인권” 이 써있는 종이를 들고 운동장을 돌면서 “두발자유, 체벌금지” 를 외침.

옥동중에서는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을 학생부장 교사가 동영상을 찍음.(채증) 5분, 10분 후에 체육교사와 학생부장이 나와서 강압적으로 해산시킴.(학생들은 마침 심한 체벌을 상습적으로 하는 체육교사가 출장을 간 상황이라 다행이었다고 함.)



## 《학내시위 이후 현재 상황》

### ◎ 신정중학교

학교 측에서 시위 참여자들 중 주도했다고 생각되는 20여 명을 불러서 오후 수업시간 동안 꿇어 앉혀두었고, 생활지도부장 김명팔 교사 등이 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 학생들의 발바닥을 10여 대씩 체벌.

생활지도부장 교사고 교장이 그 과정에서 많은 폭언을 했음. “미친 놈들” “간이 배 밖으



로 나온 놈들” “쓸개 없는 놈들” “미꾸라지 같은 놈들” “시위하면 조폭, 양아치” “머리 기르고 싶으면 자퇴를 해라” “아가리 닥쳐라” “그렇게 미친개처럼 학교를 돌아다닌다고 두발자유가 될 거 같냐?”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정당하다.” “앞으로 건의를 하고 싶거든 1:1로 오라.” 등의 말.

20여 명 학생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강당으로 다시 오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함. 징계를 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면서(교내봉사), 하루에 10대씩 체벌을 당하는 식으로 함.

### ◎ 옥동중학교

옥동중학교는 하교시간에 시위를 하여 징계 문제나 체벌 문제 등이 아직까진 불거지지 않았음. 시위를 보는 과정에서 한 사회교사가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을 가리켜 “저 새끼 잘라버려야 한다.” 라고 하였고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시위에 참석하거나 시위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부당한 징계를 주거나 체벌을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고 사과를 받아낼 것이며,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의 학생 인권 상황이 신장되도록 청소년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김석한, 「[투고] 2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외치며 학내시위 - 신정중에서는 시위 주도 혐의로 학생 20여명 징계 추진 논란」, 울산노동뉴스, 2007. 05. 14.

## [투고] 2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외치며 학내시위

### 신정중에서는 시위 주도 혐의로 학생 20여명 징계 추진 논란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조기등교 폐지 등을 외치며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학생인권보장하라"

지난 10일 신정중학교 학생 15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운동장에서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아침 조기등교 폐지를 외쳤다. 학생들은 학내시위하기 직전 교무실 창문에 종이에 요구사항을 적어 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옥동중학교 학생 100여명은 하교시간에 교문 밖에서 시위를 시작해 학내로 들어와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학생인권 보장 등을 외치며 운동장을 돌았다.

두 학교 학생들의 학내 시위는 모두 교사들의 제지로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그런데 신정중학교 교사들은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며 학생 20여명을 오후 수업시간 동안 끌어 앉혀두었고, 생활지도부장 김모 교사 등이 학생들을 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학생들의 발바닥을 10여 대씩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사들은 체벌 과정에서 많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친 놈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 “쓸개 없는 놈들” “미꾸라지 같은 놈들” “시위하는 조폭” “머리 기르고 싶으면 자퇴를 해라” “아가리 닥쳐라” “그렇게 미친 개처럼 학교를 돌아다닌다고 두발자유가 될 거 같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등.

신정중학교 교장은 또한 “내가 직접 머리를 잘라줄 수도 있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정당하다” “앞으로 건의를 하고 싶거든 1대 1로 오라”는 등의 인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교사들은 20여명의 신정중학교 학생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강당으로 다시 오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징계를 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면서(교내봉사), 하루에 10대씩 체벌을 가하는 식이라고 해 학생들의 교내시위 이후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정중학교에서는 1교시 시작 1시간 전까지 등교를 강요했고, 5월 1일부터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휴대폰 소지가 적발될 때에는 휴대폰을 압수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옥동중학교에서는 또한 한 체육교사가 뺨을 때리고 성기를 비트는 등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종종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은 신정중학교 측에 의견서를 보내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 “평화적 집회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표현의 한 형식이며, 그러하기에 국제인권조약들과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협



▲ "두발자유! 체벌금지!"

소한 의미의 ‘정해진 절차’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표현의 형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학교 측의 징계 추진을 비난했다.

한편 학내시위 하루 후인 11일까지 아직 학교측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견서>

수 신 : 신정중학교 교장

발 신 : 울산지역 인권, 교육단체들 (담당자 : 김석한 242-1119)

발신일 : 2007. 5. 11

제 목 : 학생인권보장 학내집회 관련 징계시도에 대한 의견서

신정중학교에 드리는 울산지역 인권, 교육단체들 의견서

신정중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울산지역 인권, 교육단체들은 학교 인권문화 조성 과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0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와 차별금지, 조기등교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진행된 학내 집회와 관련하여 관련 학생에 대해 차별을 가하고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이번 학내 집회가 주로 귀교의 두발규제와 핸드폰 압수, 조기 등교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특히 일상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도 차별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 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이미 만들어진 규정의 정당성만을 되뇌며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귀교는 이번 학내 집회와 관련해서 20여명의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강당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 체벌을 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교는 집회와 같은 학생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학교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규정 개정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그러하기에 국제인권조약들과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협소한 의미의 ‘정해진 절차’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표현의 형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10일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6.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 등 인권침해

를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5월 11일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울산 흥사단,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조은미,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레프트 21, 〈맞붙〉 45호, 2007. 05. 26.

##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박조은미 (청소년운동 활동가)

5월 10일 울산에서는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벌어졌다. 두 학교 모두 두발 규제가 극심했고 체벌과 기합도 일상적이었다. 신정중 학생들은 두발·용의복장 검사에 걸리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 했고, 뺨을 맞는 등의 체벌도 종종 당했다. 옥동중에서는 학생을 신발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얼굴을 밟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한 체육교사가 학생의 성기를 비트는 일까지 있었다.

결국 학생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 두 학교에서는 각각 1백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두발자유’, ‘청소년 인권’이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신정중 학생들은 “두발자유·체벌금지, 휴대폰 압수 폐지, 아침 조가등교 폐지”라는 요구 사항을 교무실 유리창에 써붙이기도 했다.

### “미친놈들”

이러한 시위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민주적 방법이다. 그러나 옥동중은 학생 주입이 동영상 채증을 하고, 신정중은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두르며 10여 분 만에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심지어 신정중은 시위 주도 학생 20여 명을 때리며 “미친놈들”이라는 폭언을 퍼붓고 징계 위협까지 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이수나로’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문화교육공동체 ‘함께’ 등 울산의 청소년·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신정중에 보내, 학생들을 징계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신정중 교장을 면담해 징계는 없어야 하고 학생들의 두발자유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자 결국 신정중은 징계 계획을 철회했다. 또 학생들의 요구 사항도 “대화를 통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다.

신정중과 옥동중 시위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활력있는 행동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존재함을 보여 줬다. 또, 이 같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 교육단체들의 연대와 만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공현, 「울산 신정중/옥동중 상황정리」, 2007. 05.

## 울산 신정중/옥동중 상황정리

(이수나로 울산지부에서 예전부터 신정중, 옥동중의 두발단속이나 체벌 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학교 앞에서 선전전을 하는 등 학생들과 접촉하며 행동을 준비해왔음)

- 공현 정리

### 2007년 5월 10일

신정중-점심시간 옥동중-하교시간에 학생들 100~200여명이 두발자유, 체벌금지, 조기등교폐지, 휴대폰 압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운동장에서 시위를 함. "두발자유/청소년인권"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었고 요구사항과 스티커를 교무실에 써붙임.

신정중의 경우 시위 당일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협박을 가함.

옥동중은 하교시간에 하여 당일에는 별 일이 없었음.

### 2007년 5월 11일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울산지부, 울산 흥사단, 울산인권운동연대 단체들이 신정중학교의 체벌과 징계 협박 등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 중단을 요구함.

### 이후

#### 신정중

전교조 울산지부 등에서 신정중을 방문하였고 교장에게서 징계는 없다는 것과,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요

구사항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음.

신정중에서는 이수나로와 연결되어 있던 학생회장 등이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요구안을 담은 서명운동을 했으나,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학생부 교사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150여 명의 서명을 모았던 서명운동은 중지됨.

학생회에서는 두발규정 개정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교장 측에서 학생회장 외의 학생들의 참여를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무산됨.

9월에 신정중에서 다시 강제이발 등이 발생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이수나로 울산지부가 냈음.

옥동중은 잠잠한가 싶었는데,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압수해서 이수나로와의 연락을 끊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추측되는 실패 요인

1) 학교측의 탄압이 예상 외로 강했다. (특히 옥동중의 경우...) 학교 안에서 시위 등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탄압에도 버틸 만큼 끈기있고 강한 조직이 아직 아니었음.

2) 학생들에게 두발단속이나 체벌 등을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고 여러 준비 끝에 이루어진 반면, 사전에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전혀 공유나 공조가 되지 않았고, 의견서를 보낸 거 외에는 협력하여 학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음.

3) 학교 안의 전교조 분회가 상당히 소극적이었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 구제 제 1 위원회 결정」, 2008. 09. 25.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 사 건 07진인4150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구○○
- 피 해 자 1. 조○○  
2. 박○○  
3. ○○중학교 다수의 학생
- 피진정인 1. ○○중학교 교장  
2. 김○○  
3. 하○○

#### 주 문

1. 피진정인 1, 2, 3에게 진정요지 가항 중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학생에게 진술서를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진정요지 가항 중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조기 등교 강요 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진정요지 다항과 같은 체벌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항 1) 중 집회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그 외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1, 2 및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교장인 피진정인 1과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다.

#### 가. 피해자 1에 대한 인권침해

1) 2007. 5. 10. 피해자 1을 포함한 150여 명의 ○○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인권', '두발 자유'를 외치며 학내 집회를 하자 ○○중학교 교사들이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학내 집회 당일 5·6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집체 교육을 시켰다. 또한 교사들은 동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1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피해자 1이 가입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라 한다)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 1의 단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교내 휴대폰 소지와 관련한 설문조사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피해자 1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형식적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킴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중학교 전교생에게 오전 08:15까지 조기 등교토록 하여 자율학습을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2에 대한 인권침해

1) 2007. 5. 10. 학내 집회 이후 며칠 동안 진술서와 반성문을 쓰도록 하였고, 피해자 2의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하여 향후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2007. 6. 4. 피해자 2가 '두발자유, 체벌금지 및 청소년인권을 위한 서명지'를 만들어 학생회장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자 교사들이 서명 운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3) 교사들이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슬립은 신발이 실내화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슬립은 신발을 압수하였다.

다. 학생체벌 관련

학교 생활지도 부장인 피진정인 2는 2007. 5. 10. 학내 집회 이후 5교시에 학교 강당에서 3학년 전체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내 집회 주동자라고 지목된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체벌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중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요지

#### 1) 학내 집회를 강제해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의 선동에 의해 학생들이 두발 자유를 외치며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사전에 학교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이며,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 집회 해산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정당한 학교 측의 조치였다.

#### 2) 정규수업시간에 집체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 당일 5교시에 3학년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규 교육 시간을 변경하여 집체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는 기초질서, 인성, 예절 등에 관한 집체 교육을 조기에 실시한 것 뿐이다.

#### 3) 학내 집회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를 주동한 학생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으나, 이는 학생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요구 사항 등이 있을 시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받은 경위서는 그 내용이 경미하여 폐기하였으며, 학생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학교로 오라고 했다는 주장 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학교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

5)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1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6)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2007. 4. 초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에 결정한 것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 여부에 대하여 동 가정통  
신문 상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잘 의논하여 결정해 달라고 문구를 명시하였  
고, 그 설문 결과에 따라 조치된 정책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따  
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콜렉트 콜 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고, 때로는 교무실 전화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의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정책이며,  
아울러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7) 조기등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일 08:15까지 조기 등교토록 한 것은 EBS 방송 시청 등 학생의 학  
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통상 등교시간보다 약 15분  
일찍 등교하게 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며,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 범위 내의 정책이라고 본

다.

8) 서명운동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명운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서명운동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명운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9) 슬립은 신발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슬립은 신발은 실내화와 비슷해서 학생들이 실내·외를 마음대로 신고 다닐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립은을 회수한 것이며, 회수한 5~6켤레의 슬립은 신발은 학생 지도 후에 돌려주었다.

10)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학교 교칙에 학생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체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교생 1,300여명의 학생을 바르게 교육시키려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07. 5. 10. 있었던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게 된 것도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집회 주도 학생(20명 정도)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하게 된 것이다. 당일 행한 체벌의 정도가 '○○중학교 학생체벌규정'을 다소 어긴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학교 내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고, 향후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체벌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체벌이 과했던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학교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무회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당부하겠다.



###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13조 제1항(아동의 표현의 자유), 제13조 제2항(아동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제15조 제1항(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15조 제2항(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제한) 제16조 제1항(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마. ○○중학교 학생체벌규정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진술(2008. 1. 14., 2008. 3. 5.)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내 집회 강제해산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의 집회는 2007. 5. 10. 13:00경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20분 간 지속되었다. 동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의해서 개최되었으며, 집회에 참석한 학생은 약 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동 집회는 사전에 학교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며, 학교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인 피진정인 2 및 3에 의해 해산되었다.

나.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본 집체 교육은 3학년 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5교시에만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당일 있었던 집회에 관한 정신 교육이었고 학교장 훈시, 생활지도부장 훈시, 체벌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1은 학교 측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집회 주동 학생들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1 및 2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집회 주동 학생들로부터 받은 경위서 내용이 경미하여 폐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위서 내용 및 경위서 작성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각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 및 피해자 담임 교사 등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이 학내 집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마.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가 피해자 1의 친구를 시켜 「아수나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동 단체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2007. 4. 초에 학생들의 가정별로 휴대폰 소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중전화기를 학교 내에 설치하고 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킨 후 학교 내에는 콜렉트 콜

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조기 등교를 강요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조기 등교시간은 08:15이고 정규수업 시작 시간은 09:15이다. 조기 등교 후에는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 서명운동을 금지시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2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2는 2007. 6. 4. 학생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전교 부회장의 동의를 받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2와 학생회장에게 서명운동을 하였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 2가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명 운동 자체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슬립온 신발을 압수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슬립온 신발을 실내화로 활용하였던 학생들의 슬립온 신발을 5 ~ 6켤레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학생들을 지도한 후에 신발을 돌려주었다.

차. 학생 체벌 부분에 대하여

2007. 5. 10. 학생 집회와 관련하여 5교시 집체 교육 시 학교 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2가 집회를 주동한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각 10대씩 체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1 및 2에 대한 체벌은 없었다. 동 체벌은 ‘○○중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 측에서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5. 판 단

가. 학내 집회 강제해산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는 2007. 5. 10.에 있었던 학내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하여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르면 학생의 집회에 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의 열거된 사유 외에는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인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표현 및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집회 시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동 집회가 제3자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학생 신분으로서 집단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한 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5. 10. 5교시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당일 발생한 학내 집회에 대한 교장, 생활지도부장 등의 훈계시간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 훈계시간은 매월 있는 기초질서, 예절 등에 관한 집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지 정규수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집체 교육시간에 피진정인 1 및 2의 훈시와 더불어 체벌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통상 있었던 집체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훈계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학생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통상의 수업시간을 학교의 편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나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학습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규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의사결정권 및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회에 참여한 일부 학생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위서 내용은 학교 측에서 경위서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집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의 경위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학생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가 사실 파악을 위하여 경위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교육적 측

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경위서는 단순 사실을 기술하기 보다는 작성자의 행위에 대한 반성 등을 포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미한 경위서 작성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권위 등에 의해 학생은 일정한 행동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각서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학교 집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 학부모들에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행동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 지도 목적 차원에서 전화를 한 행동이 학생의 행동을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부모에게 집회와 관련하여 각서 작성 강요나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가 피해자 1의 사회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1의 친구에게 피해자 1이 가입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1에게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강요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은 학교 내에 휴대폰 소지 금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실상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며,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설문조사 시 설문지에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하여 찬성하시는 쪽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문구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휴대폰 학내 소지 금지 여부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대등한 입장에서 잘 논의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 측의 위와 같은 설문조사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기 보다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휴대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조기 등교를 강요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의 수업시작 시간이 09:15인데 학생들을 1시간 일찍 등교하도록 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사실이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모범적 학습 태도를

고양하기 위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에게 참여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학생 간의 경쟁을 우려하여 경쟁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조기 등교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등교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서명운동을 금지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6. 4. 피해자 2가 서명운동을 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에게 서명운동을 했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 2가 서명 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서명운동을 제지하였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2에게 서명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슬립온 신발을 압수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은 슬립온 신발을 실내화 및 실외화



겸용으로 신고 다니고, 학교 건물을 더럽혀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슬립은 신발을 압수하였으나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사 또는 학교 측에서 학생 지도 목적상 범위 내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있거나 학생들이 소지한 물건을 임의로 압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진정의 경우는 학생들의 방만한 행동을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이며, 그 사안이 경미한 사항이고, 더욱이 압류한 신발을 이미 원래 소유자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진정 내용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차. 학생 체벌 부분에 대하여

2007. 5. 10. 학생 집회와 관련한 사후 조치로 피진정인 2가 학교 강당에서 집체 교육 시 집회 주동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각 10대씩 체벌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전교생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체벌도 불가피하며, 동 건의 경우도 학생들이 학내 질서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체벌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체벌 양태가 학교 측에서 마련하고 있던 ‘학생체벌 규정(현재 폐지되었음)’의 제반 규정, 즉 체벌 원칙, 절차, 단계 등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목적 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동 체벌을 직접 행한 피진정인 2뿐만 아니라 동 체벌을 방조한 피진정인 1 및 3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권오성 기자, 「인권위 “중학생 교내 집회, 강제해산은 부당”」, 한겨레, 2008. 10. 21.

## 인권위 “중학생 교내 집회, 강제해산은 부당”

### 학교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0교시도 인권침해 소지

중학생들의 평화적인 교내 집회를 학교 쪽이 강제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울산의 S중학교 학생 150여명이 지난해 5월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며 교내 집회를 열자 학교 쪽이 교사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해산한 것에 대해 “학교 쪽의 과잉대응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20여분 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했으며 △학교 쪽이 점심시간 이후 수업을 집체교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회 참가 학생 20여명을 과도하게 체벌한 사실 등을 확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당시 외부 활동가인 구덕기(20)씨가 학교에 신고도 없이 학생들을 선동해 연 불법 집회여서 해산을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구씨는 “학생들도 스스로 집회 참여를 결정한 것이며, 집회 선동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조기 등교를 강요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자기 의사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0교시 문제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울산 효정고등학교]

마영선 기자, 「〈속보〉'효정고 교사 폭력사태' 일파만파 - '아수나로' 가해교사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대책마련 촉구」, 울산포커스, 2007. 12. 07.

# 〈속보〉'효정고 교사 폭력사태' 일파만파

## '아수나로' 가해교사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대책마련 촉구

효정고 교사 폭력사건과 관련, 가해 교사를 상대로 한 고발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는 지난달 26일 S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효정고 교사 2명에 대해 6일 오후 울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수나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 등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검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교사들의 폭력은 효정고 체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체벌이라기보다는 한 학생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미수 행위”라며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6일과 7일 효정고 정문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사진> 현재 학교 운영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효정고 교사 2명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4일 대책위를 구성해 학교측과 교육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울산공공기관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7개 단체는 지난 4일 '효정고 교사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학생면담,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피증을 보이고 있어 학교측과 교육청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교육청이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혀 우리 역시 18일, 19일 예정된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계에서 효정고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됐던 결과 발표가 18,

19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학교쪽이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는 현재 다 끝난 상태로 다음주 초 학운위에 본회의를 열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 하지는 이야기를 했으나 학교가 시험기간이므로 18, 19 일께 본회의를 열자고 결정했다”며 “사건 발생 후 너무 늦게 결과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측 입장을 듣기 위해 7일 전화통화를 했으나 학교관계자는 “이번 문제로 학교역시 정신이 없다”며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만 답변, 즉답을 회피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황철권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옥동 중학교와 신정중학교 등 두발규제 등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학생들의 시위가 있는 등 더 이상 학생들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려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월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두발과 체벌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이달에도 이와 관련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교규정은 학교장의 권한 문제로 교육청이 이와 관련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답변했다.

지난달 26일 두발불량을 이유로 효정고 교사 2명에게 체벌을 받은 S군 모습. 사진은 사건 발생이 하루 지난 27일 병실에서 찍었다.<효정고 홈페이지 참조>

한편 효정고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수십건의 글을 게재 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분을 표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교사 2명이 평상시에도 비밀비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효정고 학운위 ‘서정운 학생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2007. 12. 10.

## 효정고 학운위 ‘서정운 학생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 I. 소위원회 구성

신진환(위원장), 정미라(간사), 김수진, 한혜란, 최선미 위원

### II. 소위원회 활동 : 2007. 11. 30 ~ 12. 10.

### III. 소위원회 조사 내용

#### 1. 피해 학생(서정운)이 쓴 경위서(원본대로 옮김)

생략

#### 2. 가해 선생님이 쓴 진술서(원본대로 옮김)

##### 1) 송00 선생님 진술서

생략

##### 2) 이00 선생님 진술서

생략

#### 3. 길메리 병원 담당의사와 면담 결과(김수진, 신진환, 한혜란, 정미라)

생략

### IV.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학운위 종합 의견

## ▶ 피해 학생과 가해 교사로부터 들은 사건 경위

서정운 학생 방문(12월3일)하여 면담(김수진, 신진환)

월요일(11.26) 등교시 지각해서(8시 30분경) 김00 선생님에게 지도받고 회초리로 종아리 4~5대 맞고 들어가던 중 그 옆에 서있던 송00 선생님에게 다시 지도받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혀 오른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4~5차례 정도 맞았다고 함. (해당교사는 꿀밤 주듯이 3~4대 정도 때렸다 함) 그러다 다시 옆에 있던 이00 선생님의 제지를 받고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에 가서 꿰어앉으라는 지시에 그렇게 함. 잠시 뒤 이00선생님이 와서 욕설과 함께 두발에 대해 지적한 후, 들고 있는 때로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맞았음. 너무 많이 맞고 아파서 손으로 막다가 손에도 상처 있음. 온몸을 맞았고, 발로 뒤통수와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차례 이상 차이고 밟혔음. 그리고 1학년실 옆 복도에 꿰어 앉아 있으라고 말했음.

1학년실 복도에 꿰어 앉아 있을 때, 송00 선생님이 와서 욕을 하면서 출석부(가해교사는 교무수첩으로 이야기함)로 뺨과 머리를 때리다가 '고개를 들라'라고 한 뒤 뺨을 양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머리와 몸을 발로 찼음.

그 후 계속 복도에 꿰어 앉아 있는 중(이 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음) 2교시 때 송00 선생님이 돈 1만원을 빌려 줄테니 지금 머리를 짧게 잘라오라고 해서 나가서 머리 자르고 왔음.

점심시간에 머리 자른 것을 확인 받고, 담임선생님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음. 병원(박정형외과)에 가서 X-ray 촬영후 후두골 골절이라 말하며 길메리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고 길메리병원으로 옮겨 MRI촬영을 했으나 결과는 이상 없었음. 치료받던 중 목디스크도 의심되어 MRI촬영을 했으나 결과는 이상 없었음. 현재 허리부분 물리 치료 중에 있고 정신적인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으로 인한 간수치가 높아지는 등이 큰 상태임.

학생은 교감선생님과 두 선생님이 병원에 오는 것이 싫다고 말함. 두 선생님이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

\* 담임선생님 의견 : 학생이 말할 때 불안해보여 물으니, 두 선생님들과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말도 잘 못하겠다고 함.(11.28)

## ▶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두발 규정의 문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두발 규정을 우선 문제로 봄. 학기 초 규정 개정 과정에서 설문조사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약속했던 토론회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재의 규정에 관해 불만이 많은 상태로 규정은 출발하였음. 대신, 학교장은 두발길이와 관련하여선 체벌이나 과도한 단속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그렇지만 교사들 또한 학생부 몇 명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현실성 없는 규정인지라 거의 두발에 대해선 지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지도 담당교사들만으로 지도되었고 결국 적은 인원으로 무리를 하며 점점 과잉 단속으로 진행되었음.

1학기 유월 중순경에 이러한 심한 체벌이 빈번하다는 얘기를 학교장에게 전달(신진환, 황지영, 정미라)하고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생부장을 통해 확인(학교장, 교감, 학생부장 배석)함. 하지만 그 후로도 두발 길이와 관련된 체벌과 지나친 체벌이 계속되었음.

두발 지도에 있어 어떠한 체벌도 없게 하겠다는 학년 초 학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음(단 한 차례도 두발길이와 관련하여 체벌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학생부장을 통해 확인) 이에 관련한 지도 감독의 문제점 발견.

### ▶ 반복적인 지나친 체벌

두 선생님의 지나친 체벌과 언어폭력은 평소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효정고 학생에게 모니터한 결과. 학생들이 제출한 투서 및 체벌 사진 등)

### ▶ 전체 교직원들의 학생인권 인식 부재

교내에서 체벌을 넘어서는 과도한 학생 지도가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교사들이 목격도 하였으나 문제 인식을 하지 않았거나 외면이나 익숙함으로까지 되어 온 총체적인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망됨.

### ▶ 교육부나 교육청의 애매한 태도

학생 두발과 관련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항상 애매한 공문과 사고 발생 후의 처리가 형식적이고 수습에만 급급함.

## V. 대책마련을 위한 학운위 논의 결과

1. 학생인권 교육 및 연수: 전체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희망학부모, 전체 학생 대상.
2. 학교 학생 생활 규정개정

현재의 두발 및 체벌 규정은 생활지도부의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정함. 체벌 규정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직접적인 체벌은 즉, 때리는 모든 행위는 금지할 것을 명시함.(직접적인 체벌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

3. 효정고 학교생활 위원회 구성

- 1) 구성 : 학생 3명 + 교사 3명(교원위원2+교사1) + 학부모 3명 + 관리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2) 활동 :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한(직접적인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학생 생활 규정 위반 및 교사의 지도에 계속적으로 불응한 학생에 대한 간접적인 체벌에 대



한 규정 마련 및 심의

3) 일정 : 다음 학운위 회의에서 학교생활 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학운위에서 심의한 후 공고

## VI. 맺는 말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규칙은 이를 지켜야 될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담아내어 정책을 입안하고 규정과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의견 나눔이나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여지도 없이 비합리적이거나 일방적일 때 결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경쟁으로 치닫고 대화와 소통의 여지를 없게 한 지금의 교육정책이나 제도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이해와 신뢰는 요원한 것이기에, 이 사건을 논의하는 학운위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이 해결되어서 효정고가 보다 더 나은 학교로 거듭나길 바란다.

구덕기, 「[기고] 효정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 - "불온, 저항, 불복종은 학생의 행복 위한 권리와 의무"」, 울산 노동뉴스, 2007. 12. 12.

## [기고] 효정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

### "불온, 저항, 불복종은 학생의 행복 위한 권리와 의무"

구덕기(이수나로 회원)

교감선생님께.

교감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덕기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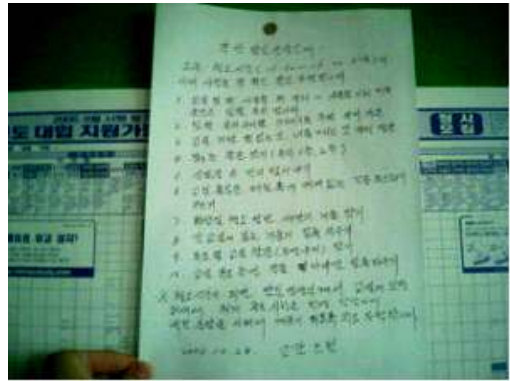
얼마 전에도 효정고 대책위 일로 뵈었으니 절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근데 졸업 후 첫 만남이었지만 씩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청소년인권단체 차원에서 검찰에 첫 고발한 교사가 모교교사라는 점과 교감/교장선생님은 그것을 묵인,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학창시절 때 교사들에게 착하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3분 지각해 운동장을 수십 바퀴 돌라면 돌았고, 그 후 주말에 ‘블랙리스트’들을 체육관에 소집해 오리걸음을 시키고 매타작하는 대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듯하게 머리 자르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벨트를 매지 않아서 친구의 벨트를 빌려 착하게 재검사까지 맡았던 기억은 압권입니다.

그러면서 효정고를 다니던 고3인 작년 여름, 이수나로-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자체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첫 활동으로 8월 20일에 울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했고, 동료들과 성남동에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학생이라 돈이 없어 달랑 3천원을 주머니에 넣고 교육청으로 향했다. 사실 교육청이 그렇게 외진 데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무작정 혹은 대충 갈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무작정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인권의 도살장인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 시책 수립하라’라는 피켓을 만드느라 전날에 4시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기쁘게 만든 피켓을 들고 교육청을 향했고 가던 중 정말 우연히도 만난 교사가 지금의 미술선생님이었습니다. 미안해서 못 받겠다 했지만 끝까지 2만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덕분에 걸어선 30분 이상은 죽히 걸리는 교육청을 땀벌에서 땀 흘리며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도 됐고, 음료수 페트병 두병까지 사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장학사 방문하는 날 효정고의 청소지도

교육청에서는 이례적인(거의 처음인) 일인지라 경찰도 오고, 정보과 형사도 오고, 학교에 올 때는 청소기계로의 기제로만 작동하게 하던, 장학사가 죽히 다섯은 넘게 나와서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모습은 청취보단 협박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사와 언론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때가 살면서 처음으로 나에게 입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장학사란 학교 올 때마다 힘들게 우릴 청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느끼며 세상을 새롭게 본 계기였습니다.



▲중앙현관 알림말

교감(교장)선생님이야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감히’ 이용하시는 것도 싫으셨을 것이고, 장학사가 오는 날은 청소지도까지 각 반으로 하달하시니 별로 이해는 안 가시겠죠(첨부사진은 고3 후반기에 찍은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학생은 청소할 때만 주인이라고 불리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시위를 끝내고 집에 가는 중 학생부장에게서 “교감선생님 화났다.”식의 전화가 오더니 역시나, 다음

날 학교로 가니 바로 마치 다단계 형식으로 1차로 담임이 “어른이 되다보면 그게 아니더라.”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학생부장에게 불러가 “정말 그만들 생각이 없냐”며 이수나로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러했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교감선생님과 대면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성숙하다느니, 시기상조라느니 같은 지루한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미성숙의 기준을 제시하라, 신체의 성숙도가 정신적 성숙까지 판가름하나.”

“시기상조가 아닌 사고나 행동으로 새로운 역사가 개척된 일이 있었다.”

그 나이 때는 약간은 거창해 보이는 답변을 하니, 종용이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자신도 후에 교장이 되면 학생들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회도 열고 싶다는, 그래서 결국은 안하면 좋겠다는 말이었는데 수업도 못 듣게 하면서 2시간 정도나 끝던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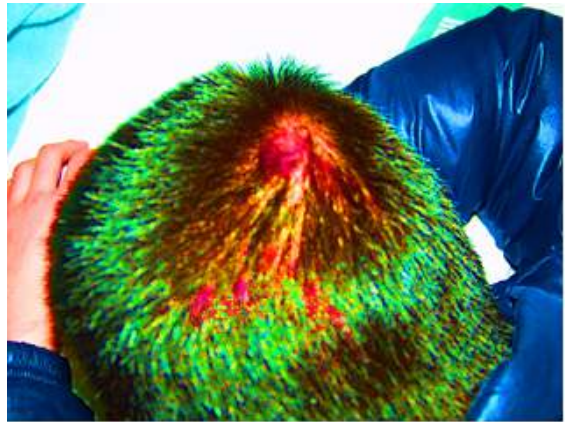


▲신정중, 옥동중 학내시위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때 교육청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위를 하려면 선동하지 말고 혼자 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시위를 했던 친구들이 신정중과 옥동중에 다니던 친구들이었고 저번 5월 신정중, 옥동중 학내시위를 있게 한 친구들이란 것을 생각하면 안 듣길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이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안 시키니 도리가 없다며 교육구조를 탓하시던데, 교육부->교육청->학교->교육부로 이어지는 책임 떠넘기기 도식은 10년 정도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젠 식상하니 다음엔 썩먹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효정고에 다닌다는 것이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생의 날엔 등굣길에 해맑은 인사를 해주며 빵과 우유를 나눠주던 교사들 때문에 행복했고, 학생들의 눈물을 이해해주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보충 수업 때 문제집 대신 불법(!)으로 5.18을, 인권을 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자랑스러웠고, 더운 날 시위한다며 2만원을 손에 쥐어주시는 선생님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강자엔 강했기 때문에, 교감(교장)선생님에겐 말 안 듣고 귀찮은(혹은 못된) 그런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학생



▲몽둥이로 맞은 학생의 머리

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 중엔 미술선생님을 보고 나중에 꿈이 ‘전교조를 하고 싶어’ 교사가 되고 싶다할 친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다름 아닌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미술선생님의 고발로 문힐 뻔했던 이번 일이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머리가 길다고 머리에 금이 간 것을 교감, 교장선생님이 은폐하려 했지만 가능합니까? 예전에도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그 ‘착한교사’가 1학년 학생부장으로 있었는데 또 감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최근 대책위에서 학교에 면담 갔을 때 작년 담임과 교감선생님을 봤습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꺼낸 첫말이 “어느 학교 갔냐.”인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보단 학교를 물어보는 것이 교감선생님과 작년 담임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에 저도 학교의 졸업생으로서년부터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학교와 교육구조의 탓이겠지만, 제가 재학 중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고분고분하게)’ 살았던 결과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학내 인권침해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탓이라고도 봅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해. 나중에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거야라는 식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한 과정의 연속이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행복은 어떤 이유로든 유예되거나 희생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불온하고 저항, 불복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교사와 학부모는 그것에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뵈는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이 편지는 몇몇 언론에 기고합니다.

**[진성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두발·복장 자유, 소지품검사 폐지, 체벌금지에 대한 건의사항」, 2007. 12. 28.

[진성고등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2007년 12월 28일

**두발·복장 자유, 소지품검사 폐지,  
체벌금지에 대한 건의사항**

**[진성고등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김성기 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성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변천하는 새 시대에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인권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사동 전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세계의 명문으로 가는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명문이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대학 합격만 잘 한다고 그 학교가 과연 명문학교일까요?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학교에 대해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몇 모이면, 심지어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입만 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과연 바람직한 학교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진성고등학교는 결코 명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학교생활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교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 등등. 21세기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새 세대 주인 되는 젊은 학도들이 70,80년대 학생을 군인처럼 양성하던 시대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변천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문명 속에서 한발 앞서나가는 명문학교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인권문제 중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건의합니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18mm 반 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면 잘라오라는, 여학생의 경우 귀 밑 5cm를 측정하기위하여 하이테크 펜 뚜껑을 이용하여 대조하는 등 터무니없는 두발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머리가 지적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며 1달에 적게는 1번 많게는 4번 이상,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남/여 학생 모두 미용실로 향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두발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두발규정은 목적이 전치되어 규제를 위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짧은 머리가 혹시라도 또 지적되지 않을까 더욱 머리에 신경 쓰게 됩니다. **머리에 신경 쓰지 말라는 명분하에 억압하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냥 지키면 되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신체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 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억압받는다면 그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의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복장규정을 하게 되었지만, 이 규정역시 목적이 전치되어 의복에 드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복에 대한 규정은 멋 내기 위한 옷차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불구하고, 야간생활지도교사는 매점에서 파는 진성티(9000원)가 아닌 시중판매 기본 면티(4000원)를 입었다며 벌점을 부여합니다. 외투에 대한 규정에서 18만원짜리 학교코트 외에 학교코트보다 저렴한 사제외투(대부분 10만원 안팎)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보온을 할 수 없게 하여 겨울철 질병이 유발됩니다. 니트, 가디건, 스웨터 등 보온의류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기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습니다.

셋째, 소지품검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학교에 술, 담배, 흥기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고, 들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등 불건전/건전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 지도교사의 경우 여학생의 주머니를 뒤지며 허벅지 부위를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검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여린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소지품검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 소속 야간 생활지도교사들께서 행하시는 체벌은 명목상 ‘사랑의 때’이지만 그 때에는 사랑이 담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있습니다. 옛장수 마음대로 옛의 가격을 정하듯, 야간 생활지도교사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지도를 달리합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그 선생님과 친밀하거나, 그 선생님의 기분이 좋을 때라면 다음부터 잘 하라는 식의 훈계로 넘어가지만, 그분들이 상사에게 지적을 받거나, 다른 지도교사가 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려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별것 아닌 듯 화풀이의 대상이 되곤 하며, 기분 변화에 따라 때의 강도가 변합니다. 이러한 체벌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교육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체벌일까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주인이 말로만 혼대도 잘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지성인들이 모인 진성고등학교에서 체벌을 받아가며 억압받아야합니까? 학생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성이 있는 학생들을 이성으로 대해주세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체벌 외에도 우리 학교에는 비폭력적인 대안인 벌점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권유린당하는 사례는 위의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세한 피해사례는 별지 첨부합니다.)

인권유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 두발규제를 폐지하여 학생들이 완전한 두발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목적이 전치된 복장규제를 폐지합니다. 합리적인 개정을 원합니다.

3. 사생활 침해가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소지품검사를 폐지합니다.
4.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합니다.
5. 위의 사례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3자회의를 개최합니다.

학교에는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체에게는 학교를 바른길로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학생들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학생이 선생님들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옳지 못한 길일 경우에는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의무에 소홀하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3주체 중 하나로써 나서겠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칙을 지키기 싫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교칙에 의해 학생들이 받는 고통을, 지금까지 받아온 억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교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불합리적인 교칙을 평화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진정으로 세계의 명문으로 가길 원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십시오.

우리학교 교가 2절에 '진성은 우리 명예 우리의 사랑'이라는 소절이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젊은 학도들이 진성고등학교에 깨끗하고 솔직하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진성고등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 (별지) 교내 인권유린 사례

### -두발 관련

\*A학생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내려오고, B학생은 뜨는 생머리 학생이다. 두 사람의 머리길이는 비슷하지만 두발검사를 하는 Y선생님의 지적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다. A는 머리가 단정하다며 칭찬하였지만, B는 무슨 머리가 밤송이냐며 꾸중을 하였다.

\*직모 학생들은 머리가 짧을수록 잘 뜬다. Y선생은 두발검사를 하며 C학생에게 뜨는 머리를 잘라올 것을 명령했다. C학생은 자신의 머리가 짧기 때문에 뜨게 된 것이라고 Y선생에게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C학생을 꾸중하며 스트레스를 주었다.

\*옆머리와 뒷머리만 짝 쳐올린 머리는 헤어스타일의 생김새가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 하여 청소년층에서 일명 ‘귀두컷’이라 불린다. 규정에 충실한 학생들은 대부분 ‘귀두컷’이라고 놀림 받으며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학생들은 혹시라도 걸리지 않을까 머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

\*현재의 두발제한은 사람마다 개인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든 학생에게 하나의 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복장 관련

\*단순히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남학생의 경우 와이셔츠를 바지에 넣은 후 벨트 착용할 것을 강요한다. 더운날 활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를 바지에서 빼고 있으면 벌점을 부여하거나 교내청소를 시킨다.

\*교복재질이 상당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가디건, 니트, 스웨터 등 보온의류를 착용하면 사복반입으로 간주되어 벌점이 부여된다.

\*여름철 더워서 교복바지에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상하의가 교복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벌점을 받았다.

\*사복에 대한 규정은 멋 내기 위한 옷차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불구하고, 야간생활지도교사는 진성티가 아닌 시중판매 기본 면티를 입었다며 벌점을 부여하였다.

\*외투에 대한 규정에서 18만원짜리 학교코트 외에 사제외투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보온을 할 수 없게 하여 감기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니트, 가디건, 스웨터 등 보온의류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겨울철 질병을 유발시킨다.

\*발이 불편한 학생, 발에 상처가 있는 학생 등 운동화 등의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학생이 교복차림에 구두를 신지 않았다고 벌점을 주었다.

#### -소지품검사 관련

\*생활관이 실시하는 야간 품신검사에서, 한 학생은 자신의 편지가 검사자에 의하여 다수에게 공개되었다.

\*생활관 실시 야간 품신검사에서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좋아하는 사람이 검사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등교 시 소지품검사를 하며 개인이 학교에 가져오고 싶은 사적인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게 한다.

\*등교 시 소지품검사는 가방을 열어볼 때 속옷 등 민망한 사항까지 들춰낸다.

#### -야간 지도교사 관련

\*야간 생활지도교사는 지각입실, 자습중 화장실, 정수기사용 등의 일에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도 제재를 가한다.

\*야간 생활지도교사 학생주임 G는 취침점호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전체를 체벌하였다.

\*야간 생활지도교사 P는 감정을 개입한 학생지도로 자주 소리를 지르며 학생과 마찰이 많다. 때로는 과도한 체벌이 있다.

\*야간 생활지도교사는 사소한 잘못에는 훈계 등의 지도가 있음에 불구하고 잘못에 비해 과도한 폭력적이고, 감정이 개입된 체벌을 하며 비인간적인 지도를 한다.

## 진성고 학생들이 쓴 대자보 1

진성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성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변천하는 새 시대에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인권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사동 전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세계의 명문으로 가는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명문이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대학 합격만 잘 한다고 그 학교가 과연 명문학교일까요?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학교에 대해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몇 모이면, 심지어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입만 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과연 바람직한 학교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진성고등학교는 결코 명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학교생활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교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 등등. 21세기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새 세대 주인 되는 젊은 학도들이 70,80년대 학생을 군인처럼 양성하던 시대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변천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문명 속에서 한발 앞서나가는 명문학교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인권문제 중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건의합니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18mm 반 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면 잘라오라는, 여학생의 경우 귀 밑 5cm를 측정하기위하여 하이테크 펜 뚜껑을 이용하여 대조하는 등 터무니없는 두발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머리가 지적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1달에 적게는 1번 많게는 4번 이상,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남/여 학생 모두 미용실로 향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두발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두발규정은 목적이 전치되어 규제를 위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짧은 머리가 흑시라도 또 지적되지 않을까 더욱 머리에 신경 쓰게 됩니다. 머리에 신경 쓰지 말라는 명분하에 억압하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냥 지키면 되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신체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억압받는다면 그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의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복장규정을 하게 되었지만, 이 규정역시 목적이 전치되어 의복에 드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복에 대한 규정은 멋 내기 위한 옷차림을 방지하기위한 것임에 불구하고, 야간생활지도교사는 매점에서 파는 진성티(9000원)가 아닌 시중판매 기본 면티(4000원)를 입었다며 벌점을 부여합니다. 외투에 대한 규정에서 18만원짜리 학교코트 외에 학교코트보다 저렴한 사제외투(대부분 10만원 안팎)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보온을 할 수 없게 하여 겨울철 질병이 유발됩니다. 니트, 가디건, 스웨터 등 보온의류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기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습니다.

셋째, 소지품검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학교에 술, 담배, 흥기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고, 들키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등 불건전/건전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검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여린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소지품검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 소속 야간 생활지도교사들께서 행하시는 체벌은 명목상 '사랑의 때'이지만 그 때에는 사랑이 담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있었습니다. 엇장수 마음대로 엇의 가격을 정하듯, 야간 생활지도교사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지도도를 달리합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그 선생님과 친밀하거나, 그 선생님의 기분이 좋을 때라면 다음부터 잘 하라는 식의 훈계로 넘어가지만, 그분들이 상사에게 지적을 받거나, 다른 지도교사가 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려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별것 아닌 듯 화풀이의 대상이 되곤 하며, 기분 변화에 따라 때의 강도가 변합니다. 이러한 체벌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체벌일까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주인이 말로만 혼대도 잘 알아듣습니다. 허물며 지성인들이 모인 진성고등학교에서 체벌을 받아가며 억압받아야합니까? 학생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성이 있는 학생들을 이성으로 대해주세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체벌 외에도 우리 학교에는 비폭력적인 대안인 벌점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권유린당하는 사례는 위의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일을 해소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권유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 두발규제를 폐지하여 학생들이 완전한 두발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목적이 전치된 복장규제를 폐지합니다. 합리적인 개정을 원합니다.
3. 사생활 침해가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소지품검사를 폐지합니다.
4.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합니다.
5. 위의 사례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3자회의를 개최합니다.

학교에는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체에게는 학교를 바른길로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학생들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학생이 선생님들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옳지 못한 길일 경우에는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의무에 소홀하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3주체 중 하나로써 나서겠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칙을 지키기 싫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교칙에 의해 학생들이 받는 고통을, 지금까지 받아온 억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교칙을 개정하기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불합리적인 교칙을 평화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진정으로 세계의 명문으로 가길 원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십시오.

우리학교 교가 2절에 '진성은 우리 명예 우리의 사랑'이라는 소절이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젊은 학도들이 진성고등학교에 깨끗하고 솔직하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성고 학생들이 쓴 대자보 2

진성고등학교 학생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른 학생들처럼 일상의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소요는 질색이지요.  
우리들은 모두 똑같아요.  
허나, 우리는 잠시 우리들의 생활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니중에는 이것을 떼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왜일까요? 학교가 대화대신 권력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내리더라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  
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입니다.  
그 진실이란 이 학교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든 학교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태가 되도록 방관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웠던 거지요.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별점, 징계, 강제전학.  
수많은 제도가 연쇄적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죠.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꿈이 학교 입학의 목적이었고,  
학교의 탄압에 순응하게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잃어버렸죠.  
학교는 좋은 대학 진학을 약속하며, 침묵과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침묵을 깬습니다.  
한 문장의 글귀가, 우리들에게 잊혀졌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권, 자유가 단순한 단어가 아닌 권리이고, 관점임을 알리길 원했죠.



학생여러분,

지금까지 눈을 가리고 살았고, 학교의 탄압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같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면  
들고 일어나십시오

정확히 1주일 후 우리 학교에서

자유,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신 잊지못하게 해 줍시다

<참고>

런던 시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일상의 편안함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나 소요는 질색이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 우리가...역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죽음 혹은 전쟁이 끝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만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1월 5일을 맞아 잠시 그 의미를 되새겨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방법을 생각해 누군가 전화통에 고향을 질러대고 곧 특공대가 오겠죠 왜  
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  
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단 겁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때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  
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웠던 거죠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전쟁, 테러, 질병 수많은 문제가 연쇄 작용을 일으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  
시켰죠

공포에 사로잡힌 여러분은 서둘러 의장한테 구원을 요청했고 그는 질서와 평화를 약속하며 침묵과 절대  
복종을 요구했지요

어젯밤! 난 침묵을 갓습니다 재판소를 파괴해 조국에 잊혀진 가치를 일깨워줬죠

400여년 전 한 위대한 시민이 11월 5일을 우리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함, 정의, 자유가 단순한 단어가 아닌 관점임을 알리길 원했죠  
눈을 가리고 살았고 정부의 범죄를 알지 못한다면 11월 5일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하지만 나와 생각이 같고 내가 느끼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면 들고 일어나십시오. 정확히 1년 후  
의사당 앞에서 그들에게 11월 5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신 잊지 못하게 해줍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진성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취재요청서」, 2008. 02. 19.

<취재요청서>

일시 : 2008년 2월 19일

1.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지난 금요일(2월 15일) 4시 30분 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진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 200여 명이 옥상에 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두발복장규제폐지, 체벌중단, 소지품검사 중단 등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로 연락을 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인권을 요구하는 용감하고 의미있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귀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진성고등학교는 과거 사학비리와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기숙사 및 학교 운영 등으로 인해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생들의 시위는 그런 상황에 학생들이 직접 저항하는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동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며, 학생들은 전에도 서명운동과 건의, 벽보 등을 이용해서 학교에 여러 차례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4.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2007년까지 가능한 행동"이라며 성의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교사의 발언은 어이없을 정도이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땐 상상도 못할 강한 교육을 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에는 분노까지 느낍니다. 학교 측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진성고 학생들과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교육의 민주화와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성의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 019-480-3328(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윤종)

<아래는 진성고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준 학내시위 사진입니다>





성하훈 기자, 「정권바뀐 올해부터 청소년 비판의식 필요없다? - 한 학교의 시대착오적 교칙... 진보단체, 청소년 인권 자율 지켜낼 것」, 오마이뉴스, 2008. 03. 14.

## 정권바뀐 올해부터 청소년 비판의식 필요없다?

한 학교의 시대착오적 교칙... 진보단체, 청소년 인권 자율 지켜낼 것



▲ 종이비행기 시위 두발복장규제 및 체벌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옥상에 올라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광명 진성고 학생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난 2월 15일, 경기도 광명의 진성고등학교 종업식을 하루 앞둔 이 날, 그간 쌓여있던 이 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집단시위 형태로 표출됐다. 봄방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1~2학년 500여명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일제히 날린 것.

1992년 개교한 이래 처음 발생했다는 이날 학내 시위는 '두발복장 규제폐지' '체벌 중단' '소지품검사 중단'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주요 이슈였다. 학교 측의 불합리한 처사와 사학재단의 강압

적인 분위기에 올려왔던 학생들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생들은 "21세기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젊은 학생들이 70~80년대 학생을 군인처럼 양성하던 때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면서 두발규제·소지품검사·체벌 등등 학교생활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교칙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매점에서 파는 값비싼 티셔츠나 코트를 입지 않으면 벌점을 매기는 복장규정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종이비행기 날린 학생들, 그 뒤에 교내엔 감시카메라가...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학교 박아무개 교사(현 학생부장)는 학내 방송을 통해 "종이비행기와 락카칠 해놓은 낙서 잘 봤다, 2007년까지만 가능했던 일이다, 비판적 사고방식 필요 없다, 불만사항은 학생회를 통해 건의하라"며 학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아울러 "두발규제는 기존 방침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 A군은 "정권이 바뀌는 마당이니 앞으로는 이런 행동이 발생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시위 이후 학내에 감시카메라가 4~5곳 정도 설치됐다"고 전했다. "학교 폭력 예방을 명목으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진성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이를 주도한 학생들이 청소년인권단체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진성고는 경기도내 유명 입시명문고교로 알려져 있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령이사회 및 급식비 의혹 등 사학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던 곳이기도 하다. 진성고 이사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광명(갑)지역 공천을 신청했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진성고의 상황을 "새 정권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한 단면"으로 소개하면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이 입시의 압박 속에 기본 인권마저 제약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2007년까지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한 진성고 학생부장의 표현에는 새 정권의 등장과 함께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사학재단의 시각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 희망 총회 지난 3월 1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회원 총회 © 성하훈

### 이사장은 한나라당 공천 신청, 학생들은 인권 보장 요구 시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학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지로 상징되는 영어 공교육 정책과 자립고로 대표되는 교육 양극화 정책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시켜 청소년들의 대내외적 활동을 많은 부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사회의식성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보수적 교육계의 목소리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져, 정부의 지원 아래 청소년들의 자율성 확보와 인권을 지원하던 청소년 운동단체의 활동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진보적 청소년 운동단체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내외적 활동을 활발히 하기는 어렵고, 서열화가 심해지면서 탈학교와 아예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또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분 활동을 지원 받던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위기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단체들의 활동 사이에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1세기청소년희망(이하 '희망') 백성균 사무국장은 "올해 '청소년 활력 프로젝트' 정도





▲ 청소년들 할 말 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공원에서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 성하훈

는 수주가 가능할 것 같지만, 최악의 경우 사단법인임에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는 교육정책들에 청소년들의 자율성이나 인권을 배려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그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주로 입시에 찌든 학생들에게 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일을 도와왔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회비 등은 경상비로만 간신히 충당되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프로젝트가 없으면 활동에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희망이 올해 주활동 목표를 청소년 인권과 자율성 확보에 둔 것은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중 고등학교의 민주적 학생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무게를 두었지만, 올해는 인권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백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뒀을 뿐 교육 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을 못했다"면서 "2007년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나 2008년에는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에 분명한 목적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 학교가 기업인가... 이런 교육에 청소년 미래 없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25일 청소년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자율권 신장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활동네트워크, 희망 등 청소년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입시정책이 많은 학생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며 학교 내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고등학생은 '경쟁을 강화시키는 교육현실은 입시성적과 경쟁에 휘둘리며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에게 경쟁과 획일적인 줄 세우기만을 강요하고 서민들을 부익부 빈익빈의 잔인한 정글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학생 인권 문제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에 청소년 운동단체들이 단호한 결의를 밝힌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운동가 전누리씨는 "학교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교육방식에 청소년의 미래는 없다"면서 "교육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운동도 새로운 논의 구조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정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장도 "20년 전처럼 2~3일에 한 명꼴로 자살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상당히 후퇴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유윤종씨도 "청소년들의 시험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같은 경우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아울러 진성고 상황에서 보듯 학생들의 반발을 아예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 불만이 표출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인 집회 시위마저 정권이 비판 이후 영향을 받는 분위기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 또한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교복 색깔로 학생의 등급 결정하는 '이명박식 교육'

이같은 청소년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고척고 김용희 교사는 "청소년 단체 활동가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감동이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소년들 © 성하훈

이와 함께 "조금이나마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 정권에서도 내신등급제가 심한 반발을 샀는데, 이는 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학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교육정책에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희망' 총회에서 만난 중·고등학생들의 외침에는 이러한 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불만이 담겨 있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보는 학생들의 답답한 심정, 입시를 통한 서열화 경쟁이 강화되는 교육현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절하기만 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전에 이명박식 영어 공교육 방침대로 수업한 적이 있는데, 한 반 40명 중 35명이 잤다. 도리어 공부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다. 영어로만 살 것도 아니고 갈 길이 따로 있는데, 그에 맞는 정책이 준비돼야지 이건 아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이 될 수가 없다. 대부분이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한 영어 사교육에 매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것이다. 결국 교복 색깔로 학생의 등급을 결정하게 만드는 처사다." - 지난 1일, 희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발언 중 일부.

강이현 기자, 「"1000명의 인권을 구해주세요" - '진성고 동영상' 확산...학교 "음해세력이 조작한 것"」, 프레시안, 2008. 03. 27.

## "1000명의 인권을 구해주세요"

### '진성고 동영상' 확산...학교 "음해세력이 조작한 것"

이른바 '입시 명문 사립고'라고 알려진 경기도 광명 소재의 진성고등학교 이 학교 재학생이 인권침해와 학생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학교 현실을 담아 제작한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8분이 조금 넘는 분량으로 제작된 이 동영상은 서두에 "지난 10일 KBS <시사투나잇> '만화 같은 현실 사립정글고등학교'에서 언급된 00고등학교는 진성고"라며 "이 UCC를 통해 방송과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성고의 실체를 알리려 한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 "샤워실은 1개, 횡령이 드러난 급식 가격은 그대로"

동영상은 우선 열악한 학교 시설을 고발하며 시작한다. 제작한 학생은 "40~50인 1실을 쓰는 기숙사에 놓인 좁은 침대는 철재이고, 사물함 또한 다 녹이 슬었다"며 "샤워시설과 화장실 시설 또한 열악하다. 그나마 이렇게 열악한 샤워실도 남자 1개, 여자 작은 규모로 5개가 전부"라고 밝혔다. 진성고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학생은 "워낙 부족한 시설이다 보니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지 못하고 결국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학생들은 매년 개선을 요구하지만 재단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끼당 1600원 군대 식단, 2700원짜리 다른 학교 식단과 진성고의 3550원짜리 식단을 비교하며 "몇년 전 행정실장이 4개월간 2억2000만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양심선언했다"며 "이후에도 저희 급식비는 전혀 내리지 않았고 급식의 질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전 이사장 딸이 운영하는 매점서 판매하는 고가 체육복 안 입으면 벌점"

동영상은 이어 "차종태 전 이사장의 딸이 운영하는 매점에서는 체육복을 판매한다. 저희는 생활복으로 체육복을 입는다. 만약 체육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을 경우 벌점이다. 한 해 평균 체육복 구입 비용은 23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에서는 최대 5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체육복이 매점에서 1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시사투나잇>의 취재 결과를 인용하며 "독점 판매와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의 교칙 이 두가지가 권장가격의 2배가 넘는, 질에 맞지 않는 1만1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저희의 인권은 바다에 처박힌 지 오래"라며 "때때로 두발검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서 직접 머리를 자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1회의 정기적인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며 "이런 소지품 검사를 통해 음식물, 핸드폰, 사복, 선크림, 딸기맛 혹은 체리맛 립밤 등에 벌점을 부여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라며 "더 놀라운 것은 이성교제를 금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이 이성과의 편지를 모두 걸러내 벌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동영상에서 밝힌 진성고의 학칙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없는 학교', '반항 행위 없는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여기에 준해 주·야간 교사들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이 교칙은 교사들, 특히 야간교사들 권력 남용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2월 종업식 하루 전날 700여 명의 진성고 학생들은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에 반발하며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교사 "학생들 반발? 2007년도까지 가능했던 일"

지난 2월 종업식 하루 전날 700여 명의 진성고 학생들은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에 반발하며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영상은 다음날 조회시간에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된 한 교사의 '경고'를 녹음해 공개했다. 이 교사는 "어제 종이 비행기 잘 봤다. 2007년도까지 가능했던 일이다. 락카칠 잘 보고 잘 지웠다. 2007년도까지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은 "<시사투나잇> 방송 이후 학교에 CCTV가 설치됐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실태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찍어서 제보하니 학교에서는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반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몇몇 사람들은 너희가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묻는다"며 "반문하겠다. 독일에서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히틀러 정권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비판의 여지가 없는 정권이었나? '선택'이 자유와 평등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입시 명문 사립 진성고등학교 그 속의 1000여 명의 인권을 구해달라. 민주적인 학교에서 맘 편히 공부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진성고는...

1995년 개교한 진성고는 지난 2005년 이미 죽은 사람이 이사로 등재돼 이른바 '유령이사'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학교다. 설립자인 차종태 씨의 부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당시 2억 원이 넘는 급식비를 횡령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뒤를 이어 이사장을 맡은 차종태 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2004년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차종태 씨는 '유령이사' 문제가 불거진 2005년에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뒤이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의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사와 감사는 설립자가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강사이거나 사위 등 친인척들이 주로 맡아왔다.

### "인재를 양성한다는 곳이 사육을 합니까"

한편,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동영상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진성고 학교 건물에 붙여놓은 것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하지 않나"라며 "그에 반대되는 환경에서 중국이 티베트 독립주의자들을 탄압한 것처럼 억누르고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곳이 사육을 합니까"라며 "관할하는 교육청을 무엇을 했으며, 그곳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는 뭐였으며,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런 고등학교를 보내게 한 사회는 무엇입니까"라고 질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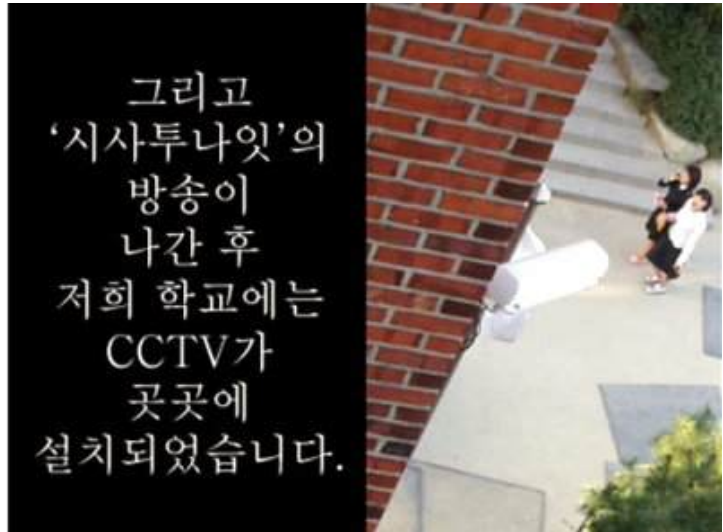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가 '총선 이후에 사학법을 나머지 반쪽마저 (2005년 이전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우리는 이를 망언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진성학원에 제대로 된 이사가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급식비 횡령



과 유령 이사와 같은 불법이 판을 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의 과거 회귀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이 주장하는 미래 지향 사학법 재개정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성고와 충암중고를 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학법이 이 땅에서 진성고와 충암중고와 같은 엉터리 사학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런 엉터리 사학들에 의해 피해 받는 학생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 학교측 "음해세력 있다..동영상도 조작된 것"

사태가 확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원도 들어와서 체크해본 것도 있고, UCC 등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개별학교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종태 전 이사장은 2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UCC를 절대로 제작하지 않았다"며 "일부 음해세력의 배후조정에 의해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제작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차 전 이사장은 "2005년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사람과 내통되어서 전교조, 시민단체, 특히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시에서 우리 학교가 일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이 우리 학교를 흠집을 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음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사장이고 그가 이번에 정치 입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지금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차 전 이사장은 동영상에 드러난 학교 현장이 진성고가 아니라며 "분석을 해봤더니 식판도 우리 학교 식판이 아니었고 (세면장 등도) 우리 학교 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이 비행기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두어달 동안 해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며 동영상이 합성 등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덕영 기자, 「진성고 UCC」 진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파문 계속, 세계일보, 2008. 03. 28.

## ‘진성고 UCC’ 진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파문 계속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를 고발한 이른바 ‘진성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둘러싸고 이 학교 설립자와 졸업생이 방송에서 엇갈린 주장을 펴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익명으로 출연한 진성고의 한 졸업생은 “(전날 설립자의 말과 달리) 내 입장에서 보면 UCC의 내용에 합성이나 거짓이 없고, 내가 학교 생활 할 때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며 전날 학교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성고 설립자인 차중태 전 이사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UCC 내용 중 학교와 관련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UCC도 외부의 음해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졸업생은 또 “차 전 이사장이 UCC를 만든 사람들이 외부 음해세력과 결탁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학생과 통화하면서 UCC를 학생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UCC에 나왔던 ‘종이비행기 시위’에 대해서 이 졸업생은 “당시 요구사항은 두발, 복장제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소지품 검사, 자의적 처벌에 대한 불합리성,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생활 등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시위였다”고 말했다.

졸업생은 “내부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까지 된 이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성고 UCC’는 40명이 기숙사 한 방에서 철제 2층 침대를 쓰면서 생활해야 하고, 비리로 얼룩져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학교 급식을 고발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단체복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이마저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구입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소지품 검사 등 폭력적인 생활지도 현실을 고발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 〈진성고 사건 결과 정리〉,

공현

이 글은 진성고 재학생 분들과 졸업생 분들을 통해 들은 사실들,  
그리고 진성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 등에 기초해서 쓴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고 합니다."라는 말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경쓰진 마세요 ~\_~;

먼저, 진성고 안에서 본래 학생들에 의한 촛불시위 계획 등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집회신고를 하러 경찰에 갔다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듣고만  
왔다고 하며,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을 통해 학교에 알려진 듯한데) 본래 계획이 있던 당일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 등이  
시위를 막기 위해 학교에 와있었다고 합니다.

그즈음에 진성고가 학생인권 문제로 언론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졸업생들의 동문회 쪽에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함께 학교 측과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4월 5일에 진성고 교장실에서

이 사장, 교감, 행정실장, 학운위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총학부모회장, 3학년 학부모 회장, 총동문회장, 6기  
동문회장 및 부회장, 11기 동문회장, 학생대표 3명, 교사 대표 3명, 교육기획부장과 학생부장 등이 참석한 간  
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협상 이후부터 재학생 분들과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아무래도 연락하던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셔서 시험기간 압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학교 측이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이상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뭐 잘 된 거지요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 졸업생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1. 재학생 대표들이 재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뽑았으며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용 예정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회의하기로 했다는군요

2. 학교 운영사항 관련 투명화 및 필요시 진성관련인 열람을 동문회에서 요구했고, 급식에 대해서도 식단 구성별 단가를 표시하고, 매점운영은 공개입찰제로 변환, 회계장부 조회 공개 등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UCC 동영상 제작자에 대한 학업 및 민형사상의 패널티는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성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사항(2008.04.14.)은 대충 이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잔류 폐지에 관한 건

1. 제안사유 : 학생 생활지도, 인권문제 등
  2. 폐지(안) : 금·토요일 귀가, 일요일 20시 귀교
  3. 설문조사 및 추후 학부모/선생님 협의
- 처리사항 : 협의 (기숙사위원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폐지에 관한 건

1. 간식을 폐지하여 급식 단가 인하
  2. 간식을 폐지 후 대안 : 컵라면 자판기 설치
  3. 간식 폐지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급식소위원회에 차후 결정
- 처리사항 : 가결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

생활관 지도규정 수정에 관한 건 (통학조치 규정)

1. 제안사유 : 야간 생활교육 및 분리자습제, 야간벌점제 등 폐지
  2. 통학조치규정(안) :
- 지도방법-등학교 조치 예정

처리사항 : 협의 (기숙사위원회)

학생회 건의사항에 관한 건

※ 학생들의 건의사항 참조

처리사항 : 가결

\*\*\* 졸업생에게 물어보니, 저기서 야간 생활교육은 학생들에게 뭐 체조라거나 '기합'(이라는 체벌, 등을 주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_@

근데 정작 뭔가 중요해보이는 학생회 건의사항은 열심히 찾아봤는데 내용이 안 보여요 -\_-;;  
연락하던 졸업생(너기)도 이 이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회의록 더 정리해서 진성고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학생 대표들이 제시한 우선 순위화된 요구사항이 뭔지 궁금한데 말이죠 꺾 -;;

대략 거칠게 요약하면

- 2008년 2월 진성고 학생들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로 교장이 책임지고 물러남
  - 2008년 3월 진성고 학생이 만든 진성고의 인권침해 등을 고발하는 UCC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언론에 알려짐.
  - 2008년 4월 진성고 구성원들의 협상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많은 부분 수용해서 개선
    - 기숙사에 주말에 남아있어야 했던 것 없앴. 급식비 인하를 위한 조치. 기숙사의 벌점제와 기합, 자습제 등 폐지.
    - 기타 학생들의 요구사항 일부 수용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처음 시위 때 요구사항은 두발자유, 체벌반대, 소지품검사 중단이었습니다. @\_@ 두발규정을 개정했다거나 소지품검사 등을 개선(혹은 없앴?)했다거나, 아니면 학생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온 다른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나 저항 등이 알려질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해야겠지요 ;;

-----

추신 : 진성고 재단 측에서 고소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 만약 그게 법정으로까지 가면 처음부터 같이 했던 인권단체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_@

상황 진행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주세요~~~

추 신2 : 이 정리가 늦은 이유는, 사실 저 "학생회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내고 나서 올리려고 생각하고만 있었거든요 --; 그런데 5월이 되도록 저 부분에 대해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서, 그냥 올립니다.

이장연 기자, 「진성고 때문에 다시 검찰에 가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8. 09. 06.

## 진성고 때문에 다시 검찰에 가야 합니다

지난 6월 27일 MBC <PD수첩> 측으로부터 학생인권 문제 취재와 관련된 쪽지를 받은 날, 진성학원(고발인 차OO 이사장)이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었다. 통지서에는 "통신망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 적혀 있었다.

무혐의 통지를 받은 뒤, 두 달 쯤 되어가는 오늘(9월 5일) 아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난데없는 전화가 왔다. 진성학원이 진성고 UCC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바로 항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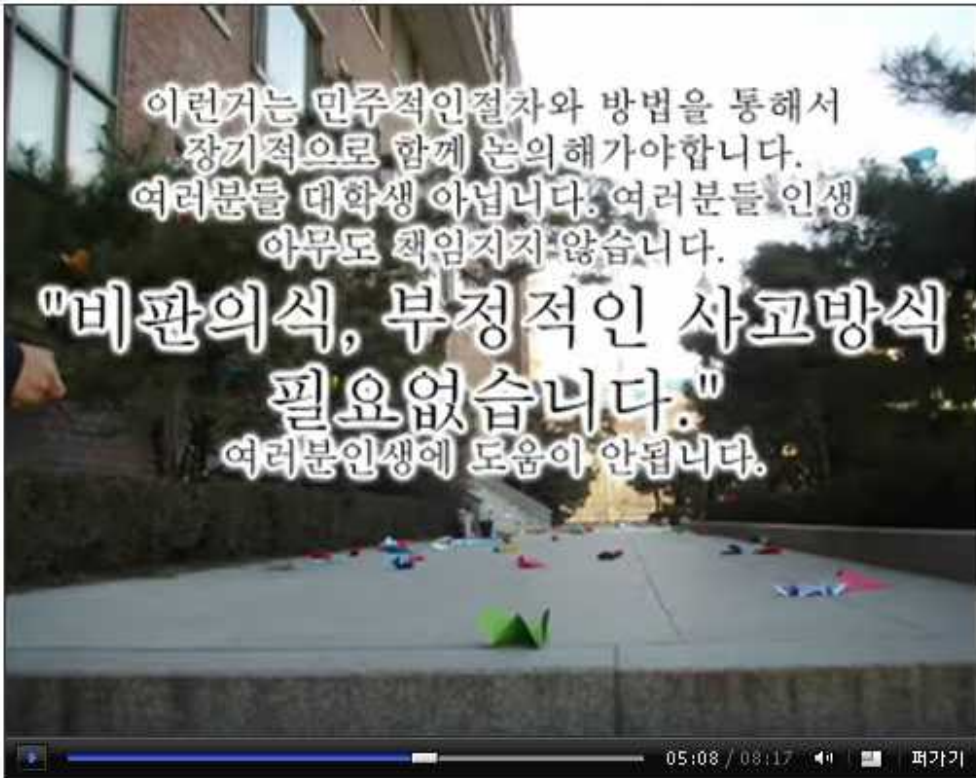
그런데 피의자의 거주지가 인천이라 조사를 받으러 안산까지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할이 따로 없는 이 사건을 자신들도 관할하기 어렵다며 인천에 위치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주면 그렇게 처리해주겠다고 팩스번호를 요구했다. 팩스기가 없어 이메일도 가능한지 묻고 가능하다하여 그렇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안산지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 진성학원이 학생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진성고 UCC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해 항고하게 된 나뿐만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을.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이었다.

진성학원 측의 악의적인 법적대응에 피해를 보는 이가 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성학원이 항고한 진성



▲진성고 UCC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었다. © 이장연



▲진성학원은 누리꾼과 블로거들에게까지 비판의식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다. © 진성고 UCC 화면캡처

고 UCC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 진성고 UCC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진성고 UCC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오마이뉴스>와 KBS2 <시사투나잇> 방송 이후 진성고 학생들이 제작한 학생인권침해 UCC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진성고의 학생인권문제와 사학비리 문제가 일파만파 퍼진 것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학원민주화와 기본적인 학습권과 생활권을 요구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학교에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되레 학생들을 더욱 감시, 통제하기 시작한 진성고에 대해 당시 누리꾼들의 분노와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었다.

나도 뒤늦게 이 사실과 UCC를 접하고 블로그와 UCC 사이트에 관련 영상을 함께 업로드 했다. 이 때문에 진성학원은 나와 다른 누리꾼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형사고발 했었다. 내가 UCC 제작자도 아니고 방송 보도 내용과 학교 현실이 다르지 않은데도, 진성학원은 전교조 등을 운운하며 외부



▲ 학생인권침해와 탄압에 어떤 반성도 없는 진성학원 그들의 비리와 문제는 아직 해결될게 아닙니다. © 진성고 홈페이지 화면캡처

음해세력을 색출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는 지난 5월 15일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고, 진성고 UCC의 배후세력, 진성고를 음해하는 세력을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며 학생인권탄압에 대해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는 진성고와 맞서기 위해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했었다. 그리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악용하는 진성고

그런데 진성학원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한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정치사항의 자유를 억압, 검열,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보통신망법의 온갖 기제들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작년부터 정부기관이나 기업, 사학재단 등은 그들의 내부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악용하고 있다.

법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기보다, 되레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범치' '범질서'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인터넷모욕죄 같은 인터넷 여론 죽이기만을 확책하고 있어 누리꾼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히 말하며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제301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학생인권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그 날을 위해..**

아무튼 검찰을 앞세워 KBS·MBC 등 공영방송과 언론·인터넷 여론과 누리꾼마저 길들이고 탄압하는 요즘,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과 의사를 당당히 솔직히 밝히면 잡혀가는 세상인지라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 같이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기가 죽거나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루하고 피곤한 싸움이 되겠지만, 학생·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탄압하는 죄를 짓고도 권력과 돈이 있기에 법과 공권력, 기득권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도리어 보호받고 있고, 제대로 지탄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이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성학원 측의 악의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 입고 있을 다른 누리꾼, 블로거들께 힘내라는 말과, 프랑스대혁명을 태동시킨 초기 계몽주의자 볼테르의 유명한 말을 전한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 어떤 식으로든

공현

학교 대응 활동을 하다보면 참 답답한 일도 많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많다. 인천 산곡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교사의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단속과 체벌, 성폭력적 언행 등의 제보 때문에 시작하게 된 산곡중 대응 활동이,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줄이야. -- 등하교길에 학생 분들로부터 증언을 모으고 홍보물을 나눠줘 가면서 밑바닥부터 조직화를 시도했던만, 산곡중 학생 분들은 만나기로 한 시간에 갑자기 약속을 핑크 내거나 규제와 체벌이 좀 느슨해진다 싶으면 연락을 끊어버리곤 했다. 그 덕에 길 위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TTT 교사나 학부모와 전화로 때로는 직접 만나서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작년에 인천시교육청도 찢어봤지만 가해 교사가 시말서 한 장 달랑 쓰고 끝났고, 올해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두발단속과 체벌은 한층 더 강렬하게 학생들을 강타했다. 산곡중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생 분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학생 분이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작년부터 있어왔지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독(?)하게 집단적으로 전개된 적이 없었다. 교사가 체벌이라는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준 것의 영향이 컸다. 그 덕에 단지 체벌 등을 신고하는 것만도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해서, 인천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에 요청해서 -- 특히 참학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움직여줘서, 산곡중에서는 결국 두발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 산곡중 최근 기사 링크

반면에 진성고처럼 학생 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바깥에서 쫓아가기가 버거울 때도 있다. 이래저래 계획도 같이 세워보고 많이 돕고 싶은데, 학생 분들은 넘치는 역량(?)으로 사건을 만들고 나서야 연락을 해주신다. 2월의 두발자유 체벌반대 소지품검사 중단 종이비행기 시위도 원래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당일에야 알게 되었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는 사나흘 뒤에야 보낼 수 있었다. (진성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픈 분들은 인터넷 여기저기에 유포된 진성고 UCC를 보시라. 기사도 많이 났으니 검색해보시구.) 학생 분들이 보내준

자료를 보면 꽤 오래전부터 상당히 조직적으로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해온 게 보여서 기분이 좋다. 특히 내가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들이라거나 전단지들의 자취가 간간히 묻어 있는 학생 분들이 직접 만든 벽보라거나 건의문 등을 보면 내가 뭔가 기여를 한 것 같달까. -\_-;; 지금은 학생-동문회(졸업생)-학교-학부모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대응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맥락도 구조도 없는 글의 요지는, 여하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진행된다는 거다. 나는 역사가 목적론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욕망과 행동들이 있는 이상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같기도 하다.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랑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만화 원피스 中) 알까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진성고든, 1년 동안 학생 분들과 열심히 안팎에서 조금씩 작업한 산곡중이든. 변화는 계속된다. 아니, 변화는, 우리가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 진성고등학교를 기억하시는가?

공현

작년 3월 초,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종이비행기 시위를 하고 [실존하는 만화속 정글고 진성고]라는 이름의 UCC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학교이다. 나도 학생들과 연락하면서 가능한 한 적극 연대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학업 상황이나 외부 출입이 어려운 상황 등 접촉과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총동문회 등의 개입과 학교의 버티기로 그리 큰 성과는 못 얻었지만 작은 성과라도 거뒀다고 자위하면서, 학생들의 사정 때문에 문제제기를 중단했었다.

관련기사들: 오마이뉴스 1318바이러스 광명지역신문 프레시안

그런데 좀 잠잠해진다 싶자, 1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진성고 측에서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게시중단을 걸어왔다. (이 게시중단 임시조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진보넷 활동가가 쓴 관련글)

이에 매우 화가 나고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일단 원본 동영상에 해당 학생이 잘못된 허위 사실이 들어있다고 인정하면서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건지 하는 짜증도 있었고 당연히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판단은 포털이 아니라 법원이 할 일이 아닌가?)

(# 게시중단 외에도 몇몇 블로거들을 진성학원 재단이 고소한 사건들도 있었다.)

함께 만드는 인터넷 세상

#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객님께 게시중단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mptyoon님.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09년 6월 1일 **진성고등학교**교육으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물이 임시 게시중단 처리되었습니다.

**\* 게시물 제목 및 내용**

진성고, 두발규제 반대 종이바행기 시위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 반대 200여명 학생들 집단행동  
<http://cafe.naver.com/asunaro/10303> [카페 (게시물)]

**\* 게시중단 요청 사유 :**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동영상 및 게시물에 대한 진성고측의 요청

(진성고 측이 표현의 자유와 학생인권에 대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Clean Daum** 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삭제 조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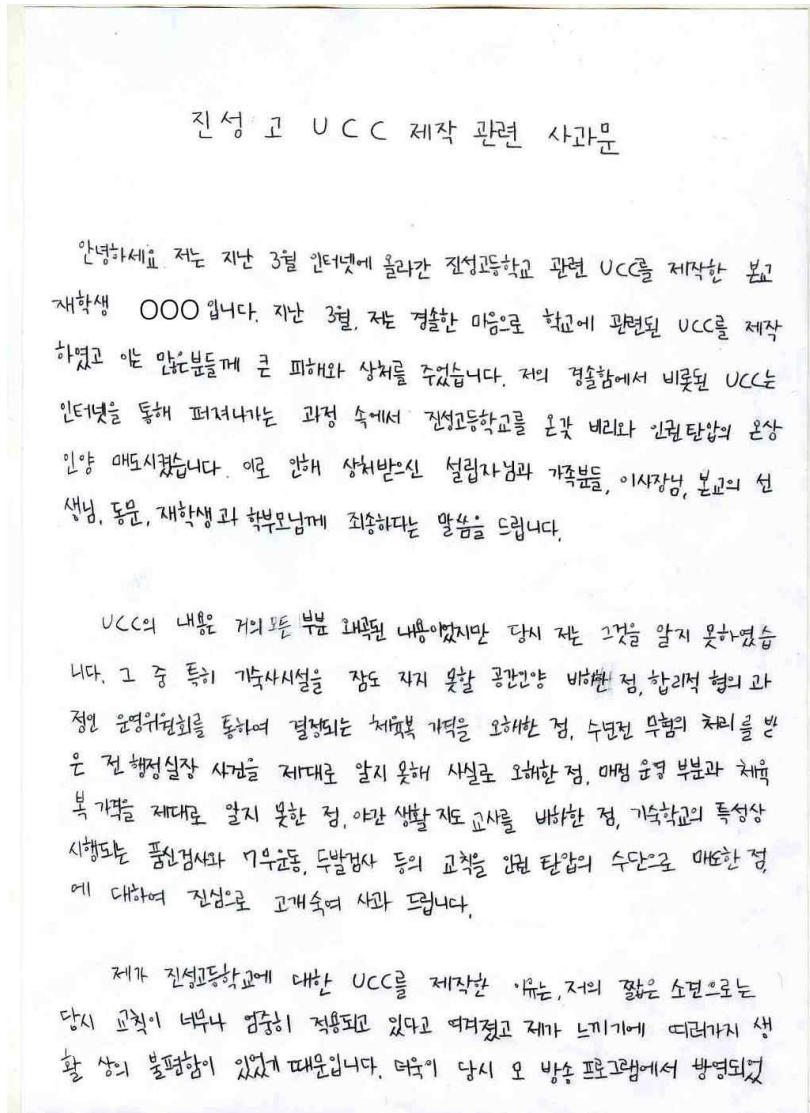
해당 게시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복원 신청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내에 소명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 주소 : <http://gonghyun.tistory.com/159>
- 문제 된 게시물 : 네이버의 현실속의정글고 진성고등학교 UCC 무단 삭제 2008/03/22 19:54 :: 걸어가는꿈
- 삭제 사유 : 원본 게시물 작성자 삭제
- 신고자 : 학교법인 진성학원 (대리인 변호사 김육균)
- ◆! ◆고접수일 : 2009년 5월 30일

☞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Daum은 언제나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는 Daum이 되겠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진성고 졸업생 분들의 글을 얻어서, 진성고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써서 게시한다.

괴악한 사과문 : '왜곡'되었다고?



이것이 진성고 UCC를 제작하여 배포한 학생의 사과문이다.

일단 이 사과문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 학생을 학교 측에서 끝내 색출해서 이런 걸 쓰도록 압박을 가했다 는 것일 터이다. 이 사과문이 전적으로 학생의 자의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학교의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지는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조사과정"이라거나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신 점" 등의 표현을 볼 때 학교 측에서 UCC를 만든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며, 만든 학생을 색출해냈고,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하지 않았으니 이런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과문 작성 과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과문 내용상 상상력을 자극하는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다.

이 사과문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 왜곡된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이 화이트로 지워지고 새로 쓴 게 흥미롭다. 원래는 뭐라고 썼을까?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왜곡되었다는 것일까?

급식비나 체육복, 전행정실장님의 폭로 등 비리에 관한 문제야 그렇다 치자.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는 건이니까.

그러나 "기숙사시설을 잠도 자지 못할 공간인 양 비하한 점", "야간생활지도교사를 비하한 점", "품신검사와 7무운동, 두발검사 등의 교칙을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매도한 점" 등과 같은 항목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이 어떻게 '왜곡' 가능한 사안이란 말인가?

시설이나 생활상의 문제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학생들의 느낌과 의견의 문제이다. 도대체가,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왜곡된 내용이었다고' 무슨 말도 안되는 문법적 오류란 말인가. (또한 소지품검사나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 사과문을 보면서 도대체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사진 자료 등과 같이 현실을 알린 것이 어떻게 잘못 알고 한 것, '왜곡된 내용'이 될 수 있는지 격한 의심이 들었다.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혹시 이 오류투성이의 괴악한 사과문이 작성된 경위를 알고 있는 진성고 학생 분이 계시다면 제보 바랍니다.)

'사학비리'와 '학생인권'

진성고 사건이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사학비리'에 분노했다. 누리꾼(네티즌)들은 급식비나 체육복 문제 등 시사투나잇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분개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제기한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7무운동 등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조용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택'해서 간 학교니까 그런 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거나, 학생으로서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것이나 두발규제 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무개념한 멘트마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사학비리'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던 것이다. 사학비리와 연관된 기숙사 시설이나 급식의 질 등 돈 문제가 워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 없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이 심각하게 호소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학생들이 종이비행기 시위를 하면서 내건 요구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소지품검사 중단 등이었지만 네티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진성고의 '비리' 여부에 대해 집중했다. 당연히 진성학원 재단 측의 대응 또한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비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에 집중되었다. 진성학원 측은 이후의 해명이나 대응 과정에서 결코 "진성고에는 그런 심한 두발규제가 없고 소지품검사도 없고.." 하는 식의 해명은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침해는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비리'는 처벌 대상이 되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현실이다.

(실제로 인천외고나 용화여고를 비롯하여 많은 '사학분규'가 학생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학생인권 투쟁으로보다는 '사학 문제'로만 바라본다.)

술.까.말.

나는 진성고가 급식비나 체육복 문제 등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별 관심 없다.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비리의 결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때이다.

급식비가 높은 데 비해 급식의 질이 낮고, 기숙사 시설이 형편없고, 체육복이 너무 비싸다면, 그 배경에 비리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성교제를 금지한다고 하고 교사에 대한 반항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7무운동'과 두발규제, 체벌,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소지품 검사가 학생인권 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에 반대한다.

현명한 진성고 학생 분이 UCC 마지막에서 말했듯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포기해야 하거나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 중인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학교 중 하나는 바로 이 진성고등학교가 아닐까?



진성고등학교 측은 학교 명예를 운운하면서 게시중단 요청을 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돈과 노력으로 학생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사육의 장이 아니다. 입시만을 위한 경쟁과 학생 쥐어짜기의 장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을 하는 곳이다. 사육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한다. 인권 보장을 원한다.

진성고 학생들의 작년 싸움은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진성고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뮤지컬 「그놈을 찾아라」 등에서도 진성고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진성고처럼 학생들이 학교의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 UCC를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처럼 진성고 사건은 비록 학교 안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 학생인권의 현실을 폭로하고 공론화시키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는다. UCC를 올린 학생을 색출해서 사과문까지 쓰게 하는 학교의 괴악함을 포함해서.

진성고를 기억하라. 그것이 한국 학생인권 현실의 한 단면이니.

p.s. 이 글을 게시중단 조치하더라도 이 글 백업을 해봤으니까 중단하면 전부 다시 올릴 것이다. 정말로 이 글을 삭제하고 싶다면 소송을 걸어야 할걸?

p.s.2 진성고 졸업생 분들에게 부탁해서 받은 글을 참고자료로 신는다. 익명의 여성 진성고 졸업생 2분의 글이다. UCC를 제작한 학생 본인이 (강압이든 자의이든) UCC를 삭제했다고 하니 동영상도 다시 올리진 않겠다. 그러나 이 졸업생의 글은 진성고의 현실을 보여주는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게 2, 3년 사이에 확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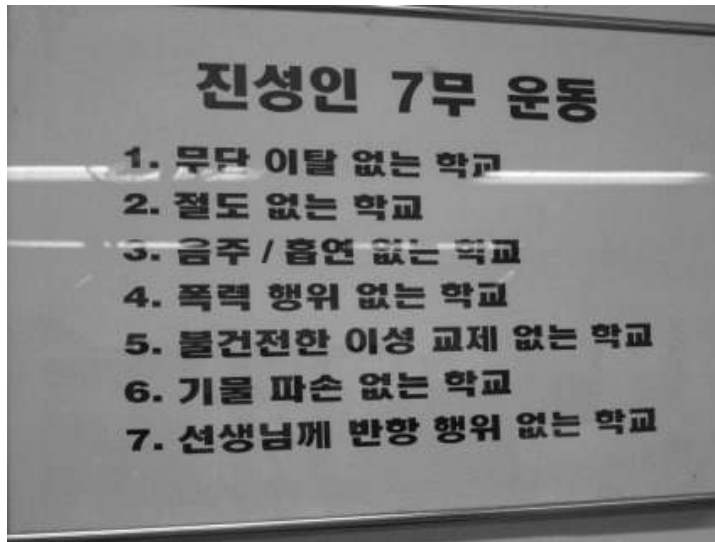
p.s.3 진성고 재단 측의 게시중단 조치나 학생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더 많은 블로거, 네티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진성? - 진성고 졸업생의 이야기1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좀 지났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 학교에 찾아가도 반겨주는 후배도 없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대부분도 학교를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리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내

어찌 잊으랴.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은 내 인생 암흑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잊을 수 없는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같은 학교 단짝 친구들과 함께 땀땀이 입시로 동네 고등학교로 진학할 줄만 알고 공부는 내 신 시험기간에만 짬짬이 하면서 평소엔 탕자탕자 놀기만 하던 중학교 3학년 여름. 학원 땀땀이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작은 다툼이 불거지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있던 후 어느날 어머니께서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하셨다. 나 때문에 화병으로 죽거나, 진짜 날 날 (애정을 담아) 죽여버릴지도 모르겠으니 눈에 띄지 않는 기숙사 학교에 가라는 것이었다.

뜬금없이 기숙사 학교라니. 게다가 진성고라니! 얼마 전에 전교 1등하는 여자가 외고도 과고도 아닌 진성고에 진학한다는 소리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등 하면서 애마음 돌린다고 전교가 들썩거렸었는데! 아니 그보다 내가 거기 갈 수나 있는 거야?

순식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어머니에게 저항해보았다.

‘아니, 가끔 학원 땀땀이 치고 좀 놀러갔다지만(걸렸다), 학교는 선생님들 눈이 무서워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좀 싸우고(걸렸다) 했었지만 기숙사학교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 나이 대에 부모님께 항변하거나 따지는 행위는 언제나 먹히지 않는 법이다. 결국 어머니께 강제 연행 당하듯 끌려간 진성고 입시 설명회를 나는 잊지 못 한다. 지하 강당에 자

리를 잡고 앉아 당시 교감선생님(추정)이 진행하는 설명 가운데 절대 용납하지 못 할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성 7무에 관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진성고에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는 금지입니다! 건전한 이성 교제도 금지합니다!”였다. 당시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몹시 불안해하시던 어머니는 환호하며 박수를 치셨고, 강당에 있던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난 더 이상 참지 못 가셨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뭐 이딴 개떡 같은 규칙이 다 있어! 일어나요! 갑시다!”라고 외치면서 어머니 팔을 끌어당겼다. 뭐라고 그래도 별 소용없이 강제로 다시 의자에 앉혀졌고 입학 전까지 내내 불멘소리를 냈지만 결국... ‘교복이 멋져!’라는 자기위로와 함께 입학했다.

### 진성의 실체

입학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였고, ‘학교가 싫으면 전학 가! 너 없어도 진성을 빛낼 인제는 많다.’는 이야기를 모 선생님이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50명 넘는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 기숙사에 딸린 샤워부스가 10개가 채 안 되서 길게 줄서서 샤워했던 나날, 날이 어두워지면 나타나 내가 내 돈 주고 매점에서 산 까까도 먹지 못하게 하는 야간담임선생님, ‘여자 머리가 귀밑 5cm가 뭔가요, 우린 레고가 아니에요!’라면서 약간의 융통성을 요청하면 ‘학생이 머리 길면 뭐가 좋냐?’에서 시작해서 건의하러 간 학생회장에게 화분을 내던지는 학교 설립자님... 학생의 요구에 대한 학교 측의 대개의 답변은 ‘공부만 하면 되는 이 환경이 얼마나 쾌적하냐?’였다. 어머 스브^^ 입학 전까지 네이버에서 ‘진성고 등학교’를 검색해서 봤을 때 칭찬 99%에 본격 까는 글 1%를 봤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둘 알게 되는 학교의 비리와, 하나 둘 터져 나오는 학생들의 불만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 학교의 분위기에 점차 질려갔다. 그래도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3년만 버티면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 감고 귀 막고 3년을 버텼다. 하지만 솔직히 진성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자부심? 위에 날고뛰는 외고/과고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명문고 출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싶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3년을 죽은 듯 보내면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선생님의 모습과, 죽은 듯 보냈지만 수도권 4년제에 이름 한 번 들어본 대학에 목매던 친구들, 선후배들의 얼굴을 매치시켜보면 그냥 헛웃음만 난다.

그런데 이 모든 세뇌와 강요가 가능한 학교가 진성고등학교다. 전교생 기숙사생활이라는 닫힌 장소에 학생들을 감시하고(몇 년 전엔 카메라도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압력을 가하고 ‘그럴 거면 학교를 떠나라’고 협박하고, 모든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너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학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답이 안 나와 ^^

1318바이러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몇 년 전의 소식이 다시 생각난다.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반대 등 학생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종이비행기 시위를 했을 뿐이었는데 주동자를 물색해서 징계하려 하고, 애국조회 때 교장선생님의 훈화 내용이 “공부 잘 하고, 짧은 머리와 인사 잘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학교의 설립 목적은 이것이다. 생각을 바꿔 학교에 맞추라”는 것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진성에 대한 미련을 아예 털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뒤 이어 학생부장 선생님의 “사랑합니다. 이게 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공부만 하러 왔습니다. 대학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시다. 자꾸 이러면 강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라고 말했음을 알았을 때는 웃음이 나왔고 한 가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 모르겠다^^ 포기하자^^ 난 모르겠어. 나 따위가 손 댈 영역이 아냐^^’

p.s. 쓰고 나니까 마치 “진성은 답이 없어”같이 느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누차 강조합니다. 집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엘리트인데다가 입시 결과도 좀 따져보지요. ‘결과가 좋으면 뭐든 좋다’가 바로 동서고금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입결만 좋으면 됐죠? ^^

진성수용소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길... - 진성고 졸업생의 이야기2

사실 이 글은 한참 전에 썼어야하는 건데 부탁을 받고도 꽤나 잊고 있었지 말입니다. 심지어 부탁을 받은 뒤에 저는 문제의(?) 사랑하는 모교에 방문했는데도 말이지요. 설 새 없이 껌

뺨이는 기억력을 닦으며...죄송한 마음을 담아 썰을 풀어보지요.

저는 7월 28일 화요일, 이른바 '100일제'를 기념하여 진성고등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100일 이냐고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을 맞아 우리의 목표인 '좋은(?)대학'에 잘 갈수 있게 해주십사...수능을 잘 보게 해주십사...돼지머리를 모셔두고 절을 하는 행사이지요. 그런데 주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고3 학생'이 있는 분이 라면 왜 107일에 100일제를 하느냐고 궁금하실꺼여요.(아무도 눈치 못채셨을려나...) 그것은 바로 진짜 100일인 8월 4일에는 학교가 공사를 하기위해 '방크학크'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진성고 학생들에게는 올해와 같이 긴(?) 10일 가량의 방학(이라고 쓰고 휴가라고 읽습니다)이 늘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 100일에 학교에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래 그제 당연한 거지만) 굳이 1주일을 당겨서까지 100일제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각설하고, 100일제의 취지가 어떤 것이고 입시전쟁이 옳건 그르건 간에...사랑하는 후배님들이 수능공부에 허덕이고 있을 것을 알기에 저를 비롯한 몇몇 졸업생이 양손에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진성고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먹을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교복과 체육복, 스포츠머리와 단발머리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더군요. 웅기중기 모인 후배님들께 먹을 것을 건네주자 어찌나 좋아하던지...제발 애들이 먹고 싶은 것 좀 먹게해줘요..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ㅠㅠ 눈물 좀 닦고..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이닥칩니다. 학생들은 별 점 및 체벌 등등을 피해 도망갑니다. 대신해서 남은 졸업생은 욕을 듣습니다. 졸업생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시네요.. 더더욱 자세한 정황을 밝히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또 우리 후배들이 추궁당할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모임은 와해되고, 사왔던 음식들은 쓰레기가 되어 버려졌습니다. 돌아온 초대교장님은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엄하신' 분인 듯, 각종 규제가 더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초대교장님은 문제의 '그 사건'(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학교 현실을 알리는 UCC를 배포한) 때문에 돌아오신 듯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군기(?)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랄까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섞여 '진성수용소'라고 부르던 그곳은 그 별명에 더더욱 걸맞게 변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뭐 전 고등학교 시절이 좋았어요 그때 알게 된 친구들도 정말 소중한데요 모이면 다들 말하죠 '그때가 좋았어...!'. 그렇지만 모두 그때의 답답한 생활까지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때가 좋았다는 말도 결국엔 그 아픈 기억은 다 망각 저 편으로 사라져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간 학교에서 느낀 것은 결국엔 또 자유의 박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했죠 '내가 그놈의 학교 다신 가나빠라!'. 물론 저 혼자 한 다짐은 아니고, 같이 갔던 모두가 같이 말이죠.

그렇지만 내년에 전 그 모든 걸 까맣게 잊고 또다시 손에 '외부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곳은 내 사랑하는 모교이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여전히 공부에 허덕이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년엔 좀 더 살만한 곳 일 꺼야.'라고..

## [인천 선인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선인고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 징계시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2008. 04. 10.

수신 : 선인고등학교 교장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선인고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 징계시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날짜 : 2008.04.10.목)

문의 : youhthr@chol.com

---

## 선인고 학생들의 학내 시위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학교인권문화 조성과 청소년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6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을 주장한 종이비행기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한 이번 시위가 주로 귀교의 두발규제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복장단속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벌점과 징계, 그리고 체벌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먼저 우리는 학생들이 요구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 인권이자 원칙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와 현재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귀교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주모자를 색출하여 퇴학시키겠다는 등 학생들에게 조처 시간을 통해 위협을 가했으며, 실제로 시위를 하지는 문자를 보낸 학생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시위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국제인권조약들과 헌법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

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5. 우리는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위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집회·시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과 학생지도과정에서의 인권침해들을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10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 [인천 예일고등학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인천 예일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와 관련해  
서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08. 12. 16.

# 인천 예일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와 관련해서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시간 :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문의 : 010-2480-3328 공현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단체들

1.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좀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만, 그러기 어려운 요즈음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에게 기사 좀 잘 써주십사 하는 인사드립니다.
2. 인천 예일고에서 지난 12월 1, 2, 3일에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시위 사실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또한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이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인천 예일고등학교(인천 지하철 박촌역)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자세한 자료는 밑에 첨부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인천 예일고등학교 학내시위 관련 상황 정리

12월 1일 월요일

-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을 요구하며 학생들 수십 명이 점심시간에 시위를 함. 시위를 할 때 교사들이 사진을 찍거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도 있음.

12월 2일 화요일

- 연달아서 학생들이 시위를 함. 6교시 무렵에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서 폭언을 하며 진술서를 강요. 다른 학생들 20여 명도 불러내서 욕설과 위협을 하며 진술서를 강요.

12월 3일 수요일

- 학교 측의 압박으로 10여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함. 학교측에서는 학생회 등에 논의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러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

12월 5일 금요일

-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한 명이 이전에 두발규정 위반 등으로 누적된 벌점 때문에 열린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 징계가 결정되었음을 구두로 통보받음.(서면 통보되지 않음.) 처음에는 두발규정 위반과 시위를 한 것 모두가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으나 선도위원회 직전에 두발규정 위반 사항만 선도위원회에 올린다고 통보 (\*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밑에 첨부한 의견서에 더 자세히 적음.)

- 교사가 16일에도 다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그때까지 두발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위 등을 하려고 하면 퇴학시키겠다고 위협. 이는 실제로 징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됨.

12월 8일 월요일

- 벌점을 사유로 같은 징계를 받은 다른 동급생들과 달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은 8일부터 곧장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아서 사회봉사를 시작.

12월 15일 월요일

- 사회봉사가 끝난 뒤, 재심 등의 절차를 알고 징계 받은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다며 학교 측에 재심 청구를 함.

© 학생들이 촬영한 시위 사진들



## ◎ 예일고에 전달하는 의견서

수 신 : 인천예일고등학교 교장

제 목 : 인천예일고의 학생인권 요구 학내시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날 짜 : 2008년 12월 16일 (화) 문 의 : youthhr@chol.com 02-365-5359

### 인천예일고 학생들의 학내 시위에 지지를 표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하며, 인천 예일고는 두발규정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3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을 주장한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학생들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한 이번 시위가 주로 귀교의 두발규제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복장단속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벌점과 징계를 가하는 등 학생인권침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요구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원칙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와 현재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고, 두발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두발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3.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귀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것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우리는 시위 도중에 귀교의 한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도 있었으며, 귀교의 학생부장 교사가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12월 2일 수업 중에도 불러내어 언어적 폭력을 가하며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부장 교사는 대략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하며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로, 매우 비교육적이며 반인

권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또는 해당 교사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시위에서 주동자로 지목당한 학생 한 명이 12월 5일에 열린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 징계를 받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비록 이러한 징계가 그 이전에 이 학생이 두발규정 위반으로 인해 쌓인 벌점에 의거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날에 교사에게서 ▲시위를 한 사실("선동") ▲두발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이 두 가지 사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비록 선도위원회 당시에는 두발규정 위반만으로 열린 선도위원회라고 다시 학생에게 전달을 했으나, 이후에 교사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시위한 것만으로도 퇴학감인데 봐준 거라는 식의 언급을 한 것 등은 이 징계가 시위를 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 이전부터 두발규정 위반 문제 때문에 매일 같이 불려가서 추가 벌점을 받던 해당 학생이, 시위 후에는 가중하여 벌점을 2점 이상씩 받았고, 12월1일 시위 이후부터 12월 5일 선도위원회 전까지 받은 벌점이 10점에 이른다(한 것선도위원회에서 학생 당사자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유(두발 등 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점)로 같이 사회봉사 5일 징계를 받은 동급생들의 경우 사회봉사를 방학 때 이행하라고 했으나 해당 학생의 경우 12월8일부터 곧장 이행하도록 한 것 등도 시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의심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교의 학생부장 교사 등이 해당 학생이 시위를 한 이유는 내년에 학생회장예 출마하려 한 것이라거나 해당 학생이 '한번만 봐달라'고 빌었다는 등의 사실무근한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한 것은 정식 징계는 아니었을지라도 충분히 해당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책임한 언동이자 시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위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되며, 징계를 포함해서 시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의심되는 모든 조치들을 철회하거나 해명해야 할 책임이 학교 측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5. 우리는 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징계나 위협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는 민주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국제인권조약들과 헌법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징계나 불이익을 받아야 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 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도 2008년 10월, 학내시위는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며 이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로 개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두발규정, 그것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개정을 요구한 두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과 학생지도과

정에서의 인권침해들을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홍사단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청소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청소년 다함께, 인권교육센터 들, 그 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진보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하파타 순)

## 청소년인권 거리 행동







## 개요

# 청소년인권 거리 행동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결성 첫해부터 청소년인권 보장 목소리를 널리 알려내는 한편 청소년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거리행동을 다채롭게 기획했다. 2006년에는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집회를 개최했고, 이어서는 두발자유를 향해 달리는 ‘두발자전거 행진’ 시위와 전국 동시다발 교육청 앞 1인시위도 열렸다. 2006년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과 더불어 청소년인권 보장을 외치는 최초의 청소년 거리행동이 집약적으로 펼쳐진 한 해였다.

2007년에는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06년이 청소년인권 의제의 최선두에 두발자유가 있었다면, 2007년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입시 경쟁, 학교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청소년인권의 의제를 대폭 확대시켜 거리행동을 조직해 나갔다. 그만큼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입시경쟁이 격화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자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거리행동과 집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에 맞춘 거리행동은 자취를 감추었다.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홍보 캠페인〉 소장사진, 2006. 04. 22.





유윤종,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인권오름 제 3호, 2006. 05. 10.

##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유윤종

### 조용한, 그래서 무서운...

학교는 하나의 폐쇄적인 사회다. 교문과 담벼락을 기준으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세계는 구별되며, 학생이나 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 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 사이에도 구별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는 “사회로 나간다.”라고 말한다. 당연히 학교 안의 일은 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밖의 일은 밖에서 할 일이라서,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거리를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떠들면 “학교 명예 훼손”이다. 학교 안의 일은, 정말 뭐 살인이라도 나지 않는 한은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예컨대 내가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학교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교육청이나 외부 언론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김제서고의 예처럼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급식이 값에 비해 좀 안 좋아요 비리라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글이라도 올렸다가는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학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깥사람들은 웬만해선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그나마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학교 안의 이야기가 학교 밖으로 종종 새어나오긴 하지만,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학교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 학생 입 꺾매는 학교의 ‘명예’

지난 4월에 양동중학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은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였다가 교사의 제지로 곧 해산 당했고 학교는 즉각 교사 및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대처방안과 징계를 논의했다. 만약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하나가 청소년인권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학내시위는 학교 밖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징계 역시 정말이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학생들을 침묵시키고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학교의 모습은 양동중학교와는 달리 세간에 잘 알려지

지 않았던 경화여중의 학내시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3월 18일 경기도 광주시 경화여중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학내시위는 구호 한번 못 외치고 조용히 매를 들고 뛰쳐나온 교사들에 의해 ‘진압’됐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힌 학내운동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행동에 나서면 학교는 조용히 학생회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할 문제를 ‘학생답지 않은 행동’으로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만약 밖에 알려지면 학교 명예가 실추된다며 학생들의 입을 껴매려 든다. 이처럼 학교들은 학내시위나 학내행동에 나선 학생들에게 그 특유의 폐쇄적 구조를 이용하여 부당한 탄압을 일삼아 왔으며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서의 행동은 자신에게 불이익만 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4월말 두발자유 학내시위가 있었던 양동중학교. 높아보이는 담벼락만큼이나 '학생인권'의 벽도 높다.

### 용감한 1인, 그러나 꿈쩍 않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섰다. 얼마 전 있었던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학생의 1인시위는 학교 교문 앞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1인시위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월요일 0교시, 학교 안에서 또 다시 학생 억압이 시작되는 시간의 상징성도 강하지만, 교문 앞이라는 공간의 상징성도 강하다. 교문 앞에서의 시위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학교 밖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2004년 1인시위의 선례를 남긴 강의석 씨의 경우에도 학교 안에서 방송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가 먹히지 않고 징계만 받게 되자, 교육청 앞, 법정 등 학교 밖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현실을 뒤엎지는 못했다. 비록 강의석 씨에 대한 학교측의 퇴학처분은 법정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철회되었고 대광고등학교는 강제종교수업을 앗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대광고를 비롯하여 일부 미션스쿨들의 강제적 종교수업은 계속되었다. 동성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오히려 아침 7시 강제 등교는 여전하고, 오히려 0교시 강제보충을 9교시 강제보충으로 돌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2004년 강의석 씨 1인시위 당시, 나는 강의석 씨에게 마음속으로 많은 응원을 보냈으나 한편으로는 세간의 이목이 종교자유와 학교 내 권력구조라는 문제의 핵심보다 ‘단식’이나 ‘서울대 진학’과 같은 강의석 씨 개인의 이야기에 쏠리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했다. 확실히 세상은, 영웅 몇 명의 힘만으로 바뀌진 않는 것이

다. 이번 동성고등학교 오병현 씨의 1인시위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되지만, “제2의 강의석”이라고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 변화는 학교 밖 광장에서부터

때문에 학생들은 산발적인 저항, 개인적인 저항이 아닌 더욱 강하고 영향력 있는 결집된 다수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 바로 이번 5월 14일에 열리는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행사이다. 학내 시위가 이어지고 거리 집회·시위가 일어난 것은 2005년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세력이 되려고 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공적인 장소—거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언하는 사회적 주체가 되려는 것이다.

더 이상 학교는 사회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학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학교 안이 아닌 광장에서부터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결집된 힘이 학교 안으로 침투하고 파고들면 학교 안에서의 권력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관계는 그 근본부터 변화할 것이다. 청소년은 당당한 권리의 주체, 변혁의 주체 중 하나다. 그 첫걸음으로 2006년 5.14는 ‘두발자유 바로, 지금’을 내걸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완전한 두발자유를 얻어내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이와 함께 5.14는 체벌, 정치활동 금지, 과중한 학습노동, 종교탄압 등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학교구조를 바꾸기 위한 요구들을 외칠 것이다. “We can change Schools!” 5.14 홍보용 웹자보에 쓰인 문구다. 그리고 이는 종래에는 “We can change Society!” “We can change World!”가 될 것이다.

5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인권을 위한 청소년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번 행사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5월 14일은 11월 3일 광주학생항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이발 모습. 학교는 인권침해의 성역인가?  
 <사진 출처: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준비위원회 www.nocut.or.kr>



지난 8일 체벌 금지, 두발자유, 0교시 강제보충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선 오병현 학생



일운동기념일—학생의 날에 맞먹는 중요도를 지닌다. 나는 얼핏 5월 14일이 사회의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되는 미래의 어느 날을 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주최로 명동에서 열린 5.14 행사 홍보 캠페인. 두발자유를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겁다.

#### 학교 실명을 밝히는 이유

고, o중, s공고, o외고... 학생 인권문제를 다룰 때 흔히 많은 매체들이 학교이름을 밝히지 않고 첫 글자만 따서 쓴다. 아직 학생의 주장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사기업 등 다른 영역의 인권 침해 주장을 다룰 때와 견줘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학생’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 못 미더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는 공적기관에 속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인권오름>은 인권탄압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학교의 이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들이 알 권리도 있다고 본다. 학교의 ‘거짓’ 명예가 학생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편집인 주>



## 청소년 인권, 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제

10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청소년 인권 찾기 선언’이라고 쓰인 종이 플래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시대가 계속 변해 왔지만, 학교는 여전히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자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옛된 기운이 섞였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다. 가면을 쓰고 마이크를 잡은 청소년들은 ‘바리깡’으로 상징되는 폭력적인 두발 규제, 교사의 지나친 체벌,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보충수업,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강요하는 종교수업 등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학교가 자신들을 고유한 개성을 가진 주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갖고 있지만, 학교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개성이 없는 똑같은 모양의 가면을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의 학교가 학생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상태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임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의 청소년 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가 주최했다. 오는 14일에 예정된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교육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지난해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후 1년

지난해 5월 14일 학교의 강제적인 두발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촛불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집단 움직임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7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각 학교에서 ‘강제 이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두발 제한이나 단속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강제적인 두발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 후 일 년이 지났다.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이들은 지난해 열린 촛불시위로부터 정확히 일 년이 되는

올해 5월 14일에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 인권의 실태를 되돌아보는 한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들이 가면을 쓰고 이야기한 주제는 강제적인 두발 규정부터 차별과 종교 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잘 보여준다. 14일에 예정된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두발 규제의 철폐에만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 달리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인권침해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인권위가 내놓은 강제적인 두발 단속에 대한 권고안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안은 사실 절충안에 불과하다.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지는 오직 청소년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단속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회원 유윤종 씨의 말이다. 유 씨는 14일 행사에서 청소년들의 두발 기본권에 대해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제제기 잇따라

청소년 인권을 전면에 내건 이들의 움직임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났다.

지난 8일 아침 서울의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오병헌 군이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은 이 학교 교사들이 제지할 때까지 시위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과도한 차별과 강제 보충수업 실시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모금하는 성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던 적이 있다. 학교 게시판을 통해 이에 대해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생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막상 학생의 권리에 대해 눈을 뜨고 보니, 학교가 학생 인권의 불모지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학교의 수많은 반인권적 관행들이 건디기 힘들어졌다. 결국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위를 준비했다.” 8일 저녁 기자와



△ 5월 10일 청소년들이 교육부 앞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만난 자리에서 오 군이 한 말이다.

학교의 두발 규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양동중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다. 불과 십여 분만에 끝난 이날 시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지만,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하나가 청소년인권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



자료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4년 강의석 사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촉발

#### 의 계기

2004년 서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씨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비기독교인 학생의 예배 선택권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강 씨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학교 역시 학생에게 이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 혹은 청소년 인권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적되면서까지 굽히지 않은 강 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학생 인권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강 씨는 그해 연말 한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동성고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한 오병현 군도 2년 전 강의석 씨가 진행한 투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씨의 영향을 받은 게 단지 오 군만은 아닐 것이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유예해도 된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올해 서울 구로고등학교를 졸업한 전누리 씨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동성고에서의 일인 시위나, 4월 19일 양동중학교 학생들의 시위 등은 학생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다.

△ 학교생활영역의 인권침해 실태 © 프로메테우스

### 지난해 '학생 두발 자유' 완전허용한 대만, 이제 한국은?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과 교육 환경이 유사한 대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지난해 8월 31일 대만 정부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완전한 두발 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2000년 민진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만에서는 과거 국민당 정부 시절의 권위주의적 관행에 대한 청산 작업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런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을 자극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집회가 연이어 벌어졌고, 결국 대만 정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진당 정부 출범 이후의 대만 사회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은 닮은 점이 많다. 대만과 한국 모두 권위주의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시춘기를 보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조금씩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자 최 의원의 미니홈피에는 이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의 게시물이 쇄도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두발 규제를 비롯한 각종 학생 생활 규정상의 인권침해 요소 철폐, 과도한 체벌 금지, 학생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강제로 실시하는 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에서 청소년 인권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화두가 돼가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오는 14일에 예정된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5. 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웹자보, 2006. 05. 14.

언제까지 억눌린 채 살 텐가?  
모이자! 모이면 바꿀 수 있다!

5.14청소년인권행동의날


**두발자유  
바로, 지금!**

5월 14일 오후 3시  
광화문역 2번 출구 KT 앞

<http://nocut.or.kr>

청소년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요 얻을 것은 인권이다.”

*We can Change Schools*



5.14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작년 5월 14일 청소년들이 거리에 모여 처음으로 두발자유를 외쳤습니다.  
대만에서도 작년 청소년 집회가 있었고, 결국 6월부터 두발자유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째 제자리걸음..  
모이지 않으면 두발자유도, 학생인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올해 5월 14일, 다시 한 번 모여 청소년의 외침을 들려줍시다.

우리 학교는 두발자유가 됐더라도, 내가 지금 청소년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 작은 행동을 모읍시다.

### 〈할 수 있는 일〉

1. 5월 14일 3시에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2. 주위 사람들에게 문자, 싸이쪽지, 블로그 등을 통해 5.14 행사를 알려주세요!
3. [www.nocut.or.kr](http://www.nocut.or.kr)에 들러 글을 남겨주세요!

### 〈행사준비위원회〉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

+

낮추자(만18세선거권운동모임)

문화연대

학교내종교자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 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5. 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선언문)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2006. 05. 14.

<선언문>

##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학교는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은 학교의 인형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 찾기 선언을 외친다.

하나, 두발규제는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로 지금, 두발규제 조항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맞지 않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모든 체벌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을 통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체벌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싶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종교사학재단이 요구하는 강제종교수업의 금지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입시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는 0교시, 강제야자, 하루 15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입시공부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등수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나 찬밥신세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해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법으로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를 민주화시켜야 한다.

하나,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부실한 교육과 현장실습현장에서의 노동력 착취, 그리고 사회적 무시 등이 실업계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계 교육을 정상화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두발 자유 바로 지금!” 행사는 청소년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얻어내기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다.

2006년 5월 14일

참가자 일동

## 사그라지지 않는 십대들의 외침

지난 14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선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1년 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열린 집회의 뜻을 이어 열린 이번 집회엔 ‘인권’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십대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넘어서 ‘십대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 집회결사의 자유 막는 ‘무언의 압력’ 여전

<5.14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집회는 ‘두발자유화’와 ‘입시교육’의 문제와 함께 종교자유,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등 십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요구들로 가득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준비한 이번 집회는 200여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작년 700여명의 교육관계자들이 동원되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저지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올해 4월 19일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청소년들을 학내시위나 교외 집회참가를 이유로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 13일 경기, 인천, 서울 지역 학생주임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회 당일 12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이 행사장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별다른 마찰 없이 행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집회 내내 참가 학생들이 느끼는 ‘신변 노출’에 대해 긴장감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징계의 위협 속에서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학생 인권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자유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회는 야외학습장”이라고 격려했다.

### “사회적 쟁점 해결, 우린 이렇게 배웠다”

한 남학생은 “4, 5월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명분으로 두발규제가 매우 심하다”





며 “단속과정에서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밀고 라이터로 지지는 등 비 인권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지 가치관의 혼란이 온다.” 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이어서 “학교라는 곳이 재미있게 다닐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 이외의 다른 것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자신을 ‘서울 M고 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학생은 신분노출의 위험 때문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다. 단상에 오른 학생은 “두발자유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안 왔을 것이다. 학생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며, 집회참여가 ‘인권’에 대한 고민에서 우러나온 행동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요즘 사회과목에서 사회적 쟁점의 해결에 대해 ‘가치의 기준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배운다. 그런데 두발규제는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십대들이 처한 상황의 괴리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서울 S여고 1학년 학생은 “선생님들께 두발문제를 말씀 드리면 ‘학생시절에 규율에 따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신다.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도 아닌데 왜 순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두발 자유화가 되면 학생들이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유를 찾겠다는 거지 학교에 미용실 차리겠다는 거 아니다”라고 강조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억지 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 십대의 인권찾기, 이제부터 시작

이 날 집회에서는 2000년 두발자유 운동을 펼쳤던 박준표(27) 씨가 그 이후 7여 간 길러온 머리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신체의 자유를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21세기가 열린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무시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최 측은 두발규제의 폐지를 청소년 인권 찾기의 시작이자 발판으로 보고 있다. “인권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학생의 말처럼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십대들은 자유발언대를 통해 당당한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낭독된 청소년 인권 찾기 선언문에서는 두발 자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체벌의 폐지,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 보장, 0교시 폐지 및 강제적 자율학습 중지 등 다양한 요구가 포함됐다.

각 단체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교육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나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풍당당 청소년들, 「“일어나! 우리가 바뀌야 해!” - ‘학교 성역’ 허무는 위풍당당 청소년들」, 인권오름 제 6호, 2006. 05. 30.

## “일어나! 우리가 바뀌야 해!”

### ‘학교 성역’ 허무는 위풍당당 청소년들

#### 위풍당당 청소년들

지난 5월 14일 광화문에서는 ‘두발자유 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 보장’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즉석 자유발언대를 열었다니 여러 청소년들이 불끈불끈 마음에 품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 친구들과 깜짝 두발자유 거리캠페인을 하고 광화문을 찾아온 <자전거 폭주(?) 연합>의 한 남중학생

“우리 학교는 옛날부터 두발규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머리가 걸리면 지도부장 선생님과 정답게 손을 맞잡고 이발소 가서 머리를 밀거든요. 우리 머리 다 밀렸어요. 저는 머리 때문



에 전학까지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렸습니다. 그래도 ○○중학교에 있는 이유는 친구들 때문에 있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학교가 싫으면 학생이 떠나라, 이딴 헛소리를 지껄이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마음만 바뀌면 학생들 백 명, 천 명 편해지는데, 선생님들 삼십 명, 사십 명 때문에 학생들 백 명, 천 명이 계속 인권침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 이제 이거 (방송에) 나가면 학교 잘리고 지도부장 선생님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전학 갔다 돌아오는 바람에 양아치 소리 듣고,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 두발자유 안되면 맞아 죽습니다. 두발자유 파이팅!”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행사에서 열린 '인권 입학식' 퍼포먼스 사진이에요.

## # 할 말은 하는 위풍당당 여고생

“두발자유 해달라고 하면 소위 윗분들이 여러 말씀 하시죠 ‘우리 학교 두발자유 하면 근처 있는 날라리들이 다 우리 학교 와서 수준이 떨어진다.’ 다른 학교가 안 하고 우리학교만 하기 때문에 모인다는 건데, 다 같이 하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생답다’의 기준이 뭐니까? 한 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학생시절에 규율을 따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시는데, 학생은 인간입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사회에서 원하는 쪽에 길들여져 가는 기계라든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들의 말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학교에 머리 염색하고 멋 내러 오냐, 그래서 공부는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발자유는 단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표시이고, 우리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학교에 미용실 차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 매직이나 파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두발자유 돼도 할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발자유 얘기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염색하고, 왁스로 머리 세우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학생회 허수아비 된지 오래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갈 때 점수 1점 더 따려고 들어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생, 우리의 자식도 이렇게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 '귀차니즘'의 압박을 이겨내고 집회에 온 남고생

“4월, 5월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두발규제가 심한데... 두발단속을 하면서 비인권적인 행위들,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다든지, 라이터로 머리를 태운다든지, 발로 차고 각종 욕설을 하는 걸 보면, 저게 과연 ‘남’이라고 불러야 하는 선생님인지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기르고 싶어서 우리는 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기르고 싶은 사람은 기르고, 짧게 하고 싶은 사람은 짧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힘이 있고, 학생도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학교 앞 1인시위에 나섰던 동성고 오병헌 학생

“강제 0교시, 비상식적인 두발단속, 체벌과 폭언, 읽을 수 있는 책 제한, 학생회 성적 제한, 말할 수 있는

권리 제한,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이게 지금 한국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저에게 많은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열하게도 조용히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용히 있을 땐,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양심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난리 났습니다. 교장, 학생부장, 학년주임이 부르고 담임선생님이 부르고 하루 종일 수업 못 듣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0교시를 폐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사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전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게 몇 가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선언합니다. 학교의 모든 부조리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학교의 부조리에 끝까지 싸우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 정도를 바꿨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은 전국의 학교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 2년 전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했던 강의석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종교재단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깝다고 해서, 또는 그 학교의 입시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주 한 시간씩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를 가지도 있다면 그 학생은 학생회장도, 학생회 부회장도, 학급회장, 부회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양보나 타협, 합의, 중용 등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인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인권을 지금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입니다.”



[끄덕끄덕 맞장구]

우와~ 또래 친구들이 집회에 나와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나오는 게 무척이나 귀찮았을 텐데, 선생님들도 감시하러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저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지금 어른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잠자코 어른들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자기의 권리를 깨달았고, 권리를 찾아 거리로 나와 어른들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두발자유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두발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발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원하고, 체벌금지를 원하고, 청소년이라고, 실업계라고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위한 공부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른들의 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들은 청소년과 대화하고, 인권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더 이상 청소년을 공부하는 기계로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교 안 문제만 주로 얘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하고 외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의 동생이, 우리들의 자녀가 또 다시 요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의 당당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 이슬




박종식 기자, 「두발자유 힘찬 페달을 밟아라」, 한겨레, 2006. 06. 18.


## 두발자유 힘찬 페달을 밟아라



[한겨레]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10여명이 18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 등 명동 일대에 서 중·고생에 대한 두발규제를 없애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자전거·도보 행진 시위를 벌였다.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두발자유 바로지금**  
그 열정을 이어가자!



**청소년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두발자유원정대, 청소년인권 위한 거리행진**

**우리가 입을것은 죽세 뿐입니다**  
**그리고 얻을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2006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5시**  
**명동성당~대학로**

- 행 사 내 용**
- 오후 3시~3시20분 명동성당에 집결  
행진 전 공유 행사 20분 동안 진행
  - 3시20분 명동에서 청소년인권홍보, 행진개시
  - 4시 동대문운동장 도착, 청소년인권홍보, 휴식  
(늦게 오는 분들 여기서 합류 가능)
  - 4시20분 행진 재개
  - 4시50분 대학로 도착, 정리



**두발자유! 학생인권법 통과/제정!! 청소년인권 보장!!!**  
대세는 저항하는 청소년!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자전거 갖고 올 수 있는 분 갖고 오세요. 음료수도 갖고 오시면 좋아요

<http://nocut.or.kr>  
문의전화) 016-297-9803



〈두발자유원정대, 청소년인권 위한 거리행진〉 소장사진, 2006. 06. 18.





## 청소년인권활동가와 교육부 관계자 면담 보도자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청소년인권활동가와 교육부 관계자 면담(총3매)

날짜 : 2006.06.29

문의 : 배경내(017-214-3550), 전누리(016-297-9803)

1. 인권 신장과 정론보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연대,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등이 참여한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이하 5.14집회 준비위)에서는 지난 5월 14일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정책에 관한 교육부에 입장을 묻고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제 6월 28일 교육부와의 면담이 성사되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면담을 위해서 5.14집회 준비위에서는 실제 학교현장을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 3명을 비롯한 청소년인권활동가 총 10명이 참석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김영운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오석규 교육연구관, 김석연 교육연구사가 참여해 학생인권정책에 대해 2시간 30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 어제 면담에 대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논평] 교육부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학생인권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행사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향후 정책을 듣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마침내 6월 28일 그 자리가 마련되어 학생인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의 일부로서 참가하였다.

###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의 무례**

그러나 그 면담의 내용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김영윤 씨가 면담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와 낮은 인권의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5.14 행사를 필두로 계속해서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면담은 그동안 침묵하던 행정당국이 그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으며,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소중한 자리였다. 김영윤 씨는 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진지한 자세로 면담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김영윤 씨는 본래 5시였던 면담시작이 약 30분이나 늦춰지도록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으며 다른 일정이 바쁘다며 10분 정도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한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인 자리임에도 처음부터 반말을 하여 은연중에 청소년들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고,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참석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그 정도로 길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를 단순한 머리길이의 문제로 취급하는 등 미흡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우리는 행정부처의 책임자가 이와 같은 무례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실망을 표하며, 부디 교육부가 앞으로는 이런 점에 더 주의해주시기를 바란다.

### **인권의식, 책임의식, 현실인식 부족이 아쉬워**

2시간이 넘는 긴 면담에 성의를 갖고 임해주신 교육연구관 오석규 씨와 교육연구사 김석연 씨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그러나 오석규 씨의 발언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듯이 교육부의 입장이 여전히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두발규제를 정하라.”라는 식의 ‘합의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 인권의 원칙은 합의와 다수결만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노력(“투쟁”)과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는 김석연 씨의 이야기는 정부 담당자의 것으로서는 부적절했다. 민주화나 사회 변화가 법령이나 공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책임과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청소년

년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김석언 씨의 어조는 비록 원본적으로 옳다고는 해도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오석규 씨와 김석언 씨는 우리가 20여 일 동안 nocut.or.kr을 통해 모은 44건의 학교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또 학교에서 실제로는 ‘민주적인 합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였으나, “부당하게 체벌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등의 이야기를 하여 현재 학교와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 교육부의 구조 개편 필요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은 단순히 담당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교육연구사들의 15가지가 넘는 업무 분류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교육연구사 하나가 전담하고 있는 데 비해 학생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는 인성교육, 청소년정책 분야 등 세 분야를 한꺼번에 맡고 있다. 오석규 씨 또한 면담에서 학생인권을 여러 업무를 다루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사소한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교육부가 학생인권 분야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었다. 11,0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여 유일한 담당자인 김석언 씨가 쏟아지는 민원들만 상대하기도 벅차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결코 교육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이며, 따라서 학교를 인권침해의 장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교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인권보장이야말로 교육의 밑바탕이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인권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며, 인력도 더욱 충원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 정책 수립과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학생인권종합대책은 학생입장 중심으로

우리는 이처럼 열악한 업무 환경에도 교육부의 김석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7월부터 조사를 하여 11월까지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법령 제·개정까지도 필요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오석규 씨와 김석언 씨의 말에 한층 더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학생인권 대책은 학생의 입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인권 정책을 세울 때 비장애인의 입장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을 더 중시하듯이 학생인권 대책 또한 학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석언 씨 등은 학부모와 교사,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입장보다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행여나 일부 교육부 관계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때문에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교육부의 학생인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진 건설적인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교육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하는 일들이 단순히 전시용 행정이나 공문 몇 장 보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들어온 민원들만 해결하는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 문제에 투입하는 인력과 자원부터 늘려야 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더 이상 공허한 핑계를 대지 말고 건설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6년 6월 2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면담〉 소장사진, 2006. 06. 18.



## 전국릴레이 1인시위 기획서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인권침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들에서는 그 것에 대한 항의를 교육부에 하였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라는 책임회피만을 일삼았으며, 지방분권시대라 교육청에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말만을 해왔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청소년들은 정부 기관의 인권보장 책임을 명확히 묻고 청소년인권 문체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의 집중 1인시위를 시도합니다.

때 : 7월 31일~8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각 지역 사정에 따라 시간대는 조정 가능)

장소 : 참가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앞.

서울 서울시교육청 앞 (참가자 있음.)

인천 인천시교육청 앞 - 이수나로 인천 회원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 - 이수나로 수원 회원

전주 전라북도교육청 앞 -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참가자 있음.)

대전 대전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앞 - 이수나로 대전지부 (참가자 있음.)

대구 대구시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앞 - 이수나로 대구 회원

부산 부산시교육청 앞 - 이수나로 부산 회원

울산 울산시교육청 앞 - 이수나로 울산지부 (참가자 있음.)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앞 - 이수나로 회원 1명?

광주 광주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광역시와 도가 겹치는 경우 시위자의 편의와 지나다니는 인구를 고려하여 결정.

### 방식

참가자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시도교육청 앞에서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정해진 시간동안 일인시위.

피켓 내용 : 학생인권 대책 확실하게 수립.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탄압으로부터 학생 보호 촉구. 두발 자유,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확실하게 감찰하여 근절할 것 등 중에서 선택하여 요구.



정혜규 기자, 「 “학생인권 개선하라” 전국동시 1인시위연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08. 01.

## “학생인권 개선하라” 전국동시 1인시위 연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7일부터 시도교육청 앞 1인시위

**전국 동시다발적  
교육청 앞 1인시위**

**왜 하나?**  
쓰담바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제대로 않으니  
청소년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인권보장을 촉구하자

**어떻게 하나?**  
8월 7일부터 하루 1~2시간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돌아가며 피켓 들고 서있기

**누가 하나?**  
각 지역에서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http://nocut.or.kr>),  
담당자 오병헌(010-6351-4817)로 연락  
<http://cafe.naver.com/asunaro>에도 신청

1인시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상의해주세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특히 이번시위는 학교앞에서 빼앗긴 인권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열다 징계를 받은 오병헌(고3)군이 주도로 참여하고, 시위가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전주 등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병헌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주장할 때마다, 교육청에선 늘 해당 학교의 자율에 맡기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해 바라만 보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교  
육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열 예정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nocut.or.k  
r)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촉  
구하는 1인 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  
다.

#### 청소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 인시위 진행

#### “학생인권침해 바라만 보고 있는 교 육청에 책임 물을 것”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그동안  
학생들이 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을 요  
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  
고 있다며 이번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했다.

또한 오군은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며 학생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전주, 진주, 울산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1인시위를 할 학생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선 이번 시위 이후에도 학생인권 개선에 관심있는 학생을 모아 지속적으로 ‘교육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현석 기자, 「"시위 외에는 방법이 없었느냐고요?" 서울 동성고교생, '학생인권'에 관심 촉구' 교육청 앞 시위」, 프레시안, 2006. 08. 07.

## "시위 외에는 방법이 없었느냐고요?"

### 서울 동성고교생, '학생인권'에 관심 촉구' 교육청 앞 시위

교육청 :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란다. 절차를 거쳐 학교에 이야기 하렴."

학교 :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마."

지난 5월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던 서울 동성고 3학년 오병헌 군이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오 군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수원, 전주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세금 먹고 뭐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간 오 군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는 말로 자신이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 교육청과 학교, 학생의 문제제기에는 관심 없어

오 군은 "지난 5월 8일 학교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제기의 당사자인 내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다. 심지어 내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교육청의 관료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교육청은 학생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사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오 군은 고교 1학년 때 불우이웃돕기 등의 학내 모금활동이 반강제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면서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생의 권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할지를 놓고 오래 고민해 왔다는 오 군은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알렸다가 오히려 학생의 신상정보가 학교에 알려져 곤욕을 치른 사례가 수도룩하다"며 교육당국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오 군은 "교육청에 문제제기할 경우 담당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거나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문제제기 하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또 학교에 직접 이야기할 경우에는 '왜 나서느냐'라거나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며 "그렇다면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군은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직접 교육청 앞에 나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누구나 학교에서 겪었음직한 문제들 "하지만 어른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학 입시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의 오 군이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는 부담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비리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누구나 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해 봤음직한 것들이다. 교사의 비인격적인 체벌과 폭언,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우열반 편성, 아침 식사를 거르게 만드는 0교시 수업, 획일적인 머리 모양을 강제하는 것,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방해 등이다.

그가 '시위'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귀 기울이는 어른들을 만날 수 없었을까? 뜨거운 햇살 아래 땀에 젖은 오 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공동준비위원회, 「 '4.14-미친학교를 혁명하라! 그 시작을 알리는 청소년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7. 04. 10.

## <보도자료>

# **‘4.14-미친학교를 혁명하라!’**

## **그 시작을 알리는**

## **청소년 기자회견**

- 때: 4월 10일(화)
-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공동준비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문화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 〈상황보고〉 2007년 1학기 학생인권실태 현황 - 각 학교사례를 중심으로

- 2월 21일 광주 - 한 2학년 남고생이 성적을 비판하여, 아파트에서 목을 매 자살.
- 3월 2일 서울 보성고 -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 면학 분위기가 훼손된다며, 핸드폰 사용 전면 금지 및 두발 복장 규정 엄격한 적용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내보냄.
- 3월 5일 서울 신목중 - 강제이발에 항의하여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  
서울 단대부고 - 두발단속 후 상습적 강제이발
- 3월 9일 신목중, 단대부고 - 경향신문, 1318virus 등 언론에 보도됨
- 3월 12일 부산 이사벨중 - 두발규제를 반대하는 학내시위 시도 그러나 시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학교 당국에 의해 시위 무산.
- 3월 12일 서울 중앙고 -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 일어난. 학교당국은 주동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협박을 함.  
후에 다시는 집단행동을 주동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함.
- 3월 14일 서울 중앙고 - 교육,인권,청소년 단체가 중앙고에 징계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냄. 학교당국 징계 시도 철회.
- 3월 부산 백양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회원이 청소년 인권 관련 전단지들 돌리다가 학교 측에 의해 제재를 받음. 학교측은 학생에게 아수나로는 불순단체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탈퇴를 요구함.
- 3월 20일 분당 송림고 - 학내게시판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글을 부착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학교당국 허가받지 못한 서명운동이라는 이유로 제지.
- 3월 23일 안양 평촌고 - 학생인권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진술서 작성 요구.
- 3월 25일 인천 산곡중 - 산곡중 한 학생이 네트워크 카페에 학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을 올림.
- 3월 27일 교육부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에서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학생회장 또는 반장 출마" 성적 제한, "학생징계시 재심요청 불허", "막연한 외부단체 가입 및 활동 금지"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 두발·복장 등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를 없앨 것. 그리고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자료를 공문으로 각 학교에 전달.
- 3월 28~29일 안양 평촌고 - 학교당국, 계속해서 진술서 작성요구. 그리고 3월 30일 '불법전단지 배포'라는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겠다는 통보를 함. 학부모와 네트워크의 항의전화로 선도위 무기한 연기.
- 3월 29일 인천 산곡중 - 고발글에 언급된 학교교사, 일부 내용(강제이발)은 인정하나, 다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글 삭제를 요구.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사실확인을 위해 산곡 중 현장조사 나감.

- 3월 30일 대전 - 대전 중고등학교 교장단,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결의대회.
- 4월 1일 광주 - 광주 수피아여고를 다니고 있는 1학년 여학생이 왕따와 교사의 복장단속에 상심하여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 4월 5일 안양 평촌고 - ‘불법 전단지 배포’로 학교로부터 징계 위협을 당한 학생, 학교당국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국가인권위 진정.
- 4월 9일 인천 산곡중 - 네트워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 산곡중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함.
- 4월 10일 서울 광양중 -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학내에서 종이비행기 시위를 시도했으나, 시위를 눈치 챈 학교당국의 제지로 불발.
- 4월 10일 군포 산본고 - 발바닥 250대 체벌 언론 보도

## 〈붙임1〉 왜 우리는 거리로 나서는가?

- 우리는 거리에서, 학교에서, 반인권에 맞서 인간다운 교육을 찾아 저항했지만, 이 ‘미친학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미친학교’는 지금 더욱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있는 강제이발과 0교시야간강제자율학습.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폭주모드 입시경쟁. 여전히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난사되고 있는 체벌등의 폭력. 그리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서 멀기만 합니다.

- 그렇다고 해서, 그저 묵묵히 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미친학교’의 발악을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미쳐버리고 있는 교육에서 우리의 인권을. 다시 되찾고 말 것입니다. 미쳐가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미친학교’를 상대로 5가지 요구를 걸고 길고 긴 한판승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 우리의 5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화입니다. 삶의 주인인 나의 결정권은 온데간데없이 우리의 머리칼과 옷은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나의 결정권을 찾아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둘째, 휴대폰 등 소지품검사압수 폐지입니다. 나의 소통의 수단과 나의 영역이 그들에 의해 함부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소통을 있게 해주는 소통수단을 절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자의적이고 획일적으로 검열하는 소지품 검사압수를 거부합니다.

셋째,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중단입니다. 사형제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는 “입시살인”, 입시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나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입시신분제” 에 반대합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입시 속에서, 입시만을 위한 교육, ‘자습’, 보충수업, 학원 등에 청소년들의 온갖 인권이 침해받고 있기에 우리는 입시경쟁교육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체벌·욕설·폭력 금지입니다. 인간사회에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학교라는 공간, 사제라는 관계 속에서는 폭력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우리는 폭력을 당당히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의 민주주의 쟁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의 민주주의가 거짓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우리의 발언, 우리 스스로의 자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 거짓된 민주주의를 쓰러트려 버리고,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한 민주주의를 다시 쌓아올리고자 합니다.

- ‘미친학교’ 와 우리와의 길고긴 2007년의 환관승부. 그 시작이 이번 주 4월 14일(토) 2시, 광화문에서 시작됩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들에게 던지는 우리의 도전장을. 이 한해의 싸움을 여는 시작점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붙임2〉 행사 기획안

###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 4월 14일,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

일시: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2번 출구 KT 앞(후에 교육부 후문으로 이동)

- **참여하는 단체들** : 교육공동체 나다, 문화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청소년인권 모임 나르샤, 개인청소년인권활동가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후원하는 단체들** :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 주요 요구 :

두발복장자유 전면자유화!

휴대폰 등 소지품검사, 압수폐지!

체벌, 욕설, 폭력 당장 그만!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즐!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 - 행사기획안 :

##### 1부: 광화문 kt앞

- 청소년들의 율동 공연
- 개회 선언 - 행사 전반적인 소개와 안내, 구호
- 지지발언1 - 교사(이용석 교사 - 부천 정왕중)  
- 예비교사(경인교대)
- 자유발언대 -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유발언
- 청소년밴드 공연
- 지지발언2 - 최순영 국회의원(섭외예정)
- 지지발언3 - 학부모 지지발언
- 자유발언 -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유발언

- 상징의식1 - 미친학교를 뚫고 교육부로  
(우리를 가둬두는 학교모형을 뚫고 교육부로 이동)

## 2부: 교육부 후문

- 간단한 공연
- 청소년들의 자유발언
- 향후 학생인권쟁취 실천활동 제안
- 상징의식2 - 교육부에 쓰레기를 투척하다!  
(우리를 규제하는 것을 종로구 쓰레기봉지에 담아 교육부로 넘기자)

## 전시물, 부스 등 부대행사

- ◎ 학내 활동가이드 북 배포 부스
  - ◎ 우리의 구호를 담아 '작은 깃발'과 피켓 만들기.
  - ◎ 인권침해 사진전
  - ◎ 학생들 저항 사진전
  - ◎ “이런 개념없는...” - 말도 안 되는 교칙, 가정통신문, 교육부 지침 등을 게시
- ※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웹사이트와 홍보문, 2007. 04. 14.

##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2007년 4월 14일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미친학교를혁명하라**

2007년 4월 14일 놀토 오후 2시  
광화문역 2번 출구 KT건물 앞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화!**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압수 폐지!**  
**체벌, 욕설, 폭력 당장 그만!**  
**입사살인, 입사신분제 즐!**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http://cafe.daum.net/youthhr> | <http://www.youthhr.org>

#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 때: 2007년 4월 14일(토) 오후 2시
- 곳: 광화문역 2번 출구 KT건물 앞

- 2007년 상반기, 학교 안 청소년인권의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강제이탈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0교시·야간강제자율학습 역시 입시경쟁의 가열과 맞물려 부활하고 있습니다. 체벌 사건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학교는 더 미쳐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 물론 이 미쳐가는 학교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울 광양중학교, 세민정보산업고등학교 등등 많은 학교에서 시도되었거나 일어났던 학내시위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07청소년인권행동의 날 공동준비위원회는 학생들의 저항과 분노를 모아, 사회와 학교에 학생인권의 보장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자리를 4월 14일 내일,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청소년 인권운동사상 처음으로 정부종합청사(교육부) 후문에서 학생·청소년들이 모여, 교육부에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번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행사는, 학교가 정말 여지없이 미쳤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미친 교칙” “미친 입시” 등에 대한 전시, 퍼포먼스 행사, 청소년들의 다소 예술적인 율동, 기타 공연, 청소년인권운동 매뉴얼, 아이템 나눠주기, “미친 학교 무너뜨리기”, “교육부에 인권침해 쓰레기 버리기” 상징의식 등으로 알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날

2007년 4월14일  
학교가

이건 그냥 아니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4월14일 놀토 2시

광화문역 2번출구 KT앞에 모이자!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화!  
휴대폰 등 소지품검사, 압수 폐지!  
체벌, 욕설, 폭력 당장 그만!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즐!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http://cafe.daum.net/youthhr> <http://youthhr.org>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미학혁명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소장사진, 2007. 04. 14.





















유윤중, 「[기고] 학교는 미쳤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이 되었다. - 4.14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청소년인권 집회를 무사히 끝나치고」, 인권오름 제 50호, 2007. 04. 18.

## 학교는 미쳤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되었다.

### 4.14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청소년인권 집회를 무사히 끝나치고

유윤중

#### 학교는 여전히 미쳤고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를 시작하는데. (미야, <나를 외치다> 노래 중에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홍보를 위해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에 맞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 노래를 되뇌면서 자기최면을 걸어야 했다.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새벽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5시 반, 혹은 6시. 비몽사몽 상태인 강아지들과 편하게 자고 있는 룸메이트의 얼굴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학교가 미쳤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다. ‘미학혁명’ 홍보를 가는 전날이면 홍보 갈 학교들 등교시간 하나에 일희일비했다.

2주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며 홍보를 했는데, 홍보할 때 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우리 학교가 왜 미친 학교냐”며 따지고, “미성숙한 애들한테 이런 거 나눠주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호통치고...정말 썩 난리를 쳤다. 행사 홍보 일정 중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발생해서 지원 나갔던 서울 광양중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입을 모아 학생들 선동하지 말라고 하며, 내가 골수운동권이다 위험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했다. 또 인천 산곡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체벌과 강제이발 등을 현장 조사해서 언론에 발표하자, ‘학부모’라는 한 사람이 전화해 “사랑의 때는 당연한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 행사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것에 대해 광고물관리법 위반이니 뭐니 하며 교사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역시, 학교는, 미쳤다. 2005년, 아침 7시 20분인 등교시간에 저항해 즉석 시위를 했던 그 무렵, 신문부 자치 신문에 투고한 글이 검열로 삭제되고, 학생인권 집회 홍보물을 한 고등학교

교 앞에서 나눠주다가 교사가 소리 지르면서 쫓아와 택시 타고 도망쳤던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 바람이 불었고

4월 14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집회가 있던 당일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부는 바람에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쓴 피켓이 휘날렸고,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 “체벌육설폭력 당장 그만”, “살인입시 즉 시폐지”,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학교가 제정신 차리는 그날을 위해” 등의 내용이 적힌 깃발이 휘날렸고, 우리들이 외친 구호는 바람을 타고 차도를 넘어 교육부까지 날아갔다. “별로 심한 인권침해 사례도 없구만” 같은 헛소리나 하면서 행사장 주위를 배회하던 장학사들에게는 그 구호 소리가 똑똑히 들렸으려나?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꿈찾기>와 <희망은 있다> 노래에 맞춘 청소년들의 몸짓(울동) 공연도, 기타 연주도 모두 도중에 음향 장비 등의 이유로 ‘뺄사리’가 한두 번 났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마음속으로 항상 그려온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집회’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께 모인 이들 모두가 각자의 절박한 ‘바람(희망)’을 품고 왔고, 그것에 솔직했기 때문에 그날의 집회는 그 어느 집회보다 즐거웠다.

“복도에서 뛰었다고 잡아서 패는데, 진짜……. 두발도 그래요 왜 우리 인권인데 함부로 자릅니까?”

“입수는 경찰도 영장 없이 함부로 못하는데 휴대폰을 왜 맘대로 뺏어 가냐구요?”

“학부모, 교사, 학생이 협의해서 두발규정 정하라는 거, 그거 솔직히 학부모랑 교사랑 짜고 청소년 다굴치는 거예요

“시위 같은 거 하지 말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하라고 하는데, 지네부터 민주적으로 하라 그래요!”

“공부 못하면 왜 제대로 교육도 못 받냐구요!”

광화문 KT 앞 좁은 인도에서,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환호와 호응이 쏟아졌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고백하고 싶었던 우리의 소망들. “너흰 아직 어려서 안돼!”,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다 너훔 위한 거야!”, “닥치고 공부나 해!”라고 쓰인 학교 모형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교육부를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던 나는 결국 교육부 앞에서 자유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교육부로 행진하는 청소년들

교육부 앞에서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쓰레기봉투에 풍선들을 넣어 교육부로 담 넘어로 넘기려고 하자(교육부는 쓰레기통이다) 경찰은 “오물투기, 업무방해”라며 우리를 제지하려고 했다. 경찰은 행사 시작 전부터 “신고하지 않은 시위 물품은 불법”이라며 우리들의 소망을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했지만 청소년들은 그것을 당당히 거부했다. 청소년들은 방패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려는 전경들을 향해 오히려 “경찰 아저씨들은 청소년 때 안 놀았냐구요!”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미학혁명’ 집회는 청소년들의 솔직한 소망들이 자유롭게 발산된 자리였기 때문에 활력으로 가득 찼다. 청소년인권운을 주제로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 앞까지 행진해서 간 집회. 그것도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화 △체



요구를 적은 풍선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거대한 쓰레기통인 교육부로 넘기는 청소년

별폭언폭력 당장 그만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압수 폐지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중단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와 자치권 등 학교 민주주의와 같은 전례 없이 급진적인 요구들을 내건 집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 잘 치러진 것은 우리 모두 솔직했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이고 예의바른 언어’, ‘정중한 논리’ 그런 것들에 갇히지 않고 나오는 우리의 솔직한 소망들은 얼마나 뜨겁고 힘 있었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청소년인권활동안내서>를 나눠주는 동안 미친 학교에 불 변화의 따스한 바람을 상상했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 '미친학교'와 '청소년인권'의 앞날은?」 녹취록, 민중언론 참세상 피플파워, 2007. 05. 01.

## ‘미친학교’와 ‘청소년인권’의 앞날은?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학교를 다니면 학생일까요? 학생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학생’, ‘청소년’은 언제나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결정은 늘 미숙하다고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인권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청소년인권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영상1: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행사

=====



하주영/ 오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누리/** 안녕하세요

**하주영/** 이번 2007년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영상에서 본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행사가 14일에 있었는데 어떤 취지였나요?

**전누리/**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맞서 싸워왔지만, 2007년 지금 현재 학생인권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강제이발과 체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



고, 심지어 살인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강제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 반인권, 반교육적인 행위들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비평준화 지방학교의 움직임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학생인권을 탄압하는 학교, 즉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친 학교에 맞서, 두발용의복장 전면 자유화, 휴대폰 소지품검사·압수 금지, 체벌·욕설·폭력 금지, 살인입시·입시신분제 폐지, 학교민주주의 쟁취 등의 5가지 요구를 갖고 교육부와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주영/** 영상에서 참 재밌어 보였는데 참여한 분들과 어떤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나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전누리/** 우선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이름 때문에 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조금 자극적 이다보니, 언론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혹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구와 제목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해주시고 원불교 인권위, 문화연대 등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전교조 교사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을 넘어, 충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KT앞에서 1부 행사에서는 축제 같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부스행사와 다양한 무대 공연, 그리고 즉석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아 자유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후문으로 가 교육부의 학생인권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대해 학생인권보장정책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로 쓰레기 봉지에 청소년들의 분노를 담은 풍선을 담아 담장 너머로 던지기도 했구요.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건 집회 홍보였습니다. 광범위한 청소년들을 다가가기 위해서 아침 7시 등교, 4~5시 하교 시간에 매일 같이 학교를 찾아가 전단지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 교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마찰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경찰까지 찾아와 저희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주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가고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를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전누리/**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처음 학생회활동을 하게하면서 축제 등 행사준비를 하다가 학교 측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학생자치에 대한 고민을 키웠고요, 이는 선배를 통해 청소년운동단체도 나가게 되고, 또 다른 학교학생들과 학생회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2005년에 불이 붙었던, 두발자유화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치와 ‘학생·청소년인권’담론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인권적 관점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학교나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분 속에서 심각하게 인권이 짓밟히는 경험을 갖기에, 또 이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학생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이 청소년인권운동이 학생인권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하주영/**그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청소년일 때 자신이 느끼던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누리/**뭐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렇기에 다 성장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그 보호라는 개념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는 선택은 ‘미숙한 결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죠. 또 청소년들이 자기의 존엄성을 위해 저항하고, 선택하는 것을 어른들의 지도를 거부하는 단순한 일탈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순응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위나, 힘, 혹은 더 큰 측면인 체제 앞에서 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하나의 주체적 판단 없이, 그저 묵묵히 따르는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주영/** 이런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누리/**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제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고 재단하는 그 목적을 가진 입시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체, 정신에 대한 통제, 그것으로 획일화를 시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벌이라든지, 두발규제, 뭐 학생자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당연히 사람들에게 받아드려지는 것이지요.

**하주영/** 네, 모두가 청소년기에 다 한 번씩은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저 반항이니 일탈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의 관습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에서 선생님들의 연대발언을 보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

**영상2: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선생님들 연대발언**

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애들이라고만 치부했던 청소년의 인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전누리/저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태동을 먼저 80년대 고등학생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운동속에서 하나의 운동주체로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저항을 한 것을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인권



직접적으로 이야기 된 계기는 1995년 춘천고에 다니는 최우주씨가 하이텔에서 강제지율학습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토론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이텔 등 피시통신의 공간에서 ‘학생복지화’라는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모임이 생기고, 더 나아가 2000년도에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조직이 출범하게 되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간 청소년인원운동이 진행되었는데 현실을 보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와 학교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누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 속에서 모임을 만들고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속에서의 의견형성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행동. 예를 들어, 거리집회라든지 혹은 학내 시위라든지 다양한 움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을 넘어 많은 전국의 지역 속에서 다양한 사회단체와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청소년모임이 자기 지역의 사안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물론, 이 지역적 움직임을 하나로 모아내어, 전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최근 보도되었듯이, 발바닥을 150대 때리는 등의 체벌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를 홍보한다는 유인물을 허가받지 않고 뿌렸기에 학생을 징계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막고,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학교 및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문제가되기도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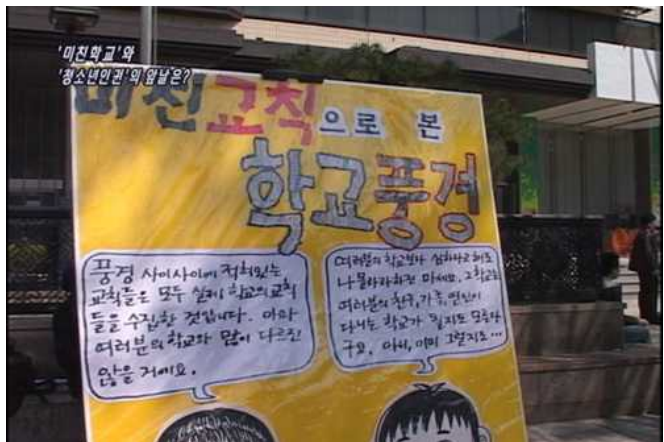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청소년들의 일반문제입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알바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죠.

하주영/ 학교는 규칙을 근거로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칙들이 학생들을 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누리**/ 네. 사회가 절차적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학교의 교칙을 살펴보면 아직도 7~80년대의 독재정권의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교칙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혹은 거리에서 집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면 퇴학,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2004년 종교자유를 외친 강의석씨처럼 그러한 이유로 여전히 학생들에게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든지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지원, 혹은 권한은 너무도 미약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주영**/이런 청소년인권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인데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전누리**/네.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인문계, 실업계 그리고 비학교 청소년도 있습니다. 뭐 활동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 인권모임을 만들거나 혹은 같이 행사 등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고민하고 활동을 하고요. 학생인권을 뛰어넘어 그동안 제기되지 못했던 차별구조 예를 들어 실업계, 비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청소년'이라는 나이제약이나 편견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습니까?

**전누리**/네. 앞서 설명했듯이,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관점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굉장히 치기어린 활동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즉, 재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성인에게 이용당하는 거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에 가입하거



나 무언가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정계로 위협을 가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위협에 좌절해갑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라는 문제에 걸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주영/**인권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학생’ 혹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누리/**중요하게 생각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200대를 때린다는 등의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체벌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은폐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의 피해자, 즉 청소년이 힘을 결집시키고 사회와 학교에 맞서 저항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주영/**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놓여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후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누리/**학교와의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 청소년 모임을 만들고 학내 및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시위 등을 펼쳐 나갈 것이고요, 또한 타 지역의 청소년단체, 모임과 함께 더욱 탄탄히 연대를 다져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에 머물러 있던 운동의 의제를 넓혀가기 위해, 우선 그 첫 번째 의제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 다른 성소수자 단체와의 간담회가 5월 중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한 여러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누리/** 감사합니다.

**하주영/** 현재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일본청소년연구소가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고등학생 5675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두 달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꿈은 한국 사회의 청소년이 받고 있는 강제와 억압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따라가느라 자신을 잊고 있어야 하는 청소년들, 이들의 인권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남은들, 「청소년들의 외침 - 4월 14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후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제 1호, 2007. 05.

## 청소년들의 외침

### - 4월 14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후기

남은들

4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2007 청소년인권거리행동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집회라고 한다.

나는 얼마 전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소년인권'을 외치며 집회에 함께했다.

언제나 있어왔던 다른 집회(어른?)들 위주로 되어있는 집회라고 해야 할까?)와 달리 '참여'가 아닌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청소년 몸짓패가 나와 공연을 펼치고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내가, 두발·용의복장에서 자유로운 내가 규제받고 억압받으며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나는, 개개인의 재능은 무시된 채 학력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발이나, 체벌 같은 것만이 청소년인권침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밟고 기어오르느냐, 밟히느냐' 식의 제한된 선택권만을 쥐어주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기려 경쟁하며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떠민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삶만을 배우며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교육방식은 청소년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일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다. 많이 긴장했나 보다. 생각해 두었던 얘기들의 절반도 다 말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 못한 말들 중에는 얼마 전 한미FTA반대촛불집회에서 있던 일에 대한 것도 있었다. 그때 청소년들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촛불집회에서 사회자가 했던 말이 있다. “어제 청소년들의 재롱으로 발언 못하신 분들 발언하세요” 이것이 아마 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재롱을 부린 게 아니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집회에 참여하고 함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롱’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게 속상해서 발언 끝나고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다른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으며 나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말을 떠올렸다. ‘행복’이라 하던가?

꾸밈없이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그네들의 말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청소년들은 “나 이려고 있는 거 학교에서 알면 당장 퇴학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며 학교 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들을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 하는 일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 상대가 어른이건, 선생이건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쳐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고 말하면 ‘반항아’ ‘문제아’란 딱지를 붙이고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못된 일이건 잘 된 일이건 무조건 ‘복종’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잘된 교육인 걸까?

청소년들의 발언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나와 지지발언을 해 주셨다.

예비교사로 계신 한 선생님은 “규제받고 억압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 내가 가해자입장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란 말을 하셨다.

권위를 내세우며 “나는 선생이다” “너네는 학생이야” 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을 존중하고 ‘가르친다’가 아닌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와 학생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대할 줄 아는 어른이라면 ‘선생’ 이라 말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은 그 어른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집회시작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뵈 수 있어서 기뻐다.

광화문에서 집회 1부 마지막으로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너흰 어려서 아직 안 돼!’ ‘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닥치고 공부나 해!’란 말들이 붙어있는 상자로 만든 학교모형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부수고 밟고 환호하며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듯했다.

이렇게 상징의식을 마치고 우리는 집회 2부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부로 이동을 했다.

교육부로 이동한 다음에도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은 계속되었다. 어떤 청소년은 교육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당신네들이 이렇게 큰 건물 안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동안 우리들은 땀새나는 교실에서 공부한다. 당신네들이 쓰는 돈 쪼가리라도 우리에게 나눠달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발하기도 하고 “학생에 본분이 공부만은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 하는 거 많거든요!”란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렇게 작지만 힘 있는 외침들을 듣고 있자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들의 이 작은 외침이 세상에 메아리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두발·용의복장’ ‘체벌·폭력’ ‘입시살인·입시신분제’ 같은 것들을 풍선에 적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교육부 담 너머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진행과정에서 전경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 풍선던지기 퍼포먼스를 못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조금 무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힘찬 분위기로 퍼포먼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우리들의 인권을 향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미학혁명 그날을 떠올리며 글을 쓰는 내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아마 10년도 더 된 노래인 듯하다. 10년 뒤에도 청소년들은 이 노래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어야만 하는 것일까.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공부 또 공부 지옥같은 입시전쟁터  
어른들의 그 뻘한 얘기 이젠 정말 싫어요  
행복과 성적이 정비례하면  
우리들의 꿈은 반비례잖아요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자율학습 또 보충수업 시험 시험 시험 입시전쟁터  
세상은 경쟁 공부 대학 출세 명예 돈  
서로 서로 사랑 하고 나눠주는 세상은 어디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내 무거운 책가방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수학책,  
외우기만 하는 과학책, 국어보다 더 중요한 영어책,  
부르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얼마나 더 무거워져야 나는 어른이 되나

얼마나 더 야단맞아야 나는 어른이 되나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넷 중에서 행복은 몇번  
우리들 살고 싶은 사랑 가득한 세상  
내 무거운 책가방 속엔 행복은 없고 성적 뿐이죠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학생의 날 행사





## 개요

# 학생의 날 행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매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인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트워크 결성 첫 해인 2006년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를 모아 붙인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 거리행사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명동 거리에서 교육으로 인해 죽어간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좀비 퍼포먼스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2008년에는 정부가 학생의 날의 명칭을 ‘광주학생인권운동독립기념일’로 변경하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학생인권과 무한경쟁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 발표와 퍼포먼스 행사를 가졌다. 이듬해 2010년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실천계획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네트워크 초창기 학생의 날은 청소년(학생) 인권 보장 요구를 집약적으로 모아내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날로서 의미가 컸고 다양한 방식의 행사와 저항행동이 기획되었었다. 이후 정부의 공식 기념일로 의미가 바뀌고, 청소년운동의 의제가 확산되고 연중 다양한 저항행동이 기획되면서 학생의 날이 운동 내부에서 갖는 위상이 약화되어 행사도 축소되었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에는 학생인권 관련 기념일이 여러 날로 분산되면서, 학생의 날을 독자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별도의 운동 기획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번 학생의 날도 공칠 텐가?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로 가는 학생인권 탕탕볼!!」 제안서, 2006. 10.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연락담당 : 전누리(016-297-9803)

<제안서>

이번 학생의 날도 공칠 텐가?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로 가는 학생인권 탕탕볼!!

1929년 11월 3일, 광주의 고등학생들은 일제의 차별적 교육과 부당한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용감한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77회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을 위한 날인 동시에 학생들이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뭘까요?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인권일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들을 너무 쉽게 침해당해왔습니다. ‘학생인권’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야기된 이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학생들은 더 민주적이고 더 인권적인 학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학생의 날은 그런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인 ‘체벌금지’나, ‘두발자유’조차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발자유, 복장자유,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강제야자금지 등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학생들의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올해, 이번 학생의 날도 공치고(아무것도 못 얻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의 학교 현장, 밑에서부터의 목소리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거리에서 벌이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공굴리기”를 계획했습니다. (공치지 않기 위해 공을 굴리자는 겁니다. ^^;) 우선 각 학교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 스티커에 자신의 학생인권 요구를 매직 등으로 잘 보이도록 큼직하게 적어서 모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 선생님들이 욕 못하게 하기”라거나, “염색까지 허용되는 두발자유” “때리지 말라” “학생인권법!” 등등... 그렇게 모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큰 공 몇 개에 붙인 뒤 11월 3일, 그 공들을 굴리며 거리에서, 교육부에서 퍼포먼스를 하여 학생인권 주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학생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별로 없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아래에서부터의 목소리를 모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커는 11월 1일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연락은 저 위에 써있는 ‘전누리’한테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학생인권의 요구들을 스티커에 많이 써주세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인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에 함께합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행사 취재요청

날짜 : 2006.11.2(목)

문의 : 유윤종(019-480-3328), 이슬(010-2720-8570), 배경내(017-214-3550)

11.3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업그레이드 가을운동회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전국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데굴데굴 교육부로 굴러가는 '학생인권 탕탕볼' ~!!

## 1. 기획 취지 - 2006년 학생인권을 '탕탕'하게!!

- 11월 3일은 77돌을 맞는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을 위한 날인 동시에 학생들이 옳은 것을 위해 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 2006년 오늘 학생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바로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학교, 입시억압으로부터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교육의 식탁에 둘러앉는 학교'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청소년의 꿈입니다.

- 특히 올해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차별금지 등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학생들의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학생의 날도 '공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직접 전달하는 '학생인권 탕탱 볼' 굴리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 2. 준비 과정 - 청소년의 목소리를 조직하라!!

### ○ 전국에 스티커 배포하기

- 네트워크는 10월부터 전국 청소년들과 관련 단체, 교사들에게 저희가 만든 스티커를 배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의 날을 전후하여 열리는 뽕뽕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생인권 보장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 발로 찾아가기

-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동대문 등 청소년들이 모인 거리로 직접 찾아가 스티커를 배포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인천의 청소년 행사 장소, 또 2일에는 서울 행당중학교 하곳길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 ○ 스티커 다시 모으기

- 그 결과 대구, 울산, 밀양, 군포, 수원, 인천, 성남, 전주, 서울 등 다양한 곳의 청소년들이 교육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네트워크로 보내주었습니다. 인천과 밀양의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교육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적어 주었습니다. 1천부 가량이 현재까지 도착했고 시간이 촉박하여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스티커도 많이 있습니다.

## 3. 11.3 사전 행사 - 학교로 찾아가자!!

- 언제: 3일(금) 오전 8시 - 8시반
- 어디서: 양화중학교 앞 (문래역 4번출구)

-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인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직접 모아내는 행사를 벌입니다.

왜 양화중학교 앞이나구요? 양화중학교는 체벌, 강제이발 등 학생인권 침해로 청소년들의 불만이 높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교육부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 4. 11.3 본 행사 (1)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

- 언제 : 3일 낮 4시~5시반
- 어디에서 어디까지: 명동성당~시청~광화문
- 어떻게: 가을운동회 분위기로 공굴리고 만국기 휘날리며 행진  
지나가시는 청소년, 성인들에게 요구 전하기

-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를 붙인 커다란 공 2개를 굴리면서, 만국기처럼 청소년들의 요구가 대롱대롱 달린 줄을 붙잡고 깃발을 휘날리며 시내 거리를 행진합니다. 청소년의 힘으로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 4. 11.3 본 행사 (2) 교육부 앞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 언제 : 3일 낮 5시반
- 어디에서 : 교육부(정부종합청사 후문)
- 어떻게: 행사 취지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자회견  
'개념없는' 교육부 넘어뜨리는 탕탱볼 퍼포먼스

- 행진을 마친 뒤에는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간단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스티커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사설]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 선언일’이 돼야, 경향신문, 2006. 11. 02.

##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 선언일’이 돼야

오늘은 1929년 광주지역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로 전국의 학생들이 항일독립 운동을 벌인 지 77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부터는 ‘학생의 날’에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도 바뀌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의 역사적 유래나 연원을 밝히고 그 올바른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지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과 국가기념일 제정은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이날을 단지 ‘역사’로만 묶어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찌들릴 대로 찌들리면서도 두발 제한 및 체벌 등 갖가지 규제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항일독립운동’은 어쩌면 공허하기조차 한 탄 세상의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오늘 일선학교에서 예정된 여러가지 행사들이 그것을 웅변한다. 서울대 사대, 고려대 사대, 서울교대 등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청소년 인권선언식을 가지며, 전교조와 흥사단 등 교사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한다. 또 전국 중·고교생들은 ‘학생도 사람이다’ ‘실업계도 학교다’ 등의 구호가 적힌 스티커를 대형 탱탱볼에 붙여서 교육부까지 끌고 간다는 소식이다. 하나같이 지금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매년 11월3월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선배들의 의거를 기리고 되새기는 일과 함께 오늘날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자랑스러운 과거’를 돌아보고 ‘고통스러운 현재’를 고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이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 법안은 두발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의 철폐,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가 협소한 지식 전달기관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길러나가는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항일투쟁에 혼연히 몸을 던진 선배들의 의로운 기상과 갖가지 규제에서 해방된 당당한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느끼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우리도 할 말 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서명지, 2006. 11. 03.

**“우리도 할 말 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업그레이드!**  
**교육부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

요기에 서명해 줘 ♥      ▶나이:      ▶서명:

**Speak Out!**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학생 인권을 되찾자!**

썩듯썩듯 갈려나가는 머리카락  
 썩듯 썩듯 멍든 몸과 마음  
 뒤통수질 강제아자와 보중에 적혀가는 우리  
 “이러 내놔” 람부로 압수당하는 소중한 물건들  
 “꺼져”, “닥쳐”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들

더 이상 참아선 안돼  
 입 닫고 귀 막고 무릎 꿇어선 안돼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이젠 그만’ 이라고 외치자구  
 우리 손으로 우리 인권을 되찾자

앞면에 우리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들을 적어보자.  
 “두발자유 바로 지금!”,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같은 것들 많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우리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해 줄거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스티커 보낼 곳: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우편번호: 110-522)

최승덕 기자, 「“우리는 때리지 않을 거예요” - 예비교사들, 학생의 날 맞아 어린이·청소년인권연대 선언 발표」, 프르메테우스, 2006. 11. 03.

## “우리는 때리지 않을 거예요”

### 예비교사들, 학생의 날 맞아 어린이·청소년인권연대 선언 발표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대와 고려대 사범대를 주축으로 한 전국의 사범대 예비교사들이 학생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예비교사들은 학교는 우리 사회 내 부당한 인권침해의 장소라며 학생 인권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대 사범대, 고려대 사범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춘천교대 등 전국 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153명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고 부당한 침해에 맞서 학생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정부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와 국회의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예비교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입시제도, 일상화된 경쟁과 통제의 메커니즘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들이 학생들의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에 우리 행동이 어디를 행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게 됐다”며 선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 학생의 날을 맞아 예비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두발제한으로 상징되는 신체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하여 체벌, 강제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아간자율 학습, 소지품 검사, 집회참가 금지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학교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때마다 침통해 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저항을 지켜보면서 또 한편으로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해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현실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 그 개인이 결단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대 사범대 혜진 학생회장은 “지금의 교육은 맞은 사람이 또 때리는 원한의 교육”이라며 “교사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도 그 구조의 피해자”라며 “소통할 수 없는 입시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나지은씨는 “지금 청소년에 대한 탄압은 엄청나다.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말로 묵인되고 있다”며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힘있는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예비교사 153명은 차별, 체벌, 두발제한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12개 선언 조항을 발표했다.

1.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천부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2.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나이, 성별, 장애, 신념, 종교, 가정환경,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두발을 비롯한 신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어린이·청소년은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체벌과 이와 유사한 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5.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일기장 검사, 휴대폰 압수 등을 하지 않는다.
6.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대해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진다. 우리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

7.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8. 어린이·청소년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신문발행이나 자발적인 결사체 조직, 집회 등을 적극 지지한다.

9. 학교 내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학생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10. 어린이·청소년들의 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성찰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실수를 존중하며, 실수하리라는 예상으로 그/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이 기자, 「학생의 날, 학생인권의 공 굴러요 - [학생의날]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아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진행」,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6. 11. 04.

## 학생의 날, 학생인권의 공 굴러요

### [학생의날]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아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진행

11월3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77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2006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직접 전달하는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전행사로 대구, 울산, 밀양, 군포, 수원, 인천, 성남, 전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네트워크로 보내 온 청소년들의 요구를 대형 탕탕볼에 붙여 명동 - 시청 앞 - 교육부까지 굴리며 행진했다. 특히 학생들의 큰 요구인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차별금지 등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미난 구호와 노래로 선전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국 청소년들의 요구가 담긴 대형 탕탕볼 ©바이러스

'학생인권 탕탕볼 굴리기' 사전행사를 마치고 교육부 앞에 모인 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는 지난 10월부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청소년 1천명의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슬(17세)양은 “11월 3일은 과거 옳은 일에 나선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날이다. 현재의 학생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학생의 날에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학생인권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조만성(영서중1) 학생은 “오늘이 학생의 날이지만 학교에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서운한 마음을 표시했다. 또한 “학생의 날은 3.1운동과 같이 역사적인 날임에도 그만큼 기념되지 못하고 있다”

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성균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당당한 청소년”이 되라며 학생의 날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스티커를 교육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부관계자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후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바이러스



'개념없는 학교', '뻘뻘한 학교', '숨막히는 학교', '무릎 꿇리는 학교' 땡땡볼로 밀어버려~

신나는 학생인권법 (아기염소 개사)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멀고 먼 운동장에서  
청소년들 여럿이/매 맞으며 돌아요/용의복장 불량하다고

찬바람이 켁썩썩/불어오는 날이면/코트라도 입었다가  
겉옷은 안 된다고/학생답게 하라고/교문에서 잡히고

학생인권 보장되는 그날/ 너무나 기다려왔어  
비행기도 날리고/함성도 외쳐보고

신나는 학생인권법

김오달, 「"우리는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원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대자보, 2006. 11. 05.

## "우리는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원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후 4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지나 교육부가 자리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벌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77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이 날 행진을 진행한 네트워크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청소년들과 관련단체,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적어 제작한 스티커를 모아 부착해 만든



일명 '탱탱볼'을 굴리며, 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체감한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 등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행진은 하교를 마치고 명동일대를 찾은 중고교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











## [2007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1월 3일(토) 학생의 날 청소년 행동 기획」, 2007. 11. 03.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1월 3일(토) 학생의 날 청소년 행동 기획

## 1. 학생독립운동기념 행사에 따지 거는 기자회견 : <학생의 날은 없다>

▶ 일시 : 2007년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관순기념관 앞

▶ 내용

1929년 11월 3일 청소년들의 내걸었던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 참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개혁 등은 아직도 요원한데 이를 단순히 “독립운동기념일”로 기념하는 것은 기만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에 반대하며 학생의 날을 청소년들의 저항을 기억하고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 2. 학생의 날 청소년 행동

: <돌아온 학생의 날, 저항&부활 - “살아있다고 사기치지마!”>

▶ 개요

“성적 때문에 죽은 청소년” “체벌 때문에 죽은 청소년” “두발복장단속 답답해서 질식사한 청소년” “학생들을 때려야 하는 스트레스로 죽은 교사” 등의 피켓을 든 귀신들과 좀비들이 눈에 띄는 복장과 선전물 등을 들고서 퍼포먼스 & 캠페인 & 피켓팅을 번화가에서 진행한다.

▶ 일시

2007년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 장소

명동거리

▶ 행사 내용

14:00-14:30 홍보활동(명동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장을 한 상태에서 학생의 날 홍보 유인물을 나눠준다.

15:00-15:10 좀비의 수능대박 퍼포먼스

15:10-15:20 거리발언대 - 자유 발언 및 지지 발언

15:20-15:30 “귀신이 산다” 퍼포먼스

15:30-15:50 뚝헤드의 노래 공연. 실버라이닝 핑이·한날 랩 공연

15:50-15:55 선언문 읽기

15:55-16:15 공을 굴리고 판을 끌며 명동거리 행진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11/3(토) 2시 : 돌아온 학생의날, 저항&부활〉 웹자보, 2007. 11. 03.



2007년 11월 3일 오후 2시, 명동거리  
~ 돌아온 학생의 날, 저항&부활 ~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청소년들을 죽이고 좀비화시키는  
끔찍한 학교에, 교육에, 사회에  
**신나게 태클 걸기.**  
하는 일

- 청소년인권 홍보 뛰기
- 길거리 자유발언
- 음악 공연 등
- 좀비&귀신 퍼포먼스와 행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youthhr@chol.com  
또는 cafe.daum.net/youthhr 을 통해 연락주세요~

< 학생의 날 선언문 >

## ‘학생의 날’은 없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해 배운 기억이 아직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날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리고 지난 2006년, 그간 ‘학생의 날’로 불리던 우리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었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기념일’이라니요. 항일 이상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 교육제도의 개혁을 내세웠던, 그 뜨거운 외침을 ‘기념’하자니요. 그날을 과거로 깊숙이 묻어두었다가 해마다 ‘독립운동 기념일’이 되면 제시하듯 꺼내 놓고 높으신 분들 나와서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등 한 말씀 씩 하는 날로 만들자니요.

그럼,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린 과연 그날을 기념해도 될 만큼 억압받지 않으며 살고 있나요? 78년 전 항일 운동 때는, ‘일제’가 곧 불의이고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우리가 되찾아야 할 ‘무엇’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며칠 전 뉴스에서는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던 학생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패뚱’ 맞아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학교의 규칙을 어긴 그 학생의 잘못이니 체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요? 강제로 학교로부터 행해지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잘못은 아닐까요? 아니, 당신이 아니라, 그간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모두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교육받아서는 아닐까요?

그런데, 또다시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인, 입시에 찌들려 죽은 듯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날을, ‘기념일’로 만들고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또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이 날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날의 저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이날을 오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 학교에서 당하는 두발규제와 체벌, 여러 인권침해와 폭력을 당장 멈추라고!

하나. 일렬로 줄 세우기 식의 대학 서열 구조를 당장 깨라고!

하나. 어른들만의 것이 아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드디어 오늘입니다. 11월 3일은 우리들의 날이고 저항의 날이지만, 당장 코앞에 놓인 '수능'이라는 괴물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입시를 앞두고 D-DAY를 세는 초조한 몇 날들 중 하루로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들의 달이어야 하는 11월이 애석한 입시가 아닌 저항의 달이 될 때까지, 더는 저항할 게 없어서 '기념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저항하고 외칠 겁니다.

2007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인디코,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프레시안TV] '학생의 날'에 신나게 태클걸기』, 프레시안TV, 2007. 11. 05.

## "살아있다고 사기치지 마!"

### [프레시안TV] '학생의 날'에 신나게 태클걸기

명동거리에 귀신들이 나타났다.

학원에서 벗어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살한 초등학교 귀신, 답안을 밀려 써서 수능을 망치고 자살한 귀신,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죽은 귀신. 인권을 침해받던 학생들이었다.

좀비도 함께 등장했다. 학교에서는 입시를 위해서라면 교복 착용은 물론 두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선생님들의 폭력까지도 용납된다. 수능을 위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좀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의 날을 맞아 교육 현실에 신나게 태클을 걸었다.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고 랩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78돌을 맞은 학생의 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교육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학생의 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거리에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두발, 복장 관련 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황유정 / 중학교 1학년

"강제로 막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래요 머리끈도요 단정한 색깔로 해야 되구요"



▲ 학생의 날 홍보 자료를 나눠주고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인디코

김윤정 / 중학교 3학년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자르라고 강요하거나, 막 억지로 교복 같은 거 뺏어가거나, 기분이 많이 상하죠"

김규희 / 중학교 1학년

"교복 너무 줄였다고 때리는 거(가 너무 하고요) (옷 입는 건) 자기가 자유인데 솔직히 교복 때문에 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새리 / 중학교 3학년

"회의 같은 거도 잘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칙을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시에서 받는 중압감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현옥 / 학부모

"요즘 아이들은 정말 너무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아이들이 뭐, 거의 죽음.. 죽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입시경쟁의 과열 속에서 올 한 해 자살하고 사망한 청소년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명. <귀신이 산다> 패러디에서는 답안을 밀려 써서 수능을 망치고 자살한 귀신, 오리걸음 체벌을 당하다가 죽은 귀신, 사교육까지 받아야하는 체육 수행평가 줄넘기에 한이 맺혀 죽은 귀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전누리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올해 7월, 부산에서는 학생이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도 계속 입시 때문에 자살한 사건들.. 그리고 여전히 체벌로 인해서 (체벌 장면을 찍은) 동영상들이 이제 유포되고 있고, 이런 학교 현실들이 옛날 그런 80년대, 90년대(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을 억압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은 입시라는 거대한 제도 앞에서 입도 뺏고 못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점차 잃어갑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주체성 없이 살아가는 좀비에 비유했습니다.

수능을 위해 어른들의 말에 무조건 순응해야 하는 학생들. 그러나 오늘은 순응 주술을 깨닫고 찢어버립니다

윤종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학교 속에 갇혀 가지고서 마치 죽은 듯이 지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학교에서는 계속 청소년들한테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행복해질 거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게 하나의 사기고, 거짓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사기치자!" 우리는 다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귀신이나 아니면 반쯤 죽은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다."



▲ <좀비의 수능대박 퍼포먼스>를 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인디코



▲ 수능 주술을 찢어버리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인디코

최은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나에겐 밀치고 올라서야할 경쟁자라는 사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한 청소년이 불렀던, 학교를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래 가사가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기획: 박사야

영상취재: 김하얀

편집: 김하얀

제작: 인디코



▲ 명동 거리를 행진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인디코

최은지,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인권오름 제 78호, 2007. 11. 06.

##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최은지

나는 18살 청소년이다. 내년에 수능을 앞둔,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볼 여유도 빼앗긴 채, 그저 내로라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 하는’ 입시 준비생. 그러나 다행히 최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날이 있었다. 분주했던 지난 며칠 사이의 기억들은 아직도 나를 기슴 뛰게 한다. 그날은 바로 11월 3일, 학생의 날! “나 살아 있소!”라고 외쳤던 2007 학생의 날 행사에 대한 나의 기억을 조금, 나눠보아겠다.

#### “반쯤 죽은 좀비로 살아갈 순 없어”

이번 학생의 날 행사는 청소년 인권운동에 발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히나 그동안 학교에서 맞이했던 지루하고 불편했던 학생의 날과는 사뭇 달라 더 의미가 있었다. 해마다 학생의 날이면 비슷한 레퍼토리의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곤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심지어 학생의 날의 기원인 ‘광주학생항일운동’ 관련 단체 이름이 수능에 잘 나온다는 얘기에 그 단체들 이름까지 죄다 외우기까지 했다! 으악,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기억들.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다. 교장선생님의 지루한 훈화 말씀 대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다. 학생의 날 몇 주 전부터 회의에서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전날 최종 점검까지, 무척이나 분주했던 날들이었다.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엄청난 열정들을 쏟아냈다.

이런 열정들 속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얼마 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살벌한 집단체벌이 있었고 그 학교 옆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은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 최근에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했다고 죽도로 학생을 때는 동영상 뉴스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이런 비참한 일들은 섬뜩하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일들이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

타을학습과 보충수업,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통제 대상으로 만드는 복장/두발 단속, 게다가 우리를 입시기계로 만드는 유래 없는 ‘명문대’ 학벌중심주의. 이런 일상적인 폭력과 억압적인 교육구조 속에서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좀비가 되어버린 우리들. 게다가 11월 3일 학생의 날은 수능을 얼마 앞둔 날이어서 더 아이러니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있다고 외치고 저항해야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담아내서 외쳐야 했다. 더 이상 입도 뻥긋 못하는, 살아있어도 죽은 좀비로 살아갈 순 없다고 우리의 몸짓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주제는 <2007 돌아온 학생의 날, 저항&부활 -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가 되었다.



▲학생의 날의 현재적 의미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제한된 과거에 구속돼 있다.

### 비참한 현실에 기념이 웬 말?

우리의 저항 행동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 현장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난 해부터 학생의 날 공식 명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되어버렸다. 사실 어이가 없었다. 78년 전 그날의 학생들은 단지 ‘국가의 독립’, ‘일제 반대’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 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다른 요구들은 모두 강그리 무시한 채 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 속에 그날의 외침들을 박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높으신 분들 한 말씀씩 하시는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치렀다. 이건 완전 기만이다. 청소년의 비참한 인권 현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갈수록 더 잔인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들이, 학생의 날을 기념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다. 기념식이 열리는 유관순 기념관 근처에서 관리하시는 분과 실랑이를 벌여가며, 우리는 “비참한 현실에 기념은 없다”고 외쳤다.

### 순응을 강요하는 수능 주술은 깨졌어!

오후에는 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캠페인과 행진을 진행했다. 좀비와 귀신, 다시 하기에 부담스런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 연습을 거쳐 부랴부랴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귀신과 좀비 분장을 한 우리들은 한손에는 홍보 전단지들, 다른 한손에는 큰 공에다 붙일 ‘학생 인권 부적’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운 분장을 한 우리들과 마주치길 꺼려했지만, 이야기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공감하고 부적 위에 학교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을 부지런히 써주었다. “학생도 사람이다”, “폭력보다 더 강한 것은 존중이다”, “내 머리카락 내놔”, “입시야 물렸거라” 등등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부적 위에 적힌 메모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바꾸지 못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은 듯’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어두워졌다.

행사 중반쯤에는 귀신과 좀비들이 모여 ‘순응(수능)대박 퍼포먼스 - 귀신이 산다’를 했는데, 지금 학교 현실을 통쾌하게 비꼬는 퍼포먼스였다. 오리걸음 처벌을 당하다 죽어 죽어서도 오리걸음만 하는 귀신, 체육 줄넘기 수행평가를 준비한다고 과외하다 죽어서 줄넘기만 하는 귀신, 답안지 밀려 쓰는 바람에 수능을 망쳐서 죽어서도 마킹만 하는 귀신, 세상이 괴로워서 고개만 설레설레 짓다가 죽어서 고개 돌리는 귀신 등 퍼포먼스에 등장한 귀신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아니 세상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중 누군가의 모습이기도 했다.



▲명동 거리를 오가는 청소년들이 학생 인권을 되찾는 부적을 직접 써주었다.



▲“순응(수능) 주술은 이제 깨졌어~!”

“나는 자랑스러운 수능 대박 앞에 자유와 인권을 팽개치고 스카이(S,K,Y)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마쳐 무조건 순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순응’만이 강요되는 ‘수능’ 주술을 깨기 위해, 우리들은 ‘순응(수능 대박)’이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가위로 시원하게 찢어 날려버렸다. 그 순간 어찌나 통쾌하던지. 몇 사람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행사인 줄 알고 지나쳐가기도 했는데,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다.

### **우리가 바뀌, 어른에게 맡기면 낚여!**

이날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각 마련하는 것,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이 당연한 권리를,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갖기엔 버겁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들의 바람을 담은 공을 굴리는 거리 행진으로 학생의 날 행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 우리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청소년 인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폭력과 입시의 억압에 시달리는 좀비이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실버라이닝의 팽이가 직접 만들어온 노랫말이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이제는 바뀌! 우리가 바뀌! 어른에게 맡기면 낚여!”

## [2008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2008년 학생의 날 - 학생의 날을 진정 학생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라」 성명서, 2008. 11. 03.

# 2008년 학생의 날

## 학생의 날을 진정 학생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라

오늘은 11월 3일, 학생의 날이다. 정부는 부산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란 이름으로 기념식 행사 같은 것을 학생들을 동원하며 크게 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며, 지금의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입시경쟁으로 비난 받던 교육을 더욱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똥덩어리’ 같은 정부가 학생의 날에 기념행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1929년 당시 학생들은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금도 노예 교육은 여전히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입시경쟁 노예 교육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등을 비롯하여 학교에 만연해 있던 인권침해들은, 학교자율화와 학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학교 체벌 사례, 진성고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들에서 불거져 나온 학생인권의 암울한 현실, 확산되고 있는 강제보충수업 등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제중과 일제고사 등을 비롯한 학교서열화 정책들은 학생들을 삶을 무한경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반복되는 시험과 서열화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입시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꿈들은 짓밟히고 있다. 최근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입시경쟁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건 등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런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경쟁교육 정책들과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반대하여 나선 청소년들에게 이 정부가 보인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경찰들과 장학사, 교감 등을 동원하여 청소년들의 정당한 행동에 압박을 가하고 태클을 거는 것은 청소년들을 민주적인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이 사회에서 학생들은 도저히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겠다고 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서, 단지 학생의 날은 수십 년 전 과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어서만은



안 된다. 1929년 당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교육에 저항했던 학생들의 행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를 행동으로 말하는 날이어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계기여야 한다.

지나온 수많은 학생의 날, 학생들이 요구해온 것들이 요원하기만 한 지금 학생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없이 학생의 날에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여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거짓말이다.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런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는 무한경쟁과 차별로 가득 찬 교육을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진정한 학생의 날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생들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경쟁 강화 정책들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죽이고 있는 입시경쟁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1.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기타 등등의 차별로 가득한 교육이 아닌 평등한 교육을 만들라.

1.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안전한 급식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1.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등 학생인권 침해를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켜라.

1.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사회·정치·학교운영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라.

1.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문화예술활동들을 보장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2008년 11월 3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회동아리센터, 홍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가나다순)



김가에 기자, 「정부의 학생의 날' 기념은 모순!」, 뉴스웨이, 2008. 11. 03.

## 정부의 학생의 날' 기념은 모순!

【서울=뉴스웨이 김가에 인턴기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전교조 등 10개 사회단체는 3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79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경쟁교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청소년을 억압하는 정부가 '학생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 © 김가에 인턴기자

한날, 「다시 ‘학생의 날’ 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제 9호, 2009. 01.

## 다시 ‘학생의 날’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한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정치적이다. 자신의 언어로 사물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권력임을 고려할 때 항시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중립적인 언어가 있다는 가정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4.19 혁명’이 ‘4.19 학생운동’으로, ‘5.16 군사 쿠데타’가 ‘5.16 혁명’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학생의 날’을 이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불러야한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흐름의 반영일까.

### ‘민족은 남고 ‘저항’은 사라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교과부의 좌편향 교과서 논란, 국제중 밀어붙이기, 일제고사 실시 등 보수 일변도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 정책과 이들 명칭의 변화는 무관하지 않다. 학생의 날이 본디 1929년 11월 3일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행하는 모범 학생 표창 수여식은 보수정권이 역사를 박제화 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상을 받는 ‘모범 학생’은 학업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한, 학교에서 언제나 칭찬을 받을 법한 학생이다. 이러한 모범 학생의 이미지와 항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이 연결되는 순간 ‘민족’은 남고 ‘저항’은 사라진다.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은 이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동맹 휴업과 등교 거부를 ‘선동’하는 학생은 민족의 단결을 쪼먹는 벌레가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 명분으로 민족의 결속 운운하는 현 정권의 모습은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라며 많은 학도병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시켰던 일제의 왜곡된 민족주의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아 있다.

### 광주항일학생운동 재현 퍼포먼스 비판

그러하기에 현 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 운동 단체들이 학생의 날

자체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퍼포먼스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더욱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이명박 정권에 숨통 트일 기회를 준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올림픽과 때마침 터져준 독도 문제였다. 막연히 국가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수 우익 정권들이 내부의 문제를 봉합하고,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낼 때 손쉽게 뽑아드는 칼이다. 광주항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일본인 중학생이 광주여자고보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광주고보 남학생이 목격하면서 시비가 일고, 결국 학생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는 장면)을 복장 까지 갖춰 입고 그대로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어떠한 맥락으로 읽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행사에서 과거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지, 현재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낳지는 않을지, 민족의식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우경화된 국가의 의도에 도리어 부합하는 편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 민족적 분노는 곧 남학생의 분노?

또한 재현하기로 택한 장면 자체에 대한 불편함도 크다. 당시 상황은 ‘제국주의 본국’의 남성이 ‘식민지’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점에서 민족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긴 하지만, 피자배 민족에 대한 폭력이 ‘성희롱’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의 문제 또한 얽혀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현되는 장면에서 ‘여성(여학생)의 분노’는 찾아볼 수 없다. 민족적 분노는 곧 남학생의 분노로 드러나며, 자연스럽게 여성은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비가시화 된다. 희롱을 당했다던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분노했던 광주 지역 남학생들의 비밀결사인 독서회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만,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항일 투쟁 조직인 소녀회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여성을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투쟁의 주체로 서 있는 학생은 곧 남학생이며, 여학생은 남학생이 투쟁을 시작하는 계기, 구해내고 보호해야할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머물러 있다.

식민지 하에서도 봉건적 인습과 미신에 기반을 둔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일본 남성이 아닌 한국 남성 에 의한 폭력, 학대 또한 지속되었다. 여성을 옹아매는 구습에 반대하는(신)여성들은 위험한 여성으로 간주되었고, 힘들게 세상과 싸우는 길을 걸어야 했다. 여성사 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기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보다 되레 그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혹은 그들과의 싸움이 절실했던 상황이 많았음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한 채 동등한 연대가 아닌 남성은 주체, 여성은 대상인 구도가 명확한 장면을 별다른 고민 없이 재현하는 것은 성별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학생의 날이 남학생의 날이 아니라면, 여학생을 타자화 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는 재고해 봐야 한다. 항일 ‘민족’ 투쟁의 관점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당시 여성운동의 구호를 발굴하고, 근대 교육의 영역에 진입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섰던 여학생들의 움직임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당시 항일 학생 운동을 현재적으로 구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 학생의 날을 너머

학생의 날이 국가와 정권의 행사로,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장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 여기에 한층 더 나아가 ‘학생’이라 묶이는 집단이 단일하지 않음을, 그 내부에도 차별이 있음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학생의 날에만 반짝, 학생의 권리가 피상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맞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웹자보, 2009. 11. 01.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 학생의 날 맞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S고 인권위제소      K고 두발자유 1인시위

6.10 청소년시국선언  
대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76명 청소년 일동〉  
610 청소년 시국선언

강요하는 일제고사 반대  
교거부 선언 기자대행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학생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일) 오후 1시 30분 - 4시 /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 3호

### 1부 : 학생인권실태 보고 및 분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분석 PPT  
2009 두발자유 K고 1인시위 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현실  
학부모, 교사가 체감하는 학생인권 실태  
플로어/기자들의 질의응답

### 2부 : 학생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1부에서 진단한 학생인권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패널없이 진행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외,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맞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9. 11. 01.

##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또 이명박 정부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국민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아웃오브안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도 없고 전문성도 별로 없는 청소년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고생스럽더군요. 왜 여론조사 같은 걸 업체에 돈 주고 맡기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조사한 결과를 이명박 정부 이후 1년하고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80주년 학생의 날에 맞춰,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현재 학생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 동시에 2008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에 학생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학교 CCTV와 같은 감시의 문제, 학생간 폭력, 이성교제/동성교제에 대한 처벌, 학교 시설의 문제 등 조사하고 파악해야 할 학생인권 실태는 많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분량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조사항목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듣지도 않는 상황 때문이라도 굳이 학교자율화,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인지도와 의견을 묻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울산, 경남, 서울, 제주 등지의 교육청/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대해서도 인지도와 의견

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이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 교육정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부터, 두발규제 등 언뜻 보기에는 교육정책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보이는 부분까지 골고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국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생의 날의 기원이 된 1929년 학생들의 항일 운동 때에도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표현의 자유,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즐기치게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해왔지만, 어째서 정부는, 학교는, 이 사회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니, 바뀌기는커녕 왜 더 안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이는 걸까요? 정말로 미성숙한 것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닐지 생각해봅시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의 현실 뿐 아니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까지, 청소년/학생 분들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및 방법

: 2009년 8월 31일 ~ 10월 1일 (약 1개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설문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학교 안에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함. (※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설문지로 조사했으나 자체적으로 입력, 처리하여 결과를 냈기에 참고를 위해 따로 실음.)

◎ 분석 도구 : EXCEL2007과 SPSS12.0K, 계산기.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으로 분석.

◎ 전국 조사한 중학생 수 : 656명

전국 조사한 고등학생 수 : 1366명

◎ 성별 및 지역분포

○ 전국 중학생

남자	여자	기타(TG 등)	무응답
30.8% (202)	67.5% (443)	0.2% (1)	1.6% (10)

수도권	영남	호남	
54.1%(355)	13.5%(88)	14.0%(131)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9.8%(64)	1.4%(9)	0.0%(0)	1.4%(9)

○ 전국 고등학생

남자	여자	기타	무응답
34.6%(472)	65.2%(890)	0.1%(2)	0.1%(2)



수도권		영남		호남	
47.4%(648)		20.1%(274)		26.1%(357)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4.2%(58)	1.4%(19)	0.1%(2)	0.6%(8)		

## 1. 전반적인 학생인권 상황의 악화

현재 전반적인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거나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중학생 6.7%, 고등학생 4.6%에 불과하다.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과 매우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을 합하면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에 이른다.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들에서 나온 결과를 고려할 때 “보통”으로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인권 침해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 그리고 다른 학교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다니는 학교가 보통의 수준이라는 의미로 답한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일 것 등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 모두 극소수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과 악화되었다는 답이 높다.(모른다는 답이 높은 것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전의 학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을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 상황이 학생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학생인권이 일정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전부터도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8% (12)	4.9% (32)	<b>42.4% (278)</b>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b>23.8% (156)</b>	<b>22.4% (147)</b>	4.8% (31)

현재의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1%(15)	3.5%(48)	33.4%(456)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32.4%(443)	27.3%(373)	2.3%(31)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3%(28)	28.0%(184)	28.7%(188)	33.5%(220)	5.6% (36)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보장하는방향	침해하는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0%(54)	32.5%(444)	37.3%(510)	23.9%(327)	2.2%(30)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부정적이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38.4%, 고등학교의 경우 51.9%나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중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6%(4)	9.3%(61)	20.9%(137)	24.4%(160)	38.4%(252)	6.4%(42)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2%(3)	3.7%(50)	13.6%(186)	28.0%(382)	51.9%(709)	2.6%(35)

## 2. 입시, 과잉 학습 (자율학습, 보충수업, 사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 51.9%, 증가가 중,고등학생 모두 30% 가량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생 0.8%, 고등학생 0.9%에 불과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50.0% (328)	30.8% (202)	11.0% (72)	4.1% (27)	1.5% (10)	2.6%(17)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61.1%(834)	25.6%(350)	8.3%(114)	2.5%(34)	1.5%(20)	1.0%(14)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44.2% (290)	28.7% (188)	23.3% (153)	0.8% (5)	0.8% (5)	2.3%(15)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51.9%(709)	29.9%(408)	15.8%(216)	0.9%(12)	0.6%(8)	1.0%(13)

중학생들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거나 0교시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기된 바 있다.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보충수업(0교시), 보충수업 등의 현실은 어떨까? 이번 조사에서도 2008년 이후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한 중학생이 36.7%에 달했다. 원래부터 야자나 각종 보충수업들이 많았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32.7%가 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6.7% (241)	13.4% (88)	2.6% (17)	22.7% (149)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3.0% (20)	25.2% (165)	22.3% (146)	2.8% (18)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2.7%(446)	9.8%(134)	2.6%(36)	20.1%(274)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2.3%(32)	35.9%(491)	17.0%(232)	0.9%(12)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중 자율학습·보충수업도 강제한다는 응답도 많아서, 입시와 강제·과잉학습이 학생들의 저녁 시간과 방학을 빼앗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방과후 학교조차도 강제된다는 답이 중학교 35.2%에 이르러서 방과후학교가 강제적인 보충수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느끼게 했다. 아침보충수업(소위 0교시 수업)도 중학생의 10.2%, 고등학생의 15.4%가 강제라고 답했는데, 0교시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 (101)	53.5% (351)	19.0% (125)	21.2% (139)
방과후학교	점심시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학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응답
85.1% (558)	8.4% (55)	41.9% (275)	4.9% (32)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	오후저녁보충수업
85.9%(1173)	57.5%(785)	20.9%(285)	72.1%(98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6.9%(777)	13.5%(184)	80.6%(1101)	0.6%(8)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4.4% (29)	<b>24.4% (160)</b>	<b>10.2% (67)</b>	10.8% (71)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b>35.2% (231)</b>	2.9% (19)	<b>14.9% (98)</b>	19.2% (126)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b>60.0%(819)</b>	35.6%(486)	<b>15.4%(210)</b>	<b>54.7%(747)</b>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8.5%(389)	7.3%(100)	<b>53.1%(726)</b>	6.5%(89)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0.5% (3)	1.1% (7)	0.2% (1)	0.8% (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8% (38)	0.3% (2)	2.1% (14)	19.2% (126)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5.0%(68)	1.5%(20)	1.0%(14)	2.5%(3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0%(27)	0.2%(3)	3.3%(45)	7.0%(9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7.2% (47)	6.6% (43)	2.1% (14)	3.9% (2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2.6% (214)	2.4% (16)	11.1% (73)	19.2% (12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211)	3.0%(41)	1.5%(21)	4.9%(6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15.7%(214)	2.4%(33)	10.8%(148)	6.7%(92)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 중학교의 평균 등교시간은 오전 8시 8분, 고등학생의 경우 오전 7시 45분으로, 중학생 중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다고 답한 비율이 38.1%에 고등학생 86.9%로, 학생들은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해야만 한다. 하교시간마저 오후 4시 이후라고 답한 중학생이 60.8%, 고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 하교한다는 응답이 64.7%이다.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은 평균 12시간 35분, 중학생은 평균 8시간 4분에 육박한다. 성인들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하며 여가가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이런 과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중학생은 6.7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고작 5.6시간이며, 중학생 중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이 40.7%에 고등학생의 경우 75.3%였다. 건강을 위해서는 대개 하루 7-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 모두 잠이 부족하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야학원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밤 11시, 12시, 1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답도 상당수 되었다. 청소년들이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지만, 정부와 국회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입시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현실부터 고려하길 바란다.

등하교시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평균 수면시간,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8시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7시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4시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8시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884)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8시간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12시간35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9시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11시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8.3시간
평균수면시간	6.7시간	평균수면시간	5.6시간
6시간 이하 수면	40.7%(267)	6시간 이하 수면	75.3%(1028)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 중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사교육의 경우도 일부는 입시를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이후에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답한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20.7%였다. 권영길 의원실에서 냈던 자료를 보더라도 입시 사교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나 사교육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방과후학교 등도 강제적 보충수업처럼 되어가고 있다.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67.2% (441)	5.5% (36)	2.0% (13)	2.4% (16)	34.5% (227)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42.2%(576)	4.8%(65)	3.7%(50)	1.7%(23)	49.5%(676)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0.3% (199)	5.3% (35)	36.8% (241)	21.8% (143)	5.8% (38)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0.7%(283)	10.7%(146)	41.2%(563)	20.6%(282)	6.7%(91)

### 3.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성적, 외모 등

차별 중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원인으로 성적을 꼽은 중학생이 59.3%, 고등학생이 69.6%에 달했다. 이는 20%대인 성별, 나이 및 학년, 외모나 신체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외모로 인한 차별, 나이나 학년으로 인한 차별이 많았다.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당사자들이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수치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역시 주목해야 할 차별임은 물론이다. 또한, 성적이 주된 차별 원인이라 그런지 차별의 방법 또한 학생들에 의한 것보다 교사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시설 이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존재했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59.3%(389)	20.1%(132)	23.3%(153)	6.1%(40)	15.4%(10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2.3%(15)	12.6%(83)	28.4%(186)	22.4%(147)	3.7%(24)	6.3%(41)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69.6%(951)	14.9%(204)	27.6%(377)	3.5%(48)	7.3%(1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1.0%(13)	15.7%(214)	25.9%(354)	17.0%(232)	1.7%(23)	3.1%(42)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사언어폭력	교사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1.2%(270)	35.8%(235)	23.3%(153)	7.3%(48)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3.0%(85)	6.1%(40)	5.3%(35)	28.5%(187)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사언어폭력	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6.5%(635)	31.7%(433)	15.4%(210)	16.5%(226)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4.6%(200)	8.4%(115)	6.8%(93)	22.2%(303)

2008년 이후 차별 상황 변화에 있어서는 중고생 모두 변화없다는 답과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지만 증가했다는 답이 감소했다는 답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차별이 어떤 분야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가장 높지만,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집단의 경우 입시 성적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전체보다 더 높다.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20.6%(135)	1.4%(9)	0.2%(1)	1.2%(8)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3.5%(220)	36.7%(241)		6.5%(42)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19.4%(265)	1.5%(21)	0.2%(3)	0.7%(10)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0%(536)	34.1%(466)		4.6%(6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9.3%(61)	1.2%(8)	0.6%(4)	0.0%(0)	0.5%(3)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1.4%(9)	1.5%(10)	4.0%(26)	73.9%(485)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11.1%(152)	1.0%(13)	1.1%(15)	0.1%(2)	0.1%(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0.8%(11)	0.9%(12)	3.4%(47)	81.3%(1110)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3%(2)	0.3%(2)	0.2%(1)	0.0%(0)	0.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0.0%(0)	0.0%(0)	0.0%(0)	82.6%(54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0%(0)	0.1%(1)	0.1%(2)	0.1%(1)	0.1%(2)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1%(1)	0.1%(1)	0.0%(0)	0.2%(3)	90.1%(1231)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61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0.3%	21.9%	6.3%	1.6%	0.0%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152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5.7%	16.4%	6.6%	0.7%	0.7%

#### 4.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이 중학생의 경우 7.8%, 고등학생의 경우 6.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중학생 32.6%, 고등학교 36.9%에 달했다.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도교사가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학생회 임원에 성적제한이나 선거에서 후보의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것,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 골고루 나왔다. 심지어 학생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도 중학생 16.5%, 고등학생 11.4%나 되었다.

학생회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적 문화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동아리 상황도 열악했다. 종합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지원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중학교에서는 15.1%, 고등학교에서는 18.4%에 불과하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동아리가 학교의 선호에 따라 폐쇄되거나 불허된다는 답이 고등학교가 더 많은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동아리를 학교가 불허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7.8% (51)	30.2% (198)	23.9% (157)	32.6% (214)	5.5% (3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6.2%(85)	24.9%(340)	28.3%(387)	36.9%(504)	3.7%(50)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중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3.0% (151)	24.8% (163)	15.5% (128)	20.7% (136)
잘 모름		기타	무응답
16.5% (108)		4.3% (28)	15.5%(102)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6.4%(360)	29.0%(396)	22.8%(312)	25.4%(347)
잘 모름		기타	무응답
11.4%(156)		6.1%(83)	12.8%(17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중학교)

활동 활발, 지원 충분	동아리 불허, 폐쇄	지원부족	활동 거의 없음
15.1% (99)	14.6% (96)	32.0% (210)	39.2% (257)
학생참여부족	잘모름	기타	무응답
18.0% (118)	3.2% (21)	4.7%(31)	5.3%(3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활동 활발, 지원 충분	동아리 불허, 폐쇄	지원부족	활동 거의 없음
18.4%(252)	25.2%(344)	44.0%(601)	30.1%(411)
학생참여부족	잘 모름	기타	무응답
21.2%(290)	2.6%(35)	4.0%(55)	2.8%(38)

2008년 이후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는,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위축되었다는 답이 중학생 14.0%, 고등학생 19.6%였다.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답한 중학생의 35.9%가, 고등학생의 50.0%가 위축의 원인으로 입시환경변화를 꼽았다. 입시, 성적,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과 연관지어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입시환경 변화 외에도 학교 지원의 변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변화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 것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6.3%(41)	14.0%(92)	37.3%(245)	35.5%(233)	5.8% (38)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8%(65)	19.6%(268)	37.3%(509)	34.8%(475)	3.2%(44)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41명) 중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6.8%	26.8%	17.1%	31.7%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26.8%	4.9%		7.3%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65명)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1.5%	15.4%	47.7%	30.8%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12.3%(33)	4.6%		3.1%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32.6%(30)	37.0%(34)	22.8%(21)	34.8% (32)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35.9%(33)	4.3%(4)		8.7% (8)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41.0%	44.8%	13.8%	41.4%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50.0%	3.4%		8.2%

## 5.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학생들이 두발규제 등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규제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두발복장규제 상황은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 2000년, 2005년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하여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조치는 두발규제 상황 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두발규제에 있어서는 이미 진즉에 ‘학교자율화’가 되었던 셈인데, 그 이후로도 두발규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95.3%, 고등학생이 94.2%에 달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입히는데도 교복을 강제로 입힌다는 답이 중학생 77.0%, 고등학생 77.5%로 의외로 적은 것(?)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악세서리, 양말 등 다양한 복장규제가 존재했다.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5.3% (625)	2.9% (19)	0.8% (5)	0.3% (2)	0.8% (5)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4.2%(1287)	4.2%(58)	1.0%(13)	0.2%(3)	0.4%(5)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 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0% (505)	70.7% (464)	38.7% (254)	78.4% (514)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85.1% (558)	64.6% (424)	1.4% (9)	1.8% (12)	0.3% (2)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 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5%(1058)	74.4%(1011)	33.7%(461)	67.9%(928)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79.1%(1080)	65.6%(896)	1.5%(21)	2.8%(38)	0.5%(7)

두발복장규제 위반시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이나 징계로 처벌한다는 답이 가장 많은 편이다. 교사가 강제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강제이발이 23~29%나 응답이 나왔는데, 특히 강제이발을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폭력으로 보고 중단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8.7% (188)	56.3% (369)	69.1% (453)	54.0% (354)
악세서리 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61.0% (400)	55.5%(364)	1.5% (10)	0.7% (5)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3.5%(321)	49.3%(674)	74.7%(1020)	54.5%(744)
악세서리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58.6%(801)	73.4%(1003)	1.7%(23)	05%(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도 강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규정이 학생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거나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는 대답도 중고등학생 모두 각각 20%와 40%를 넘는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두발복장규제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두발복장규제다. 또한 학교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을



더 통제하고, ‘단정한 학생’들로 만들어 지역 사회나 보호자(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평판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4.1% (27)	21.2% (139)	4.6% (30)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2.2% (277)	26.7% (175)	22.7% (149)	2.6% (1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2.6%(36)	25.5%(348)	4.3%(59)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1.1%(562)	34.0%(465)	17.6%(241)	1.0%(14)

## 6. 없어지지 않는 체벌, 숨막히는 상벌점제

체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이다. 교육부는 체벌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체벌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거나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다수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고생 모두 50% 가량이 1주일에 1회 이상 높은 빈도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했다.

체벌의 이유는 두발복장규제 위반, 과제 및 수업태도, 지각결석이 고르게 5-60%에 달했다. 성적으로 인한 체벌도 상당수 존재했고, 교사지도불응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많은 응답이 나와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과 대화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올리거나 두발복장규제 위반과 같은 입시경쟁과 억압적인 학

교 규칙에서 비롯되는 체벌이 많다는 것은 체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52.1%(342)	15.5%(102)	8.7%(57)	14.9%(98)	5.8%(38)	2.9%(19)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49.9%(681)	14.0%(191)	9.5%(130)	19.9%(272)	5.1%(70)	1.5%(20)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6.4%(370)	44.1%(289)	62.3%(409)	18.9%(1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28.7%(188)	25.0%(164)	7.2%(47)	12.5%(82)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5.4%(757)	52.3%(714)	54.8%(749)	13.3%(181)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34.6%(472)	22.6%(309)	7.5%(102)	7.5%(102)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31.6%(207)	16.0%(105)	11.6%(76)	23.3%(153)	14.0%(92)	3.5%(23)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35.9%(490)	15.4%(211)	12.2%(166)	22.8%(312)	11.2%(153)	2.1%(29)

2008년 이후 체벌 및 언어폭력의 변화에서도,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 다음으로 체

별이 강화되었다는 답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체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체벌이 줄어들거나 약해졌다는 답은 거의 없어서, 교육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체벌이 더 심해진 이유는 두발복장규제가 강화된 것이나 등하교시간 및 자율·보충학습이 강화된 것 등과 연관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4.2%(159)	5.2%(34)	13.4%(88)	3.8%(2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9.0%(190)	36.1%(237)		3.2%(21)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0.1%(275)	4.9%(67)	13.8%(188)	3.3%(45)
변화없다	모름		무응답
34.9%(477)	34.5%(471)		1.6%(22)

정부가 체벌의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린마일리지제, 상벌점제이다. 그러나 정말로 학생들 입장에서 상벌점제가 대안일까?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질문했더니 중학생의 45.4%, 고등학생의 49.4%가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징계가 증가했다고 답한 학생들 중 다수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상벌점제 도입을 지목했다. 상벌점제 도입이 규제투성이인 학교에서 징계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기까지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교내폭력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더 수치가 높은 것도 볼 수 있다. 중학생도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불필요한 두발복장규제를 없애기만 해도 체벌이나 징계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중고등학교 모두 흡연 및 음주가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학교가 흡연하는 학생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금연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흡연하는 학생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지도불응

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도 꽤 많은 응답이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징계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은데 그 원인으로는 상벌점제 도입, 교장, 교감, 교사의 변화, 학교 규정의 변화가 주로 지목되었다. 두발복장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답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중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5.4%(298)	4.7%(31)	21.8%(143)	21.3%(140)	3.5%(23)	3.2%(21)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9.4%(675)	5.6%(77)	20.5%(280)	18.7%(25)	2.9%(39)	2.9%(39)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45.4%(298)	27.6%(181)	65.2%(428)	64.6%(4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저항	기타	무응답
32.3%(212)	41.2%(270)	3.2%(21)	4.2%(27)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54.0%(737)	29.6%(404)	48.6%(664)	67.5%(922)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 저항	기타	무응답
34.8%(476)	33.7%(461)	5.2%(71)	2.3%(31)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8.3%(251)	4.3%(28)	19.8%(130)	34.1%(224)	3.6%(23)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2.8%(448)	3.7%(51)	25.8%(353)	35.1%(480)	2.5%(34)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251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5.4%	52.2%	45.4%	17.5%	10.3%	0%	3.1%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448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7.8%	52.2%	48.0%	14.3%	9.0%	1.1%	4.0%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28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21.4%	32.1%	25.0%	21.4%	25.0%	0.0%	7.1%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51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1.2%	21.6%	25.5%	15.7%	33.3%	3.9%	11.8%

## 7. 기타 소지품, 휴대전화 규제, 급식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등교시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돌려주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답은 중학생 57.3%, 고등학생 47.0%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도 중학생의 70.9%, 고등학생의 53.1%가 휴대전화를 꼽았다.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규제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	수업시간만 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57.3% (376)	24.1% (158)	5.9% (39)
규제 안함	기타	무응답
6.4% (42)	3.2% (21)	0.6% (4)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휴대전화금지	수업시간만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47.0%(642)	30.2%(412)	10.7%(146)
규제안함	기타	무응답
10.5%(143)	0.5%(7)	1.1%(16)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담배나 술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화장품, 장신구, 옷
70.9% (465)	53.0% (348)	40.4% (265)	38.7% (254)	32.0% (210)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술담배	휴대전화	책	옷장신구	전자기기
54.7%(747)	53.1%(725)	30.1%(411)	29.2%(399)	26.5%(362)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 경우	소지품 검사 없음	기타	무응답
4.9% (32)	5.0% (33)	5.9% (39)	55.2% (362)	23.9% (157)	2.3% (15)	2.7% (18)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 경우	소지품검사 없음	기타	무응답
4.0%(54)	5.1%(69)	5.5%(75)	56.7%(775)	26.2%(358)	1.2%(17)	1.3%(18)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두발복장규제나 자율·보충학습 등에 비하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변화가 없다는 답이 높다. 하지만 완화되었다는 답이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 규제가 상대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졌다는 답이 많은 편인데, 이 역시 ‘면학 분위기’를 강조하게 된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폰규제완화
16.0% (105)	2.7% (18)	18.6% (122)	2.3%(1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8% (261)		25.6%(168)	2.3% (15)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전화규제완화
10.4%(142)	3.5%(48)	18.3%(250)	3.3%(4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2.0%(574)		26.6%(364)	1.8%(25)

급식의 변화의 경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이 가장 높는데, 좋아졌다는 답에 비해 나빠졌다는 답 역시 많은 편이다.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직영급식을 규정하던 규제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쁨”은 원래 문항에는 없는 보기이지만 기타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이 나와서 따로 분류해보았다. ‘변화없음’ 속에도 이런 의미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급식의 질에 대해서 설문지 분량 문제상 따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쁨	
9.6%(63)	23.0% (151)	1.1% (7)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45.3%(297)	16.0%(105)	1.6%(10)	4.6%(30)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쁨	
12.9%(176)	28.0%(382)	1.8%(24)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39.5%(540)	14.2%(194)	1.1%(15)	2.3%(32)

## 8.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당사자인데도 교육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기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제고사나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금지조례 등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30% 이상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대입자율화에 관해서 고등학생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고등학생들이 특히 대학입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입자율화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인지도가 매우 낮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이것이 현재 경기도지역에서만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 또한 최근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또한 학생들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는 답이 높은 걸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도가 낮을수록 의견이 없다는 답이 비교적 높다. 일제고사, 그린마일리지, 고교다양화, 휴대전화금지조례 모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자율화도 반대 의견이 다소 높다. 대입자율화는 중학생의 경우 찬성이 다소 많고 고등학생의 경우 반대가 다소 많은데, 중학생은 대입자율화에 대해 모른다는 답이 많고 고등학생은 잘 알거나 대략 안다



는 답이 많다.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으나, 대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입자율화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나 대입자율화 등 “자율화”라는 명칭의 정책에 대해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 [학교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5.9%(39)	21.0%(138)	36.1%(237)	29.1%(191)	7.8%(51)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무응답
32.2%(211)	34.5%(226)	28.2%(185)	5.2%(34)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4.8%(66)	26.0%(355)	35.4%(484)	29.5%(403)	4.2%(57)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무응답
28.8%(393)	48.2%(659)	20.4%(278)	2.6%(36)

### [그린마일리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20.6%(135)	36.3%(238)	19.7%(129)	18.8%(123)	4.7%(31)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무응답
15.4%(101)	65.1%(427)	14.8%(97)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14.5%(198)	35.1%(479)	23.6%(322)	23.6%(322)	3.3%(45)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무응답
17.2%(235)	66.4%(907)	13.9%(190)	2.5%(34)

[일제고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27.4%(180)	39.9%(262)	17.5%(115)	10.1%(66)	5.0%(33)

찬성	반대	의견 없음	무응답
9.6%(63)	74.6%(488)	11.6%(76)	4.4%(29)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20.4%(278)	47.9%(654)	18.2%(249)	10.1%(138)	3.5%(4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7%(214)	72.2%(986)	9.6%(131)	2.6%(35)

[고교다양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9.0%(59)	22.1%(145)	35.8%(235)	28.0%(184)	5.1%(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2.0%(144)	51.7%(339)	21.5%(141)	4.9%(32)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6%(104)	26.0%(355)	32.1%(438)	31.0%(423)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8.6%(254)	63.5%(868)	15.2%(207)	2.8%(37)

### [대입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2%(47)	16.3%(107)	39.3%(258)	31.6%(207)	5.7%(3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4.4%(291)	32.6%(214)	18.3%(120)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1.6%(159)	38.3%(523)	28.0%(382)	18.7%(256)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0.0%(546)	43.9%(600)	11.1%(152)	5.0%(68)

### [학생인권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3%(48)	15.9%(104)	38.3%(251)	33.7%(221)	4.9%(32)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61.4%(403)	13.6%(89)	19.5%(128)	5.5%(36)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2%(58)	13.0%(177)	38.3%(523)	41.8%(571)	2.6%(3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3.1%(998)	10.2%(139)	11.5%(157)	5.3%(72)

**[휴대전화금지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3%(133)	30.3%(199)	22.9%(150)	22.0%(144)	4.6%(30)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0.5%(69)	68.9%(452)	16.0%(105)	4.6%(30)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0.8%(148)	27.0%(369)	28.8%(394)	30.7%(419)	2.6%(3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4%(101)	77.0%(1052)	10.4%(142)	5.2%(71)

## 9. 지역 간 차이

지역별로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 그리고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비율과 비교해볼 때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학생인권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침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답 또한 영남지역이 가장 높았다. (응답이 적어서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는 제주나 강원지역은 제외) 실제로, 따로 첨부된 경남지역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자율·보충학습이 강화되었다거나 두발복장규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체로 보수적인 영남지역이 학생인권 상황도 안 좋으며 악화 경향도 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등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355)	1.1%	3.9%	43.4%	22.8%	22.5%
영남(88)	2.3%	3.4%	34.1%	26.1%	31.8%
호남(131)	3.8%	9.9%	46.6%	23.7%	12.2%
충청(64)	1.6%	1.6%	40.6%	28.1%	25.0%
강원(9)	0.0%	11.1%	33.3%	22.2%	33.3%
제주(0)	0.0%	0.0%	0.0%	0.0%	0.0%
전체	1.8% (12)	4.9% (32)	42.4% (278)	23.8% (156)	22.4% (147)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648)	0.6%	3.5%	29.9%	34.0%	29.8%
영남(274)	0.0%	0.7%	23.0%	44.9%	30.3%
호남(357)	3.1%	5.6%	47.1%	20.4%	21.0%
충청(58)	0.0%	3.4%	43.1%	31.0%	20.7%
강원(19)	0.0%	5.3%	15.8%	31.6%	31.6%
제주(2)	0.0%	0.0%	0.0%	100.0%	0.0%
전체	1.1%(15)	3.5%(48)	33.4%(456)	32.4%(443)	27.3%(373)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355)	3.4%	27.3%	28.7%	32.4%
영남(88)	4.5%	39.8%	30.7%	21.6%
호남(131)	6.9%	15.3%	23.7%	51.9%
충청(64)	4.7%	35.9%	31.3%	25.0%
강원(9)	0.0%	44.4%	44.4%	11.1%
제주(0)	0.0%	0.0%	0.0%	0.0%
전체	4.3%(28)	28.0%(184)	28.7%(188)	33.5%(220)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648)	4.3%	32.4%	41.4%	20.1%
영남(274)	1.8%	44.5%	35.4%	17.2%
호남(357)	4.8%	23.2%	30.3%	38.7%
충청(58)	6.9%	29.3%	46.6%	15.5%
강원(19)	0.0%	42.1%	31.6%	10.5%
제주(2)	0.0%	0.0%	100.0%	0.0%
전체	4.0%(54)	32.5%(444)	37.3%(510)	23.9%(327)

## 10.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인권침해 등을 묻은 서술형 답에 해준 답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 실은 것이다. 두발규제, 입시경쟁, 체벌, 급식, 학생회 등이 모두 골고루 개선해야 할 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심각한 체벌, 언어폭력을 적어달라고 한 것에도 충격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

-두발규정을 어겼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시간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발 규정을 어겼다고 강제이발 같은 규정은 저희 학교에 분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담임선생님은 억지로 제 머리를 자르셨고, 두발규정보다 훨씬 짧은 머리로. 게다가 제가 원하지 않는 머리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의 머리를 막무가내로 자르셨습니다 규정보다 훨씬 짧게요. 인권침해를 당한 기분이 들었고 상당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선생이 지 기본대로 애들막대함. 지 뺨치면 애들 좇나게 팸. 규정도 존나 심해서 애들 숨도 못 쉰. 머리를 때림— 선생한테 말도 못 걸게함 웃는 걸 본적이 없음. 냅다 소리부터 지름 귀싸대기를 때림.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 나눠준 손소독제를 교무실에 갖다두고 선생 혼자 씹. 다른 반 애들은 선생님이 다 짜주는데 우리 반만 절대 못 씹 선생이 지만 신종플루 안 걸릴려함.

-선크림 발랐다고 뭐라하고 뺨때리고 머리질질 끌고가고 술집에서 일할거냐고 쌍욕하고 성적 떨어진 점수대로 1점당 1대씩 맞고

-교복을 조금 줄였다고 포르노 잡지에 나오는 애들이냐고 그러고 술 집 여자냐고 그러고. 사실 교복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치마 딱 한단 반 줄이고 셔츠는 줄이지도 않았습니니다.

(두번째로 작은 사이즈일뿐 그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마른 체형이라서..)

그런데 그런 수치심 느끼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가슴도 만져봤습니다.

뭐 뺨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나..

-학교에서 머리 긴 친구한테 한 여선생님이 "너희 엄마 술집다니시니?","살아계시니?"등등의 막말을 퍼부었음.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울었고 부모님학교에 찾아오셨었음.

- 일제고사를 반대, 모두 3번으로 마킹해서 제출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종례시간에 비슷하게 한 몇몇 아이들을 불러내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당했다. 그 후에도 방과후에 반에 남아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께 싸인을 받아오라고 했다. (나는 그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반성문을 쓰지 않고 집에서 내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4장 써서 그 다음 날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했다. 선생님은 읽으신 듯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

방과후학습. 영어, 수학 보충. 담임선생님이 일제고사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인 아이들을 불러모아 방과후학습을 아이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시켰다. 난 실기시험이 100%인 예고를 가기위해서 매일 연습을 나간다. (정식학원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냥 집에서 영상을 돌려보며 연습한다.) 그러므로 사유를 예고준비로 해서 방과후학습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영어담당인 담임선생님이 방과후학습을 반대 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업시간 태도를 심히 과장해 말하고 시키게끔 유도하였다.

-돈없다고학교오지말라고함. 발로 배깁.

-두발규제, 강제야자&강제보충학습

야자가 왜 야자입니까?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근데 왜ㅋㅋㅋㅋㅋㅋ선택권이없는거죠?

방과후수업도

동의서는 왜받아가요?

동의안함 체크도 못하게하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

-두발규제/ 강제야자/ 선생님들 실적올리려고 학생 꿈 무시하고 대학에 밀어넣으려는 더럽고 무지한 태도/ 체육선생들 수업불참 자기들멋대로임. 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자처해서 경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학총장들 얘기보다 현직 교사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면에서 체제가 잘 이뤄진 나라를 본받아 우리나라 색깔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당연한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머리만줄지 쓸 줄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린마일리지는 정말 없어져야한다.

학생을 점수로만 판단하는 그런 썩은 정책은 없어져야한다.

강제야자도 없어져야한다.

강제로학교에 잡아 놨자 하는애들 별로없다.

두발규제도 없어져야한다.

길이만이라도 풀렸으면.

학생죽이는 교육정책내놓지마시고 이런 설문조사 하지 않게끔 좀 잘좀 하세요.

- 별점제 때문에 복장규제가 너무 심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더 심해져서 복도도 못돌아다니겠다---

뭐만하면 '너 별점이야 몇학년 몇반' 뭐만하면 '너 징계당하고싶어?' 정말 짜증난다.

깜빡하고 리본,빅타이 안가져온것도 별점. 규정대로 안에 힌티입었는데 더워서 하복 블라우스 벗어 놓은것도 별점. 안에 힌티인데 티에 써있는 글씨가 너무 흰다고 별점.

단정하지 못하다고 별점.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 징계다...

-그린마일리지 반대표가 많아서 재투표함. 규정도 비공개로 투표함.

-공교육 강화를 내세운 이명박정부였으나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자사고 건립 추진으로 인한 일반계고 학생들의 위축된 입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가. 조금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 급식, 입시경쟁, 아침저녁 보충, 방과후학교 등등  
설문지에는 희망과 불희망이 있으나 선생들이 강제로 희망에 체크하게하고  
또, 불희망에 체크해도 전혀 의사가 반영되진 않는다.

0교시며 방과후 학교나 아침저녁보충이라던가 야자 등은 나를 스트레스받게한다.  
심각하게 스트레스받는다.

희망, 불희망 반영되지도 않을거면서 도대체 왜 그럼 설문조사를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질 않는다.

0교시와 야자만이라도 제발 폐지했으면 좋겠다.

잠을 자고싶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싶다.

노무현대통령님정권때만해도 보충같은 것은 없었으나 이명박정부때부터 갑자기생겼다.

입시지옥이다.

-두발규제, 강제야자,입시경쟁.

그린마일리지는 특히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점수로써 메긴다는 소린데 안그래도 점수로 매겨지고있고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메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메깁니다.

죽고죽인다는 소리죠. 기분이나쁘네요. 사람이 한번쯤은 지각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점수를 깎다니요. 등교 시간을 늦춰준다면 또 모를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6시간 자면서 생활을 합니까. 시험기간땐 6시간도아니죠 2~3시간?

그럼 학교에서 부족한 잠을 채우려들데고 수업을 잘못듣죠. 그럼 당연히 효율성도떨어질 것 아닙니  
까. 학교에서 잡아두면뭘해요. 그리고 저희학교만 그런지 몰라도 수업시간에 자는것도 점수 깎는다면  
서요? 참나

그리고 부모님께 문자를 날리는것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꼭 애완동물이 된것만같네요.

-강제야자는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다

2009년에만 우리학교 학생중 두명이 자살해서 죽었다.

사실 자살기도한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한명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우리모두는 그 광경을 보고 우울했고 슬펐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상황인것 같다.

무섭다.

학교는 정신병원같고 선생님은 우리를 감시한다.

아침 여섯시반에 일어나야하고 집에 오면 열시인 생활이 매일인 히루하루가 반복되고 우리는 사람으로 대우받지않는다.

우리의 인권은 침해당하고있고 사는것자체가 힘겹다.

야자같은것은 선진국들은 전혀 하지 않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아이들을 밤 아홉시 열시까지 잡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환경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호주에 갔을때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15분에 끝났다.

한국이 너무 지옥같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학교와 교육관련의 모든 기관,정책은 우리를 옹아멜뿐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인권운운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금 나는 나에게 인권이란게 주 어지기는 했는지 내가 인격적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3이 될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겠다.

- 두발규제, 강제야자, 강제보충학습, 체벌, 사교육 감소니 뭐니 보충 수업 해봤자 사교육 시키는 부모들은 꼭 사교육 시키는거 모르나? 보충수업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학교 수업인 건 학교 수업인 듯 싶다. 인식이 그럴 것 같다. 사교육은 학교가 아닌 사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데,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까? 지금 우리 반의 학생들만 해도 과반수가 전부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12시가 넘어 서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청, 신종플루 비상으로 야자 한 번 빼줬다는데 필요없다고 빼지 말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휴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

-학기초 학생들의 특이사항이나 가정사항등을 적어 내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어야할 학생의 기본정보들과 특이사항들은 신경쓰지 않은채 의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오 라고 시키며 그러한 개인정보들은 소홀히 다루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숨기고싶은 정보가 있기마련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또한 요새 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등은 전혀 자율적이지 못한 타율적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말이 자율이지 이것은 타율이다. 담임이 시키는 대로 자율학습 희망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결석시에는 벌점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에게 경쟁의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학교생활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타율이 아닌 자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타율이 아니라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이기기위한 자율의 학습이다.' 라는 식의 꼬임에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식의 문제로는 내가 재학중인 학교는 급식은 자율인데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내주위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내기 아깝다" 라는 하나같이 같은 이유를 말한다. 급식의 질은 예나지금이나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다. 하루종일 학교에 메달려 학교급식에 의존할 수 밖에없는 학생들은 그런식의 부실한 급식에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의견을 말한다고 들어줄 학교이냐가 문제이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저 한달에 한번 교박교박 아까운 급식비는 나가고있다. '이대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혹은 '이대رو가 최고다'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우리학교의 급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다.

몇몇 교사들의 행동에도 문제가 많다. 물론 이세상의 교사들중에 훌륭하신 교사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망각하게 하는 무지막지한 개념없는 교사들의 횡포가 더 심하다는게 문제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도대상으로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이있다. 그런 인권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말만을 따라야하고 무조건 규정에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다.

-학교의 등교시간을 늘리고 하교시간을 줄여주길 바란다.

학생만의 자율학습 시간을 주기 위해 등교시간을 늘리고 하교시간을 줄여주자.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말라. 자율학습인데 왜 강제로 시키는것인가.

입시제도는 무조건 바껴야한다. 학생 각자가 원하는 길로 재능을 발전시킬수 있게 학제도를 바꾸면 좋겠다. 꿈이 과학자든 문학가든 체육인이건 예술가건 똑같이 이론들만 배우며 대학들어가는게 목표는 헛된 시간낭비이며 학생을 기계화 시킨다. 학생의 재능을 발전시켜 그에 맞게 대학을 가고 목표로 향할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면 학생들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수 있을것이며 입시경쟁의 스트레스와 부담은 크게 줄것이다.

그리고 일제고사로 학생을 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 개개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데 이론들만 외우고 생각해서 시험을 쳐서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는 무의미하다.

-교육정책 진심 바뀌어야 함 이걸 안 됨  
아 그리고 학교들도 너무 경쟁적이지 않게 가야함  
대학 많이 보내는걸로 경쟁하는 건 좀 아닌듯 싶음  
지내 경쟁때매 학생들이 너무 힘들

- 급식비가 올랐는데 중학교때의 급식보다 싸구려 음식들이 눈에 띈다. 길이의 두발자유는 되었으나 교문에서 학생부가 복장지도를 할때 겹옷을 못 입게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겹옷을 못 입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리고 MB정부는 제발 전국 학력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학력평가가 대학교를 갈때 면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 학교가 난리다. MB정부의 줄세우기 정책 때문에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 11. 결 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은 학생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예측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어왔다.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0교시,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 침해까지 ‘학교자율’에 맡기며 허용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일제고사가 강행된 후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방학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는 기사들도 났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학생인권의 현실이 실제로도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두들 알다시피, 두발복장규제나 소지품 압수, 강제적인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입시경쟁, 체벌,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인권 문제는 굳이 이명박 정부가 아니더라도 있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이러한 인권침해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시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등 직접적으로 학교들을 서열화시키는 한편,

학교자율화 정책을 통해 학교들이 자유롭게 학생들을 쥐어짜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입시경쟁의 강화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이 중학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생 자치 활동 또한 위축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 등 상벌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정부 교육 정책 중에서 특히 학교생활과 학습 부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제고사와 그린마일리지, 고교 다양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가 조속히 요구된다.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 [인권] 인권/청소년 7단체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에서 열린 토론회 이어져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 실태조사단의 설문조사에서 08년 이후 차별/성적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단은 “정부는 학생인권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다.

1일 여성플라자에서 7개 단체에서 준비한 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 2,000명을 상대로 설문했다.

설문 조사결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변함없다 또는 심각해졌다는 답변이 중학생은 56%(372) 고등학생은 69%(954) 넘어 “현 정부 이후 학생인권이 더 악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가장 큰 문제로 평가했다.

최근 차별을 줄이겠다고 시행하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에 대해서 상벌제가 있는 없는 상관없다. 혹은

더 통제받는다'는 의견이 중학생 67.2%(442) 고등학생 69.9%(955)로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사람을 점수로써 매긴다는 소린데 안 그래도 점수로 매겨지고 있는데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매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매깁니다. 죽고 죽인다는 소리죠”라며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는 찬성 13%(277) 반대 73%(1474)로 경쟁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찬성 67%(1401) 반대 12%(228)로 학생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가 많았다.

설문조사 보고 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여패널로 사회를 맡은 발칙한(이수나로), 김인식(송곡고 2학년), 김태균(평등학부모회), 조영선(경인고등학교 교사) 분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 오른쪽으로부터 김인식 군, 발칙한 씨, 김태균 사무국장, 조영선 교사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김인식군은 송곡고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학생회장 출마를 제한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라는 말과 이번 경기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며 “학생인권을 위해서 진보건 보수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김태균 학부모는 “여러분의 이런 조사와 참여의 행위가 놀랍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김 학부모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요구를 잘 모른다.”라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연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경인고 조영선 교사는 “예전에 인권문제가 났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미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상황을 복원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학교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하고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 다양한 토론이 오갔던 토론장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이런 참여패널의 발언 후 토론을 공론화로 만들자,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의 연대할 지점은 없나, 현재 학생인권의 뇌관은 두발문제가 최선인가 등에 다양한 논제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에 오늘의 발표와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인권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발칙한, 「뛰어보자 폴짝」 숫자로 본 시공창 : 학교 안에서도 인간일 수 있기를」, 인권오름 제178호, 2009. 11. 10.

## 숫자로 본 시공창 : 학교 안에서도 인간일 수 있기를

발칙한

안녕, 난 발칙한이야. 너흰 나를 출석부에 적힌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그게 누구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글을 읽다 보면 대충 눈치 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 끝까지 눈 기울여 줘.

###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청소년 자살

저번에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던 설문지 기억나? 문항이 뭐 이리 많냐고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답해줬지. 오늘은 그 설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나와 내 학교 밖 친구들이 그 조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별다른 게 아냐. 주위에서 청소년 자살 뉴스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뉴스거리도 못 되고, 일제고사다 고교 선택제에 서열화다 해서 학교에서 우리를 붙잡아두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두발복장 단속이 더 빡세지는 데다, 심지어는 조례로 우리의 전자기기 사용까지 규제하겠다는 걸 보고 화가 나서야. 정부에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신들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인권침해적인지 제대로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시행 이후에도 그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나 하지 않고 있어. 만약 그에 대해 대충이라도 알고선 모른척하고 있다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구.

그래서 우리는 몇 날 밤을 고심해가며 문항을 만들고, 여러 단체와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걸 수합해서 추석 때는 합숙까지 해가며 엑셀에 답안들을 일일이 입력했어, 후후. 원래는 거의 4천 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경남지역 친구들 건 그 쪽에서 따로 수합하고, 나머지를 좀 제한 656명의 중학생과 1366명의 고등학생들의 답을 입력하고 분석하게 되었어.

## 새로운 것 없는 학생인권 실태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1% (15)	3.5% (48)	<b>33.4% (456)</b>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b>32.4%(443)</b>	<b>27.3% (373)</b>	2.3%(31)

△ 현재의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설문의 결과는 예상대로야. 학생인권이 매우 잘 보장된다고 답한 고등학생은 전국에서 열다섯 명 뿐. 2008년 이후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중고등학생은 4%에 불과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아예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고등학생은 절반이 넘어, 제대로 본 거지 뭐. 원래부터 학생인권상황이 암울했지만, 그마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는 분위기였지.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 8시 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 7시 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 (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 (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 4시 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 8시 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 (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 (88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b>약 8시간 4분</b>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b>약 12시간 35분</b>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 9시 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 11시 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일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일주일)	8.3시간
평균 수면시간	<b>6.7시간</b>	평균 수면시간	<b>5.6시간</b>
6시간 이하 수면	40.7% (267)	6시간 이하 수면	75.3% (1028)

△ 중고등학생 등하교시간, 평균 수면시간 등 비교 분석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5.6시간, 중학생 평균 6.7시간의 통계는 충격적이었고, ‘야자’나 보충수업 등등이 강제 혹은 반강제되면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도 고등학생은 12시간, 중학생은 8시간이 넘었어. 내심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두발복장규제나 체벌 등은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

었는데, 학교에 두발규제가 없다는 중학생은 5명뿐이었고, 체벌을 일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는 답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어.

### 학생들의 무지를 체계화하는 학교

그런데 오히려 더 암울했던 건, 이런저런 문항에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학생회나 동아리 등이 어떤 식으로 운영 되냐,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냐고 묻는 질문에는 거의 3명당 1명꼴로 모른다고 답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70%에 육박하는 문항들도 있었고. 물론 정부 정책들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건 정부 책임이야. 대상자들이 정책을 잘 알 수 있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그렇지만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정부나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을수록 우리도 더 관심을 갖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 비슷한 맥락에서 ‘교복 안팎에 코트, 셔츠 등을 입는 것을 규제한다’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답을 하고, ‘교복 입는 것을 강제한다’에는 그렇다고 답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면서도, 어쩌면 매일같이 교복을 입다보니 그것을 ‘강제’ 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되고 슬프기도 했어.

###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해야 할 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난주 일요일인 11월 1일에는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어.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결과 발표회 한 장면

꽤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의견이 방을 꽉 채웠는데, 1부에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한 명씩이 와서 자신이 느끼는 현장의 ‘실태’나 앞으로의 연대,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공유했어. 2부에선 각자 앞에 과자를 쌓아두고 자유로운 얘기를 나눴고 처음에는 자기 학교 상황이 이러저러 하다는 푸념들과 자신의 투쟁방식(ㅋㅋ)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토론회가 막바지로 갈수록 아직도 학생인권의 뇌관은 두발자유인가, 아니라면 이제 어떤 키워드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왔어. 마지막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도 좋고, 다른 이슈를 갖고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만나서 학생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보자는 의견들로 마무리를 했구. 너희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토론회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날 보지 못했을 거야. 꼭 집어 실태조사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대로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학교에 계속 다니는 거지, 하는 수면 아래에 있던 생각이 수치화 된 자료들을 보면서 등실, 떠오른 것 같아. 피하기보다는 맞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학교를 쉬는 며칠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 물론 며칠이 아니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훗. 그동안 너희도 한 번 쬐은 펜을 내려놓고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들이, 학생인 순간 당연하지 않아지는 때가 많지는 않은지.

\* 이 글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발표한 후 작성한 것입니다.

\* 발칙한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홍보문, 2009. 11. 03.

학생의날 벌써 80년, 하지만 80년전이나 지금  
이나 학생들의 삶은 안습ㅠ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무한경쟁, 비교, 학  
벌, 4대강삽질, 용산참사, 언론악법....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무너지는 암울한 학교!사회!

암울한 학교, 사회를 바꾸기 위한 80주년학생의  
날 선언과 퍼포먼스에 함께해주세요!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사회,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학생의날은 지극지극한 잔소리문화말씀  
대신 후끈후끈 우리의 뜨거운저항을!

1. 80주년학생의날선언에 함께해요!

△ 온라인으로 참여! [cafe.daum.net/go1103]

2. 11월3일 학생의날 퍼포먼스

△ 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성당앞으로!

학생다움?  
인간다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날!

**11월3일 이겨슨 학생의날!**

학생의날은 1929년 일본제국주의시절에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며 동맹휴교와 대규모시위로 저항했던  
학생저항운동을 기념하며 독재정권에서는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던 학생들의 저항의 날입니다!

정바뀌는 학생인권, 경쟁에 미친교육, 암울한 사회...  
학생의날 잔소리가 아닌 우리들의 뜨거운 저항이 필요합니까!

**1** 뜨거운외침 콰잇나웃!!  
**80주년 학생의날선언!**

학생인권보장,막장교육개혁,시국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8개의 목소리를 담은 학생의날선언에 참여해주세요!  
선언은 온라인(cafe.daum.net/go1103)에서 참여할수 있어요!

**2** 뜨거운행동 콰잇나웃!!  
**11월3일 학생의날퍼포먼스!**

암울한 학교,교육,사회를 바꾸기 위한 청소년들의 퍼포먼스★  
11월3일(화)/7시/명동성당앞 우리들의 뜨거운 저항의 퍼포먼스 거 거

**cafe.daum.net/go1103**

진성철 기자/김태균 기자, 「명동성당서 '학생의 날' 행사 열려」, 연합뉴스, 2009. 11. 03.

## 명동성당서 '학생의 날' 행사 열려



▲학생 저항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80주년 학생의날기획단 청소년들이 학생의날을 기념하며 학생인권보장, 경쟁교육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9.1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학생의 날' 80주년을 기념해 학생·청소년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잘못된 제도에 맞서 행동한 과거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정부는 두발 규제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경쟁만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명동 변화가에서 풍물놀이를 벌이고 '학생 인권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해직교사 복직' 등의 요구안이 적힌 소형 열기구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한국인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벌인 항일 독립운동을 기리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

\* 출처: <http://cafe.daum.net/go1103> / 80주년 학생의날 기획단

## 학생의 날 80주년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썩썩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팡팡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게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 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나아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인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 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지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차별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 1. 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 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삽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

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 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찢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80주년 학생의날 기획단

[2010년]

▶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0. 11. 03.

##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 때 : 2010년 11월 3일(수) 10:30

■ 곳 : 교육과학기술부 앞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 차 례 ■

1.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청소년 발언 -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고등학생)
2. 청소년 활동계획 발표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3. 시민사회 지지발언 - 권혜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4. 교사 지지발언 -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
5. 청소년 행동 선언 낭독
6. 퍼포먼스 (줄다리기)

### ※ 학생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에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 저항 운동에서 유래한 날이다. 과거부터 이 날은 정부에서 기념식을 하곤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계승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학생인권 등을 외치며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2007년부터 공식 명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었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청원 서명운동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발의 청구인이 될 수 없음.

-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 등 청소년들이 그 주인이 되어야 하는 조례이며,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 공동의 뜻을

모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는 반감됨.

- 때문에 별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임. 학교에서 거리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청원 서명을 모아서, 주민발의 청구 서명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같이 제출할 예정임.

- 이미 10월부터 서명운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0여명의 서명을 모은 상태임.

## 2)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

-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서부터 자기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주인이 되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모으기 위해 서울지역 청소년들 중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를 최소 1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임.

- 청소년 서포터즈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기 학교, 동네에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또한 자기 동네에서 캠페인이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지역 간담회·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참여함.

- 11월 15일(월)부터 청소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시작.

## 3) 정기적인 캠페인, 퍼포먼스 등

-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꾸준히 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주1회 이상 진행.

-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의 퍼포먼스와 피케팅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더 잘 알려지도록 할 계획.

##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청소년 행동을 선언한다

81년 전 11월 3일, 중고등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식민지 노예 교육'에 맞서 싸웠다. 이 같은 학생들의 저항 투쟁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 되었다. 오늘 다시 한 번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선언한다.

1929년, 그때의 학생들은 대한독립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억누르고 차별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생 자치권을 확립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바라는 것과 그리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던 학생들도 어른들이 해줄 거라고 기다리지 않고 독립을 위해, 더 나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행동했다. 우리도 이러한 저항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첫째,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물론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민발의 청구인도 수임인도 될 수 없는 뿔스런 제도 탓에 직접 주민발의 서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더욱 청소년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뜻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낀다. 둘째, 우리는 서울 전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 자기 학교, 자기 동네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들의 캠페인, 퍼포먼스, 시위 등을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한편, 우리는 학생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가 반인권적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괴악한 짓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교장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은 무식한 발상이고, 학생들을 말 잘 듣는 노예처럼 인형처럼 대우하는, 교육 아닌 사육과 경쟁을 계속하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학생들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등 반인권적·반교육적 무개념한 발언을 내뱉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보고 있자니 81년 전 학생들이 맞서 싸웠던 일제 식민 정부와 수준이 고만고만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

학생의 날은 단지 흘러간 과거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참여와 저항의 역사이다.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이 화두가 되고 학생인권조례가 그 기초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학생의 날에 어울리는 것은 학생인권을 위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행동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학생인권

조례여야만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인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0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 행동 계획 발표〉 소장사진, 2010. 11. 03.



강성란 기자,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청원 서명 나선다” - 81돌 학생의날 맞이 청소년 활동 활발」, 교육희망, 2010. 11. 03.

##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청원 서명 나선다”

### 81돌 학생의날 맞이 청소년 활동 활발



▲청소년들이 8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한편 10대 요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강성란 기자 ©

청소년들이 8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한편 10대 요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실천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식 주입 교육에 몰입한 현재 학교는 학생인권침해를 당연시 한다”는 말로 학생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나선 파이루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가 무너지고, 체벌금지 방침으로 교권이 무너진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볼 때마다 ‘통제’가 아니고서는 권리와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서글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던 2년 전에도, 80년대 성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던 교육당국이 여전히 시기상조를 말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청소년이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로 입을 연 김인식 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활동가는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청원 서명 운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 이주호 장관, 학교 관리자와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을 두고 줄다리를 하지만 결국 청소년들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10대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꿈이 없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이 문제”라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희망이 지난 달 16일부터 청소년 1534명에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가장 바꾸고 싶은 10가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발과 용의복장의 자유’를 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항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강제야간 자율학습과 유료 8교시(보충수업 및 방과후 교실) △부모님 허리 휘게 만드는 학원비와 과외비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취미와 특기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교육 △청년 실업, 비싼 대학 등록금, 비정규직 등 불안한 미래 △왕따, 빵셔틀, 학교폭력, 우울증, 청소년 자살 △수시, 정시, 예체능 등 값비싼 대입원서 수수료 △꿈이 없고 뭘 해야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 △너무 짠 알바 시급 등을 불합리한 사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기타 학생인권 활동

청소년인권토론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생지도 현황  
(중기부 내 883개 중·고교)

휴대폰 압수학교 404개교
중학교 275개교
고교 129개교


금지.압수

권 침해? 인권 침해? **괜찮아??**

뜨거운 감자, 학교에서의 휴대폰 규제에 대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나누는 이야기들

때 : 6월 9일 솔토 오후 1시  
곳 : 구 선교교육원 강당 (서대문역1번출구)

문라차이? 권력관계?  
통제라 규제? 예의의 문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cafe.daum.net/youthhr )



## 개요

# 기타 학생인권 활동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법 제정, 학내 저항 지원, 거리집회 기획, 학생의날 행사 기획, 경기도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사업을 펼쳐왔다. 그리고 앞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학생인권 사업들도 함께 펼쳤다.

2006년 학도호국단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펼친 대응 활동(헌법소원까지 기획하였으나 당사자 모집에 실패했다.),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했던 휴대전화 토론회, 학내 종교자유와 관련한 강의석 소송 결과에 대한 대응, 2009년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의 시범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했던 예비조사 작업(당시에는 상벌 점제가 교육계 안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본격적 대응 작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서, 2006. 05. 03.

< 성 명 서 >

##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학도호국단 운영에 대해 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번호 05-0002310)을 냈다. 진정의 요지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인 학부모의 동의 없이 편성, 운영 중인 학도호국단은 헌법 제 11조,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 1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 진정 사건에 대해 3월 30일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각하 결정문과 4월 6일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학도호국단이 현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시대비 계획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형식적인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처음 설치된 이래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지난 85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학생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리에 학도호국단을 불법 편성·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에 드러난 ‘전시 학생호국단 운영 계획’ 문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전시에 동원하도록 학생들에게 준(準) 군사번호를 부여, 군사조직으로 편성토록 지시하는 내용과 좌경 교사와 학생을 격리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 자체가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인권위는, 각하 결정의 이유로 지금은 전시가 아니므로 문서상의 학도호국단 운영에 의해 현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18세 미만 청소년을 비밀리에 전쟁에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은 이미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반인권적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조는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91년부터 한국도 적용을 받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8조(“전략)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에도 위배된다. 학교는 군대와는 반대되는, 인권의식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처럼 학교를 준군사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일제치하나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킬 정도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리에 학도호국단을 운영해 왔다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청소년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청소년은 스스로를 대변할 권리가 있고 당사국은 그것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그들을 전시 학도호국단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을, 특히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정부는 청소년을 하나의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전시에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소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참여정부’ 시대에도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좌경’ 교사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좌경 교사나 ‘순화가 곤란한’ 학생을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다른 학생들로부터 격리한다는 내용 역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평시 사상검증이나 비밀감시가 이루어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지난해 교육부가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학도호국단이 운영되는 한 전시를 대비한 평시 비밀감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형식적인 이유로 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학도호국단 운영 자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놓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정보 비공개는 당사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더군다나 진정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학도호국단 운영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얼마 전 교육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진정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에도 핵심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의적으로 규정된 ‘국가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인권과 직결된 전시동원 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는 학생 당사자는 물론, 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비록 교육부가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는 하나,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에 또 다른 문제는 남아있지 않은지 학생 당사자와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학도호국단이 운영되는지 여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옳지 못한 행위를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거센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도호국단 운영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학도호국단 운영 자체가 명백한 잘못임에도 당장의 실질적 침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의 인권의식 수준에 의문을 품게 할 정도이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인권문제에 대처할 뿐이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잠정적 인권침해를 뿌리 뽑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가 정말 인권을 생각한다면, 설령 진정은 각하처리

하더라도 학도호국단에 대한 별도의 권고나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외면 말고, 즉각 학도호국단 운영 중단을 위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라!  
교육부는 불법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

2006. 5. 3

광주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은평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주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희망사회당 청소년자치위원회(준), 희망사회당 학생위원회

남종영 기자, 「내가 학도호국단원이라고?– 학생들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 안보 이유로 자료공개 거부,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한겨레21 제614호, 2006. 06. 14.

## 내가 학도호국단원이라고?

### 학생들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안보 이유로 자료공개 거부,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나는 오랫동안 종사해온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한다.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고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 성전에 대한 제군 및 우리 반도 동포가 갖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김성수, <매일신문> 1943년 11월6일)

한국의 학교는 ‘군사주의적 국가주의’의 모의 연습장이다. 한국의 학교는 태평양전쟁을 수행한 일제 시대 이후 한국 전쟁과 분단 시대를 거친 학생들을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군인처럼 길러왔다.

지금까지도 학교의 일상은 군사주의의 은유로 읽힌다. 연병장은 운동장으로, 아침·저녁 점호는 조례와 종례로, 일직사령은 주변 교사로 현현한다.



△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도호국단원으로 가상 편제돼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 1977년 서울시 학도호국단의 여의도 사열행사(사진/ 연합)

#### 국감에서 지적받고 공개한다더니...

군사주의의 조직적 매개는 학도호국단이었다. 학도호국단은 학생자치단체인데도, 군사적 칭호를 부여받았다. 학생회장은 연대장이었고, 학생들은 학도였다. 학도호국단은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 조치로 1985년 폐지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상 편제하

학도호국단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도호국단은 전시 대비 조직으로 존재한다. 교육부는 매년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 하지만 학도호국단에 대한 어떤 사실도 실제 단원이 될 학생에게 ‘비밀’로 유지된다. 도대체 학도호국단의 실체는 무엇일까.



△ 박정희는 1964년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등의 저항에 부닥치자 군국주의 교육을 본뜬 ‘교련’을 도입했다.(사진/ 한겨레)

5월4일 <한겨레21>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001~2006년치 운영계획과 관련 회의록, 장(차)관 결재문서 등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상대로 비공개를 통보했다. “전시 학도호국단 관련 문서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운명만 교육부 비상계획담당관은 5월30일 취재진이 재차 확인했을 때에도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국가비밀 관리규정(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폭로된 관련 문서로 볼 때, 학도호국단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 조직되는 학생 동원 체계다. 전쟁 직전 위협 상황 때 선포되는 ‘충무2중’ 단계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된다. 예전에는 학생 각자에게 단번(군번)을 부여해 학교를 군대처럼 운영토록 하고, 좌경 학생·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등이 포함됐지만, 2005년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빠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는 “18살 미만 청소년을 비밀리에 전쟁에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은 이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전쟁 동원이 아닌 민방위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30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정린 침해구조총괄팀 조사관은 “아직은 효력이 없는 문서상의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행정 활동으로 보기 힘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도호국단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일까.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학생들은 전시 국민교육을 받는 한편 긴급 지원복구 등 후방지원 임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학도호국단의 활동

성격이 ‘참전’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학도호국단의 해당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학도호국단 존재 자체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학도호국단원에 편성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잘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청소년의 알 권리는 물론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민방위 활동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 교육부는 국가안전보장에 해롭지 않은 학도호국단의 존재 사실조차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한겨레21> 취재 결과 교육부와 비상사태 총괄부서인 비상기획위원회는 한때 학도호국단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기획위원회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교육부와 함께 2005년 총무집행계획에 ‘학도호국단 홍보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에도 이 계획을 재차 확인했고, 이는 2004년 국정감사 처리 결과 실적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당시 비상기획위원회는 △대학 및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도호국단 운영에 따른 활동 및 기본 임무 등에 대한 홍보대책 수립 △민방공훈련 때 학도호국단의 체제·운영 및 임무 등의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은 알려주기로 결정했던 셈이다.

## 어느 순간, 황당한 명령을 받는다면?

그러나 교육부는 2004년 10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전시 학도호국단은 예민한 사항으로 평시에 교육·홍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5년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비상기획위원회도 결국 이런 교육부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학도호국단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개적으로 평시에 교육·홍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필요한 지침을 준비해두었다가 총무 사태시 교육·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수나로와 인권운동사랑방은 5월30일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청소년은 스스로를 대변할 권리가 있고 당사국은 그것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를 한국 정부가 어기고 있다는 게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이다.

“당신은 일찍부터 학도호국단원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수행할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느 순간 위와 같은 명령 앞에 황망하게 서 있어야 할지 모른다. 아무리 국가를 지키는 게 국민의 의무라 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말해줘도 되는 걸까. 누가 됐건 전쟁이 터지면 어떤 활동이든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만약 그 전쟁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듯 더러운 전쟁이라면?

## 유신정권이 살린 어용 학생회

###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한 학도호국단의 역사

학생회의 옛 이름은 부끄럽게도 ‘학도호국단’이었다. 학도호국단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한 과거의 유산이었다. 1948년 9월28일 학생자치단체임에도 ‘대통령령’에 의해 기이하게 출발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됐고, 지역과 중앙학도호국단으로 연결됐다. 학도호국단은 반공 강연회, 행군, 산악훈련 등의 활동을 펼치며 4·19 혁명 뒤 폐지됐다.

학도호국단을 부활시킨 건 유신정권이었다. 1975년 대학총장 회의에서 부활된 학도호국단은 간선으로 임명되는 어용 학생회 체제였다. 간부들은 사단장, 연대장 등 군 계급으로 불렸으며 평시에는 각종 경연대회를 주최하고 교련 사열 같은 군사적 행사도 주도했다.

1980년대 지하에서 성장하던 학생운동의 일차 과제는 ‘학도호국단 폐지’였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학생회를 요구했고, 1985년 전두환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학도호국단 폐지를 의결한다.

하지만 학도호국단은 ‘비상기획위원회 규정’이라는 정부 법령에서 유일하게 살아났다. 비상사태 때 비상기획위원회의 인력재정동원과장이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5년 3월24일 개정으로 ‘학도호국단’이라는 단어는 이에 법령에서 자취를 감춘다. 적어도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조직이 된 셈이다.

## 교육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안내

### ■ 학도호국단 이란?

2005년 5월, 전교조 주간지 <교육 희망>,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에서는 교육부가 전시에 중, 고생들을 군인으로 징집 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을 폭로 하였습니다.

학도호국단은 현재 폐지된 “학도호국단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의해 시행 되던 것으로 1945년 처음 시행된 이후 1960년 폐지 되었다가 1975년 재 시행 되어오다 1985년 공식 폐지된 준 군사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학부모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시학도호국단”에 편입시켜 군번과 동일한 학도호국단 단번을 부여 받고 학교의 배정에 따른 전시 임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오마이 뉴스의 입수 문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전시 학도호국단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단(2000명 이상), 연대(1300~2000명), 대대(650~1300명), 중대(160~650명)로 분류되며 40명 내외의 소대, 9명 내외의 분대까지 현 군대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최소단위인 분대는 분대장 1명, 부분대장 1명, 소총수 7명입니다. 학도호국단의 최고 책임자는 학교장이고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교련교사·군복무 경력 교직원·기타 교직원으로 임명하고 소대장급 이하 지휘관은 간부학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학도호국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에게 “학교 고유단명(학교번호) + 학번”으로 준 군사번호(일명 ‘단번’)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 고유번호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다. 전시 학도호국단은 총무3종 사태가 선포되면 운영준비를 하며, 총무2종 사태가 선포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시에 학도호국단은 긴급복구사업 지원, 민방공 지원, 경계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특히 실업계 학생은 “필요시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 등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여학생은 각 지역별로 구급활동, 유아보호 및 군병원 등에서 간호활동을 지원한다고 비밀문건은 적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 전시에 비상소집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간부급 이상 소수 정예 요원"으로 '비상소집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밝히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무기고를 정하고 "평시에 용도를 변경했던 무기고는 총무3종 사태시에는 무기고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귀"하라고 문건은 적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비상계획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비상계획과 관계자는 "이 문건은 단지 전쟁을 대비한 지면편성이며 평시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면서 "다른 국가도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건을 보도해서 국가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유사시를 대비한다지만 그 당사자인 학생이나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01년에 폭로 된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21의 보도(2006. 6.20, 614호)에 의하면 국무총리산하 비상기획위원회와 교육부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5년 총무집행계획에 "학도호국단 홍보대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2004년 10월 교육부가 "학도호국단은 예민한 사항으로 평시에 교육·홍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비상기획위원회는 2005년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학도호국단폐지론 까지 대두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 해볼 때 공개적으로 평시에 교육·홍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필요한 지침을 준비해두었다가 총무 사태시 교육·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 현재 진행상황

2005년 5월 전교조 주간지 <교육희망>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등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이 폭로 되었으며, 당시 그 계획에는 학도호국단 편성 지침 외에도 좌경 학생, 교사에 대해 감시, 학도호국단 편성시 지휘관 편성 제외, 격리 수용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시민단체, 전교조의 반발과 언론 보도에 따라 2005년 9월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나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 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 수 가 없습니다. 2005년 6월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였으나 2006년 3월, 인권위에서는 "현재 이 계획은 지면 편성중이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라며 진정 각하를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정당등 약 20개 단체에서 이에 항의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 헌법소원의 취지

학생들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제 조약인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제 1조, 유엔아동권리협약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 헌법소원의 목적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그들을 전시 학도호국단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을, 특히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하나의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전시에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상황이 언제 재현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는 2006명의 헌법소원심판 국민청구인을 모집하여, 중앙 학도호국단 발대일인 9월 2일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모아야 반 인권적인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 헌법소원에 참여하시려면

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나, 청구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참가 하고자 하시는 분은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연락 하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헌법소원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시 준비물 : 호적등본 1통, 보호자 도장

## ■ 헌법소원 관련 문의처

- 소송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 T. 018-248-6884
- 인권운동 사랑방 배경내 T. 02-741-5363, hregang@hanmail.net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순욱 T. 019-521-0613, boyeco@gmail.com

# 헌법소원 청구 관련 계획

## 1. 청구인 모집

- 일시 : ~ 8. 20 경
- 장소 : 변호사 사무실(우편 접수 기능 여부 파악 중) : 은평구 소재
- 모집 방법
  1. 네트워크 소속 단체 홈페이지 공고
  2. 언론사 홍보 요청
    - 1318virus, 프로메테우스 등
  3. 문자, 싸이 쪽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
  4. 전교조 협조 요청
  5. 반전, 청소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6. 민주노동당, 희망사회당에 협조 요청

## 2. 청구서 제출 사전 작업

- 일시 : 청구서 제출 전일 까지
- 장소 : 온&오프 병행
- 방법
  1. 온, 오프라인 서명전
  2. 아고라, 네이버 블 등 이용 사전 홍보
  3. 관련 성명 발표(제출 전일 까지 3~4회)
  4. 항의 캠페인 개최 : 서명전과 동시에

## 3. 청구서 제출

- 일시 : 9월 2일 전 후
- 장소 : 헌법재판소
- 방법
  1. 담당 변호사 분과 협의 하여, 원고로 참가한 학생이나 네트워크 내에서 1~2명정도 동행
  2. 언론사에 보도 자료 배포

#### 4. 이후 작업

- 일시 : 무기한
- 장소 : 온&오프 병행
- 방법

##### 1. 헌법재판소 압박

- 학도호국단 운영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도록 1인시위, 성명서 발표등 진행
- 시민 단체들과 함께 하여 릴레이로 하거나 공동 성명 발표

##### 2. 교육부 압박

- 항의 성명 발표
- 장관 면담 요청
- 교육부 앞 1인시위

##### 3. 학도호국단 편성 거부선언

- 일시 : 판결 발표 전후
- 장소 : 미정
- 방법 : 학도호국단 편성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들을 모집 하여 학도호국단 편성을 거부 한다는 의사를

표명 하고, 교육부(+ 각 학교)에 항의문 전달.

청소년의회, 가자, 민주노동당 청위 협조를 통해 학도호국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 4. 교련수업 거부

- 일시 : 헌법소원 청구 직후
- 장소 : 각급 학교
-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련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회나 학교내 학생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교련 수업 집단 거부를 표현 한다.

Ex) 학급 문 폐쇄, 교련 책 반납 하기, 항의 성명 발표, 교련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지 않기 등

※ 이후 학도호국단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대응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웹자보, 2007. 06. 09.

청소년인권토론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생지도 현황  
(경기도 내 883개 중·고교)

휴대폰 압수학교 404개교

중학교	275개교	고교	129개교
-----	-------	----	-------

압수기간  
주말

〈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


고권침해? 인권침해?

뜨거운 감자, 학교에서의 휴대폰 규제에 대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나누는 이야기들

때 : 6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곳 : 구 선교교육원 강당 (서대문역1번출구)

문화차이? 권력관계?

통제와 규제? 예의의 문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cafe.daum.net/youthhr](http://cafe.daum.net/youthhr) )

## 청소년인권 토론회 〈학교, 휴대폰 금지. 압수 괜찮아?〉

### □ 행사 취지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등의 일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은 특별히 휴대폰 금지 및 압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고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교장단은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 청명고등학교에 대해 휴대폰을 전면 금지하는 교칙 조항이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의 행위는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4월 14일에 열렸던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청소년인권 집회도 그 요구사항 중 하나로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압수 폐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한겨레와 방송3사 등의 언론이 학교의 휴대폰 금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휴대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휴대폰 금지에 대한 논쟁지점의 설정과 내용 있는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단체들도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제에 대한 이 사회의 담론은, 오직 언론에 나온 단편적인 인터뷰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휴대폰 문제가 명백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 휴대폰 문제에 대하여 교사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 행사 일시와 장소

때: 6월 9일(토) 오후 1시

곳: (구)선교교육원 강당 (서대문구 1번 출구)

### □ 토론회 패널

- 교사 2인
- 학부모 2인
- 청소년 2인

## □ 진행

- 행사 취지 : 사회자
- 패널 입장 발표
- 쟁점 토론
- 플로어 토론

「학교, 휴대폰 금지압수 괜찮아?? 청소년인권 토론회 소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2호, 2007. 06. 11.

## <학교, 휴대폰 금지 압수 괜찮아??> 토론회

최근에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올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게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 한편에서, 대전지역 교장들이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휴대전화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방송3사를 비롯해서 한겨레, 국민일보 등이 학교에서의 휴대폰 금지, 압수 문제를 다뤘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휴대전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청소년으로 이수나로 박인선 씨,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김강영 씨, 교사로 전교조 하현중 씨, 예비교사로 민진(한날) 씨, 학부모로 양미화 씨, 박수영 씨, 간디학교 학부모로 정창주 씨 등이 참가해주셨어요.

토론회는 휴대전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휴대전화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가 같은 질문이라거나,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의 정당성·부당성, 휴대전화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인가 등을 거쳐서 교육과 자본의 관계나 수업·교실의 구조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규제에 찬성하는 분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은 소비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잘못된 자본주의 풍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거나, 휴대전화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다거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나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셨구요.

규제에 반대하는 분들은 유독 청소년에게만 그런 것들이 강제되는 부분은 권력 관계가 개입해 있다거나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유독 불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이 사회·학교의 폭력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점, 다수의 청소년들이 수업을 독점한 교사에게만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교육 자체가 폭력적이고 ‘무례’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학교에는 숨쉴 여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유익한 자리였어요 ^^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리고, 앞으로 휴대전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네트워크 안에서 더 고민해서 운동을 만들어가도록 할게요.



예비교사 민진(한남)  
아수나로 박인선(리아)  
한고학연 김강영  
전교조 교사 하현중  
학부모A 양미화  
학부모B 박수영  
학부모C 정창주(간디학교 학부모)  
청소년인권활동가 윤종(공헌)  
진행자 양동훈

날짜 2007년 6월 9일 토요일.

장소 (구)선교교육원 강당

## 1. 휴대전화는 과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가?

- 학부모들과 교사가 휴대전화는 과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함.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휴대전화를 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함.
- '필요'를 묻는 건 모호하다고 지적. 유독 청소년의 경우에만 그것이 필요한지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상함.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는 모호함. 누구의 기준에서 필요한가?(예비교사&인권활동가)

## 2. 휴대전화의 의미

- 휴대전화의 의미에 대해서 박인선(리아)은 입시교육 현실 속에서 소통의 도구라는 이야기를 했음.
- 한고학연 김강영은 역시 소통의 도구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자신도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하면서)
- 휴대전화가 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들의 집합체라는 지적이 많았음.
- 휴대전화가 자기 주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관찰력 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학부모A)
- 휴대전화가 면대면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교사)
- 휴대전화가 면대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자기 주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거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 그럼 휴대전화가 없을 때 면대면 인간관계가 활성화되고 자기 주변에 관심이 있었는가? 휴대전화는 그 보조도구 혹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우려가 많았으나 그때의 과잉된 우려들은 거의 기우였다. (방청자 둘, 무명&박조)

- 요즘 애들은 '연대'가 없다는 지적(교사)
- 그럼 과거 세대에는 '연대'가 있었나? '위계'가 있던 건 아닌가? (양아치의 지적)
- 휴대전화를 규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자제력이 부족해서 질서가 깨질 거라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과잉 보호이며 미성숙의 신화. 왜 유독 청소년들을 믿지 못하는가? 학생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음.(예비교사)

### 3. 휴대전화와 자본

-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학교에서의 폭력은 아이들이 "자본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지책.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그만두었을 때 자본에게 포섭될 것이 뻔해보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권리의 주장은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성격이 있음. 휴대전화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가? 소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인권'이 될 수 있는가?(교사)
-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행위 자체도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소비자의 역할을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성격이 있는 건 마찬가지임. 마치 교사는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자유로운 듯이 이야기하지만 이는 오만. 또한 소비권이 아니라 사생활권 등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음. 소비권이라는 명명 자체에 가치판단이 들어있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권으로 성립할 수 있음.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노동해서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자유가 주어지는가?(인권활동가)
- 간디학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공동체 파괴 문제.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학부모C)

### 4. 휴대전화와 수업시간, 교육, 압수 문제 등

- 수업시간에 청소년은 수업에만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 교사가 수업내용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딴짓'을 일방적/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구조는 잘못되어 있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의 문제일지 몰라도 규제하거나 할 대상이 아님. 성인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대에게 자기 말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는 없는데, 왜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규제, 압수가 있는지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권활동가)
- 적절한 규제는 필요. 다만 압수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임. 휴대전화 관련 규칙은 학생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져야 함. 중독이 되어서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수업시간에 교육을 받는 건 의무임. 의무를 위배하는 그런 주장은 이기주의.(김강영)
- 수업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폭력이라는 주장은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사와 학생이 1:1 교육 관계면 모를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 상황에 맞지 않음. 학생들 각자가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수업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맞출 것인가?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 (학부모B)

-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임.(예비교사)
-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들 각자의 컨디션(상황)에 맞게 숨쉴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음.(방청자, 개굴)

공현, 「폰질을 허(許)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asunaro>) 연구논리 자료실, 2007. 05. 09.

## 폰질을 허(許)하라

공현 / 윤중

### - 압수도 금지도 인권침해

최근 많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고 휴대폰이 학교에서 눈에 띄면 압수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대안학교들조차도 휴대폰을 금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생활권과 맘대로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분명한 인권입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휴대폰을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인권침해입니다. 간혹, 휴대폰 압수를 다른 ‘문제행위’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나 ‘징계’로서 이용하는 학교도 보이는데 이때의 압수는 말할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에 청명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 학내시위 이후에 휴대폰을 모두 압수한 것과 2학기 들어 휴대폰을 전면금지한다고 청명고 교칙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2007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는,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의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보장”, 제16조 “사생활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7조의 “신체적·지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 교육 보장”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상급기관 지침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 생들의 휴대폰 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하였다고 하나, 휴대폰 소지 현황 파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내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교내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는 조문 또한 상기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7년 1월 31일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이처럼 학교가 휴대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자기 맘대로(또는 교사 맘대로) 압수하는 것은, 경찰조차도 물건을 압수해가려면 원래 법원의 심사를 받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만약 휴대폰이 총 같은 흉기라면 그것을 긴급하게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타인의 권리를 그 자체로 구체적·실질적으로 크게 침해하지도 않으며, 휴대폰은 총처럼 오직 사람이나 생물을 다치게 하거나 부수기 위한 목적의 물건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시든 취업이든)이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데 휴대폰이 무슨 쓸모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설령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존엄한 인간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공부”라는 목적을 들먹이며, 단순한 공부라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나 자유 등의 가치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더라도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제26조)라고 나와 있으며,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동권리협약)에도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제28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사실 단순한 ‘공부’보다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수업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휴대폰 압수가 초중고등학교에서처럼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일부 교수님들은 수업 중에 강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혼내기도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뿐더러 강의 도중에 슬쩍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 등은 거의 규제당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잘 ‘타이틀’지는 모르지만요)

즉,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휴대폰 압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생활을 규제·통제 당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며 미성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이 무슨 인권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무식한 생각과 달리, 휴대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당하거나 마음대로 압수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 - 수업시간, 집중력이 저하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에 신경을 쓰다보면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모든 학생들이 40분(중고등학교라면 45분, 50분) 동안 오직 한 가지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똑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여 똑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학생들을 사회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체제 규율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며, 주어진 시간에 맞게 살아가는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너무나도 체제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며, 인간중심적인 교육·자율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정권을 무시합니다. 한 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컨디션(기분, 상황, 건강 등)에 처해 있으며 때로 그것은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있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결석을 금기시하는 교육현실, (인문계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전교생의 60~70% 이상의 학생들이 개근상이나 정근상을 받습니다. 실업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덜하기도 하지만 ‘빡세게 시키는’ 실업계의 경우 결석을 하면 심한 처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확일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은 청소년들을 감금하고 그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청소년들을 교실에 확일적으로 붙잡아두려고 집착하는 것은 오직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수업을 받고 싶지 않을 때, 그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 - 수업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나 출석부에 결석 체크가 되는 등 - 을 감수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결석을 할 권리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교육, 인간중심적인 교육은 소통·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다양한 차이와 생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틀을 따르는 것만을 요구하는 폭력적인 교육이어선 안 됩니다.

제가 이는 이재익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날 이런저런 이유로 수업을 받기 힘든 사람들은 이름을 적어놓은 후에 자리에 앉드려 있는 등 수업에 빠지는 것을 합법화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잘 이야기하여 조정하기도 합니다. 상습적으로 수업을 빠지는 학생들과는 그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확일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된’ 수업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방식의 수업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금지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수업과 교실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교실 안에 있는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모두 한 가지 내용의 수업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폭력입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 눈 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이를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스토커의 사랑’이고 폭력일 것입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요란하게 벨이 울린다거나 하여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에 부정행위가 우려되어 휴대폰을 시험기간에만 금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벨이 2~3차례 계속 울리는 등 계속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수업시간에만 잠시 꺼놓도록 민주적으로 합의한다거나 (충분한 대화와 설득 후에) 반성문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압수하고 원천 금지하는 것은, 정말이지 단순무식한 폭력입니다.

#### - 예의의 문제, 평등하게 소통해야 한다.

많은 교사 분들이 자기가 수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으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벨이 울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꺼내놓아서 ‘눈에 띄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학생을 혼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교사의 ‘오만함’을 느낍니다. 오만함이란, 모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수업에 집중해야만 하며 집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교사중심적인 생각과 자신의 수업에 대한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사와 학생을 평등한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집중하고 싶지 않은 수업을 학생들이 들으나마나 계속 진행하는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교사가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을 모두 강제로라도 자기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체벌이나 위협적·고압적인 말투, 물건 압수 등의 폭력을 마구 휘두른다면, 그 교사는 심하게 말하면 좀 앞전한 강패로까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코 교사의 인권이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바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수업을 잘 이해시키고 함께 그 수업을 만들어가야 하며, 그것이 교사의 교육권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자신의 수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이 아니라 독선일 뿐입니다.

교사가 그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듣고 소통하려고 한다면, 교사는 자신이 느끼는 ‘오만한’ 불쾌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학생들이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급할 때는 조용히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가서 휴대폰을 잠깐만 사용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교육희망과 1318virus에 게재된 김지형 선생님의 휴대폰 금지에 대한 글입니다.

통제 수단으로서의 핸드폰 압수. 이것이 핸드폰을 매개로 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좀 슬프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의 존경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핸드폰이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규정된다면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이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미성년자, 교실, 수업 시간이라는 조건이 사라질 때 핸드폰 사용에 대한 예절 역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통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예절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제와 같은 명령이나 관습으로 행동을 규제하는 쪽보다는, 힘들더라도 끈질기게 어떤 조항이나 규칙을 이해시키는 것이 보다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길이 아니겠는가? 극장이나 공연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심지어 태연하게 통화하는 사람들은 통제가 부족이 아니라 예절에 대한 이해 부족 아닌가? 이해의 과정은 빈약하고, 통제가 관계를 대신하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걸리지 않’거나 ‘견디기’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힘든 일이겠지만,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도는 예절의 문제, 곧 자율적 주체들이 역사사지 함으로써 보다 큰 전체를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팔아먹는 데만 급급한 거대 자본이 잇은 것을 교사가 떠맡는 게 꽤심하긴 해도, 우린 교육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 5월 6일 교육희망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8312>)

이 글과 같이, 휴대폰 압수는 ‘통제’의 수단 혹은 통제를 학습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은 예절의 문제이며, 서로 소통해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전면금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며 소통을 통해 그 이외의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런데 사실 휴대폰 압수와 휴대폰 소비 조장의 관계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는 노동자로서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집중하여 열심히 일만 할 것을 강조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는 소비자로서 충실하게 소비하고 즐길 것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학습/수업시간엔 공부에만 집중하고 수업 외 시간엔 소비자로서 휴대폰을 향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대 자본이 잇은 것을 교사가 떠맡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평등한 소통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휴대폰을 전면금지하거나 일괄 수거·압수



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정말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휴대폰 사용에 대해 굳이 ‘전면금지’ 규정을 만들거나 ‘일괄 수거’ 규정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거나 가져오면 꼭 꺼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가져오거나 꺼두지 않은 경우에도,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동차를 압수하지는 않듯이 다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흔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한 합의를 통해 휴대폰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학교들도, 동의하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다수” 또는 “학부모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은 하나하나의 인간들에게 모두 있는 것이기에, ‘다수의 합의’에 인권을 위임하는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권은 궁극적인 가치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불가양(양도할 수 없음), 불가침(침해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전면 금지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일은 그 절차가 어쨌든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즈,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인권오름 제170호, 2009. 09. 16.

##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이즈(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회원)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해. 흔히들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지. 그런데 국제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는데. 물론 이 이전에도 일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제재(법 이하 조례 및 규칙)는 있었지만 말이야. ‘정보통신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휴대전화(핸드폰)사용 금지 조례라고 하는데, 8글자만으로도 위협감을 풍기는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



청소년 휴대전화 금지 조례에 관한 인터넷 기사

울산지역에서는 등교 시 초, 중학교의 휴대폰 소지가 금지되고, 서울지역에서는 초등학교는 등교 시 휴대폰 소지 금지, 중,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울산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외 모든 휴대전자

기기(MP3, PMP, 전자사전 등) 소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소지가능해대.)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지도’는 강화될 거고, 교문이나 학급에서의 휴대전자기기 및 휴대전화 압수를 위한 소지품검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불안한 예감도 들어. 이걸 정말 뭐가 아니니 싶어.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걸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모든 학생을 준 범죄자 취급하며 소지품검사를 하는 인권과 인격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잖아? 등교 시부터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항목에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 인권침해를 위한 인권침해법?

왜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까? 그에 대해서는 다들 몇 가지씩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놈이겠지? 흔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인형으로라도 만들려고 하니가 말이야.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으려나? ‘교사의 권위’라는 것도 있구나. 정말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거라면 교사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선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뻔뻔하게도 당연한 듯이 들고 다니면서, 전화벨까지 울려가면서 ‘미안하다, 잠시만 기다려라’ 라는 말 한 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학생’이란 다른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선생과 수업내용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지. 이른바 도구 통제를 이용한 세뇌라고 해야 하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는 통신권을 박탈하는 행위, 그런 도구 통제를 이용한 세뇌행위 둘 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겠지만, 인권침해를 위한 인권침해법이라는 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는 더욱 더 있어서는 안 될 법이야.

###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억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어째서일까?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일부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낭비를 반복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요구조차도 못할 때가 많아. 그런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행동이 바로 휴대전화의 사용이야. 솔직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수업에 방해가 돼야 얼마나 되겠어? 완전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 -\_-; 나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벨 울리는 거 들어봤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내가 살아오면서 10년쯤 들은 수없이 많은 수업 중에 1%정도라도 되나 몰라? 그런 반면에 내가 수업 들은 30%는 애들 목소리에 방해받았던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수업시간 잡담 금지 조례’도 생길지 모르겠네. 그런데 왜 수업에 더 방해되는 잡담을 먼저 금지하지 않는 걸까?

##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학생의 의무부터 지키라고?

1318 바이러스의 ["학생 휴대폰 사용 금지 조례" 만드신 교육 관료님 들에게 한 마디]라는 기사에 [daffodil]님께서 다신 댓글 중 일부야.

“인권이란 자신의 의무를 다 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권리가 먼저일까 의무가 먼저일까라는 질문을 접하면, 달같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라는 질문과 혼동하기 쉬워. 어느 쪽이 먼저인지 헷갈린다 이거지. 하지만 이건 닭과 달걀과는 달라. 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좁은 의미로 권리를 생각하자면, 그건 ‘대우’야 아닐까? 회사이름 대우 말고, 어떠한 존재로 인정해준다는, 취급의 의미를 가지는 대우 말이야. 즉,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권리에 걸맞은 존재로 대우한다는 거지. ‘인권’이라는 건, 상대가 인권을 지켜줄 때 내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지. 그럼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건? ‘인간이하’라는 뜻! 그런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의무를 종용한다 이거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도 패러독스, 즉 모순이야. 우리가 몇 가지 의무를 ‘당연하게’한다고 해서 어른들도 과연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줄까? 아니지. ‘당연하게’ 학생이니까 그것도 해야 하고 공부를 하기위해서 권리 같은 건 무시 되도 되는 거지. 즉, 우리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행할법한 존재로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즉 존중받을 권리, 인권 말이야.

## 공부가 의무였던가?

그리고 보면 또 다른 모순이 있어. 몇 가지 권리는 의무를 지킨 후 주장하라고 하면서, 어떤 권리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어른들이 보장해주려 하는 걸까? 교육 받는 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말이야. 마치 어른들은, 우리의 권리를 의무처럼 만들어놓고 그건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나머지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권리 같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 같아. 헌법에서도 ‘교육을 받는 건’ 권리라고 나와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런 권리를 왜 어른들은 ‘교육받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 로 생각하는 걸까? 아무래도 어른들은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감히 딴 짓이라니!’라는. 그런데 그건 의무고, 그걸 받고 말고는 우리 권리야. 그런 어른들의 의무를 빚내기 위해 우리가 권리를 강요받고 다른 권리는 제재 당하는 게 우스워.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 즉, 그걸 하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이라 이겨지.) 이게 남 일이었더라면 진짜 코미디였을 텐데. 내 일이고, 우리 일이다보니 한 번 웃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 권리는 주장에서 나온다

여태까지 우리는 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가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어른들의 억지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아봤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 쓰이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권리는 포기한 권리가 아닐까? 우리는 남들이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다함께 노력하면, 언젠가 될 거라구!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금지 조례 반대' 플래시몹의 한 장면

## 끄덕끄덕 맞장구

놀랍지는 않았다. 도리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적합하다. 조례 제정 추진이 본격화 되기 전부터,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체벌을 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 학생들을 더 찢찢매게 하는 일이라는 걸 교사들은 경험상 알고 있고 그것을 '길들이기'에 활용해 왔다. '교칙에서 조례로' 억압이 전면화된 것일 뿐, 학교 안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교칙이 학생들이 토론을 거듭해 만들어낸 스스로의 창조물이 아닌 것처럼, 조례 또한 마찬가지다. 법과 규율 앞에 청소년들은 언제나 인간이 아니었다.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배울 것이 한참인 학생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권고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권의 틀에서 빗겨나가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참으로 씁쓸하다.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대략 이러하다.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것,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것, 탈선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아니, 휴대전화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말인가!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다. 휴대전화가 사라지면, 학교는 예전처럼 조용해질까?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똑같은 자세로 들어야 하는 폭력적인 교육 환경, 빠져나올 수 없는 경쟁의 늪에서 친구이기보단 적이 돼버린 동료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교사들... "왜?"라는 질문을 진득하게 한 번만 던졌어도 이런 어이없는 해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막다른 골목이다.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존재들의 처절한 몸부림. 이 고통 섞인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교육 공간이 될 수 없다. 그곳은 심장이 없는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자, 살아있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이게 남 일이었으면, 진짜 코미디였을 텐데...' 이즈 남에게 이 사건이 웃지 못 할 희극인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둘러싼 이 진상 풍경은 우리의 현재이며, 곧 다가올 미래다.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사회'는 학교에서 시작되는 법이므로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상임 활동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내 종교자유를 지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강의석 1심 승소 판결 환영 논평, 2007. 10. 05.

## 학내 종교자유를 지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광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강의석씨가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와 잘못된 퇴학처분에 대해 대광학원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가 종교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기에 대광학원이 학생에게 학생의 의사에 상관없이 각종예배와 종교수업 등을 강제로 시킨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종교계 사립학교 내에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교사이에 불평등한 권력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학생의 인권이 우선되어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가 헌법과 교육부 고시를 어겨가며 종교의식과 종교수업을 강제한 대광학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불법적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 관리·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종교계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 2005년부터 강의석 씨 등 여러 이들이 사실을 폭로하고 싸워왔지만 종교계 사립학교 내 현실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예배와 수업 등의 종교 활동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종교를 강제하는 대광학원 등의 모든 종교계 사립학교는 이번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들여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강제적인 종교 활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침묵으로 방치하고 있는 교육청 역시도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지도·관리 책임의 역할을 다해 하루빨리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코 인권의 원칙에 반한 교육과 종교활동은 존재 할 수 없다.

2007년 10월 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고등법원의 판결 자체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벗어났다」, 강의석 항소심 판결 긴급 규탄 논평, 2008. 05. 09.

## 고등법원의 판결 자체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벗어났다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했던 강의석 씨가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1심에서는 강의석 씨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학교 측의 퇴학처분이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강의석 씨나 강의석 씨의 부모가 학교 측의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종교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며, 강의석 씨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광고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우리는 학생이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안에서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한다. 이는 학생들이 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학교 측의 종교교육에 있어 강의석 씨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이야말로 사회적인 허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종교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는 종교교육이 사회적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것은 학생은 애초에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당해도 좋다고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또한 강의석 씨를 퇴학시킨 대광고의 행위는,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 학생에게 퇴학이라는 강력한 징계로 응했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결국 학생인권에 대해 비우호적인 ‘사회 통념’들을 반영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허용” “사회통념” 등의 말로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준다면, 현존하는 불의와 불법들을 인정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 강의석 씨의 패소 판결을 내놓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5월 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배경내,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강의석 씨 2심 판결의 문제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강의석 항소심 판결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8. 06. 24.

##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

### :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강의석 씨 2심 판결의 문제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sup>1)</sup>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全文) 중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8조 중에서

어이없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강의석 씨 손해배상청구사건(사건번호 2007나102476 손해배상(기))에 대한 원심 결정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인 대광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학교가 학생을 먹살잡이해서 종교행사에 끌고 간 것이 아니라면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찾으면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않고도 종교과목을 듣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학생에게는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주어도 마땅하다는 것. 2004년 강의석 씨의 ‘학교 내 종교자유’ 싸움으로 잠시 궁지에 몰렸던 종교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판사에게 달려가 큰 절이라도

---

1)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지난해까지 활동해오다 2008년 2월 ‘인권교육센터 들’을 새롭게 창립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성, 학생인권지침서 개발,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인권활동 지원, 교사·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등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인권교육센터 들이 이어갑니다. 홈페이지 [www.dlhre.org](http://www.dlhre.org).

할 만한 고마운 판결일 것이다. 반대로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계엄령’ 선포와 다름없는 엄혹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학생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 고단함과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록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 의무 조항(18조의4)이 지난해 말 삽입되기도 했다. 학생인권을 교육개혁의 핵심 요소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발맞추어 학생인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학생의 의사 존중과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와 교육권, 불복종의 권리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인권 보장 책임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강의석 씨 사건이 학생인권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갖는 상징성을 놓고 볼 때, 이번 판결이 전체 학생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 1. ‘명시적 거부’와 ‘선서의 의미

### : 학생의 의사 존중과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강의석 씨 2심 재판부는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종교행사와 종교교육에 대해 강의석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강의석 씨가 입학 당시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신입생을 대표하여 낭독하였다는 사실도 근거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완전히 삭제한 상태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명시적 거부를 살펴보자.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면 강제가 아니라는 말은 ‘침묵=동의’라는 어이없는 공식을 정당화시킨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침묵=동의라는 공식이 온갖 전횡을 부러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공식을 재강화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연 침묵은 동의인가?

서울중앙지법은 강의석 씨 1심 판결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동의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학생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사전에 진지한 의사로 명백히 표시”되었을 때에야 강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안 권력관계를 따져볼 때, 1심의 판단이 훨씬 더 현실 타당성을 갖는다. 그 근거로 1심 판사는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무능력자인 미성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내몰려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 학교나 교사의 뜻에 거슬리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의 누적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침묵’의

로 이어져온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침해의 결과인 ‘침묵’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하는 것은 2차 폭력에 다름없다.

히틀러가 쏟아낸 술한 잔혹한 정책들에 독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듯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인이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듯이, 일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기독교인들이 모두 신사참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듯이, 학교라는 절대 강자가 밀어붙이는 행사와 교육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학생이 대놓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담임교사가 보충수업 동의서를 나눠주고 모두 동의란에 체크하라고 한 뒤 일괄적으로 거두어갈 때, 학생들이 동의란에 체크를 했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불시에 들이닥친 교사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몸 뒤집을 할 때, 휴연단속을 이유로 소변검사에 따를 것을 시킬 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나 검사하고 적발시 청소를 시키거나 체벌을 가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학생은 과연 몇이나 될까.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표시되지 않는 한 강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입학식 선서가 가진 기능을 살펴보자. 많은 학교에서 입학식 때 학생들에게 교칙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서약서는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포기 각서로 기능한다. 이에 대해 1심 판사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각종 행위를 원고가 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약…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와 자신이 결정한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이 포기각서를 학교의 전황에 대한 학생 동의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결혼식 때 낭독되는 혼인 서약은 두 배우자의 약속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의 선서도,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우자에 의한 모욕과 폭력까지 수용하겠다는 양도증서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입학선서도 그러하다. 입학 전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입학식 행사의 하나로 그러한 선서를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학생이 가진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록 학생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배반하지 않고자 하는, 곧 외부의 힘에 의해 자아의 완결성을 짓밟히지 않고자 하는 자존의 욕구가 있다. 이 자존의 욕구를 위해 사회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권력자, 심판자인 학교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에게서 사전 굴복의 문서를 받아내는 선서 관행은 학생이 자기의 의사와 양심을 가꿀 정신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 2. 공교육의 책무와 사학의 종교 자유

### : 학생의 '종교 자유'와 교육권의 관점에서

강의석 씨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존재목적은 살릴 수 있도록 학교장이 가지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보장하되 해당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여지지 않도록 규율할 의무를 진다”고 해 이 문제를 ‘사립학교의 선교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라는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문제를 동등한 두 권리가 충돌한 사례로 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사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교육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교원수급상의 문제, 학생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우선 2심 재판부가 동등한 권리로 보고 있는 ‘학생의 종교 자유’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결코 동열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학생의 종교 자유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개인의 존엄에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이자 하위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종교사학들은 자신들의 종교교육(선교)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가 조화를 이루려면 학교를 강제로 변경하는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선교를 할 수 없다면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학생선발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학생선발권과 평준화 해체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학생선발권과 평준화 해체는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고 동등하게 교육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종교를 기만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곧 기꺼이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입시 경쟁이나 사회적 성공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자녀에게 이를 강요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종교 의식과 교육을 강요하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평준화 해체는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현상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나아가 설령 자기가 믿는 종교계열의 사립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입학 당시에는 학교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신앙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도 있다. 그런 학생에게 단지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종교교육에 불모로 잡힐 것을 요구하거나 종교가 바뀔 때마다 전학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기만한 채 강제로 종교활동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대한 배반을 요구하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나 선교(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종이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배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무신앙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따라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물론 다른 모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나 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선교를 목적으로 경전이나 종교서적을 읽고 암송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 종교나 무신론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행위,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조직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부서를 두는 행위 등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하나, 2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은 학생의 교육권과 공교육기관인 학교의 책무이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라면 학교의 1차적 존재 의의는 학생의 교육권 실현에 두어야 한다. 선교나 종교교육 이전에 학생의 교육권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권은 단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교육권은 단지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교육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엔이동권리협약은 학교의 규율이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어야 하고(28조), 인권을 존중받는 과정 속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때(29조 1항)<sup>2)</sup> 학생의 교육권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구성한다<sup>3)</sup>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학교의 명시적·암묵적 조치 모두는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1심 판사 역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여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종교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다 보면 학교의 권한이 남용되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번식하고 선교가 교육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 2) 유엔이동권리협약 제29조 1항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b)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과 강화 (c)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과 강화 (d)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강화
- 3) 유네스코 교육 차별금지협약 제1조 : (교육에서) “차별”이라 함은 특히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d)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 3. '정당한 지도'와 '불손한 행위'

#### : 학생의 불복종과 적법절차의 권리의 관점에서

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강의석 씨를 퇴학처분한 학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종교사학뿐 아니라 일반 국·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인권까지 폭넓게 옥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모호하고 정당성도 없는 교칙을 근거로 법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강의석 씨 사례에서와 같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으로 궤뺌죄를 물어 과도한 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2004년 4월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두발자유를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교실에 돌렸다가 퇴학을 당했고, 2007년에는 안양 평촌고에서는 학생인권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놓아두고 관심있는 학생들이 가져가도록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 작성과 선도위원회 회부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나아가 징계의 절차도 적법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교 교칙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를 보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금지할 수 없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호한 규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할 빌미까지 제공한다.

이번 2심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자”가 대표적이다. 대다수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조항은 정당한 지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불손한 행위 역시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호하면 법이 아니다’는 근대 법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교칙인 것이다. 나아가 비록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명령이나 정책에 대해 자기 신념에 따라 불복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불복종 자체를 ‘반항’이나 ‘불손한 행위’로 싸잡아 버리면, 학생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는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백번 양보해서 강의석 씨가 교사에게 보인 행동이 불손했다 치더라도, 불손함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히 질문하지 않는다.<sup>4)</sup>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변론권과 재심요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징계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어 학생의 변론권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의 의견 진술은 학생부실에서 강제로 작성을 강요받는 진술서와 반성문으로 대체되는 경

4)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강한 반발과 불손한 태도로 불응’한 건에 대해 퇴학처분이 가능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들어 퇴학처분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우가 많다. 징계(선도)위원회 개최 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참석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소선도위원회는 이에 아무런 절차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의석 씨에 대한 퇴학처분에서도 대광고는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학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학생의 학습권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징계가 적벌절차도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의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법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할 뿐 아니라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징계가 응징적, 보복적 성격이 되지 않으려면, 사유 자체가 정당하고 심의기구도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생이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징계 규정에 있지도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 4. 교육청의 감독 책임 다했다?

#####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의 관점에서

유엔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respect)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fulfill)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 이는 국가가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학생 인권과 관련시켜 보자면, 국가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 교사 등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즉각 변경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진다. 또한 학생 보호자나 학원, 기타 교육 관련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나아가 학생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 
- 5)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이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 6)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변론 기회를 주지도 않는 경우가 흔할 뿐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로 학생을 배제하고 학부모의 진술을 듣는다. 그러나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론권을 행사하는 일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학생이 변론권을 행사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는 신뢰 관계에 따라 학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내는 일뿐 아니라, 필요한 공적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의석 씨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인 장학지도와 공문 발송, 사건 발생 후의 소극적인 사후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사립학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하고 교육청의 시정 명령은 감독기관인 교육청의 필요적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 같은 판단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혹은 재량권에만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을 위한 국가의 의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사적 왕국을 만들어내고 독재를 유지케 하는 힘이 되어 온 현실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즉각 제지시키기 위한 국가 경찰력의 개입은 정당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고 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구성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의무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학교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생이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통해 권리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학생의 직접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적극적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 아닌가. 국가의 역할, 교육청의 책임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 5. '학교자율화' 시대, 강의석 소송이 갖는 의미

2004년 당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건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부끄러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중대한 인권의 각성과 진전을 일구어낸 바 있다. 강요된 종교는 그 자체로 폭력일 뿐만 아니라, 종교 강요를 통해서는 애초 목적인 선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회적 자각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변화를 일구어낼 촉매제가 된다. 나아가 학교의 자유보다는 학생의 인권이, 선교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2007년의 1심 판결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이에 항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징계를 감행했던 사립학교의 전횡에 제동을 걸 판례를 만들어냈다. 부당한 명령에 굴종하는 순종적 삶을 '학생다운 태도'로 교육해온 반인권의 교육이 비로소 인권에 기초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 디딤돌을 쌓은 셈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고, 종교계 사립학교는 또다시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이번 2심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그 다음 달에 나왔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폐지대상에 오른 지침에는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지도 철저 지침'이 나온 배경은 (구)교육부의 고시와 일반적 교육청 장학으로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자유 침해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지침이 불필요한 규제 목록에 올랐다. 2심 판결은 학교의 자유, 학교의 재



량권이 학생인권과 대립하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었으며 학교장의 독단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학교 단위에서 학생 참여와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지금, 학교 자율을 내세워 학생 인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성을 정글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뒤,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학교의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한국 교육의 경쟁적 풍토가 어린이·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자유를 통해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준비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참여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 기본권 제한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이 권고를 무시한 채 학생 인권의 수레바퀴를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교육정책과 사법부의 판단은 학생에게 더욱 억압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교육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행해도 이미 늦었음을 교육당국과 사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임정훈, 「평택 ㄱ고, 친구 신고하면 상점준다?- 학교장 쓰레기학교 발언도 논란, 교육청 게시판 항의글 폭주」, 오마이뉴스, 2009. 06. 04.

## 평택 ㄱ고, 친구 신고하면 상점준다?

### 학교장 쓰레기학교 발언도 논란, 교육청 게시판 항의글 폭주

임정훈

학교장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학교규정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ㄱ고교의 실태' 등의 제목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학생들의 글이 80여 편 남짓 올라왔다. 특정 학교 문제로 학생들이 도교육청 게시판에 이처럼 많은 분량의 글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학생들이 도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학교장의 모욕적인 인권침해 발언 ▲일부 교사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욕설 중심의 생활지도 ▲두발 등 학교 규정의 강압적 적용 ▲일관성 없는 그린마일지리(상·별점)제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학생들은 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학교장은 학생들이 모아 놓고 훈화하는 자리에서 내 아들은 이런 쓰레기 학교 안 보냅니다라고 했다"면서 "무슨 학교 오자마자 (학교를) 쓰레기라고 하느냐 학생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말 가려서 해 주세요"라고 학교장 발언을 지적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 역시 이 발언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조화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해 모두 놀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주장은 달랐다. 이 학교 교장은 처음 기자와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학생들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화를 통해 발언 내용의 진위를 다시 확인하자 자신이 한 말은 "문장이 전혀 다르다"며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실내화를 안 신고) 신발도 마음대로 신고 다니며 두발 규정도 안 지키고 복장이 불량하면 쓰레기 학교가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그런 말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묻느냐"고 되물었다.

## 일부 교사들 심한 폭행과 욕설

강화된 생활지도와 함께 일부 교사들의 심한 폭행과 욕설도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각목으로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있는가하면 손으로 귀뺨을 때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다 걸린 학생에게 당구 큐대로 김북은 멍이 들도록 때린 교사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심한 욕설과 함께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에서 끌고 다니며 체벌을 가해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이 말리기도 했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한 학생은 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애들을 개처럼 다루시고... 꼭 여학생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교무실에서 창피를 줘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중략)...학교 오기 점점 싫어집니다"라며 일부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을 지적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이 학교의 한 부장 교사는 "학생부 선생님들이 욕을 안 먹으면 학교가 무질서해진다"면서 "올해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생활 지도에 선생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너무 풀어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은 폭풍이 지나가서 아이들도 안정되고 순종적으로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강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두발 규제 등 학교 규정 적용은 작년까지 느슨하게 하던 것을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면서, 제대로 지도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학교장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날 아침 수업중인 시각에도 학생부장 교사는 학생들을 복도에 세워놓고 큰 소리로 '지도'를 하고 있었다.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별점 항목이 줄어들고 점수도 5점, 3점 등 높은 점수 항목이 1~2점으로 낮게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던 5월 25일에 별점을 받은 학생과 25일 이후 별점을 받은 학생의 별점 카드 뒷면의 내용이 차이가 있었다.

또 상점 항목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2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그린마일리지제도가 학생들간의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별점을 상쇄하거나 상점을 받으려면 '흡연 및 절도를 한 친구나 선·후배를 신고하라고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달랐다.

"앞머리는 눈썹,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단정하게 정발한다는 두발 규정과 달리 학교 측이 반삭발에 가까운 머리 길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두발의 모양, 이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말라'는 도교육청 지침에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에 체육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머리가 긴 학생을 체육관 앞에 데리고 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온갖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1·2학년을 중심으로 두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 친구 신고하면 상 받는 그린마일리지제도

체벌의 부작용을 없애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중인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도도 논란의 대상이다. 학교장이 새로 오면서 도입돼 올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별점을 주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점수가 지나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나치게 별점카드가 남발되고 있고 별점 카드로 겁부터 주고 시작하는 교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별점은 20점이 넘으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처리된다.

특히 취재 이후 별점카드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별점항목	별점	별점항목	별점
1. 무단횡단 및 무단외출	2	9.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상태	3
2. 욕설	1	10. 피어 또는 염색	3
3. 실내외화 '피구분' 착용	2	11. 교복변형 및 과도하게 작은 교복 착용	3
4. 교사 기만 및 침담한 지시불이행	5	12. 교복 착용 불량 -넥타이, 외부착용 등	1
5. 실내소란(교성,공놀이, 뛰는 행위등)	1	13. 화장 또는 익세사리 착용	1
6. 쓰레기, 침, 가래, 땀 등 투기 행위	2	14. 도박행위	5
7. 급식장서 파종수 (세지기)	2	15. 알과시강 중 핸드폰 소지 및 사용	2
8. 수업, 청소 중 무단 이탈	3	16.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	5

〈절취선〉

별 점 항 목			
1.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	1	8. 무단 외출	1
2. 규정에 맞지 않는 용의 복장	1	9. 알과 중 핸드폰 소지 사용	1~2
3. 실내소란(교성,공놀이, 뛰는 행위등)	1	10. 무단 횡단	2
4. 급지불전소지(만화,고대기,화장품,의상물등)	1	11. 지정장소 외에서 음식물 먹고 다니는 행위	2
5. 명찰 미착용	1	12. 쓰레기 투기 행위	2
6. 외부, 담요, 체육복 걸치고 다닌 경우	1	13. 실내외화분 구분하지 않은 경우	2
7. 반지, 목걸이, 귀걸이 착용, 넥타이	1	14. 피어, 염색, 머리변형한 경우	3

### 기자 학교 방문 전

### 기자 학교 방문 후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가 학교에 다녀간 이후 별점카드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한다. 별점 항목이 줄어들고 점수도 5점, 3점 등 높은 점수 항목이 1~2점으로 낮게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던 25일에 별점을 받은 학생과 25일 이후 별점을 받은 학생의 별점카드 뒷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한 학생은 "담배 피우는 학생과 도난 사고 등이 있어 그런 항목이 생겨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친구를 신고해서 상을 받으라는 건 교육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4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악용 사례가 있어 논란과 함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중순 내려 보낸 지침을 통해 "용의복장 중심의 학교 규정이 70%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를 "공동체 함양 중심으로 재정비" 할 것과, "학교생활규정에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고교는 두발·복장·신발 등 용의복장 중심의 생활지도를 여전히 하고 있고 '학칙'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도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교육적 조치 없이 장기간 압수·보관을 못 하도록 한 휴대폰 사용 지침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탑재하도록 돼 있는 학교생활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 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지침도 안 지켜

신임 학교장의 부임 이후 학생들의 집단 항의로 이어진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A교장은 "더 이상 도교육청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상 점 항 목			
1. 교외의 선행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된 경우	2.5	6. 학교업무 및 행사 돕기	1
2. 분실물 습득 신고	2	7. 인사를 잡하는 경우	1
3. 친구에게 선행을 베푼 경우	2	8. 짝서 생활의 모범이된 경우	1
4. 흡연 및 절도 신고	2	9. 자발적 폐휴지 및 쓰레기 수거	1
5. 자발적으로 교내 행사에 도움을 활동한 경우	1	10. 기타 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선행 (청소동)	1

〈절취선〉

상점 항목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2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벌점을 상쇄하거나 상점을 받으려면 '흡연 및 절도'를 한 친구나 선·후배를 신고하라고 돼있기 때문이다. 그린마일리 지제도가 학생들간의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며 "학생들이 적응해서 잘 돼가고 있는 중이고 학교 쇄신을 위해 교사·학부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까 염려되니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도교육청에 글을 올려 봐도 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지, 학교의 지도방침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과 같은 학교 운영 방식에 순응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은 "명문고가 되려면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소통이 중요시 돼야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명령으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취재와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도 "학교 측에서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어 무슨 보복이 있을지 두렵다"며 자신들의 신상을 절대 밝히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학교 교감은 특정 학생을 불러 취재에 응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은 이에 대해 "교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는 "(그고교 사례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강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같다. 교장과 학생부의 권력이 학생을 순종시

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학교를 폭력과 감시의 공간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따르면 게시판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무렵 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게시판 상황을 알고 있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나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찬욱,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점제-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인권오름 제162호, 2009. 07. 22.

##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점제

###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찬욱

난 해리 포터 마니아야. 읽고 또 읽고 다음 편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학교 때는 시험기간에 해리 포터를 읽다가 선생님에게 혼난 적도 있었지ㅋㅋ 그런데 이번에 <해리 포터와 혼혈왕자> 영화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리 포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지. 그런데 이번엔 해리포터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다스리는 상벌점제

####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수업 장면

해리 포터의 줄거리는 대강이라도 알고 있지? 고아인 해리는 이모와 이모부 집에서 구린 대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 열 살이 되던 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호그와트 마법사 학교에 입학하게 되지. 호그와트는 마법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는 7년제 학교야. 호그와트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데, 기숙사는 4개로 나뉘어 있어. 학생을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순수혈통 엘리트, 그리고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각각 기숙사에 배정하는 거지.



해리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그리핀도르야. 호그와트 마법학교엔 ‘반’의 개념이 없고 ‘기숙사’단위로 나눠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기숙사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야. 각 기숙사에는 사감교수가 있고, 기숙사 단위로 점수를 매겨 학생들을 평가해. 체벌은 없는 대신 가끔 개념 없는 교수들이 끔찍한 체벌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훌륭한 일을 하면 가점을 주고 규칙을 어기면 감점을 줘.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기숙사는 연말에 기숙사 우승컵을 받게 되지. 학생들은 수업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각 기숙사 반장들과 교수들로부터 상점이나 감점을 받아.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떠든다거나 복장이 교수나 반장들 맘에 안 든다거나 하면 감점을 받을 수 있어. 규칙들도 꽤나 많아서 규칙을 어기면 감점을 받게 돼. 몇 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거나 어디는 출입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칙들.

### 스네이프 교수의 악행 : 꼬투리 잡아 맘대로 감점

해리가 들어간 그리핀도르는 다른 기숙사인 슬리데린과 사사건건 대립하게 돼. 슬리데린의 사감인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를 무척 싫어하지. 해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고. 아무튼 마법의 약을 가르치는 스네이프 교수는 첫 번째 수업시간에 해리에게 감점을 줘. 태도가 너무 건방지다는 거지. 해리의 친구인 헤르미온드도 감점을 받은 적 있어. 스네이프가 말하라고 지목하기 전에 질문에 대답했다는 게 이유였어. 이런 방식으로 스네이프 교수는 계속 꼬투리를 잡아 감점을 시키지. 당연히 자기가 맡고 있는 슬리데린 기숙사 학생들은 절대 감점을 시키지 않지.

감점을 받게 된 해리는 기숙사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부담감을 갖게 돼. 물론 그렇다고 해리가 모든 규칙에 순응하며 생활하진 않지만, 기숙사 전체가 우승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갖는 건 당연하겠지. 같은 기숙사 학생들도 해리에게 따카운 눈총을 보내곤 해. 소설에선 그런 일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해리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해.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그것도 기숙사 단위로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마치 한 친구의 잘못 때문에 반 전체가 단체기합을 받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친구는 반 아이들로부터 엄청난 눈총을 받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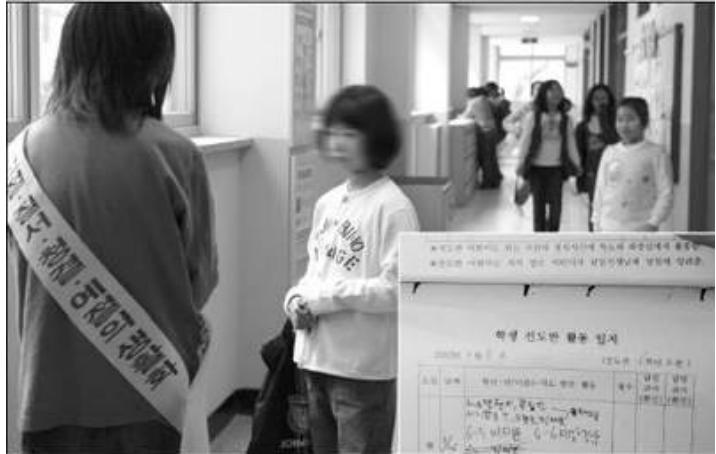


▲ 벌점으로 해리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스네이프 교수

되잖아.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규칙에 민감해지고 교수들 말에 고분고분해지게 되는 거야.

### 별점이 넘쳐나고, 신고가 넘쳐나고..

가만 쪽 읽다가 뭔가 떠오른 거 없어?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제도야. 전국 초·중·고교의 10%에 이르는 1천858개 학교에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고, 2011년까지 전체 학교에 도입될 거라고 해.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초등학교 선도부 활동 모습  
[출처: 교육희망]

내가 다니는 학교엔 상벌점제가 없지만,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 교과부에서는 체벌의 대안으로 상벌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모양이지만, 상벌점제가 들어온 뒤에도 체벌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뭤미? 게다가 상점은 너무 멀리 있고 별점은 너무 가까이 있다. 교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별점, 머리가 규정보다 조금만 길어도 별점, 뭘 해도 별점 별점 별점! 아이고 뭐가 그러도 많은지……. 반별로 합산해서 별점이 많은 반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도 있다. 들어가 보셨나, 신고제! 규칙을 어긴 학생을 신고하면 신고한 애한테 상점을 주기도 한다는 거야. 신고를 당한 애는 누가 날 고발했는지 눈을 부라리며 찾아내서 자기도 복수할 기회를 노리겠지. 학생 선도부가 나서서 별점을 매기는 학교도 아주 많다. 별점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징계도 주고 부모님한테 통보도 간대. 이런 일이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니 더 끔찍해. (초등학교라고 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 우린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학교를 다닐 만할까? 체벌보다 상벌점제가 낫다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게다가 별점을 매기는 근거 규칙들은 대다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아니었나? 상벌점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점수 하나에 울고 웃고 고분고분해지는, 말 잘 듣는 개로 만들기 위한 과정. 상벌점제가 불러올 것은 억압과 통제에 익숙해진 우리들 모습이야. 그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지?

### **『고덕고덕 맞장구』 학생 녹화사업, ‘그린 마일리지 제도’**

해리 포터 이야기를 상벌점제를 통해 들여다보니 엄청 흥미진진한걸?ㅎ 글 잘 읽었어. 상벌점제는 낯선 제도는 아니지. 오래 전부터 상벌점제를 시행해온 학교들도 여럿 있었고, 몇몇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정책으로 추진하기도 했었고 올해 들어 새로워진 점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상벌점제가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곧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걸 거야. 또 하나, ‘그린 마일리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중·고를 연계해서 벌점을 마일리지 개념으로 적립,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통제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겠다는 점도 들 수 있겠군.

교과부가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체벌의 대안’입네, ‘학생 인권 존중 방안’입네 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MB식 학생 녹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악취를 숨길 수는 없지. 녹화사업이 뭐냐고?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비판의식과 저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을 시켰던 사건을 말해. 이명박 정권 역시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자나 깨나 법치를 외치고 있었잖아? 교과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법에 순종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 반인권적인 교칙에 순응하는 학생부터 만들겠다는 것, 교사와 선도부를 통해 비판 의식의 씨앗을 벌점을 통해 뽑아버리겠다는 것이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숨은 의도이지.

어떤 교사들은 체벌처럼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학생들을 상벌점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 혹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몰라. 매질, 단체기합과 같은 체벌이나 강제이발 같은 일은 교칙의 잔혹함과 파괴된 교사-학생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반면, 벌점을 매기는 일은 그 본질을 교묘하게 숨기지. 학생들의 저항감도 적은 편이고 게다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을 집행하는 과정에 ‘합리성’이라는 외양까지 덧입혀줘. 조용하고도 교묘하게 학생의 자유 영혼을 잠식하고 ‘법치’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지키기를 요구하는 규정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더욱 교묘해진 통제엔 더 예민해진 감수성으로 맞서야 해.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폐해를 드러내고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 배경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상임활동가입니다.

찬욱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입니다.

## 녹화사업, 그린마일리지제로 돌아오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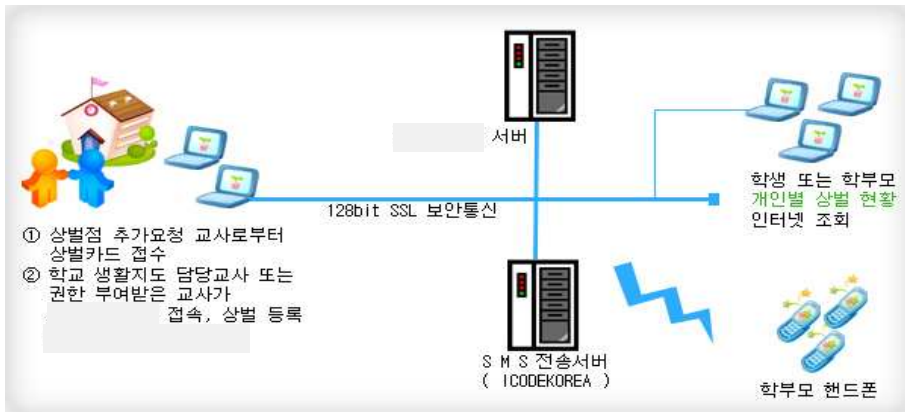
한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다 교사가 학생에게 몽둥이찜질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 학생은 ‘몽둥이’를 붙잡으며 한마디 던집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다음에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렵지 않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토록 오만불손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학생 하나를 쫓아냈습니다. 2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의 위치에서 보면 권력자인 교사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직접 붙잡는 일은 보통 용기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었다라면 핫김에라도 이런 행동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아 마땅한 용기있는 행동은 ‘싸가지 없는 행동’, ‘심각한 교권 도전’, ‘교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예외적 사건이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별점으로써 정신을 길들이는 학교규율의 횡포, 그 규율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은 허용하지 않는 학교,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기 힘든 학교, ‘허위 교권’이 학생인권 위에 군림하는 폭력적 질서가 지배하는 학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학생인권 담론이 이제는 교육당국의 정책문서에도 등장하는 공식 언어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생인권 존중 의무를 학교장과 설립자 등에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가 행사하는 폭력에 ‘합리성’과 ‘법치주의’라는 더욱 세련된 가운을 입히기 위한 제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아래 그린마일리지제)이 바로 그것입니다.

### 더욱 촘촘해진 학생 ‘녹화사업’의 그물망

그린마일리지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내건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가 제도입니다. 서울에서만 110개교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던 상벌점제를 보완하여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인데요 칭찬받을 행동에는 상점(Blue Point)을 주고 규칙을 어기면 벌점(Red Point)을 주되, 벌점이 어느 정도 쌓인 학생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얻은 점수(Green Point)로 벌점을 만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상벌점제와 구분되는 점은 상벌점이 학교전산망에 일일이 기록되고, 학생이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보호자에게 문자서비스로 통보하도록 한 점입니다. 또 선도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준법정신을 고양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네이스(NEIS)와 결합해 초·중·고 상벌점이 통합 축적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마일리지제의 운영 개념도>

이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는 그 이름에서부터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는 녹화사업할 때의 ‘녹’(綠)과 포인트 적립을 의미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뼈빠해질 틈을 없애고 이미 뼈빠해진 학생은 얼마나 순종적으로 개량되었는지를 점수화, 계량화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지요. 생활태도를 점수화한다는 것은 학생통제에 합리성의 외양을 둘러친다는 의미이고, 규칙 위반 시 학생이 처해질 운명을 다만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시화한다는 의미이고, 점수의 힘으로 학생의 ‘자발적 순종’까지 유도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의 도덕성이나 생활태도가 ‘객관적’ 점수로 제시되다 보니 쉽게 반박하기 힘들고, 교사의 훈계나 체벌보다는 각종 시상이나 학생대표 피선거권, 학교 추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에 더 민감한 학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기대효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잘 드러납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가정·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연계된 생활지도체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학생의 벌점 기록이 누적 기록될 뿐 아니라 매일, 매년 통계를 통해 벌점자가 많은 반이 어디인지, 어떤 교사가 많은 반이 계속 벌점자가 많은지도 비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보호자 역시 학생의 상벌점 기록을 문자로 통보받을 뿐 아니라 온라

인으로 조희할 수 있게 돼 학생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의 ‘순종 태도’를 점수로 계량화하여 자발적 규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지도에 소극적인 교사나 보호자까지도 일상적 학생 통제에 가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통제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또한 경미한 시안은 학생자치법정에 부쳐 준법의식의 내면화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이 무시된 것은 언제나 있어왔던 대로니 따질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린마일리지제가 낳는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수업태도가 좋고학교행사 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이 부여됩니다. 교사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다른 학생의 규정 위반을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상을 받는 이유가 되다 보니, 수업태도 불성실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됩니다. 수업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려는 교육적 탐색은 멈춰섭니다. 학생을 부리고 친구를 팔아 밀고하는 일이 외려 칭찬받을 일로 둔갑합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 선도부에 벌점 부여 권한까지 쥐어주고 선도활동의 대가로 상점을 부가하니, 학생들이 알아서 규칙 위반 학생을 적발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집니다.

상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나열돼 있는 벌점은 또 어떨까요? 두발·복장규정, 흡연 금지, 휴대전화 소지, 외부 행사 참여, 정치 관여 행위 등 교칙이 엄하고 있는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진 채 위반 학생에게는 벌점 딱지만 붙습니다. 교사에 대한 언행 불손, 지도 불응, 학교명예 훼손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쉬운 자의적 조항들이 점수로 둔갑해 학생들을 더욱 옥죄입니다. 벌점이 쌓인 학생들은 ‘푸른교실’(방과 후 문제학생들을 따로 남겨 얼차려, 뽕뽕이 등을 돌리는 활동)로 보내져 녹화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을 써냄으로써 점수를 만회해야 합니다. 그래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학생은 전학 권고나 자퇴 등의 형식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립니다. 상벌점제가 가혹하게 시행된 수원의 한 학교에서 지난해 자퇴나 전학 등의 형식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은 무려 70여 명에 달합니다. 부친의 한 학교에서는 올해 3개 반을 줄여 새학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인 학생들을 몰아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학생들은 더 번두리 학교로 옮겨가거나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떠돌아다니곤 합니다.

80년대 전두환정권 아래 맹위를 떨쳤던 대학 녹화사업이 대학내 운동세력 말살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그린마일리지제는 학생을 더욱 순치시키고 학교규칙에 의문을 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슈어내는 제도입니다. 교칙 조항들이 과연 인권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학생의 권리는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준법’의 의무만 오롯이 남게 됐습니다. 결국 그린마일리지제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전체 사회에 재갈을 물리고 이단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학교판인 셈입니다.

### 학교규정에 대한 의문을 봉쇄시키는 상징폭력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린마일리지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생활 규정으로 제·개정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규정을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라고 권고했습

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충실히 따른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경남지부가 지난 7월 시범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상벌점 항목 등에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이 67.7%,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답한 학생은 4.2%에 불과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길 없는 상태에서 그린마일리지제만 보급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진다면, 학교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사라진다면, 그린마일리지제는 도입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박탈하는 통제규정들을 빼꼭히 만들어 두다 보니 위반 학생이 생겨나고, 위반 학생을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모두 순치시키지 못하다 보니 그린마일리지제와 같은 제도가 추가로 요청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규정 위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이나 강제이발 등 가시적인 폭력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그때마다 그 폭력의 정당성은 물론, 근거가 된 규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도전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수’로도 충분히 학생을 제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근거 규정이 객관성의 외피를 입고 정당화되는 상징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학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교육당국이 그린마일리지제의 도입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체벌 대체 효과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체벌 대체 효과가 발생했느냐의 문제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체벌이라는 봉건적, 가시적 학생통제 방식이 ‘순종의 점수화’라는 근대적, 비가시적 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것도, 통제가 줄어든 것도, 근거가 되는 반인권적 규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요. 차라리 체벌이 훨씬 더 인간적이었다, 기록에는 남지 않으니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와 같은 어이없는 ‘항수’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마일리지제는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에 맞서왔던 학생인권 요구의 입지를 더욱 줄이는 효과까지 낳을 것입니다.

## 인권이 사라진 자리엔 교육도 없다

앞서 말했던 이수나로 경남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그린마일리지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79%에 달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이달 서울의 시범학교 3곳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에서도 학생들 절반 이상이 생활태도를 점수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거나 현행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점수 때문에 알아서 기게 되지 행동 개선 효과는 없다, 교권 남용의 수단이 된다, 사람의 인격을 점수화한다, 학교가 싫어진다 등 다양한 이유들을 학생들은 짚어냅니다.

이에 반해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희박한 편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 방편이 생겼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생인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던 교사들조차 체벌 대체 효과를 이유로 내심 환영합니다. 특히 힘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여교사들이 별점제를 더 반기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체벌로 발생할 수 있는 시끄러운 문제들을 피하면서 현장에서도 학생 통제의 고삐는 그대로 유지하고픈 교사들의 잘못된 욕망이 여전히 강력한 타입니다. 반

면 그린마일리지제가 더욱 교묘한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꿰뚫어보는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린마일리지제는 억압적 학교생활규정을 전제로 학생 통제와 순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만큼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교육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권이 사라진 자리에 짝튼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린마일리지제는 학교가 응당 감당해야 할 교육적 소통의 자리에 객관화된 점수라는 괴물을 들어앉혔습니다. 학생 행동의 이면에 자리잡은 이유들을 살피는 교육, 그 무수한 차이와 예외성을 인정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교육, 학생의 지적·정서적 도전을 반기는 교육, 삶에 대한 열정이나 불안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보살피지는 교육은 점점 더 학교현장에서 멀어집니다. 점수와 점수를 부과할 힘을 가진 자의 호령만이 합리성이란 의자에 앉아 학생을 부릅니다.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에 덩동~ 별점 부과를 알리는 문자서비스가 날아갑니다. 학생과 얼굴을 마주 봐야 할 시간에 교사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상별점 기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료 학생을 괴롭힌 잘못을 쓰레기를 줍거나 동료 학생을 밀고하여 용서받습니다. 자기 양심을 기만한 채 선처를 미끼로 던져지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점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에 대한 성찰 대신에 별점 관리라는 당장의 이익에 먼저 눈을 돌립니다.

그린마일리지제는 그 외양이 사뭇 합리적이기에, 체벌과 같은 구시대적 통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린마일리지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폭력입니다. 자유는 무책임을 부른다는 오랜 인식에 맞서, 자유 없이는 책임도 없고 자유야말로 책임감을 기르는 가장 훌륭한 배움터임을 보여주곤 하였던 이들이 그린마일리지 시행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니까?

- ① 충분히 반영됨      ② 어느 정도 반영됨
- ③ 반영되지 않은 편    ④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9. 상벌점제를 시행하면서 상점과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공정하고 합리적입니까?

- ①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됨
- ② 교사에 따라 간혹 불공정하게 시행함
- ③ 불공정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 ④ 잘 모름

10. 상벌점제 도입 이후 생활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변한 점이 있습니까?

- ① 생활규정과 적용이 더 세세해지고 엄격해짐
- ② 생활규정과 적용이 더 느슨해지고 완화됨
-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11. 상벌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늘어났음
- ②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줄어들었음
-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12. 상벌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는 수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강제전학, 자퇴, 퇴학 등이 증가
- ② 강제전학, 자퇴, 퇴학 등이 감소
-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13. 생활규정 적용의 변화나 징계받는 것의 변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수의 변화 등에 상벌점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향이 있음      ② 영향이 있지만 크지 않음
- ③ 별 영향 없음    ④ 전혀 없음    ⑤ 잘 모름

14. 상벌점제 도입 이후 체벌이 줄어들었습니까?

- ① 체벌이 사라짐      ② 있지만 줄어들었음

- ③ 별 차이 없음      ④ 체벌이 더 심해짐
- ⑤ 잘 모름

15. 상벌점 내역을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하나하나 모두 보호자에게 알리는 건 반대
- ② 상점을 알려더라도 벌점은 안 됨
- ③ 징계나 수상 등 특별한 경우에만 알림
- ④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찬성      ⑤ 잘 모름

16. 상벌점기록을 전산화해서 초중고를 통합하여 누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상벌점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누적해서 적용)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 ③ 별 의견 없음

17. 상벌점제로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점수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 하나하나를 점수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통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육해야 함
- ②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필요함
- ③ 상벌점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행 상벌점제에서 개선이 필요함

18.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도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아주 부정적
-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 ③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⑤ 별 의견 없음
- 이유는? :

19.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도가 내년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현행대로라면 반대, 개선 필요  
 ③ 상벌점제 자체를 반대      ④ 별 의견없음

20. 귀하는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얼마나 벌점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 가장 많이 쌓였던 벌점은 몇 점입니까?  
 벌점을 받은 주된 사유와 그 사유로 인해 한번에 받는 벌점은 몇 점입니까?  
 벌점이 쌓여서 처벌 받은 적은 있습니까?

현재 벌점		가장 많이 쌓였던 벌점	
주된 사유 및 한번에 받은 벌점	(            ), (            )점	처벌받은 적	있음 / 없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cafe.daum.net/youthhr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실태 예비 조사> 결과 미발표 자료, 2009. 10.

- 총 3개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이후 활동 계획에 참고함

### <구암중학교> 총33명

- 규율 적용이 더 세세해 졌다 : 8명
-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17명  
매우 부정적이다 5명
- 벌점제도에 대해 자체로 반대 14명  
현행 제도로는 반대 11명

#### [벌점을 받는 이유]

- [공부] 수업태도, 지각 결석
- [불량 태도] 두발, 복장, 뛰거나 장난, 음주
- [교사와 권력관계] 교사지도불응, 저항
- [폭력] 학생간 다툼 폭력
- 기타 : 교권 남용

#### [상점을 주는 이유]

- 수업/ 봉사활동/ 다른 학생 규정 위반 신고 / 교사 심부름

#### [처벌]

- 벌점에 따른 징계. 선도위원회 회부돼 징계. 부모님 소환
- 처벌 후 벌점 유지

#### [근본 문제]

- 근거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자체가 인권 위반, 학생 의견 반영하지 않음.
- 도입과정에서도 학생 의견 반영 안 됨.
- 혹 어이없이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정적이다.
- 벌점을 한번도 받은 적 없는 학생도 부정적 의견. 도움이 별로 안된다.

- 상점은 폭이 작고 별점은 상당히 넓어 사소한 것까지
- 교권 남용 도구가 되고 있다. 교사에 따라 별점을 막 주는 경우가 있다
- 억압적이다
- 교사를 피해다니고, 성적과 연관되어 있어서 민감하다
- 별점을 받으면 반항심이 생겨 더 많은 별점을 받게 된다
- 볼 때만 행해진다
- 있든 없든 똑같다. 규칙 안 지키는 건 똑같다
- 심지어 체벌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도 교권남용의 도구
- 생활을 점수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사의 감정이 쉬이는 경우가 있어 때때로 불쾌
- 별점을 안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긍정적.
- 학생들에게 기회가 없고 상별점제에 따라 해야 하나까 불리.

### 〈신림고 - 남 2학년〉 35명

: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견도 많음. 학교에서 적극 시행하지 않은 결과

- 규율 적용이 더 세세해 졌다 : 4명
- 체벌이 차이 없다 16명  
더 심해졌다 6명
-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7명  
매우 부정적이다 9명
- 별점제도에 대해 자체로 반대 8명  
현행 제도로는 반대 10명

#### [전반적 의견]

- 해당 별점이 사라진다, 다시 별점이 쌓이면 기증 처벌 받는다, 별점이 남아있다 등등 다양한 분포
- 학생을 점수로 매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상점은 주지 않는다
- 원래 즐거웠는데, 너무 썩다. 학교가 싫어진다
- 수치 관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 제도 개선 필요하다.
- 등교가 힘들.

- 몇몇 학생 빼고는 잘 모른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생활 하나하나를 점수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

### 〈신림고 - 여 2학년〉 33명

불공정 시행에 대한 불만

- 규율 적용이 더 세세해 졌다 : 13명
- 체벌이 ....차이 없다 11명  
더 심해졌다 5명
-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12명  
매우 부정적이다 6명
- 벌점제도에 대해 자체로 반대 2명  
현행 제도로는 반대 24명

[전반적 의견]

- 학생들을 억압하는 작용만 하고 효과적인 결과가 없다
- 학생 의견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 별 효과 없다
- 벌점만 주고 상점은 안 주니까 기분 나쁘다
- 상점 받는 이유가 벌점을 받는 이유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상점은 주지 않고 벌점만 주어서 봉사활동 등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싫음. 상점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 벌점 부과가 편파적
- 변화된 학생이 없다
- 초반에는 다들 안 받으려고 하지만 나날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 〈디지텍고 - 남 2/3〉 93명

- 규율 적용이 더 세세해 졌다 : 12명

- 체벌이 줄었다 19명/ 차이 없다 24명/ 더 심해졌다 6명
-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16명/ 매우 부정적이다 13명
- 별점제도에 대해 자체로 반대 16명/ 현행 제도로는 반대 18명

[전반적 의견]

- 시범학교라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 해봤자 그게 그거. 애들만 고생.
- 상받기는 힘들고 별점 받기는 쉽다
- 차별대우한다
- 학생들의 불만만 더 심해진다
-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음